

제25호/2006·3·1



조정남[®]

교 양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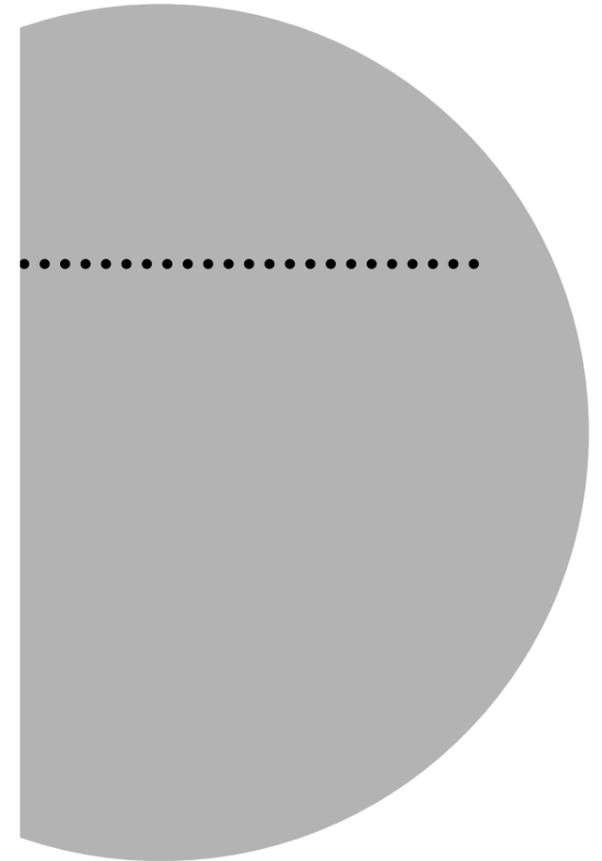


발행처 : 교양사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95
영동빌딩507호

편집인 : 조정남(☎010-4716-3616)

발행일 : 2006년 3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바 03304 / 등록일자 2004.3.3

ISSN 1229-2796 / 값 15,000원



25 2006 Spring



보통국가

특 집 日本의 樣態

- 〈정책기조〉
6 '전후총결산' 논리의 자가당착 - 조정남
- 〈안보정책〉
36 무장과 동맹, 그리고 타자의 시각 - 이응현
- 〈정당정치〉
54 총보수화로 내달리는 過積車輛 - 이기완
- 〈민족주의〉
82 기생적 민족주의 초극의 과제 - 石田英敬 외
- 〈영토분쟁〉
104 서로 다른 대처태도 보이는 영토분쟁 - 호사카 유지
- 〈전후처리〉
129 피해자에 대한 상상력마저 결여 - 田中伸尙
- 〈지방정치〉
142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 - 송중호
- 〈동아시아 공동체〉
168 친미와 경제 내셔널리즘의 이중성 - 이상혁
- 〈망언백태〉
192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일지 - 정려정

- 218 **논 단**
중앙아시아의 민주화노선을 재고하라 - 그레고리 고스
- 226 **포커스**
러시아의 중국이민 - 예동근 역
- 232 **기획연재 ② - 민족과 문학**
'님'의 재발견과 민족의 구체화 - 여태천

보통국가
특집 **日本の 様態**

일본의 국가와 사회

〈정책기조〉 '전후총결산' 논리의 자기당착 - 조정남

〈안보정책〉 무장과 동맹, 그리고 타자의 시각 - 이웅현

〈정당정치〉 총보수화로 내달리는 過積車輛 - 이기완

〈민족주의〉 기생적 민족주의 초극의 과제 - 石田英敬 외

〈영토분쟁〉 서로 다른 대처태도 보이는 영토분쟁 - 호사카 유지

〈전후처리〉 피해자에 대한 상상력마저 결여 - 田中伸尚

〈지방정치〉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 - 송종호

〈동아시아 공동체〉 친미와 경제 내셔널리즘의 이중성 - 이상혁

〈망언백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일지 - 정려정



특집

정책기초

‘전후총결산’ 논리의 자가당착

- ‘외형’과 ‘내면’ 사이의 괴리

조정남 (고려대 교수)



서론

현금의 일본정치는 전후 그들이 견지해온 ‘전후’ 적 상황의 탈피 즉 ‘戰後總決算’을 통한 새로운 체제건설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태평양전쟁의 패배와 더불어 시작된 연합군사령부에 의한 점령기를 거쳤고, 그러한 점령기간 동안에 마련된 체제의 틀과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기본방침에 따른 ‘55년 체제’라는 독특한 보혁구도 속에서 주권 없는 경제대국을 건설하는 ‘半國家’¹⁾의 상태를 유지시켜왔다. 그러나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그 동안의 일본정치의 내용을 지워 왔던 ‘전후’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건강성을 회복 하려는, 즉 그동안의 ‘片肺國家’의 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普通國家’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戰後總決算’은 당대의 가장 중심적인 정치적 목표로 떠올라있다.

1) 伊部英男, 『半國家-日本』, (ミネルブア書房, 1993) 참조.

1945년8월15일 패전 후 1951년9월8일의 ‘對日平和條約’ (Treaty of Peace with Japan)과 ‘日美安全保障條約’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1952년4월28일 발효)에 의해 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기까지의 약 7년간은 연합군사령부(GHQ)에 의한 점령기간이었다. 이 기간 안에 만들어진 전후 일본의 골격²⁾이 기본적인 뼈대로 굳건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주형 시키면서 이른바 被動體制로서의 일본의 체제 구축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런 피동적인 뼈대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자민당 우월적인 保革體制인 ‘55년체제’가 전후정치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아 특유의 일당 중심적 다당체제, 파벌간의 정권교체, 비군사화와 專守防衛를 원칙으로 한 경제중심 체제를 이어오면서 전후 일본정치의 실질적인 내용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의 ‘戰後’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대두와 이에 따른 일본 국내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서서히 ‘脫戰後’의 기운이 점 점 그 열기를 더해가면서 정치 사회 전 영역에서의 총체적인 ‘戰後總決算’이 가장 핵심적인 당면 정책목표로 강력하게 대두되게 된다. 전후총결산의 설계자인 中曾根은 1986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후정치의 총결산”은 전후 40년 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 동시에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제도나 구조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에서 고쳐 그 뒤틀림과 결함을 시정하여 21세기를 준비하려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제반 개혁과제들을 다양한 영역에서의 거론하면서 이들 과제들의 효과적인 달성을 통하여 일본의 비정상적인 과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본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³⁾

이글에서는 전후 일본정치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전후총결산노선의 기본적인 구도를 살핌으로써 현대 일본정치의 오늘의 참 모습을 이해함은 물론 현실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과거 청산과 미래건설에 대한 이중적인 논리구조를 파악하고, 이들 명분적 논리와 실제적 논리 사이의 괴리를 확인함으로 현대 일본정치가 가지고 있는 갈등 구조의 원천적인 뿌리를 파악하려한다.

전후총결산의 배경

전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던 일본의 ‘전후체제’가 방향을 수정하여 지금까지 지속시켜오던 ‘전후’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그 궤도를 수정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다. 일본 국내정치가 그 동안의 전후체제의 경영을 통하여 만들어 낸 편향적인 발전이 가지

2) 맥아더의 ‘일본 민주화지령’ (1945년9월4,11일), ‘일본국헌법’ (1946년11월3일공포).

3) 『週刊20世紀』第82號/1986(昭和61年)(朝日新聞社), 2000년8월24일자.

는 문제점이 오히려 이 전후체제를 정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역풍으로 작용한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는 달리 국제적 상황에서 형성된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일본의 전후체제를 더 이상 방치시키지 않았음도 주요한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제적 배경이다. 190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세계적인 냉전구도의 와해는 일본 전후총결산의 가장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담당했다. 1989년의 ‘냉전종결선언’과 이에 뒤이은 ‘동구혁명’, 1991년의 소연방해체 등으로 이어진 전후 세계질서를 관통해온 냉전질서의 붕괴는 그 동안 이러한 동서 냉전구도를 전제로 유지되어온 ‘55년 체제’의 존재기반을 강력하게 동요시켰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현상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과 소련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면서 ‘평화공존’에 근거한 신 국제평화질서의 재건을 모색하고 있던 시기에 등장했던 田中내각 후의 三木내각에서, 1985년의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에 의해 추진되었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차’가 실시되던 시점에 끝난 中曾根내각⁴⁾에 이르는 약 13년간의 전후총결산의 준비기로 볼 수 있다.

원래 三木내각에서 中曾根내각 시기 또, ‘55년체제’ 그 자체는 자민당과 사회당의 ‘2대 정당’ 간의 독특한 관계보다도, 국제정치에서의 동서대립을 내용으로 한 냉전구조에 대한 일본적인 대응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898년12월3일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종결선언’ 이후, 그 동안 일본정당정치의 제1야당으로 55년 체제의 한 축을 이뤄왔던 사회당이 별다른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급속하게 그 세를 잃은 것에서도 자명하다. 냉전구도를 특징 지워 왔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 양극체제가 와해되어 가자, 이러한 국제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고 유지되어 왔던 전후 일본의 보수-혁신 양대 정당을 두 기둥으로 하여 구축되었던 55년체제가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결국 일본의 보혁구도를 중심내용으로 하던 일본의 전후정치가 자민당의 단독우월성이 더욱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전후’의 保革體制를 뛰어넘은 새로운 保保體制로의 재편으로 그 방향전환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전후총결산을 준비하게 된다.

둘째, 정당체제적 기반이다. 일본의 전후총결산 시대는 국내 정당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다분히 전후를 일관되게 지배하여 오던 保革體制인 55년체제가 와해되고 이에 대신한 새로운 보수양당체제인 이른바 保保體制의 형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민당 宮澤내각 붕괴 후 자민당을 탈당하여 새로운 보수정당의 新生黨

4) 이 내각은 신보수주의를 내건 영국의 대처수상(1979.5.4 ~ 1990.11.28)이나 미국의 레이건대통령(1981.1.20 ~ 1989.1.20)의 정책과 연동하고 있었다. 田中浩, 『戰後日本政治史』(講談社, 1996), pp.230 ~ 231.

과 日本新黨 등을 중심으로 한 ‘非自民聯立政權’의 細川내각의 성립은 일본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보수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보체제



일본은 지금까지의 ‘전후’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건강성을 회복 하려는, ‘片肺國家’의 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普通國家’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목표로 떠 올라있다.

로의 전환의 시작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탄생된 細川내각은 보수당의 한 변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기본적 성격은 1989년의 ‘냉전종결선언’에 근거한 적극적인 ‘평화공존’ 노선으로 이행한 신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전후 50년 가까이, 호헌, 반 일~미안보를 표방해 왔던 최대 야당인 일본사회당을 자연스럽게 보수진영으로 흡수해 버린 자민당의 별동대이기도 했던 것이다.⁵⁾

細川정권으로부터 村山정권을 거쳐 橋本정권 성립까지 약 2년5개월의 기간은 보수당내부의 권력투쟁을 통해 보수당재편에 의한 재 결집과 그 최대의 부산물로서 전후 일본정치의 한 축이던 사회당의 괴멸되고 이에 대신하여 보수세력이 여야 간의 ‘총 보수체제’를 확립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 후 지속적으로 보수 2대 정당에 의한 ‘안정된’ 일본정치의 재편으로서의 ‘96년체제’를 만들어 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보수당의 새로운 교동정리의 바탕에서 전후총결산의 본격적인 발진의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셋째, 보수주의이념의 기반 형성이다. 일본의 전후총결산은 이념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본사회의 전면적 보수주의화의 이데올로기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출발되고 있다. 일본의 정당구조가 ‘55년체제’의 종언과 새롭게 형성된 보보체제의 가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보수주의로의 이데올로기적인 통일을 달성한 상황에 더하여 이러한 새로운 보보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일본사회당의 이념적인 변신이 전후 적 상황을 양 대분 해 온 일본정치의 이념적 지형을 총 보수화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 일본사회당의 村山위원장이 細川수상에 이어 새로운 수상으로 추대되면서 사회당은 그동안 견지해오던 좌파적인 당 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우편향성을 강하게 전면에 내걸게 되었으며 바로 이 같은 일본사회당의 변신이 전후총결산을 위한 총보수의 이념적 통일기반 형성에 크게 작용하게 된다.

村山은 수상취임 후 소집한 1994년7월18일의 국회연설에서, 사회당의 기본정책을 백팔십도 전환, “일미안보체제를 견지한다.”고 선언하여 자민당 의석으로부터 열렬한

5) 위의 책, pp.283~284.

박수를 받기까지 하였다. 그는 또 20일의 중의원본회의의 대표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위대는 헌법이 인정하는 것”, “히노마루”, 기미가요는 “국민에 정착해 있으며, 존중한다.”고 말하는 가하면 또 다음달 21일의 대표질문에의 답변에서도, “비무장중립은, 냉전이 붕괴된 지금, 그 정책적 역할을 다했다”고 단언했다. 이렇게 하여 전후 50년 가까이를 지속된 ‘護憲’의 당 ‘일본사회당’은 그 정치적 사명을 끝내고, 여기에 이르면 사실상 ‘일본사회당’의 정신은 사멸했다. 이로써 일본의 전후의 보혁구도의 틀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넘었을 뿐 아니라, 전후의 일본정치 현장에서 살아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상당부분 도맡아왔던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생명력도 마감했다. 일본정치는 이제 총보수화의 이념적 영역을 크게 확충 시켰을 뿐 아니라, 이러한 통일된 이념적 지평을 딛고 전후총결산정책의 전력투구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⁶⁾

특히 이 같은 보수주의노선 강화는 전후청산을 위한 작금의 시대상황이 과도기적인 방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강력한 국가목표로서 ‘和魂洋才’ 정신의 회복이라는 부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中曾根은 이에 대해 “현재는 바블후의 뒤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나, 그것과 동시에 장래에 대한 전망, 다시 말하면, 국가의 목표를 국민에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그 목표를 제시하여, 그것을 수행해 가기 위한 지도력을 형성치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목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역사교육, 역사로부터 배우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세계는 대단히 상대주의가 돼, 어떤 의미에서는 사상적으로는 아나키다. 명치시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소가 어디에 있었던 가하면, 과거의 유교, 사서오경, 논어 등, 일본의 무사도나 과거로부터의 이어져 온 습관이 여전히 가정에도, 국가에도 존재했었는데 있다. 그것이 명치의 발전에 원동력이 됐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국가목표의 부재를 해소키 위해 和魂洋才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대를 생각하면, 외형적으로는 화혼양재라고 생각되나, 무엇인가 부족하다. 무엇인가. 일본인이 서양문명에 빠져버린 감이 든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도 생각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상대주의로부터 벗어나, 칸트적인 단언명령, 유교적인 교리, 혹은 시도적인 가르침, 그러한 일본 고유의 것을 재고하여 그것을 사상의 주류에,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화혼양재의 회복 즉 일본의 보수주의적 사고의 발전적 계승이 현 시대에 가

6) 위의 책, pp.380-382.

장 절실한 지향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⁷⁾

전후총결산의 당면목표

일본정치의 '전후' 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전후총결산정책의 현실적인 정책목표로 일본 정계에 등장한 것이 普通國家論이다. 즉 일본의 '전후' 의 완전한 극복은 패전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비정상적인 국가, 즉 片肺國家에서 벗어나 정상성을 회복한 普通國家의 건설에 있다는 것이다.

'普通國家' 란 小沢一郎이 그의 책 『日本改造計劃』(講談社, 1993)에서 새로운 일본의 국가목표로 제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일본 전후총결산의 현실적인 목표로 자리잡아왔다. 小沢이 말하는 普通國家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전후의 고립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무역과 안전보장, 정치, 경제의 각 분야에서의 협조적인 국제질서가 확립된 '國際國家' 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국가' 와 '普通國家' 는 小沢에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또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인과관계로도 설명될 수 있다.

< '普通國家' 란 무엇인가.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스스로의 책임아래 행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 당연하게 행한다. 일본 국내에서밖에 통용되지 않는 것을 내세우거나, 국제사회의 압력을 이유로 할 수 없이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안전보장 면에서 그러하다. 걸프전 때의 국제공헌이나 PKO협력법안을 둘러싼 논의를 되돌아볼 필요도 없이, 특히 안전보장의 문제에 이르면, 갑자기 헌법이나 법제도를 구실로 삼아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협조의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려 한다. 어떤 나라보다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일본이, 안전보장을 국제공헌의 대상 분야에서 제외하는 것 등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을 냉정하게 생각하여, 안전보장 면에서도 스스로의 책임아래 스스로에게 걸 맞는 공헌이 가능한, 체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 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또 하나의 요건은 풍부하고 안정된 국민생활을 구축키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또 지구환경보호와 같은 인류공통의 과제에 대해, 스스로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불충분한 점이 많기는 하나, 상당한 성과가 있기도 하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고, 또 계속해 가는 것으로, 일본은, 국내의 경제적 발전과 재의 배분과 재화의 배분밖에 생각지

7) <http://www.yatchan.com/seiji/tenchi/t2001/0214.html>

않았던 ‘片肺國家’로부터, 국제사회에서 통용하는 이른바 ‘普通의 國家’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⁸⁾

일본 전후총결산의 현실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普通國家論은 그 후의 역대 정권에 의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실천노력을 기우리면서 일본이 명실상부하게 그들의 오랜 ‘戰後’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일본의 구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이 역대정권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전후총결산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인 普通國家론의 구체적인 실천정책은 다음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문제와 역사인식의 재구축

태평양전쟁관

일본은 과거의 태평양전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특유의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과거의 전쟁으로 아시아제국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기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군사대국의 길을 포기하며,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1995년 村山 수상 때부터 지금의 小泉수상에 이르기 까지 역대 수상들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⁹⁾

그러나 이와 같은 공식적인 일본정부의 과거전쟁에 대한 입장은 현실정치의 여러 영역에서 그대로 견지되기는커녕 이와는 정반대의 양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다. 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한 아전인수식인 논리에서 비롯, 전쟁이 가져다 준 결과를 놓고도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접국들에 대한 가해적인 입장을 외면하고 그 전쟁이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전쟁피해 당사국이나 주변국들

8)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講談社, 1993), pp.103~105.

9) “우리나라는, 일찍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제국의 사람들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재차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의 사과의 기분을 표명함과 함께, 앞의 대전에 있어서의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나타냅니다. 비참한 전쟁의 교훈을 풍화 시키지 않고, 두 번 다시 전화를 쉬는 일 없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나갈 결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후의 역사는, 확실히 전쟁에의 반성을 행동으로 가리킨 평화의 60년입니다. 아시아제국과의 사이라도 전에 없을 정도 경제·문화 등 폭 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의대수의 사이에 있는 중국이나 한국을 시작으로 하는 아시아제국과는 함께 손을 잡아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격시 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해, 아시아제국과의 상호 이해와 신뢰에 근거한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05년8월15日の 内閣總理大臣談話(小泉内閣)(발췌).

의 독립이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는 기여론의 입장을 점점 강화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처리를 위해 열린 ‘東京裁判’에 대해서도 이는 승자에 의한 패자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객관적이지도, 또 정당한 절차를 갖추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그 재판에 의해 형성된 ‘전쟁책임’이나 ‘전범’ 규정도 이를 부인하고 나서는 등으로 태평양전쟁 전반에 대한 기존의 국제사회의 평가와 제재에 대한 부정으로 그들이 새로운 전후총결산의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전쟁 평가>

일본의 전후총결산에 있어서의 역사인식의 출발은 과거 제2차세계대전기에 그들이 관여했던 전쟁(1941년~1945년) 즉 이른바 태평양전쟁에 대한 인식으로 집약되고 있다. 전후 상당기간동안 일본은 이 전쟁에 대해서는 패전국으로서의 피동적이고 수세적인 인식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의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수반한 자주성 회복기운이 강화되는 새로운 시기를 맞아, 이 전쟁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인식이 점점 힘을 얻어가면서 과거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다양성을 발휘해 가고 있으며, 또 이러한 전쟁인식에 대한 다양성은 전쟁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인식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인식과 재평가 작업과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전후총결산의 기본적인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거 전쟁에 대한 일본사회에서의 인식태도는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태평양전쟁사관’으로 이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에 침략을 감행했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미국, 영국 등과 무력충돌하면서 유럽의 민주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군사적인 도발을 일으켜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방적인 도발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국주의 세력은 특히 한국, 중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과 수탈 그리고 살육 등을 감행하면서 이들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렇듯 당시의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세력이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성에 저항하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들 전쟁수행과정에서 아시아 지역들에 대한 침략과 수탈 등을 자행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결과 시켰다는 ‘태평양전쟁사관’은 그 후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태평양에서의 미, 영과의 전쟁이라는 두 개의 서로 연관되면서도 엄밀하게는 분리된 성격으로 이 전쟁의 성격을 설정하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또 다른 전쟁 관으로 연계되고 있기도 하다. 여하튼 이러한 전

쟁관은 패전일본이 상당기간 견지해온 '패전사관'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후 역사학의 초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패전사관은 현금의 전후총결산시기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극복과 초극의 역사적인 사관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이 태평양전쟁관은 당초부터 미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여기에서는 포츠담선언으로부터 일본의 점령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전제는 '그 전쟁'은 일본군국주의(일본 파시즘)에 의한 아시아나 미국에 대한 침략전쟁이며, 미국에 있어서는 아시아해방과 동시에 파시즘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었던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 위에서, 미국은 군국주의자로부터 아시아의 민중들 뿐 아니라, 일본의 대중들을 해방, 일본을 민주화한다고 하는 '대의'를 내걸었고 일본의 점령정책은 정당화시켰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극동국제군사법정(동경재판)도 이러한 역사관을 기정사실화하려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A급 전범'이라는 것도 이러한 미국식 논리 속에서, 침략전쟁의 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해(다른 말로 하면 일반대중을 구제하기 위해), 미국이 만들어 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제2차 대전이란 세계제패를 계획하는 일부 파시즘국가에 의한 침략으로부터 자유나 민주주의를 내걸고 대다수 인민, 대중을 보호, 또 해방하기 위한 세계전쟁으로 그 전쟁을 편파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이는 특히 패전 후 일본을 점령 통치하던 연합군사령부가 강하게 주장하던 전쟁관으로 미 점령당국은 일본이 이 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는 부르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그 전쟁을 '태평양전쟁'이라고 명명토록 함으로서 그 후부터 이 명칭이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며, 여기서도 이 명칭이 갖는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¹¹⁾

둘째, '15년전쟁사관'으로 이는 '태평양전쟁사관'에 이어 1970년경부터 일본의 전후 역사학에 등장한 것으로 여기서도 과거의 전쟁은 일본인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15년전쟁'이란 1931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함으로써 시작된 중·일전쟁(일본에서는 만주사변이라 명명)으로부터 시작하여 1945년8월15일 일본의 태평양전쟁에서의 패배에 이르는 15년간 일본에 의해 자행된 제국주의 전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전쟁은 일본의 하나같이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통하여 상대국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일본 측의 가해에 의해 발생한 전쟁이다.

70년대 小學館에서 간행되었던 『昭和の歴史』시리즈가 바로 이러한 역사인식에 근거한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관에서는 확실히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하는 양자선택적인 문제구성의 단순성 때문에 특정사관은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

10) 佐伯啓思, 『日本の論点2006』, (文藝春秋), pp.218~219.

11) 鈴木貞美, 『日本の文化ナショナリズム』, (平凡社新書, 2005), p.223.

지 가운데 하나의 입장을 자기의 것으로 하여야 했으며, 이 15년전쟁 사관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일본인들의 가해자로서의 인식이 전제



‘15년전쟁’이란 1931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함으로써 시작된 중·일전쟁으로부터 일본의 태평양전쟁에서의 패배에 이르는 15년간 일본에 의해 자행된 제국주의 전쟁을 말하는 것

가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인식을 기저로 하는 전통적인 사관에 대한 일종의 도전적인 입장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15년전쟁관’은 그렇게 강한 지속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복고적인 일본피해론과 전쟁공허론으로 협공을 당하게 된다.¹²⁾

셋째, ‘대동아전쟁사관’으로 이는 일본이 전쟁에 뛰어든 것은 당시 일본이 ‘ABCD’(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의 포위망에 둘러싸여 국가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대응으로, 이러한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국가생존을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역사관이다. 그리고 이 사관은 일본의 전쟁개입의 불가피성 뿐 아니라,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전쟁 즉 대동아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되었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그들의 독립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아시아의 각국의 독립회복에서의 전쟁공헌론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긍정적 전쟁론 내지는 전쟁불가피론의 입장으로 이는 앞의 ‘태평양전쟁론’과는 대치되는 극단적이며 일방적인 전쟁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교전 쌍방 간에 처음부터 전략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국력의 차가 있었다고 하면 그 전쟁은 애당초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제2차 대전에서의 일본이 행한 전쟁도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전쟁에 일본이 뛰어든 것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1948년에, GHQ노동국자문위원회의 멤버였던 Helen Mears의 『アメリカの鏡・日本』(Mirror for Americans : Japan), (アイネックス, 1995)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주만공격이라는 사건은 “‘세계정복’을 기도한 야만인에 의한 ‘일방적’이고 배반의 공격이었는가, 혹은 압도적인 강한 나라와의 힘의 개입에 끌려들었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경제봉쇄에 대해 도전한 공격되었던 것인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후자였다고 말 한다. 이어 그는 일본의 옥쇄적

12) 『世界』(岩波書店), 2005년 11월호, pp.65-67.

전술에 대해서도, “죽은자가 많았던 것은, ‘항복보다 죽음을 선택’ 한 광기의 각오에 의한 것은 아니라, 연합국 측의 화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이며, 일본병이 피로, 공포, 히스테리로부터 집단자결을 도모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진주만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을 개시했으나, 아시아에의 진출은 ‘오렌지계획’¹³⁾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미 기정방침이었다는 주장도 일본의 ‘어쩔 수 없는 대응’의 논리에 추가되고 있다. 獨協大學의 中村繁 명예교수는 『大東亞戰爭への道』(展轉社)에서 “19세기말 이래 문호개방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미국 극동정책과, 특히 만몽과의 특수 관계 유지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대륙정책과의 상극 때문에 생긴 쟁탈전”이 ‘主流’이며, 이것에 소련의 “공산주의로부터 일본과 東아시아를 지키려는 반공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일미대륙정책과 연결된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대동아전쟁의 기본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역사가 Christopher G. Thorne의 『太平洋戦争とは何だったのか』(草思社)에서는 구미세력이 일본과 충돌한 오랜 역사로 묘사, “일본이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서구 제국의 종언을 재촉했다.”고 결론, 민주주의세력에 대한 침략전쟁을 했다고 이해되는 일반적인 시각에 역행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 왜곡된 입장이 바로 일본의 대동아전쟁론의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논거이기도 하다.¹⁴⁾

이러한 대동아전쟁관은 1941년12월의 진주만공격이 시작되기까지의 당시 일본의 논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특징이나, 전후 60년 일본에 대한 전쟁책임론과 이에 따른 전후보상책임이 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이와는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일본에 의한 전쟁발발의 불가피성과 이 전쟁이 가지는 여타 아시아국가의 독립내지는 발전에 대한 기여론은 여전히 상당한 영역에서 힘을 가지고 유지되어온 것도 사실이며, 전후총결산이 시대적 과제로 새롭게 등장한 현금의 일본적 상황에서는 더 한층 힘을 받고 있는 전쟁관의 하나로 되살아나고 있다.¹⁵⁾

넷째, ‘보통전쟁론’으로, 이는 그 전쟁은 근현대의 세계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다시 말해 유럽의 19, 20세기에 흔히 있었던 것과 같은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ABCD)간의 보통의 전쟁으로 이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전후총결산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中曾根 전 수상등이 앞장서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 입장은 태평양전쟁은 과거 유럽에서 있어왔던 그 수많은 전쟁과 그 성격이나 내용에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은 평범한 보통의 전쟁의 한 형태라는 것이기

13) 미국이 일본을 침략하려는 계획은 일찍부터 마련되어 치밀하게 준비되어왔다는 주장, 저자의 저서명으로부터 이러한 미국 음모설을 ‘오렌지계획’으로 불러왔다. Edward Miller, 『オレンジ計畫:アメリカの對日侵攻50年戰略』

14) 『日本の論点2006』(文藝春秋, 2005), p.223.

15) 『日本の論点2006』(文藝春秋, 2005), pp.214-223.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지나치게 침략성이나 공헌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中曾根에 의하면 이 전쟁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침략 혹은 침략적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등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군사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력적인 개입자체가 그 전쟁의 본질적인 의미인 보통전쟁으로서의 성격을 크게 손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보통전쟁론은 과거 일본의 전쟁이 가지는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이는 세계사에서 빈발되고 있는 교전당사국간의 이해상충에 의한 전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전쟁이 가지는 일본의 의도성과 침략성을 희석시킴은 물론, 한국 중국 등 아시아국들에 가한 전쟁피해에 대해서도 이를 불가피한 전쟁수행의 대가의 수준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상대화시키고 있다.

中曾根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보통전쟁론의 입장은 그 후 태평양전쟁을 이제는 '同詩代史'의 맥락에서 탈피하여 '역사'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인 입장에서 그 전쟁을 평가할 때는 이미 그 전쟁은 '침략'도, '聖戰'도 아닌 단순한 '역사물'의 한 영역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하는 당대의 일본의 '역사학과'들의 논리적 원류라고 볼 수도 있다.¹⁷⁾

이런 의미에서 볼 때 普通國家論은 그 성격에 있어 위의 '대동아전쟁론'과 아래의 '역사적전쟁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전쟁론'으로, 이는 태평양전쟁은 다양한 함의를 가진 전쟁이나, 그러한 그 전쟁이 내포해온 다양한 함의는 그것이 '同詩代史'적 환경에서 벗어나 '역사'의 장으로 그 위치를 변경시킬 때라야 비로써 보다 새롭고 유의미한 새로운 함의로 되살아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이 전쟁은 비로써 기억 속에 하나의 기록으로 살아서 작용하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평양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는 국민의 1할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전쟁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교훈을 찾아내는 일반적인 역사적인 사이클 속에서 기억하는 세대가 감소하고 그 기억을 같은 세대 또는 다음 세대가 기록으로 남기고, 또 다음 세대는 그 기록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선택하여 그것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 나가는 사이클 속에서 지금의 상황은 태평양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기록하는 세대가 감소하고, 교훈화해야 할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태평양전쟁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처는 바로 이를 '同詩代

16) <http://www.yatchan.com/seiji/tenchi/tenchi2004/0527.html>

17) 『日本の論点2006』(文藝春秋, 2005), p.214.

史'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이를 역사의 입장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¹⁸⁾

특히나 이 입장에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전쟁책임과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미 공식적으로 사과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이나 재산, 청구권 문제도 관계국들 간에 일괄하여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은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리를 마친 전쟁은 이제 '역사'의 장으로 넘기고, 이제부터는 과거사를 거울삼고 보다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 가는데 더 이상 과거의 전쟁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⁹⁾

<극동군사재판>

극동군사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1946年5月3日에 개정, 1948年11月12日에 형이 선고됐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리한 연합국이 일본인 중대전쟁범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재판으로 여기서 28명이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에 대한 죄' 등에 의해 기소되어 병사나 면소된 사람을 제외한 2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재판은 '東京裁判'이라고도 한다. 이 재판소는 1946년 1월 19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특별성명서'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총 17조)에 의해 설치되어, 3가지 유형의 범죄를 설정²⁰⁾, (a) 평화에 관한 죄, (b) 통상적인 전쟁범죄²¹⁾(c) 人道에 관한 죄 중 (a)에 관련되어 기소된 중대 전쟁범죄자에 대해서만 심리·처벌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평화에 관한 죄를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조약을 위배한 전쟁'을 계획·개시·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죄 또는 그 계획·모의에 참가한 개인·단체구성원이 범한 죄로 규정함으로써 이

18) 위의 책, pp.215~217.

19)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qa/01.html~10.html>

20) 'Class A'는 'crimes against peace', 'Class B'는 'war crimes', 'Class C'는 'crimes against humanity'.

21) 제2차세계대전에서 새로 전쟁범죄로 간주된 것으로, 평화에 대한 죄란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조약·협정·서약에 위배되는 전쟁을 계획 준비하고 실행한 일, 또는 이들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계획이나 모의에 참가한 일'(국제군사재판소 조례 6조,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5조) 등을 말한다. 인도에 대한 죄란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일반인민에 대하여 이루어진 살해, 멸종적인 대량살인, 노예화, 강제적 이동,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범죄가 이루어진 국가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사실 여부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대한 죄의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또는 이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정치상·인종상 또는 종교상의 이유에 입각한 박해를 말한다. 제2차세계대전에서는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전쟁범죄가 이루어졌으며,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과 일본의 전쟁 지도자를 '평화에 대한 죄', '일반적인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독일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와 일본 도쿄(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많은 사람을 유죄판결하여 형을 집행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범재판에 대해 ①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에 대한 죄는 국제법상 충분히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사후법(事後法)의 적용이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된다는 점, ② 소추(訴追)된 개인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행동한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 ③ 재판소가 연합국측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침략전쟁이나 인종박해(人種迫害)는 국제사회(인류)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화의 유지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며, 국제법의 발전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들 중대 전범자를 A급 전범자로 규정하였다.²²⁾

극동군사재판은 1946년 2월 18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D.맥아더에 의하여 웹(William Webb) 재판장(오스트레일리아)을 비롯한 10명의 재판관(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인도·네덜란드·필리핀·뉴질랜드에서 각 1명)과 케난(Joseph Keenan)(미국)을 수석검찰관으로 하는 30여 명의 검찰관이 임명됨으로써 발족되었고, 이에 따라서 1946년 4월 29일 東條英機 이하 28명의 피고가 A급 전범자로 정식 기소되어, 이 해 5월 3일부터는 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각 피고인이 선정한 28명의 일본인 변호인단과 2명의 미국 측 변호인단이 참가하였다. 법정은 48년 11월 12일, 심리하는 도중에 사망한 松岡洋右, 永野修身와 정신이상을 일으킨 大川周明을 제외한 25명에 대하여 전원 유죄를 인정하여,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금고 20년 1명, 금고 7년 1명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동경재판에 대해 ‘전후총결산’의 주된 논리는 그 재판은 “사후 법에 의한 재판, 전승국이 검사와 재판관을 겸한다고 하는 전승국에 의한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사실인정의 오류”라고 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A급 전범’이란 전후의 동서냉전이 본격화되지 않았을 때, 전승국인 연합국이라는 환상의 공동체가 만들어 낸 ‘척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철저히 재판과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두고 있다.²³⁾ 이렇듯 전후총결산의 논리에 의하면 동경재판은 그 절차와 내용 판결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정당성은 재판 당시부터 커다란 문제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동경재판에 대한 전후총결산의 논리구조는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절차적 하자>

먼저, 사후법적용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동경재판은 승리한 쪽이 자기 맘대로 재판의 규칙이나 원칙을 결정,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에 대한 죄’ 등, 지금까지 없던 죄를 법률로 만들어 그것을 적용하여 행한 것으로, 사후에 얼마든지 만들어 재판해도 좋다고 하는 국제법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있을 수 없는 재판으로 불법이라는 논리로 동경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中曾根은 이 같은 입장에서 동경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승인할 수

22) A, B급은 죄의 무게에 의한 등급이 아니라, 각 각 “전쟁전반에 대한 지도적 역할에 대한 책임”, “통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지휘, 명령, 방지의무 위반의 책임”, “통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실행자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구분이다. 사형에 처해진 수는 A급 7명에 대해서 B, C급 984명으로 B, C급이 훨씬 많다.

23) 『中央公論』, 2005년9월호.

없고, 이에 따라 당연히 이 재판에서 단죄된 전범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러한 입장이 전후 태평양전쟁을 단죄한 동경제판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라고 볼 수 있다.²⁴⁾

특히 A급전범에게 적용됐던 ‘평화에 대한 죄’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수행하고, 또는 공동모의에 참가한 죄)는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에 규정된 범죄이며, 피고들의 행위가 행해진 후에 제정된 이른바 사후 법이었다. 사후 법에 의한 처벌금지, 근대 형벌론의 기본원칙일 뿐 아니라, 이러한 논리는 B. C급 전범에 적용된 ‘인도에 대한 죄’도 동일하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에서 동경제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주요한 반박의 내용이다.²⁵⁾

이 같은 주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이 바로 인도 칼카타대학 법률학 교수였던 팔 (Radhabmod Pal) 동경제판의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제시했던 소수의견이다. 팔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평화에 대한 죄’ 등을 법리적으로 추급, “동경제판은 전승국에 의한 의식화된 복수”라며 피고 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재판은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치사회의 철칙인 법의 불소급원칙까지 침범, 죄형법정주의를 무너트린 복수재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원무죄”²⁶⁾라고 주장 했다. 그는 또 비전투원의 생명재산의 무차별과괴가 위법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의한 원자폭탄의 사용 그것이 나치의 유대인 절멸 지령에 유사한 유일의 케이스라고 까지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팔 판사의 소수의견서는 웹 재판장에게 거부돼, 법정에서 낭독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당시 프랑스의 베르난(Henri Bernard) 판사도 “이 재판은 법의 적용 및 절차에 있어도 잘못이 있다”고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11명의 판사가 한자리에 모여 재판에 대해 협의 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고 이 재판이 가지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기도 하다고 인용하고 있다.²⁷⁾ 뿐만 아니라 동경제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은 1951년5월, 미국상원군사외교합동위원회의 석상에서, 맥아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은 “일본이 전쟁에 돌입한 목적은, 대부분이 안전보장상의 필요에 내몰렸기 때문이다.”²⁸⁾고 증언한 사실에서도 그들 전쟁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 가지는 한계성의 논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그 후 A급 전범 무죄론이나, 동경제판부정론의 근거가 돼, 자민당 정치가나, 보수계 지식인들의 입으로부터 수 없이 반복, 많은 설화사건을 일으키기도 해왔다.²⁹⁾

24) <http://www.yatchan.com/seiji/tenchi/tenchi2004/0527.html>

25) 『日本の論点2006』, p.228.

26) <http://www1.toptower.ne.jp/~katumata/sub514.html>

<내용상의 하자>

동경재판의 부당성은 또 그 재판이 가지는 내용상의 문제점을 가



일방적으로 구성된 편파적인 재판에 의해서 규정된 'A급전범'이라는 것도 점령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고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먼저 동경재판이 일본이 “위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침략적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개시했다”라는 케난 검사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이는 진실을 크게 왜곡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소내용에 의해 진행된 동경재판이 객관적이지도 정당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동경재판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후 일본에서 일찍부터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태평양전쟁은 서구열강의 아시아침략 전쟁의 맥락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독립된, 그리고 일본에 의한 일방적인 서구침략이라는 관점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작가 林房雄은 1964년의 『大東亞戰爭肯定論』(夏目書房)에서 “나는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은 1백년전쟁의 종착역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서양열강의 아시아침략의 역사 속에서 태평양전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철학자 上山春平은 61년의 『大東亞戰爭遺産』(中共新書)에서 “극동재판의 원리가 된 ‘태평양전쟁’ 사관의 가치적도는 조선전쟁, 알제리아 전쟁, 스위스전쟁에서의 구 연합국의 행동에 의해, 차례차례 의심되는 것으로 되어왔다.”고 지적, 극동재판이 내건 ‘문명’과 ‘정의’가 괴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⁰⁾

동경재판의 문제점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논리는 그 재판의 구성이 점령군들이 일방적으로 구성된 일방적인 재판으로 이는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리에 의하면 이 일방적으로 구성된 편파적인 재판에 의해서 규정된 'A급전범'이라는 것도 점령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5년5월 森岡正宏 労働政務官이 자민당 국회의원회에서 小泉수상의 靖國神社 참배에 찬의를 표한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평화나 인도에 대한 죄를 멋대로 점령군이 만든 일방적인 재판이다. A급 전범의 유족에는 연금을 주고 있으며, 일본국내에는 벌써 죄인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이어 6월24일, 靖國神社가 “A급전범의 전쟁책임은

27) <http://www1.toptower.ne.jp/~katumata/sub514.html>
28) 『日本の論点2006』, p.228.
29) 『日本の論点2006』, p.227.
30) 『日本の論点2006』, p.218.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東京新聞』으로부터의 질문에 대해, “전쟁재판수형자는 국내에서 범죄자 등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재판 그것에 대해서도 “동경재판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회답하고 있음은 동경재판과 그에 의해 규정된 ‘A급전범’에 불인정에 대한 전후총결산논리의 명확한 입장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³¹⁾

특히나 일본이 동경재판을 수락 했는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래에 들어서 는 일본이 애초부터 이 재판을 수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위와 같은 잘못된 구성으로 잘못내린 재판의 결정은 과거에나 현재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그들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³²⁾ 제11조의 “Japan accepts the judgments …” 를 그동안은 일본이 동경재판을 수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여기서 사용된 ‘judgments’ 를 재판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것은 일본이 단지 판결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봐야 정확하다고 하는 渡部昇一 씨 등의 주장이 동경재판 부정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³³⁾

동경재판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또 하나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양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다. 동경재판은 뉘른베르크재판³⁴⁾을 근거로 하여 행해졌으나, 쌍방의 판결을 비교하면, 독일에서는 사형된 피고의 대부분이 전쟁범죄에 대한 것으로, 평화에 대한 죄의 형양은 가벼웠음에 대해서, 동경에서 사형에 처해진 피고는 침략의 공모자로서 평화에 대한 죄를 물은 것의 대부분이었다. 이 차이는 독일에 대한 처리에 비해, 일본에 대한 자세가 보다 보복적이며, 정치적이었음, 즉 일본을 악으로 규정시킨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치에서 호로코스트와 같이, 민족이나 사상으로 선별한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대량학살 하도록 한 범죄를 일본은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쟁을 한 이상, 다양한 측면에서 책임을 물

31) 『日本の論点2006』, p.228.

32) 吉田茂는 『回想十年』(中公文庫)에서, 강화조약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강화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사고는 다 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로 대일강화회의는 종래의 포츠담회의나, 베르사이유 회의와 같이, 전승국 측과 패전국측이 상대하여 강화조약을 토의하는 회의와는 결코 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다. 이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제창한 무조건항복방식이나, 또 이에 따른 포츠담선언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연합국측이 평화조약에 의해 정하려고 하는 사태를, 이미 점령기간 중에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 즉 소위 기정사실을 만들어 두었다. 따라서 평화조약은 새로운 사태를 만들어 낸 다기 보다,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사태를 확인하는 것이 된 것이다.”

33) 『産経新聞』, 2005년6월18일자.

34) 재판소가 뉘른베르크에 있었다 하여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도 한다. 이 재판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4개국 간에 체결된 국제군사재판의 설립에 관한 협정(1945년 8월 8일, 유럽 추축국의 중요 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과 그 부속국 국제사재판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는 그후 19개 연합국이 가입하였다. 이 협정은 모스크바 선언(1943년 10월 30일)의 원칙을 확인하고(전문),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 한하지 않는, 제2차 세계대전 전체에 일반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전쟁범죄인을 재판하는 것과(1조), 특정한 지리적 장소에 한한 전쟁범죄자는 그 장소의 소속국으로 보내어져 그 나라의 재판소에 의하여 재판받게 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 아래 국제군사재판 조례의 법적 근거에 의해 유럽 추축국의 중요한 전쟁범죄인의 공 정하고 신속한 심리와 처벌을 위하여 국제군사재판소가 설립된 것이다. 이 재판은 후에 실시된 공동국제군사재판과 함께, 침략 전쟁을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고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야 하고 반성해야 할 사유가 있었으나 그것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교전국에 비해서 많다고는 도저히 말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과정에서는 극동국제재판소 조례는 사후입법이며 사후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전승국만이 평화에 대한 죄에 대해서 재판을 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의 행위인 전쟁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 포츠담선언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범죄인은 종래의 개념의 전쟁범죄인으로 '평화에 대한 죄' 라고 하는 기괴한 개념은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이러한 재판은 항복조건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등의 이론이 제시되었으나 변호 측이 준비한 방대한 자료와 함께, 거론되지도 않고, 피고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고 東條英機 이하 7명이 사형, 木戶幸一 이하 16명이 종신징고, 2명이 유기징고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상과 같이 전후총결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경재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후법에 대한 재판, 전승국이 검사와 재판관을 겸한다고 하는 전승국에 의한 재판, 법정에서의 사실인정의 부정확 등의 세 가지 사항 그 모두는 너무나 자의적으로 이 재판을 단순화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하는 등으로 논리의 객관성을 결하고 있음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경재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牛村圭는 다음과 같이 동경재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이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동경재판이 '통상의 전쟁범죄'에 추가하여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라는 사후법에 의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서 그는 동경재판이 법정주의라고 하는 근대법의 원칙에 저촉하는 재판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히 법적근거를 가지는 논리이기는 하나 죄형법정주의도 하나의 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상사의 입장에서부터는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 (without a law, there is no crime) 라는 즉 대륙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대응하는 것은 없고, 오늘날에도 이 점에 관해서는 확실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 극동군사재판 피고인석.

영미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는 엄밀한 원칙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경재판은 주지하는 것과 같이 근대 일본이 친숙한 대륙법이 아니라, 영미법이라는 이 문화의 재판이었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입법의 금지라고 하는 원칙에 저촉했다는 비판은 크게 설득력이 있는 것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승자에 의한 재판’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동경재판의 문제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전쟁사에서 보면 전쟁기간이나 전후처리정은 재판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마저 생략된 즉결처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같은 승자들

극동 군사재판 판결내용

〈교수형〉 7명 주된 직위 (*는 靖國神社에 합사)	
東條英機	육군대장, 수상
廣田弘毅	수상, 외상, 조소련대사
土肥原賢二	육군대장, 奉天특무기관장
板垣征四郎	육군대장, 支那파견군총참모장
木村兵太郎	육군대장, 미얀마 방면군 사령관
松井石根	육군대장, 中支那方面軍사령관
武藤章	육군중장, 육군성 군무국장
〈종신형〉 16명	
木戶幸一	내大臣
平沼騏一郎	수상, 추밀원의장
賀屋興宣	藏相
鳥田繁太郎	해군대장, 海相, 해군군령부총장
白鳥敏夫	주 이탈리아대사
大鳥浩	육군중장, 주 인도대사
荒木貞夫	육군대장, 陸相
星野直樹	만주국총무장관, 동조내각서기관장
小磯國昭	육군대장, 조선총독, 수상
畑俊六	육군원수, 支那파견군총사령관
梅津美治郎	육군대장, 관동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南次郎	육군대장, 陸相, 조선총독
鈴木貞一	육군중장, 기획원 총재
佐藤賢了	육군중장, 육군성 군무국장
橋本欣五郎	육군대좌, 大日本赤誠會統領
岡敬純	육군중장, 해군성 군무국장
〈금고 20년〉 1명	
東郷茂徳	외상, 주인도, 주소련 대사
〈금고 7년〉 1명	
重光葵	외상, 주 영국 대사
〈판결전 사망〉 2명	
松岡洋右	외상, 만철총재
永野修身	해군대장, 해군 군령부 총장
〈정신장애로 인정돼 免訴〉 1명	
大川周明	국가주의운동가

자료 : 〈讀賣新聞〉, 2005년6월9일자.

만에 의한 재판이라는 것으로 동경제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인정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물론 당시에 있어서도 학문적 정확성을 결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입장은 자주 당시 팔 판사가 재판의견서에서 동경제판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인정과과정에서의 부정확성이 많아 정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른바 ‘팔 의견서’에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전적으로 재판의 자의성에 근거한다고 보기보다는 당시의 번역의 미숙이나 그 밖의 상황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책임전가로 동경제판 그 자체의 문제점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³⁵⁾

이밖에도 동경제판에서는 미국에 의한 원폭투하, 소련의 일·소중립조약침범과 시베리아억류 등 승자에 의한 전쟁범죄 이외에, 천황의 전쟁책임의 문제가 재판되지 않았다는 문제로서 남았다. 御廚貴 동경대 교수는 천황의 전쟁책임과 A급전범의 관계에 대해서 “A급전범이 희생양으로서 천황, 일반병사의 죄를 뒤집어 쓴 면은 무시할 수 없으며, 천황을 면책하는 이상, A급전범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동경제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³⁶⁾

야스쿠니신사문제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의 ‘A급전범’을 비롯한 과거의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 군속과 그에 준하는 사람들을 慰靈, 顯彰을 위한 시설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靖國神社에 대한 수상을 비롯한 일본의 정관계인사들의 참배의 문제 또한 전후처리총결산의 주요한 현안의 하나다.

일본정부는 靖國神社에 대한 참배문제는 과거전쟁에서의 전몰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이른바 ‘不戰의 盟誓’를 위한 합당한 행위라고 강변하면서 이에 대한 참배를 강행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신사에 합사된 전쟁범죄자들이 일으킨 전쟁행위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받은 한국, 중국 등의 주변 국가들은 일본이 ‘A급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를 그만두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에 대한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 이에 대처하면서 이 문제는 일본 전후총결산의 중요한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5) 牛村圭 “歴史認識論争を‘文化の裁き’とするながれ~東京裁判再考”, 『中央公論』, 2006년2월호.

36) 『中央公論』, 2005년8월호.

<경과>

靖國神社는 1869년(명치2년)6월29일, 戊辰戰爭의 관군 측 전사자의 慰靈, 顯彰을 위해 東京招魂社로서 창건되었다. 10년 후, 명치천황의 명령에 의해 靖國神社로 개명됐고, 육해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別格官幣社가 되었다. 전후에는 국가신도의 폐지에 수반하여 國家護持의 손을 떠나 단일 종교법인이 되었다.³⁷⁾ 靖國神社는 신화 상의 신이나 역사상의 인물을 제사하는 일반신사와는 달리, 戰病死한 ‘英靈’ 이라고 부르는 군인군속과 그에 준하는 사람들로, 전전은 육해군, 전후는 厚生省의 선고를 거쳐 祭神으로 제사지냈다.³⁸⁾

일본이 패전 후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를 한 것은 종전 다음해인 1945년10월 幣原수상이었으나 그 후는 GHQ의 지시로 전몰자에 위령제에 대한 공개적인 관여는 일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 후 강화조약이 서명되자 吉田수상은 그 비준을 기다리지도 않고 여전히 점령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몰자의 위령제에 대한 공인의 참배는 괜찮다”고 하는 점령군 당국의 허가를 얻어 공식참배를 행함으로서 吉田이나 유족 모두가 감개무량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전후 이렇게 시작된 수상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吉田수상이 4회, 岸수상이 5회, 池田수상 5회, 佐藤수상 11회, 田中수상이 5회씩 각 각 수상으로서 공식 참배하여왔다. (小泉수상 5회) 이렇듯 전후에도 역대의 수상이나 집권당의 지도자는 靖國神社에의 참배가 이어져 왔으나, 특히 문제가 된 것은 1985년에는 당시의 中曾根 수상이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에 ‘공식참배’, ‘靖國 공식참배는 위헌소지를 부정할 수 없다’는 80년의 일본정부 통일견해를 무력화 시킨 후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小泉수상은 2001년 총선거에서 ‘전몰자위령의 날에 靖國神社에 참배한다.’ 고 공약, ‘전몰자에 애도의 마음을 바쳐, 不戰의 맹서를 하기 위해 참배한다.’ 고 참배를 반복함으로써, 중국, 한국의 반발을 초래, 심각한 외교문제로 발전하고 있다.³⁹⁾

수상에 의한 참배의 시비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의 하나는 일본헌법 제20조의 ‘政經分離’ 와의 관계다. 小泉수상의 靖國參拜로 종교의 자유가 위협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05년11월까지 8건의 소송이 제기돼, 11건의 판결이 났다. (地裁7건, 高裁4건). 2004년4월에는 福岡地裁가, 수상의 靖國參拜는 공무이며, 헌법에서 금하는 종교행위에 해당한다며 처음으로 위헌판단을 내렸다. (中曾根수상의 참배에 대해서는

37) 高橋哲哉, 『靖國問題』(筑摩書房, 2005)

38) 『日本の論点2006』, p.238.



1985년에는 당시의 中曾根 수상이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에 ‘공식참배’, ‘靖國 공식참배는 위헌소지를 부정할 수 없다’는 80년의 일본정부 통일견해를 무력화 시킨 후부터였다.



▲ 靖國神社社號碑와 神社에 참배하고 나서는 고이즈미 수상.

1992년에 大阪高裁가 ‘위헌의 의심’을 지적했다.) 이어 2005년9월에는 大阪高裁로서는 처음으로 위헌판단을 내렸다. 어느 재판에서나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平野武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위헌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라고 하는 헌법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경중을 올리는 것은 재판소의 하나의 임무로 타당하다.”고 논평 하고 있다.⁴⁰⁾

<A급전범 문제>

靖國神社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A급전범’ 합사 문제다 78년10월 靖國神社는 동경재판

靖國神社에 참배한 일본의 현직수상

東久邇宮揆彦(염)	1945.0818일/1회
幣原喜重郎	1945.10/11월/2회
吉田茂	1951-54년의 春秋例大祭 등 5회
岸信介	1957년, 58년의 例大祭 전후에 2회
池田勇人	1960-63년의 秋의 例大祭 등 5회
佐藤榮作	1965-72년에 春秋例大祭 등 11회
田中角榮	1972-74년에 春秋例大祭 등 6회
三木武夫	1975-76년에 春秋例大祭 등 3회 (8월15일 1회를 포함)
福田赴夫(부)	1977-78년에 春秋例大祭 등 4회 (8월15일 1회를 포함)
大平正芳	1979-80년에 春秋例大祭 등 3회
鈴木善幸	1980-82년에 春秋例大祭 등 8회 (8월15일 3회를 포함)
中曾根康弘	1983-85년에 春秋例大祭 등10회 (8월15일 3회, 85년은 전 각료 대동)
橋本龍太郎	1997년7월에 1회
小泉純一郎	2001.8.13/2002.4.21일 例大祭/2003.1.14/2004.1.1/2005.10.17 등 5회

<자료> : 『日本の論点2006』, p.239에서 재인용.

에서 유죄로 여겨진 A급전범을 ‘昭和殉難者’로서 합사했다. 전후 8회에 걸친 昭和천황의 靖國參拜는 75년11월을 최후로 그만뒀으나 그 이유는 이 A급전범 합사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서 외교평론가인 岡崎久彦은 “소화50년에 당시의 三木수상이 ‘私的’ 참배라고 말함으로써 천황의 참배를 公的·私的으로 구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참배할 수 없었다.”고 하여 “천황의 靖國參拜와 A급전범 합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영향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⁴¹⁾ 지금의 천황은 즉위 이래 한번도 참배하고 있지 않다.

靖國神社에 대한 일본수상의 참배에 대해서는 일본국내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수상참배를 긍정하는 논자들의 대부분은 동경재판이 법적, 조약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53년8월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쟁범죄에 의한 수형자의 사면에 관한 결의’가 채택돼, 구 적국의 전쟁범죄재판에 의한 형사자 등은 국내법에서의 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면조치가 취해진 것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철학자 梅原猛 같은 이는 이와는 달리 “A급전범이란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을 개시한 것은 어쨌든, 분명한 패전을 방지하여 수백만의 인간을 죽였을 뿐 아니라 중국,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 책임자”이며 “A급전범이 모셔져 있는 靖國神社에 참배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수상의 靖國參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⁴²⁾

수상의 참배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찬반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分祀’와 ‘별도의 추도시설 건립’안이다. ‘분사’안은 A급전범을 본전과는 다른 곳에 모시자는 안으로 中曾根은 이를 “나는 동경재판은 승인하지 않는다. 때문에 전범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교적인 타개방책으로서 정치가는 생각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 양방이 어느 정도 타협하여 이야기 하여,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의 전진을 하는 것이 외교의 요체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참배하는 장소를 바꾼다. 요컨대 배전의 장소를 이동한다. 그러한 생각에 서서, 나는 분사라든가 분전이라는 것을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사의 입장에 대해 靖國神社 측은 신도에 있어서는 예컨대 하나의 신령을 분사하더라도 본래의 신령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여 분사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은 靖國神社와는 다른 별도의 국립추도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39) 『讀賣新聞』, 2001년7월29일자.

40) 『讀賣新聞』, 2005년9월30일자.

41) 『諸君』, 2005년8월호.

42) PHP研究所 編, 『檢證 靖國問題とは何か』, (PHP研究所, 2002).

안이다. 이 안에서는 새로 만드는 추도시설은 전사자만이 아니라, 공습이나 원폭에 의한 일반민간희생자도 포함, 특히 교전상대국의 희생자도 포함한 모든 전몰자를 추도하는 무종교 내지 다종교적 추도시설을 말한다. 宮崎哲彌는 “하나의 종교 법인에 지나지 않는 靖國神社에 국가적인 위령 추도의 기능을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와는 다른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알링턴 묘지와 같이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추도시설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한다.⁴³⁾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도 명치이래의 역사를 가지고,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얻어온 靖國神社에 대신하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옥상옥을 만드는데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강하다.

대외정책의 재편

전후총결산을 통한 普通國家 창출을 위한 노력은 대외정책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小沢一郎은 우선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내정과 외교의 일체화’, ‘평화창출’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한 세부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內政과 外交가 분열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사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내정과 외교는 그 대상도 수법도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서로 다른 기관에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양자가 확연하게 분단되어 있는 상태는 좋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정과 외교의 일체화란 또 이들 두 가지의 정책이 국가로서의 이념이나 원칙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외교가 모든 국내정책을 압박케 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내정 상의 곤란함 때문에 외교가 발목이 잡히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일 이념, 원칙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일본이 가진 내정과 외교와의 갈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통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들 간의 정치개혁이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⁴⁴⁾

普通國家를 위한 내정과 외교의 일체화를 위한 내정의 정비작업으로 가장 중요한 조치의 하나는 ‘國旗國歌法’ 제정을 통한 ‘전후’의 극복작업이었다. 小淵내각이 전후정치의 총결산의 하나로 내세웠던 국기국가법이 1999년8월9일, 참의원본회의에서 찬성 166표, 반대71표로 가결 성립했다. 참의원의 찬성표는 70%, 7월22일의 중원의 찬성표 82%을 합하면 국회의원 3/4이상이 법제화를 지지했다. 이것은 일본이 ‘전후’를

43) 『朝日新聞』, 2005년4월22일.

44) PHP研究所 編, 위의 책, pp.106~108.

뛰어넘기 위한 하나의 구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반 '히노마루 기미가요' 를 정치쟁점화해 온 좌익이데올로기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민주주의' 가 극복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⁴⁵⁾

다음으로 대외관계에서의 '평화창출' 을 전략 수립이 普通國家論의 또 하나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일본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인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듯이 일본적인 대국으로서의 지위에 걸 맞는 의무를 수반하는 대외관계에서의 이른바 '노브레스 오브리쥬' 정신이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中曾根의 '外交原則' 을⁴⁶⁾ 기본으로 한 일미중심의 평화유지전략이 우선적으로 강조된다.⁴⁷⁾

한국, 중국을 비롯한 일본의 주변국들이 한결같이 일본의 단독행동을 경계하고 있으며 가장 관계를 중시해야 할 미국이 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이 취해야 할 평화공헌의 길은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평화유지전략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책인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국방의 기본방침 제1항에 UN중심주의를 내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미안보체제 아래 독립과 평화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냉전기에는 안보조약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단견으로 몰아붙이면서 小沢는 일미안보조약은 북대서양조약과 같은 단순한 방위를 위한 조약이 아니라 제2차 대전에서 역사, 민족, 언어, 문화 등이 전혀 다른 두 나라가 사력을 다해 싸웠으며 전쟁이 끝나자 강력한 유대를 맺은 것이 일미안보조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미안보조약은 3층 건물로 비유하면서 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층은 페리제독이 내일했을 때 체결한 일미화친조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미우호협력조약으로, 일미안보의 정식명칭이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이 되어 있는 것은 이를 말하며, 2층 부분은 가장 눈에 띄는 방위상의 약속이며, 북대서양조약에 상당하는 부분인데 일미안보조약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북대서양조약과 달리 일미안보조약은 1층과 2층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는 양국이 문화나 인종을 달리하고, 커다란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점 미국과 유럽은 인종, 문화,

45) 『讀賣新聞』, 1999년8월10일.

46) 中曾根은 10여 년 전부터 '外交4原則', '北韓5原則', '中國-臺灣5原則' 등을 그의 외교원칙으로 제시해 왔다. 있습니다. 그의 '외교4원칙' 은 ① 실력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다. ② 도박으로 외교를 하지 않는다. ③ 내정의교를 혼합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세계의 정통적 조류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5원칙' 은 ① 포괄적 해결을 하고 부분적 해결은 하지 않는다. ② 핵문제와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1관문이다. ③ 한국과 행한 합의 이상은 하지 않는다. ④ 경제협력은 최후단계에서 한다. 돈이나 경제지원은 최종단계에 결정한다. ⑤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삼위일체로 한다. '중국-대만 5원칙' 은 ①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과의 조약이나 선언을 준수한다. ② 중국은 평화통일에 철저하다고 말하면서 군사적 수법은 감히 말하지 않는다. ③ 그 대신 대만은, 독립이라든가 UN가입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④ 양안의 정치회의를 재개한다. ⑤ 통상, 통신, 통항의 三通政策을 실행하나, 단지 양안정치의 협정에 의한다. 등이다. <http://www.yatchan.com/seiji/tenchi/tenchi2004/0527.html>

47) PHP研究所 編, 위의 책, pp.112~126

종교, 언어 등이 거의 같고 또 19세기 초 미영전쟁 이래 2백년 가까이 본격적으로 싸운 적이 없어 우호조약도 부전조약도 필요 없기 때문이나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미안보조약을 기축으로 한 국제 활동을 전개하는 것만이 일본이 취해야 할 길이라고 본다는 것이 미일중심의 안보전략에 대한 小沢의 입장이다.⁴⁸⁾

자위대의 재편

자위대의 재편 또한 전후총결산의 주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은 동서대립이라는 냉전구조 속에서 명분적으로는 UN중심주의를, 방위전략으로서는 일미안보체제를 기축으로 하여 일본에 대한 직접 간접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 대처한다고 하는 ‘專守防衛戰略’이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개별적자위권은 보유하나 집단적자위권⁴⁹⁾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해석의 테두리 내에서 안전보장정책이나 방위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 자위대는 독자적인 능력으로 국가주권을 지키는 ‘군대’로서는 기능하지 못했고 일미안보체제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군사기능이 유효하게 발휘될 수 있는 체제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이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일본도 신질서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자, 그를 위한 중심적인 수단으로서 자위대가 아주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위대가 ‘專守防衛戰略’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질서구축은 심각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만약 자위대를 활용하려 한다면 당연히 자위대의 전략을 전환, 조직을 재편, 바람직한 전략 환경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단으로 위치지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수동적인 ‘專守防衛戰略’에서 능동적인 ‘平和創出戰略’으로 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정적이고 또 소규모적인 침략을 자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위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그 밖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될뿐 아니라, 군사력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 체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위대는 지식, 기술집약형 조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상황에 대비케 하기 위해서는 전수방위

48) 같은 책, pp.114~118.

49) 집단적자위권은 1945년10월, UN이 창설되었을 때 모든 국가가 가지는 고유권리로 UN헌장 제51조에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이 헌장의 어떤 규정도 UN가맹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의 고유의 권리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이 자위권의 행사에 있어 가맹국이 취한 조치는 곧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UN에 가맹한 1951년9월 이후는 이 헌장을 준수할 의무가 생겼다. 즉 일본국 헌법은 이 규정이 성립된 후인 1946년에 성립됐다.



를 기본으로 하는 '방위계획의 대강'은 기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군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civilian control'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⁵⁰⁾

헌법 개정

일본에서의 헌법개정의 문제는 전후총결산노선의 최종적인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전후 지금까지 외세에 의해 강요받아 만들어진 헌법이 전후일본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후체제를 명실공히 결산하기 하기 위해서는 이의 기본이 되는 전후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의 개정이 완료될 때에야 비로써 총결산을 완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전후총결산과정에서 헌법개정이 갖는 의미는 이의 전제이자 이의 완료를 의미하는 복합적인 함의를 가지는 전후총결산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中曾根은 일찍부터 새로운 헌법개정 즉 '평성헌법'이 성립될 수 있어야 비로써 '제3의 유신'이 성립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다.

“나는 헌법개정촉진을 전력투구해 왔으나,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전돼 일본의 체질이 변해 가는 데는 30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30년간의 조용한 혁명을 지금부터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제3유신'이라는 것이 平成憲法이 성립돼서부터 시작한다. 평성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5,6년 내에 만들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로부터가 문제다. 어떻게 하여 지금과 같은 미국적인 상대주의나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바꿀 수 없는 요소를 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기에 우리들 정치가의 임무가 있으며, 국민의 공동의 목표가 있음을 크게 정치가는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며, 우리들은 그것에 노력치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오늘의 소견이다.”⁵¹⁾

이러한 입장에 서서 그는 헌법개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50년, 1백년에 걸친 21세기 일본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표라고 보고, 그 중심적인 헌법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⁵²⁾

50) 위의 책, pp.118-122.

먼저, 前文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는 현행헌법의 전문은 맥아더사령부의 “방위는 미국이 담당하니까, 일본은 스스로 이를 행



‘보통의 나라’를 구축해 내려는 일본은 외부세계의 관찰자들 모두에게 여전히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전후 총결산 논리가 가지는 자가당착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할 필요는 없다.”는 점령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는 “일본의 방위는 사령부가 담당한다.”는 간접의 의사표시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자주성을 가지고, 일본국민의 역사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다함께 만들어, 다 함께 수호하고 발전해 가는 것과 세계의 운명이나 평화확보를 언급하는 내용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헌법에는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위기관리의 조문이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선언 등에 의한 행정조치는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사태에 국회에서의 논의하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것은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든가, 승낙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 부분도 맥아더 사령부의 “비상사태에는 여기서 대처한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였기 때문에 시대상황과는 걸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개정의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 제9조에 대해서도 中曾根은 제1항은 남겨둬도 좋다고 생각하나, 제2항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이것을 보지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 권은 인정치 않는다.”는 조항 역시 개정하여 역시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지킨다고 하는 의사를 명확해 해 둘 필요가 있으며, 그것도 개별적 자위권만이 아니라, 집단적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헌법의 정부 해석에서는 집단적자위권은 권리는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 일미안보조약에서도, UN헌장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답변에도 “집단적자위권은 있기는 하나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집단적자위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별적 자위권을 위해 존재하는, 넓은 범위 가운데 하나의 권력이다. 즉 자기 한 사람으로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상대와 연대하여 동맹조약을 체결하여 수호한다. 제후상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쪽이 도울 수 없다고 한다면 상대에 있어서는 일방적 편무적인 계약이며 당방은 피보호국의 형태가 된다. 당연히 상대를 도우지 않으면 독립국이 아니다. 당연히 당방은 어디까지 상대를 도울 가의 정도는 헌법이나 특별히 입법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에서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위권 발동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51) <http://www.yatchan.com/seiji/tenchi/tenchi2004/0527.html>

52) <http://www.yatchan.com/seiji/constitution/02-05.html>

동맹조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상대를 도울 자위권의 행사 즉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개별적자위권도 집단적자위권도 일체동근으로 개별적자위권을 위해 집단적자위권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결 어

이상에서 개괄한 일본의 전후총결산에 대한 기본구도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인 세계평화유지와 평화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미화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같이 일본이 '빼앗긴 50년'의 '전후'를 극복하고 온전하고 강력하고 '普通國家'로서의 실력과 위상 그리고 명분을 확보한다는 실질적인 목적이 일관되게 자리잡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역사인식의 전제가 되고 있는 태평양전쟁에 대한 입장에서도 과거의 피동적이고 수구적인 전쟁가해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일본이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말려든 불가피한 전쟁관에 날을 세우고 있으며, 태평양전쟁의 처리장이었던 극동군사재판(동경재판)에 대해서도 이를 수궁하는 종전의 명분론을 존치한 채로 이와는 역행하는 이 재판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당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의한 전쟁판단이나 전범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새로운 실질적인 논리를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일본수상의 참배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신사에 합사된 이른바 'A급전범'이라는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재단된 판단이기 때문에 靖國神社에 대한 수상의 참배는 더 이상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동경재판에 대한 수궁태도와는 다른 논리로 수상의 그곳 참배에 대한 옹호에 힘을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기초에서도 겉으로는 '내정과 외교의 일체화', '평화창출'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미일안보조약을 가일층 강화하면서 이를 통한 일본 방위력의 증강과 재군비 등의 현안들을 차질 없이 풀어나가려 하고, 이에 더해 자위대 또한 기존의 전수방위 전략을 완전히 폐기치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평화창출전략'이라는 논리로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실질적인 수단을 찾아내려한다. 그리고 이 논리는 또 이러한 제반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새로운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半身不隨的인 헌법을 상당부분 실질적으로 개정하여, 형식은 유지하되 내용은 보통국가화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에 손색이 없도록 하고 있다.

53) <http://www.yatchan.com/seiji/tenchi/t2001/0326.html>

일본의 전후총결산논리가 보이고 있는 이 같은 명분과 실질적인 내용사이의 이중성은 전통적인 일본적 사고방식의 한 유형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전후총결산의 명분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 같은 '外形' 과 '內面' 사이의 괴리가 만들어 내는 결과는 이러한 결산을 통하여 보다 강건한 '보통의 나라' 를 구축해 내려는 일본 스스로에게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외부세계의 관찰자들 모두에게 여전히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전후총결산 논리가 가지는 자가당착이자, 해결해야 할 최대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도서안내

사상과 혁명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III 교양사회
조정남 편역 / 값 10,000원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무장과 동맹, 그리고 타자의 시각

- 일본 안보정책의 현주소

이웅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환경, 무장, 동맹, 타자의 시각 균형점

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안보정책이란 이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그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 및 그 실행과정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예의 주시해야만 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의 변화 즉 안보환경의 변화이다. 국가의 존재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은 국가일 수도 있고, 특정 개인일 수도 있으며,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탈국가적, 초국가적 집단일 수도 있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도 안전보장에 대한 잠재적인 적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자 또는 행위자의 조합이 주요한 적인가 하는 것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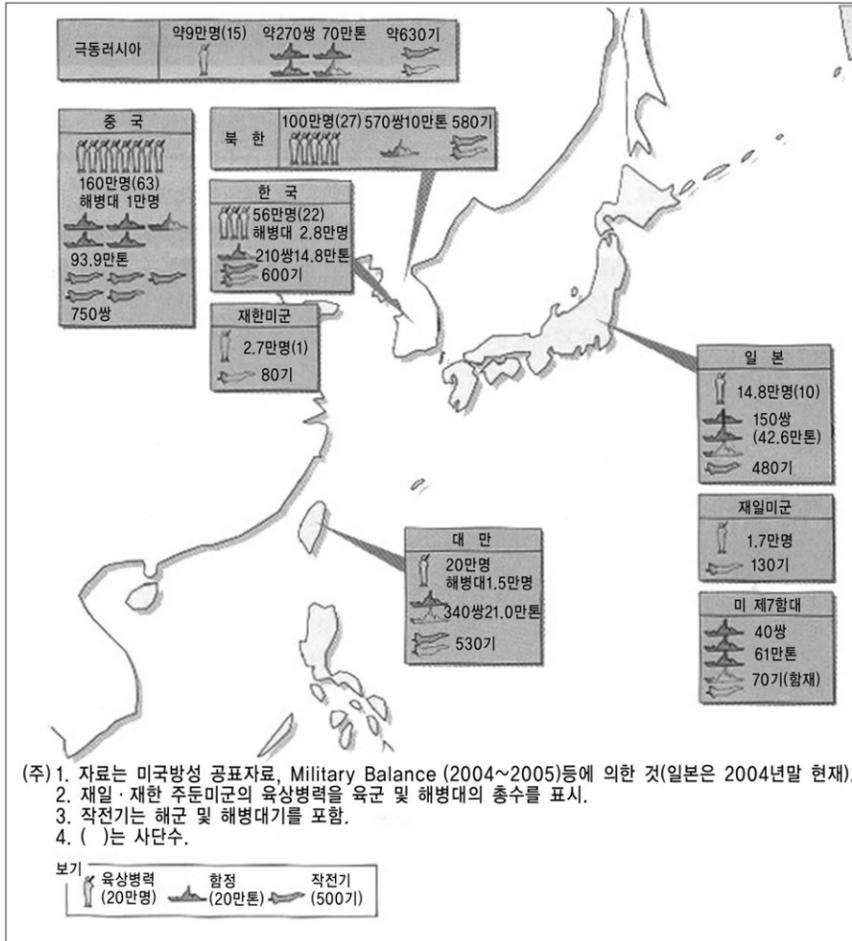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잠재적 적을 결정하는 것이 안보환경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변화하는 잠재적 적과 그 공격행동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즉 안보정책 역시 이에 조응할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잠재적 적으로 설정하느냐, 그 잠재적 적이 겨냥하는 것이 무엇이나

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국가무력체제의 정비를 포함한 무장 그리고 그 무장능력의 결핍을 보완하는 동맹을 자국과 자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개인의 국가에의 심리적 의존도가 느슨해지고, 비국가적 행위주체들이 확대되어 가는 탈근대적 상황에서 잠재적 적은 분화하고 있어도, 안전보장의 최종적인 피난처는 여전히 국가인 것이다. 그러한 국가가 스스로 무장하거나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안보정책은 구체화된다.

이는 마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모인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이 만들어 내는 자신에 대한 잠재적 공격자, 즉 자연재해나 질병,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자택의 출입 장치를 강화하거나 더 나아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무장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개인의 안전보장 행위와 국가의 안전보장 행위의 투사 대상자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즉 사회 속 개인의 안전보장 행위는 타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는 있어도 타자 자신에 대한 물리적 위협으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반면, 국제사회 속의 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과 행위는 타국에 대한 공격적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상위의 중재 조정자가 없는 사회 속에서 일국의 안보정책이 오해의 악순환을 거쳐 거꾸로 그 국가 및 국가가 포함된 지역체제의 불안과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안전보장문제는 안보환경의 변화, 그에 적응하려는 무장 또는 동맹, 그리고 자국의 안보정책이 투영되는 거울 즉 타자의 시각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균형을 요구한다.

일본의 안보문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딜레마와 변수 사이의 균형점을 추구하는 것이 안보정책 형성의 핵심이다. 흔히 일본의 대외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전전의 제국주의 국가와 전후의 평화국가 사이의 현격한 차이, 즉 단절을 암묵의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점 추구의 정책과정이 결국 실패했느냐 혹은 성공했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안보정책에 관한 한 본질적인 단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보불안에 시달린 나머지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장과 잉으로 치달으면서 타자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전전의 일본이었다면,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동맹을 선택하고 점진적인 무장을 추구하면서, 타자의 시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전후의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장과 동맹 사이의 균형, 타자의 시각에 대한 고려를 내적 긴장화하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 있었던 시기가 냉전시대의 일본이었다면, 이러한 내적 긴장에 더해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까지도 고려에 넣어 이 모든 변수들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탈냉전 시대의 일본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주둔하는 병력상황



패전과 점령 그리고 안보정책 부재

전전의 제국 일본의 결정적인 패배를 초래한 미국과의 전쟁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개전이유는 '자존자위' 였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던 셈이다. 개전 직전 미국의 최후통첩인 헐 노트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중국 및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부터의 일본군 및 경찰의 전면적인 철퇴와 1931년 만주사변 이전으로의 상태로의 복귀" 였고, 이 요구사항을 일본

의 안보정책결정자들이 거부했다는 것은 '제국의 존립' 즉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군사적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 등의 '적극적' 개입이라



한 국가의 안전보장문제는 안보환경의 변화, 그에 적응하려는 무장 또는 동맹, 그리고 자국의 안보정책이 투영되는 거울 즉 타자의 시각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균형을 요구한다.

는 안보환경의 변화를 적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무장과잉과 전쟁을 선택함으로써 1890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이래 전통적인 일본의 '이익선'으로 간주되어 왔던 조선의 강점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즉 '무조건 항복'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일본의 영토를 만주사변 이전의 상태로뿐만 아니라 1895년의 청일전쟁 종결 이전의 상태로까지 되돌려 놓고 말았다.¹⁾ 결국 미국의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헐 노트를 수락하는 것이 1931년까지 일본이 획득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판단은 물론 잠재적 적에 대한 오관 그리고 그로 인한 팽창과잉(무장과잉)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패전과 '점령'이라는 국가안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패전과 점령의 상태에 빠진 일본이 점령국 미국의 군정 하에서 전전 안보정책으로부터 철저히 이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전전의 안보정책에 대한 환멸의 결과이기도 했다. 연합국을 대표한 미국이 점령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요구한 것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였고, 군정 하의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내각은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적 개혁 이념의 소유자인 수상 자신의 방침에 따라 천황제의 존속을 조건으로 "전후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철저히 평화주의를 국가의 방침으로 할"²⁾ 것을 맥아더에게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골자를 수용한 맥아더 군정이 작성하고 일본 내각이 수정하여 만들어진 것이 소위 일본의 평화헌법이었다. 이 헌법은 1946년 11월에 공포되고 194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헌법의 제9조였다. 일본의 헌법 제9조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하(威嚇)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 田中明彦, 『安全保障 : 戦後50年の模索』(東京 : 讀賣新聞社, 1997年), pp. 13-15.

2) 五百旗頭真編, 『戦後日本外交史』(東京 : 有斐閣アルマ, 1999年), p. 45.

육, 해, 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군정은 이 조항의 기초작업 과정에 자위권마저 포기시키겠다는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 국제정치적 현실 및 헌법의 수명을 고려하여 침략전쟁이 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안을 수정하였다. 결국 점령 하에 제정된 1947년의 헌법으로 인해 일본은 안보문제에 관한 한 스스로의 방위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무장을 할 수도 교전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³⁾ 피점령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안보환경을 고려할 수 없었던 일본의 안보정책결정자들은 무장이나 동맹이나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었고, 오로지 적에서 점령자로 바뀐 미국이라는 타자의 시각을 의식하면서 자위권의 가능성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46년부터 1950년 사이 일본이 제9조의 제약 하에서 그나마 의회의 내외에서 논의할 수 있었던 안전보장방식에는 ①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 ②중립, ③세계연방, ④보호국, ⑤재군비의 방식 등이 있었다. 세계연방과 보호국 같은 이상적인 소수의 주장은 제쳐두더라도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과 중립의 방안도 헌법 제9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현실성을 결여한 논의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재군비 즉 무장과 관련하여서는, 전력 내지 무력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자위권’에 관해서 조차 거의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될 수 없었다.⁴⁾ ‘자위권’ 나아가 무장과 동맹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의 변화를 기다려야 했다.

국 가	국 방 비 (단위 : 백만 달러)	1인당 국방비 (단위 : 달러)	국방비의 GDP 비율 (%)
일 본	35,189	276	0.988
미 국	387,319	1,337	3.5
영 국	45,984	770	2.7
독 일	24,851	303	1.1
프랑스	34,068	570	2.0

3) 따라서 ‘자위’를 위해서는 전력을 보유할 수도 교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것은 현재까지 자위대 보유 등 일본 안보정책의 현실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이기도 하다. 2003년판 일본의 “방위백서”는 “평화주의의 이상을 내세운 일본국 헌법은 제9조에 전쟁포기, 전력비보유, 교전권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가 독립국인 이상 이 규정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의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위권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행사를 뒷받침하는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防衛廳『日本の防衛』平成15年(2003年), pp. 86-87.

4) 粕谷進『戦後日本の安全保障論議：憲法9條と日米安保の原点』(東京：信山社, 1992年), pp. 151-153.

최소한의 무장과 동맹의 선택

유럽에서 미-소 간의 냉전이 전개되기 시작할 무렵인 1948년 10월 트루먼은 NSC13-2 문서를 통해 비군사화를 기반으로 한 대일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일본 역시 연합국과의 평화회담에 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의 관계 재편의 움직임은 1949년 10월 중국의 공산화, 1950년 2월 중·소 군사동맹의 성립,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촉진되었다. 이른바 강화조약의 추진이었다. 냉전의 전개와 한국전쟁은 일본열도에 있어서의 미군 기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했으며, 결국 대일강화와 동시에 일본의 주권 회복 후에도 기지의 계속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미, 일 양국 간 협정체결을 서두르게 하였던 것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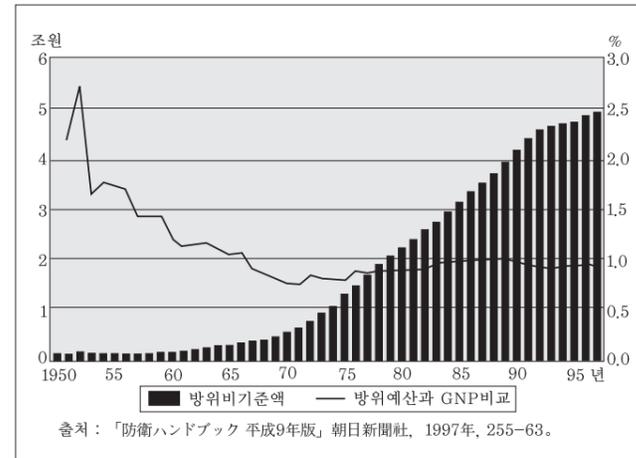
1949년 가을부터 피크에 달했던 일본 내 강화논쟁에서 ‘평화문제담화회’ 중심의 전면강화 및 비무장중립 등의 주장과, 야당인 사회당의 평화 3원칙(전면강화, 중립견지, 군사기지화반대) 등 이상주의적 논의들이 분분한 가운데, 수상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패전국은 전승국의 대립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미국, 영국과의 협조가 일본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요시다는 ①조기강화의 달성, ②재군비 요청의 회피, ③미군 주둔에 의한 일본의 안전보장을 세 개의 축으로 한 방침을 결정하고 미국에 1950년 4월 이 방침에 입각한 서한(‘요시다 서한’)을 미국에 송달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중국의 참전을 계기로 미국은 극동의 방벽으로서의 일본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고, 일본 재군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이 재군비 요청은 경제적 곤란, 일본 군국화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우려, 헌법상의 제약 등을 이유로 요시다에 의해 회피되었다.⁶⁾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전개와 공산주의의 위협을 감지한 미국은 일본의 요청을 수용, 결국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동시에 미일안전보장조약(동맹조약)이 발효(체결은 1951년 9월)되었다. 안보환경의 변화에 일본은 동맹을 선택했고, 무장의 압력에 대해서는 타자의 시각을 이유로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요시다 노선은 무장의 전면적인 거부가 아니라 ‘최소한의 경군비’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맥아더는 일본정부에 “점령군이 한국전쟁에 출동한 후의 치안유지를 위해 7만 5천명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해상보안관 8천명의 증원을 허가” 하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표했다. 패전으로 인한 제로상태로부터의 재군비의 시작이었다. 수상 요시다는 미국의 전쟁 전략상의 요구에 편승하여 강화교

5) 永野節雄『自衛隊はどのようにして生まれたか』(東京：学習研究社, 2003年), p. 183.

6) 池井優『日本外交史概説』(東京：慶應通信, 1992年), pp. 240-242.

일본의 방위예산 추이



출처 : 「防衛ハンドブック 平成9年版」朝日新聞社, 1997年, 255-63.

섭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쟁 중의 한국 수역에서의 일본의 소해정 활동도 허가했다. 뿐만 아니라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로서 체결되었다. 무장 해제된 일본이 독립을 하더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대로는 '무책임한 군국주의(즉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위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이 '잠정조치'로서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킨다는 것이었다. 일본이 서서히 자국의 방위를 책임질 것을 기대한다고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전문은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었다.⁷⁾ 안보조약에는 원래부터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⁸⁾

물론 일본의 재무장의 시작은 전적으로 환경변화의 외압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요시다 노선'(경제 우선건설 및 안보 대미의존)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요시다는 미국의 압력을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1952년 2월 경찰예비대를 증강하여 11만 명으로 증원했고, 보안대를 개편하여 보안청에 편입시켰다. 동년 8월 설치된 보안청은 경찰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고 치안유지 이상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군대가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요시다는 보안청 장관으로서의 훈사에서 보안청이야말로 "신 군비의 기초이며, 신 국군 건설의 토대"라고 명언했다.⁹⁾ 독립한 일본의 안보를 위해 선택한 미-일 동맹체제는 미국의 병력과 일본의 기지제공 즉 '사람과 물자의 결합'이었고,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요구되는 일본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동맹조약의 틀 속에서 전후의 평화헌법이 해석학적으로 허여할 수 있는 '자위권' 확보를 위한 재무장의 기회를 일본은 가질 수 있었

7) 豊下 橋彦, 『安保條約の成立: 吉田外交と天皇外交』(東京: 岩波書店 1996年), p. 235-238 자료 참조.

8) 坂本一哉 『日米同盟の絆: 安保條約と相互性の模索』(東京: 有斐閣 2000年), p. 76.

9) 앞의 책, pp. 78-79.

던 것이다. 1954년 7월에는 육상 13만 명, 해상 1만 5천 명, 항공 6천 명 정도의 '자위대'가 창설되었다. 병력의 최고 지휘감독권은 방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의 관계 재편의 움직임은 1949년 10월 중국의 공산화, 1950년 2월 중·소 군사동맹의 성립,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촉진되었다.

청장관을 통해 내각 총리가 행사한다는 문민통제의 원칙이 법률적으로 수립되고, 병력이 해외출동을 금지하는 결의가 의회에서 행해졌지만 일본은 패전과 점령 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동맹과 “최소한의” 무장을 통한 안보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안보환경의 확대와 동맹의 재조정

강화조약 이후에도 일본의 완전한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몇 가지 과제가 놓여 있었다.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와 국제연합 가입이 그것이었다. 후자를 위해서도 전자가 선행되어야 했다. 소련과는 법적인 전쟁상태의 지속, 국경의 미확정, 소련 내 일본인 억류자 등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내각의 노력은 1956년 10월 평화조약에 이르지 못한 채 국교의 정상화라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 절반의 성공 결과 일본은 자국의 안보 구상에 중요한 선택지의 하나였던 유엔가입을 같은 해 12월에 달성할 수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자민당 지배의 양당체제인 '55년 체제'가 수립되고 국제연합 가입을 실현함에 따라서 국내외에 자립화의 조건을 정비한 새로운 일본정치의 변화를 예리하게 제시하고 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수상은 적극외교를 표방하며 정력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었다. 1957년 5월 기시는 동남아시아 6개국을 순방하면서 각국의 수뇌들에게 아시아 개발기금 구상 등을 제안하였고, 6월에 타이페이에 들러 “중화민국 정부의 대륙회복에 동감”을 표시하기까지 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미-일 신시대'의 도래를 강조하고,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재검토를 제안했다.¹⁰⁾ 또한 1950년대 종반까지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 배상 또는 평화조약의 체결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이 시기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보환경이 확대되면서 타자의 시각을 적극적

10) 田中浩, 『戦後日本政治史』(東京: 講談社, 1996年), pp. 157-158.

으로 일본의 안보에 유리하게 변화시킴과 동시에 동맹의 강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1957년 기시 내각이 처음으로 출간하기 시작한 “외교청서”는 전후 일본 외교의 세 가지 원칙으로 ①국제연합 중심주의, ②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③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 등을 표방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 외에 일본이 미·일 동맹체제의 재조정을 의도한 데에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걸맞지 않는 내적 불평등성의 문제가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조약의 형식이 여전히 미군이 주둔군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미군이 일본의 내란 진압에 동원(‘내란조항’)될 수도 있었고, 일본의 기지 제공의무는 명문화되어 있었지만,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독립국가로서의 일본의 위상에 상처를 주는 안전보장체제였던 것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 ‘안보소동’이라는 국내적 소요를 겪으면서 1960년 1월 탄생한 새로운 미-일 안보조약은 기존의 동맹의 성격은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지만, 미국의 일본방위 의무를 명문화하였고, 조약에 기한을 붙였으며, 내란조항을 삭제하고, 미-일의 경제협력관계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연합 및 조약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부속 교환공문에서 기지사용이나 핵 반입에 사전협의의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불평등감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비록 ‘물자와 사람의 협력’이라는 기지제공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미, 일 양국이 “일본국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일본에 “무력공격에 저항하는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체적 무장능력 증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자위력의 유지, 발전이 의무화”되었던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미-일 동맹 체제를 상호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바꾸면서도 안전보장을 미국에 일임하는 체제를 지속, 유지하였다. 196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은 이와 같은 안보정책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재조정된 동맹체제 하에서 일본은 무장능력을 강화해 나아갔다. 1962-66년의 제2차 방위력 증강계획과 1967-71년의 제3차 방위력 증강계획을 통해서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군 장비의 근대화를 추진하였으며, 1960년 1천 569억 엔이었던 방위비는 10년 뒤인 1970년 네 배인 5천 685억 엔으로 증가했다. 동맹이라는 우산(雨傘) 하에서의 자체적 방수(防水)능력 강화의 시도는 때로는 파란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한반도의 유사시 자위대의 대응방안에 관해 비밀리에 진행된 이른바 ‘미쓰야(三矢)연구’가 의회에서 폭로되기도 했다.¹¹⁾ 자위대의 질적 증강과 유사시 작전계획의 비밀 연구 등이 보여주는 것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일본의 안보정책이 동맹일변도 속에서도

자체적인 무장능력의 강화를 꿈꾸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본적 방위력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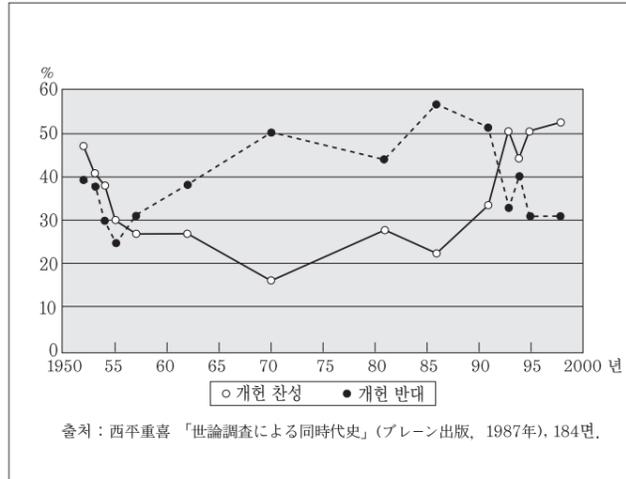
안보환경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다고 일컬어지는 냉전적 양극체제에서 1970년을 전후로 한 시기만큼 '격동적인 변화'를

노정했던 시기도 매우 드물다. 양극체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1968년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고, 이듬해인 1969년에는 중국과 소련이 국경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등 장막 뒤편의 체제균열도 심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중소 간의 균열이 심상치 않을 무렵에는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표명함과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보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1971년 7월에는 닉슨 대통령이 중국방문 예정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동맹국으로부터 소외감을 맛보아야 했다.

중국은 10월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타이완을 밀어내고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미-중 간의 화해뿐만 아니라 미-소 간에도 화해의 움직임이 있었다. 1972년 미국과 소련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략무기제한협상(SALT I)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재빠르게 호응하면서 중, 소 양국과의 화해,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미-일 동맹 체제에 의존한 안보정책의 재조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현상유지로부터 긴장완화로의 안보환경 변화는 안보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던 것이다.

안보정책 재검토의 결과가 1976년 10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방위계획의 대강(大綱)'이었다.¹²⁾ '방위계획의 대강'은 방위력의 본질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정의를

헌법의식의 변천



11) 五百旗頭真, pp. 120~122.

내리고 있었다. 즉 대강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방위력이라고 정의하고, “위협이란 침략할 수 있는 능력과 침략할 의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면서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의도’가 없으면 위협은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위협은 ‘능력’에 ‘의도’가 결합함으로써 침략으로 현실화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방위력에 관해서 “전면전쟁 내지는 그것으로 발전할 위협이 있는 대규모 무력분쟁은 미, 소 양국의 상호 핵 억지 및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견지에 의해서 회피될 수 있다”는 점을 대전제로 하여 소규모의 침략도 ‘의도’의 여하에 따라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고 설명할 뿐이었지만, 대강에서는 ‘기본적 방위력 구상’을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의도’란 변화하기 쉬운 뿐만 아니라 관찰하여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며… ‘능력’이란 것도 위협의 양만을 고려하여 방위력의 양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배치에 있어서 빈틈없는 균형태세를 보유하며, 평상시에도 충분히 경계태세를 취할 수 있는 상태로의 방위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강’은 “국가가 목표로 하는 방위력의 규모를 처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바로 이 ‘기본적 방위력’이라는 일본의 안보구상은 미-일 안보동맹체제 하에서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의 구상을 밝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소규모의 침략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무장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었다.

데탕트의 전개라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맹’이 관리할 수 없는 안보불안을 ‘무장’으로 해소하려는 것이었지만 타자의 시각도 고려해야 했다. 1976년 12월 발족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내각은 ‘전방위 평화외교’를 표방하면서 미-일 안보의 유지, 중-소 양국과의 데탕트 계승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북방영토와 어업문제로 소련과의 관계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중국과의 사이에서도 영토문제는 물론 소련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른바 ‘폐권조항’의 문제로 순탄치 않은 협상을 벌였고, 우여곡절 끝에 1978년 8월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1977년 8월에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협력자로서의 연대강화에 노력하면서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했다. 데탕트의 기류에 편승한 일본의 안보정책은 동맹과 무장, 타자의 시각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유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냉전적 양극체제는 일시적인 데탕트로 녹아버리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었다. 이 시기 일본의 안보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했던 것은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점이었다.

12) ‘방위계획의 대강’은 1977년판 『防衛白書』 참조. <http://www.jda.go.jp/j/library/wp/>로 들어가면 최근까지의 ‘방위백서’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신 냉전의 전개와 다시 동맹 그리고 무장

1978년 이후 소련은 그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 관계 개선과 중-일 관계 개선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다. 같은 해 소련은 베트남, 이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등과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기감을 달래려 하고 있었다.¹³⁾ 같은 1978년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침공했고, 중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1979년 12월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새로운 냉전의 시대를 열었다. 미국의 카터 정권은 브레진스키의 영향으로 대소 강경자세로 전환했고, 일본의 안보정책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강화로 선회했다. 이러한 정세변화 속에서 후쿠다 내각 시절인 1978년 11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은 ①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②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에는' 일본이 독립으로 한정적이고 소규모의 침략을 배제하며, ③ 일본 이외의 극동지역의 사태에 대해서는 협력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의 독자적인 안전보장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비 급증에 따른 내외의 반발 즉 타자의 시각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협력을 통한 서방동맹의 강화 즉 '전략원조'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위 '종합안전보장(總合安全保障)'이라는 이름 하에 방위비와 대외 경제협력비용으로 서방의 동맹에 공헌한다는 것이었다.¹⁴⁾ 1980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내각의 정책연구회가 제안한 이 '종합안전보장'은 비국가적 주체에 의한 안보위협, 인간 안보 등등을 고려에 넣고 있었고, 되돌아 보건대 9.11 테러 이후의 안보환경 변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¹⁵⁾ 그러나 21세기가 될 때까지는 결국 '수표책 외교(checkbook diplomacy)'의 기원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일본의 안보능력 강화를 위한 내부적인 법령 정비도 검토되었는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극동지역의 사태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방침에 따라 일본 방위청은 1981년과 1984년 "헌법의 범위 내에서" '유사법제(有事法制)'를 검토했다. 법령제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에 따르면 방위출동명령 시의 징집과 징용을 위한 정령을 정비하고 시민법적 법령은 자위대의 활동에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군사우선법령을 형성한다는 등, 위헌적인 무력으로서의 자위대를 '보통의 군대'로 변경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중대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안

13) 和田春樹, 『歴史としての社會主義』(東京: 岩波書店 1992年), p. 168.

14) 五百旗頭真, pp. 180-183.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관해 얻을 수 있는 일



전보장회의설치법이 제정되었고, 내각 관방실에 안전보장실이 설치되었다.¹⁶⁾ 뿐만 아니라 1978년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운용 면에서의 안보의 기능변화는 결국 1980년대의 '1천 해리의 전략적 해상교통로(SLOC)' 방위론 및 미-일 공동작전체제의 확립, 비핵 3원칙의 공동화(空洞化)에 의한 핵 군사화의 진행, 전시 수용국 지원(HNS)의 가능성 검토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공동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NATO 식의 공동방위태세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1981년 5월 스즈키 젨코(鈴木善幸) 수상과

레이건 미 대통령 사이의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동맹'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했고, 일본의 방위력 개선과 방위분담을 위한 일본의 '역할'이 언급되었다.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의 '불침항모론'과 '론-야스 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초, 서방에서 신보수주의 정당들이 집권하고 동북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되는 시기의 이러한 일본의 '동맹'과 '무장' 병행의 안보 정책은 1983년 9월 소련에 의한 KAL기 격추사건으로 더욱 공고해졌고, 나카소네 내각은 방위비의 GNP 대비 1%의 돌파에 나섰다. 실제로 일본의 방위비가 GNP 대비 1.004%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1% 상한선을 초과한 것은 1987-1989년의 3년 동안에 불과하지만 안보에 관한 일본의 의지를 천명했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¹⁷⁾ 1985년 4월에는 극동의 소련군에 대항하기 위한 미 공군의 전폭기 F-16 48기가 일본의 미 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1986년 9월에는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에 일본도 참가할 것이 결정되었다.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15) 田中明彦監修, 『外交フォーラム』編集部編, 『新しい戦争時代の安全保障』(東京:都市出版, 2002年), p. 6.
 16) 山内敏弘編, 『日米新ガイドラインと周邊事態法』(京都:法律文化社, 1999年), p. 42.

동맹 하의 '무장'은 더욱 강력한 방향으로 안보정책의 노선이 굳어졌으며, 타자의 시각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국에 관한 한 일본의 선택을 존중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소련과 대립하는 중국에게도 일본의 안보노선은 백안시당할 것만은 아니었다.

냉전해체, 동맹표류와 재건

동맹의 균열은 공동의 적이 사라졌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특히 미-일 동맹과 같은 불균형, 비대칭의 동맹은 균형, 대칭의 관계로 발전하면서 경쟁과 질서의 싸움을 틈우게 되고, 동맹체제 유지를 위한 역할과 비용 부담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반목과 대립의 씨앗으로 배태될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무역 불균형의 시정과 일본시장의 개방 압력으로 시작된 미-일의 마찰은 1987년 미·소 간의 중거리핵전력폐기협정(INF)의 체결로 '새로운 냉전'이 종식되면서 안보부문으로 이어졌다. 1989년 차세대 전투기(FSX) 공동개발에 있어서의 부담문제로 미·일 사이에 의견 차이가 노정되었다. 같은 해 일본에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출간된 것과 동시에 서방에서는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를 주제로 한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1989년은 동-서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해였다.

균열은 1990~1991년의 걸프전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은 130억 달러에 달하는 전비를 지불하고도 인적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 무책임한 국가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1991년 말 소련의 붕괴는 미-일 동맹의 존재이유의 한 축마저 파괴했다. 일본은 걸프전 기여도에서의 미미함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감안하여 '국제화'와 '국제공헌'을 모토로 PKO(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안을 1992년 6월 성립시켰지만, 냉전의 해체를 전후로 한 시기부터 표류해 온 동맹의 재조정은 불가피했다.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미국에 있었다. 1995년 봄 미 국방성은 '동아시아 전략보고'(Nye Report)에서 자국의 동아시아전략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첫째, 동아시아의 미군 병력은 10만 명 정도를 유지하며, 둘째, 냉전 해체 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중국에 대해서는 '봉쇄'가 아닌 '관여(engagement)'의 정책을 취할 것이며, 셋째, 일본은 미국의 '당연한 파트너'이며 '아시아의 미국 안보보장 정책의 지렛대'라는 점을 밝혔다.¹⁷⁾ 그리고 같은 해 일본 방위청은 '신 방위계획의 대강'을 발표하면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새로운 대강은 '기반

17) GNP 대비 1%의 상한선이라는 기준은 일본의 GNP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거의 그 의미를 상실했다. 1980년대 3조 엔 대었던 일본의 방위비는 1%의 상한선 아래로 다시 복귀한 1990년대에는 4조 엔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Peter J. Woolley, Japan's Navy: Politics and Paradox, 1971-2000 (Boulder,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0), p. 50.

적 방위력 구상'을 기본적으로 답습하면서도 방위력의 첨단화와 콤팩트화를 지향하고 있었고, "미일안전보장 체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본의 방위력을 미국의 그것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여 안보의 지역적 범위를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있었다.¹⁹⁾

이 '신 방위계획의 대강'과 1996년의 미-일 공동선언을 기초로 하여 양국 사이에 1997년 채택된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즉 신 가이드라인 역시 1978년의 '가이드라인'보다 일본 안보활동의 작전지역과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일본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사태 발생으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른바 '주변사태')"의 미·일 양국의 군사적 협력관계의 구체적 방식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다. 1978년의 가이드라인이 '일본의 유사시'와 '극동의 유사시'를 전제로 하고 있었고, 1996년의 미·일 공동선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었음에 비해서, 신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지역'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주변 유사시'의 양국 간 군사협력을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주변지역'에 관해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착안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적어도 한반도와 중국, 타이완, 러시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²⁰⁾ 표류하던 동맹은 재건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이 여전히 미-일 동맹의 구도 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파트너로서의 일본의 자체적인 방위능력 증강도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장과 동맹으로의 회귀노선에서 타자의 시각은 소외되고 있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일본의 정치질서도 격변을 거듭하면서 자국의 정체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보통국가론'도 호응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평화헌법 하에서 부흥과 성장의 50년을 보낸 일본 여론은 무장병력에 의한 '국제적 공헌', '무장' 그 자체 그리고 동맹국의 요구에는 부정적이었다. PKO협력법의 통과가 난항을 거듭했던 것처럼,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유사법제'의 성안 역시 인식되는 안보환경의 변화, 즉 실질적인 위협들이 선행되어야 했다. 1998년 8월 북한이 일본의 영공을 통과하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의 '안보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집권 자민당은 '위기관리 프로젝트 팀'을 가동시켰다. 이어 2000년 10월에는 미국이 '아미티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미-일 간의 동맹 강화를 천명하였고,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일본이 미국의 진정한 역내 동맹국이 되지 못하는 주된 장애물은 일본이 스

18) 田中明彦『安全保障：戦後50年の模索』, p. 336.

19) 『防衛ハンドブック』, 平成17年版(東京：朝雲新聞社, 2005年), pp. 41-47.

스로 집단적 자위권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극동의 영국'이 될 것을 제의하고 있었다.²¹⁾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 후



동북아 평화질서 수립에 위협적인 북한의 핵무장을 현실로 인정했던 것처럼 장래에 일본의 헌법개정과 '군사력' 보유 그리고 그 대외적 행사를 현실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9.11 테러와 미확인 선박에 의한 일본 영해 침범사건 등이 발생하고 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추진에 필요한 보완입법이 완성되었다. 2002년 4월 일본의 각료회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자위대법 개정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 개정법안' 등 소위 유사법제 3개 법안을 성안했고, 2003년 5월 일본 여당 3당과 민주당의 공동발의로 의회를 통과시켰다.²²⁾ 탈냉전 시대에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 하에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9.11 테러 이후 이러한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다. 우선 2001년까지 방위력정비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일본의 『방위백서』는 2002년 이후 테러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요 논점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미국·이라크 전쟁 후인 2003년 이후에는 주요 안보환경 가운데 하나로 이라크 문제를 포함했다. 그리고 2005년 "일본의 방위"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국제사회의 과제로서 ①테러와의 싸움, ②대량파괴무기 등의 이전과 확산 문제, ③이라크를 둘러싼 정세, ④복잡 다양한 지역분쟁 등을 거론하고 있다.²³⁾ 2004년 12월에 발표된 '방위계획의 대강' 역시 대량파괴무기 및 테러리즘의 확산 그리고 중국과 북한 등 잠재적 위협요소의 배제를 위한 유연한 방위력의 증강,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국제안보활동에의 적극 기여 등을 표방했다.²⁴⁾ 대체적으로 자체적인 방위력 즉 무장의 증강에 더하여 동맹의 강화와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등은 미국의 입장을 추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은 미국의 압력과 관계없이 국내적으로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법제정비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2000년 1월 '헌법조사회'가 설치된 이래 제9조의 개정문제를 포함한 평화헌법의 개정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및 무력행사를 포함한 집단안전보장체제에의 참여를 불허하는 현행 헌법의 제약, 자위대의 지위 그리고 국가긴급권의 근거조항 신설 등에 관한 방향으로 개헌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2005년 4월 자민당의 신헌법기초위원

20) 山内敏弘編, pp. 46-47.

21) 오가와 아키라, "극동의 영국"으로 변해 가는 일본: 일본의 변화하는 안보 군사정책, 『전략연구』 통권 24호 (2002년), p. 77.

22) 아카기 간지, "일본의 재래식 전력과 동북아 안보정책", 『전략연구』 통권 26호 (2002년), p. 109.

회는 “자위를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기한 헌법요강을 작성 발표했다. 헌법 요강에 문민통제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2004년의 방위계획의 대강이 여전히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일 동맹의 구조 속에서 미국에 대립할 만한 국가로 일본이 발돋움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²⁵⁾ 그러나 일본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이러한 국내외적 움직임을 공격적인 것이라고 다시 말해 타자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21세기에 접어든 일본이 안보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여전히 ‘동맹’과 ‘무장’을 안보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며 ‘동맹’과 ‘무장’의 현격한 불균형이 전후 60년을 지나면서 대칭성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자체적인 안보능력의 확보 즉 무장의 증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타자의 몫이며, 일본의 안보정책 추진과정에 이 타자의 시각에 대한 고려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 안보정책과 타자로서의 우리 시각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닦할 수 없는 것처럼 국가의 무장을 닦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타국의 무장이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웃국가의 무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스스로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길은 그 이웃국가의 안보정책의 현재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일본이 재무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보수 우경화하고 있다는 경계의 눈초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일본의 무장능력 증강과 보수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전후 일본의 재무장은 1954년 자위대의 발족 이래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무력의 해외 파병 역시 한국전쟁에의 소해정 파견 이후 최근의 이라크 파병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다만 ‘군’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점진적인 수면 하의 군사화행보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반발이 일본의 무장에 대한 제동력으로 작용한 적도 없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총리의 대응과 일본 의회의 비무장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 또한 과거사와 미래의 선린우호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인식이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침략

23) 防衛廳編, 『日本の防衛』防衛白書 平成17年版(2005년), pp. 4~17.

24) 『防衛ハンドブック』平成17年版(東京:朝雲新聞社, 2005년), pp. 48~56.

25) 박영준, “인간, 국가, 국제체제, 그리고 일본의 전쟁: 근대 일본의 전쟁원인을 통해 본 21세기 일본안보정책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2005년), pp. 270-276.

과 패전의 역사를 이미 거론할 가치 없는 아련히 먼 과거지사로 만들어 놓은 강대한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에 기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행동으로서 이상한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도 아니며 전전의 보수주의로의 회귀도 아니다. 일본이 굳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세계화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또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열망이다. 쓰라린 역사적 경험과 그 재발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성을 배제하고 현실적인 정책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운영의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감정적 차원의 대응을 지양하자”는 국내의 목소리를 한 꺼풀 벗기면 그 안에는 국가로서의 일본의 행동양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일본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잇기 힘든 피해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불문율과 변설허용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의 지양은 ‘합리적 대응의 모색’으로 객관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감정의 착오를 완전히 풀 수는 없다고 해도 국가의 지위확립을 위한 일본의 안보정책이 뚜렷한 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대일정책은 무엇인가를 자문할 때가 되었다. 설득이든 항의든 아니면 방위력의 상대적 강화든 주변국가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차가운 계산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질서 수립에 위협적인 북한의 핵무장을 현실로 인정했던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일본의 헌법개정과 ‘군사력’ 보유 그리고 그 대외적 행사를 현실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민주국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선동과 주문(呪文)의 리더십이 아니라 설득과 주판(珠板)의 리더십이다. 늑대가 출몰하는 국제사회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반복되는 비명은 경계심의 둔화 말고는 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총보수화로 내달리는 過積車輛

- 일본 자민당의 현주소

이기완 (장원대 교수)



들어가는 말

1955년 11월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보수합당에 의해 창당된 자민당은 1993년 8월부터 1994년 6월까지 약 10개월을 제외하고는 200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집권정당으로서 일본정치를 주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의 집권체제는 '1993년 정치변동'을 전후하여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1993년 7월 중의원 총선거 전까지 38년간 중의원 총선거에서 공천 후보의 당선에 과반수를 넘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선거 후 추가 영입으로 과반수를 획득하여 '단독으로 정권(hegemony system)'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3년 제40회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추가 영입을 포함해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비자민 연합'을 표방했던 야당에게 집권당의 자리를 '처음'으로 '양보'하고 야당으로 전락했다. 하지

만 자민당은 하타 쓰토무(羽田孜) 소수와 내각에서 각의협력에 있던 사회·사키가케 양당과의 연합을 통해 재차 정권에 복귀했고, 1996년 1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내각의 성립으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내각 붕괴 이후 2년 반만에 수상직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자민당은 1996년 10월 제2차 하시모토 내각에서 3년 3개월만에 자민당 단독 소수와 정권을 성립시켰지만,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내각에서부터 모리 요시로(森喜朗)내각을 거쳐 현재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내각에 이르기까지 연립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 글은 자민당이 걸어온 궤적을 '55년 체제'와 '1993년 정치변동 이후'로 구분하여 자민당의 성격과 자민당 정치의 특징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초래된 정치적 위기에 자민당이 어떠한 정치 전략을 통해 정치적 지지획득과 정권정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최근 고이즈미의 포퓰리즘적 전략이 자민당의 태생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민당과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에 대한 조감도를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55년 체제와 자민당의 안정적 우위

자민당의 창당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1945년 11월 대일본정치회 출신들이 모여 일본진보당을 결성했고, 정우회 출신의 동교회계가 중심이 되어 일본자유당을 창당했다. 1946년 4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당은 제1당이 되어 정권형성에 착수했지만, 그 목전에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총재의 공직추방에 의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정권을 장악, 전후 정치를 주도해 갔다.

그러나 1951년 8월 하토야마가 공직추방에서 해제되어 요시다가 이끄는 자유당에 복당하자,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었다. 요시다가 평화헌법의 기반 위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경제 우선주의 노선을 주장했던 반면, 공직추방 해제 후 정계에 복귀한 하토야마는 요시다의 친미·경제노선에 반발하며 헌법개정, 재군비, 그리고 정치 우선주의를 표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8월 28일 요시다는 당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불시해산'을 단행하고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 총선거에서 요시다의 자유당은 단독 과반수를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요시다 파와 하토야마 파의 분열로 해산 전 의석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또한 1953년 2월 28일 요시다는 '빠가야로 해산'에 의해 의석수의 감

〈표-1〉 정치세력의 정치노선

구분	정치세력	헌법문제	재군비 문제
보수세력	요시다 세력	호 헌	재군비 억제
	하토야마 세력	개 헌	재군비 확대·군대창설
	아시다 세력	호 헌	재군비 확대
혁신세력	사회당, 공산당	개 헌	재군비 반대

* 출처: 小野直樹, 『戦後日米關係の國際政治經濟分析』(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部, 2002), p. 76.

소와 함께 점차 반(反)요시다 세력의 신장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¹⁾

이러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1954년 초 요시다 내각을 강타하는 조선의혹(造船疑惑)²⁾이라는 뇌물수수 사건이 폭로되었다. 요시다 수상은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등을 통해 어떻게든 사태 수습을 시도했지만 커다란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1954년 12월 6일, 임시국회 서두에서 반요시다의 보수세력을 규합한 일본민주당과 좌·우 양파 사회당에 의해 반요시다 연합이 형성되어 요시다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 이로 인해 12월 7일 요시다 내각은 총사직을 단행했다. 1955년 2월 27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하토야마의 민주당은 의석수를 증가시켜 제1당이 된 반면 요시다의 자유당은 180석에서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평화조약 체결방식을 둘러싸고 분열했던 좌·우 양파 사회당은 1954년 12월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하토야마가 내각을 조직하고 개헌논의를 본격화하자, 당내외로부터 호헌세력의 결집을 요구받았다. 이에 좌·우 양파 사회당은 1955년 1월 임시 당 대회에서 총선거 후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개헌저지를 위한 3분의 1의석을 확보한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당 재통일의 움직임은 한층 진전되었다. 그리고 10월 13일 통일대회가 개최되어 1951년 분열했던 좌·우 양파 사회당의 재통합이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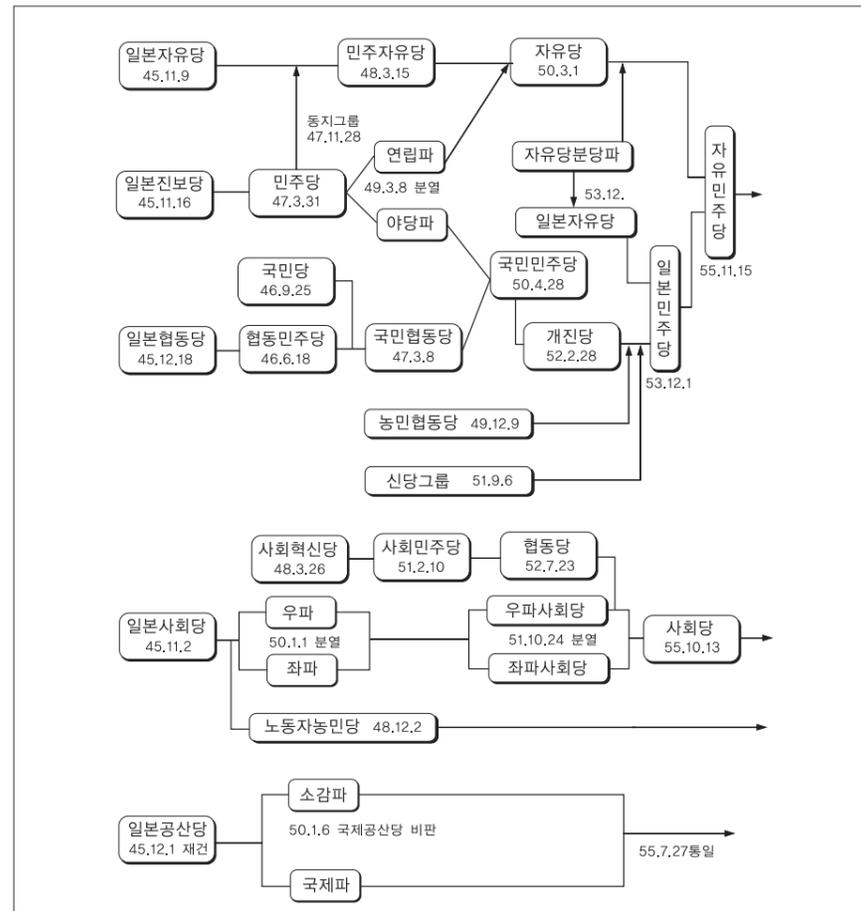
이 사회당의 동향을 주시하던 재계는 보수합당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미 1954년 시점에서 정국 안정을 위해 보수합당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었다. 재계는 1954년 6월 경제4단체 공동성명 “국회의 분규수습에 노력하기 바람”과 10월 경제동우회 제7회 전국대회 결의에서 “하루 빨리 보수합당을 실현하기 바람”

1) 이기원(역), 『일본현대정치사』(서울: 케이시, 2003), pp. 111-112.
 2) 조선의혹 사건은 한국전쟁의 특수가 끝나고 불황에 빠진 조선업계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항선박건설용자 이자보조금법과 손실보상법의 성립 및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자유당의 사토 간사장 및 이케다 경조회장 등이 관련되어 요시다 내각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

등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보수정당의 합당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러한 재계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인물이 하토야마 내각 수립에 주역을 담당했던 미키 부키치(三木武吉)였다. 1955년 4월 12일 지방선거 지원유세 도중, 그는 “보수합당을 위해서라면 하토야마 수상에 고집하지 않겠다”는 중대발언을 하고, 이를 계기로 보수합당의 논의가 일거에 급진전되었다. 통합협상은 신당의 당수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분규했지만, 10월 들어 사회당의 통합이 실현되고 재계의 압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11월 15일 요시다의 자유당과 하토야마의 민주당 합당으로

〈그림-1〉 전후 주요 정당의 변천: 1945-1955



3) 김성룡, "일본 '55년체제'의 형성과정 연구," 『일본평론』 제8호(서울: 사회과학연구소, 1993), pp. 356-385.

자민당이 창당되었다.³⁾

이같이 자민당의 창당과 사회당의 통일로 성립한 정당체계를 일반적으로 55년 체제라고 한다. 이러한 55년 체제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상대 득표율에서 80% 이상, 의석수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외견상 여·야당간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체제였지만, 실제로는 '1과 2분의 1 정당체제'—의회 세력에서 자민당 1에 대해 사회당 2분의 1—로서 자민당의 '일당우위 정당체제'였다.⁴⁾ 따라서 정권교체는 자민당 내 파벌간의 대립항쟁 속에서 새로 형성된 주류파가 정권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의사정권교체(擬似政權交替)'에 불과했다.

또한, 이데올로기 및 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혁신의 대립구조가 국내정치 기조를 이루었다. 일본을 서방진영의 일원으로 간주하면서 일본사회의 전통을 중시하려는 보수와 비무장 중립을 지향하면서 전전(戰前)으로 연결되는 전통을 부정하려는 혁신의 기본노선이 여·야당 간 타협 불가능한 대립을 형성하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대립은 일본정치의 기본노선에 관한 대립이며 여·야당간에는 화해 가능한 공통점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대립은 의회입법과정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야당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의하기보다는 의사방해, 지연전술, 그리고 장외투쟁 등의 방법을 구사하며 자민당 주도의 의회운영에 반대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심의일정을 고려하면서 야당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자민당 장기지배체제의 정치과정

자민당 정권의 안정은 자민당 창당 직후인 1950년대 후반에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그 시점에서 여야당간의 세력관계가 안정되지 않았고, 더욱이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정권 하에서 여야당간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시 수상은 헌법개정을 주창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 교직원 근무평정실시 등 치안유지색이 강한 입법을 시도하여 사회당과 대립주의적 정치자세를 강화했고,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을 강행하여 국민들의 안보투쟁을 초래, 결국 1960년에 퇴진했다.⁵⁾ 이러한 여야당간의 대립정치의 경험에서 1960년 7월에 등장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내각은 안보조약, 헌법개정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색이 강한 쟁점을 피하고 야당과의 협조를 피하기 위해 '관용과 인내'의 저자세의 입장을 표방했다. 그리고 1950년대 후

4) 로버트 스카라비노·升味準之輔, 『現代日本の政黨と政治』(東京: 岩波書店, 1962), p. 46.

5) 이기완, "미일안보체제의 과거와 현재," 이기완(의), 『동맹의 정치학』(서울: 매봉, 2005), pp. 53-104.

반에 대두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제부흥, 고도 경제성장을 추진할 '국민소득배증계획'을 발표하고 경제 우선주의 노선을 추진했다. 이를



자민당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집권정당으로서 일본정치를 주도해 왔으나 자민당의 집권체제는 '1993년 정치변동'을 전후하여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여 자민당 정치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고도경제성장의 혜택으로 이케다 내각과 1964년 이케다 내각을 계승했던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내각은 각각 4년 4개월, 7년 8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고도경제성장이 종언을 고하기 시작하자, 자민당의 안정적 위위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고도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속에서 발생된 복지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자민당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복지 및 환경오염반대 운동이 각지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운동은 생활관련 사회자본의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운동과 연계되면서 자민당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초래했다.⁶⁾ 특히 혁신자치체의 출현은 자민당 정권의 안정을 크게 동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내각은 '열도개조론'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재차 실현하여 동요하기 시작한 자민당 정권에 대한 지지를 만회하려고 시도했지만, 역으로 토지투기에 의한 지가상승과 적극재정에 의한 물가상승만을 초래했다. 그 결과, 다나카 내각의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1972년 12월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후퇴와 공산당의 약진이라는 선거결과를 낳게 되었다. 광란물가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다나카 정권은 1974년 7월 참의원 선거를 맞이했다. 보수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다나카 내각은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 확보를 위하여 금권선거 및 기업동원선거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자민당의 의석을 감소시켜 보·혁 백중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와중에 폭로된 록히드 의혹 사건은 자민당 정권의 동요를 가중시켜, 1976년 6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국회의원 6명의 탈당과 7월 다나카 전 수상의 체포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동요 속에서 실시된 1976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공인 추천 후보 가운데 249명만이 당선되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지만, 추가로 후보를 영입하여 가까스로 단독 과반수를 유지할 수

6) 이기완(역), 앞의 책, p. 158.

있었다. 그 결과 1976년 말에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16년만에 처음으로 중의원 부의장에 사회당의 미야케 쇼이치(三宅正一)의원이 선출되었고 중의원의 24개 상임위원회 중 10개 위원회는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18년간 지속된 자민당의 위원장 독점체제는 종말을 고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민당이 당면했던 최대의 과제는 재정적자에 대한 대응이었다. '일반 소비세'를 도입하여 1984년까지 적자국채를 해소한다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의 정책구상은 여론의 비판을 받아 자민당의 지지 만회에도 불구하고 1979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초 스즈키 겐코(鈴木善幸)내각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내각의 정치적 과제는 '증세 없는 재정재건'을 목표로 한 행·재정개혁이었다.

특히 나카소네 수상은 '제로-마이너스 한도(zero-minus ceiling)'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면서 '증세 제일주의 노선'에 제동을 걸려고 했다. 이 노선은 소득세 등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사무직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또한 나카소네 수상은 행정의 합리화를 통한 작은 정부의 실현과 막대한 적자 해소를 통한 재정재건을 실현하기 위해 국철의 분할·민영화를 추진했다.⁷⁾ 이는 적자해소와 전투적 노동운동을 대변하던 국노를 해체하여 노동전선의 우익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한 '활력 있는 복지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86년 7월에 실시된 중의원·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자 나카소네 수상은 '86년 체제'의 성립을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민당은 1988년 자당의 거물정치인과 야당 지도자, 재계, 관계 등 많은 사람들이 관여한 리쿠르트 사건과 이후 제네콘 오직 및 도쿄 사카와규빈(東京佐川急便) 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정·부패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교착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도쿄 사카와규빈사건을 계기로 가네마루 신(金丸信)이 정계를 은퇴했고, 그 후계 인사 다템으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와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파와 하타 쓰토무(羽田孜)파로 분열했다. 이것은 다나카 지배의 종언일 뿐만 아니라 자민당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는 단초가 되었다. 1993년 6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이 정치개혁을 단념하자, 이를 계기로 자민당 내에서 신보수주의 정치노선을 주장해 온 의원들이 탈당하여 신생당과 신당사키가케를 창당했다.⁸⁾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치러진

7) 1987년 4월 일본국유철도(국철)이 민영화되어, JR 홋카이도(北海道), JR 東日本, JR 도카이(東海), JR 西日本, JR 시코쿠(四國), JR 큐슈(九州), JR 가모츠(貨物) 등 7개 회사로 분리되었다.

8) 자민당 붕괴로부터 신당 창당 및 그 이후의 정치과정에 관해서는 森田實『政界大亂: 自民解体・新黨創生』(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3); 朝日新聞政治部『政界再編』(東京: 朝日新聞社, 1993).

〈표-2〉 55년 체제하의 중의원 득표율

구분	총정수	자민당	추가공인	사회당	공산당	공명당	민사당	신자유클럽	사민련	신생당	인본신당	사키가케
제28회 (58.5.22)	467	57.8 (287)	11	32.9 (166)	2.6 (1)							
제29회 (60.11.20)	467	57.6 (296)	4	27.6 (145)	2.9 (3)		8.8 (17)					
제30회 (63.11.21)	467	54.7 (283)	11	29.0 (144)	4.0 (5)		7.4 (23)					
제31회 (67.1.29)	486	48.8 (277)	3	27.9 (140)	4.8 (5)	5.4 (25)	7.4 (30)					
제32회 (69.12.27)	486	47.6 (288)	12	21.4 (90)	6.8 (14)	10.9 (47)	7.7 (31)					
제33회 (72.12.10)	491	46.9 (271)	13	21.9 (118)	10.5 (38)	8.5 (29)	7.0 (19)					
제34회 (76.12.5)	511	41.8 (249)	12	20.7 (123)	10.4 (17)	10.9 (55)	6.3 (29)	4.2 (17)				
제35회 (79.10.7)	511	44.6 (248)	10	19.7 (107)	10.4 (39)	9.8 (57)	6.8 (35)	3.0 (4)	0.7 (2)			
제36회 (80.6.22)	511	47.9 (284)	3	19.3 (107)	9.8 (29)	9.0 (33)	6.6 (32)	3.0 (12)	0.7 (3)			
제37회 (83.12.18)	511	45.8 (250)	9	19.5 (112)	9.3 (26)	10.1 (58)	7.3 (38)	2.4 (8)	0.7 (3)			
제38회 (86.7.6)	512	49.4 (300)	4	17.2 (85)	8.8 (26)	9.4 (56)	6.4 (26)	1.8 (6)	0.8 (4)			
제39회 (90.2.18)	512	46.1 (275)	11	24.4 (136)	8.0 (16)	8.0 (45)	4.8 (14)		0.9 (4)			
제40회 (93.7.18)	511	36.6 (223)	8	15.4 (70)	7.7 (15)	8.1 (51)	3.5 (15)		0.7 (4)	10.1 (55)	8.1 (35)	2.6 (13)

* 주: 무소속은 포함하지 않았음. ()은 획득 의석 수.

1993년 7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여 자민당의 일당지배체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민당 장기정권의 요인

자민당이 55년 체제 하에서 38년간에 걸쳐 정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민당 내부의 공존 시스템, 즉 파벌간 역학관계이다. 자민당이 장기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자민당 내부의 '파벌간 진자운동' 과 그 경쟁을 통한 의사정권 교체 때문이었다.⁹⁾ 자민당은 매우 다양한 보수세력의 결집체였기 때문에 당내에는 다

9) 内田健三, 『派閥一政權抗爭の表と裏』(東京: 講談社, 1983), p. 177.

10) 田中直毅, 『日本政治の構想』(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4), p. 43.

양한 이념과 정책 흐름이 존재했다. 이 때문에 자민당 내부에는 어느 정도 권력의 상호 통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었다.¹⁰⁾ 이 ‘메커니즘=파벌간의 협력과 경쟁’이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파벌간 격렬한 경쟁이 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이었다.¹¹⁾ 주류파에 대항하는 비주류파의 존재는 차기 정권담당 후보를 가시화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 장기정권의 독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파벌역학관계에 의한 의사정권교체는 일당지배의 본질을 은폐시켜 주었고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둘째, 자민당의 분권적 정치구조에 의한 포괄정당화이다. 자민당은 하부조직을 통해 지방의 정치운동을 장악했다. 즉 자민당은 사회경제의 깊숙한 부분까지 침투하는 동시에, 그것이 중앙의 의사결정에 일정부분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의 요구와 이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더욱이 자민당 단독정권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계진출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신념에 상관없이 자민당에 입당함으로써 자민당의 사상적 폭은 넓어질 지언정 좁아지는 일은 없게 되었다. 즉 자민당은 이데올로기 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정치집단과 시대적 조류를 포섭하여 ‘포괄정당’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¹²⁾ 또한 특정 이데올로기나 사회 계층에 집착하기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다시 말하자면, 자민당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에 합당한 정책을 개발 실행하는 능력과 보수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그다지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했다.

셋째, 혁신정당의 미성숙과 유연성의 결여, 그리고 정권교체의 의지 상실 등이다. 일본에서 정당정치가 시작된 이래 강력한 내각에 의해 지탱된 보수정권이 지속되었던 반면 혁신정당이 정권을 장악했던 경험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혁신정당은 이상주의를 표방했던 강경 좌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미성숙한 채로 머물러 있었다. 즉 혁신정당은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모방 차원을 넘어 주체적인 정치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다. 더욱이 혁신정당은 정권담당 능력과 의사를 가진 대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후 제 1야당인 사회당은 자당후보가 전원 당선되더라도 중의원 의석 과반수에 훨씬 미달되어, 정권교체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¹³⁾ 다시 말해 일본의 정당체계에서 혁신정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11) 居安正, “自民黨の派閥,” 西川知一·河田潤一(編), 『政黨派閥』(東京: ミネルヴァ書房, 1996), p. 159.

12) Otto Kirchheimer, “The Catch-all Party,” in P. Mair(ed.),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50-60.

13) 山口二郎, 『政治改革』(東京: 岩波書店, 1993), pp. 67-68.

이 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자민당 정권의 장기화는 혁신정당의 미성숙과 유연성의 결여, 그리고 정권교체의 의지 상실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냉전체제의 지속이다. 우선, 냉전체제 하에서 자민당은 반공주의 이념을 체제선택의 논리로 사용하여 자민당 이외의 다수파 형성의 여지를 협소하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자민당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안보비용을 삭감하는 동시에 시장 및 기술의 무제한적 공급으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해 산출된 잉여의 배분을 통해 지지집단을 유지·확대할 수 있었다.

자민당 정권의 돌발적 붕괴

그렇다면 위에서 전술한 네 가지 요인에 의해 38년간에 걸쳐 단독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던 자민당이 돌연 1993년 8월에 야당으로 전락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자민당 체제의 과잉 제도화로서 파벌정치의 폐해이다. 자민당 내에는 정치적 입장이 가까운 집단이 파벌 횡단적으로 형성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응집성은 파벌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즉 자민당 내에는 정책 입장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편으로, 정당의 통일성을 약화시켜 파벌간의 대립과 경쟁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무시한 채 현실적 이익에 기초한 정치활동이 일반화됨으로써 ‘돈과 파벌의 힘’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¹⁴⁾ 이것이 자민당 파벌정치와 금권 스캔들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었다.

〈표-3〉 자민당 파벌정치의 변화 : 1955-1993

	정권 특징	당풍
중소파벌 시대 (1955-1978년)	· 주류파와 비주류파의 대립 · 정권 불안정 · 각 파벌의 운영은 영수의 성격·시조를 반영	· 돈과 포스트를 매개로한 다수파 공작 · 유동적
일파벌돌출 시대 (1978-1987년)	· 다나카파가 정권 운명결정 · 정권의 이중구조	· 각료와의 유착 · 이익배분의 다나카 정치
대파벌 시대 (1987-1993년)	· 비주류파가 존재하지 않음 · 당기관과는 별도로 파벌간의 협의로 정부와 당의 방향결정	· 파벌의 운영이 기관중심주의로 변질 · 의원의 비판적 언동을 파벌이 억제

14) 井芹浩文, 『派閥再編成』(東京: 中央公論社, 1988), pp. 150-153.

15) 田中直毅, 앞의 책, p.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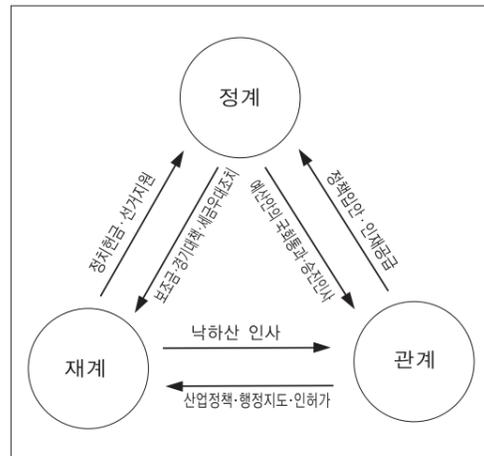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보면, 다나카가 금맥(金脈)문제로 퇴진할 때부터, 파벌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한 약동감은 자민당 정치에서 사라지고, 음습한 권력투쟁만이 전개되었다. 소위 정권을 스스로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는 '배후의 지배·이중권력구조(二重權力構造)'의 문제가 표면화 되었다.¹⁵⁾ 이 때부터 자민당 장기집권의 원동력인 파벌간 역학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복수의 파벌이 적당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비판 견제하여 긴장감 넘치는 정치운영을 도모해 가는 파벌정치의 효용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⁶⁾

둘째, 국내경제의 변화에 의한 이익유도정치의 파탄이다. 1960년대 이케다·사토 내각은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그 이익배분 메커니즘에 따라 이익집단을 조직화하여 자민당 정권에 대한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¹⁷⁾ 그 결과 55년 체제 하에서 자민당의 핵심적인 역할은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예산 및 인·허가권을 특정 선거구 혹은 특정 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관·재 삼각동맹에 의한 이익유도정치는 정당정치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정치의 기능을 단순히 이익배분에 집중시키는 역할로 폄하시켰다. 그러나 1980년

대에 들어 이러한 이익유도정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로, 정책 공간의 포화(飽和)이다. 이는 지방의 생활정비 및 경제기반의 향상을 도모했던 정책이 끝나고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전개할 여지가 사라졌다. 둘째로, 조직상의 변화이다. 자민당을 지지했던 조직 규율의 이완과 조직속에서의 개인의 자립이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로, 통치구조의 한계이다. 이는 중앙부처가 더 이상 지방의 발전 및 복지의 이미지를 그릴 수 없게 되었다는

〈그림-2〉 정·관·재 상호관계와 이익유도정



* 출처: 金子道雄(編), 『現代日本の國家と社會』(京都: 法律文化社, 1996), p. 75.

16) 岩見隆夫, "派閥の力学," 『ジュリスト』第35號(東京: 有斐閣, 1984), pp. 123-124.

17) 이기완, "현대일본국가의 변질과 신보수주의," 『아세아연구』제47권 제3호(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4), pp. 189-195.

것이다. 1950~60년대처럼 일본의 경제력이 불충분하고 경제발전이 정책목표인 단계에서 중앙 부처 주도의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



1990년대 자민당의 경제정책은 적절한 경기대책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쿄 사가와규빈사건으로 대변되는 이익정치로 인해 자민당 정권은 점차 정권담당능력을 상실해 갔다.

를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 고도경제성장이 달성된 후에는 오히려 관료와 중앙 부처의 주도는 장애물이 될 뿐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 변화를 총괄해보면, 기존의 자민당이 지지를 조달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언급했던 '중앙과의 파이프'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맞물려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는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복합불황'의 상태에 빠졌다.¹⁸⁾ 자민당 정권은 수차에 걸쳐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지만, 그 방법은 공정금리의 인하에 의한 금융완화와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수법에 의존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요와 동떨어진 행정주도의 경제 정책은 한편으로 지방자체단체로의 막대한 공공사업 보조금의 지원과 다른 한편으로 대도시 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따라서 1990년대 자민당의 경제정책은 적절한 경기대책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쿄 사가와규빈사건으로 대변되는 이익정치로 인해 자민당 정권은 점차 정권담당능력을 상실해 갔다.

셋째, 국제적 냉전체제의 붕괴이다. 냉전 시기에 자민당은 자당과 반대 정당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 및 정책의 차이 때문에 격렬한 파벌투쟁에도 불구하고 당내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77년 록히드 사건과 1988년 리쿠르트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회당을 비롯한 반대정당의 존재 때문에 자민당 내에는 소수의 탈당과 정치개혁 슬로건 이상의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1980년대 자민당이 분열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자민당 내의 반대세력들이 야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할 공통의 '정치적 토양'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소연방의 붕괴에 따른 냉전종식은 전후 일본정치를 분단시켜 왔던 보·혁 대립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자민당 일부와 야당 세력 간 정책연합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즉 냉전종식은 전후 일본정치의 기본구도인 보·혁 진영간 대립을 해소

18) 宮崎義一, 『國民經濟の黃昏: 複合不況とその後』(東京: 朝日新書, 1995), pp. 158-159.

19) 이기완,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서울: 케이시, 2002), pp. 86-88.

20) Gerald L. Curtis, 『The Logic of Japanese Politics: Leaders, Institutions, and the Limits of Change』(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pp. 78-79.

하여 대담한 정계개편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²⁰⁾ 이리하여 냉전이라는 장벽에 의해 포위되었던 정당간 폐색(閉塞)상황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정당 내 대립과 파벌정치도 표면화했다. 자민당 내 파벌투쟁의 영향은 당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하타·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등과 같은 야심적인 자민당 정치인들은 전후 일본정치에서 형성된 의회의 대립 축을 횡단하면서 야당과 정책연합 내지 연립정권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전의 반대 정당인 사회당을 정계개편의 '파트너'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사회당의 정권 참여를 불허한다는 기존의 방침도 철회했다.

1993년 정치변동과 자민당의 불안정한 우위

자민당의 분열과 비자민 연립정권의 성립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55년 체제를 종결지었던 자민당의 분열과 그 후 비자민 연립정권의 성립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파의 내분과 자민당 내 중진 의원 및 소장파 의원들의 대립 등이 서로 중첩되면서 발생했다. 이 양자에 관계했던 것이 1980년대 말 리쿠르트 사건 이래 일련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스캔들이었다. 파벌영수인 다케시타 전 수상과 가네마루 당 부총재가 스캔들에의 관여 의혹으로 파벌 운영에서 이선으로 물러나자 다케시타파는 주도권을 둘러싸고 오자와가 주도하는 하타파와 오부치를 영수로 하는 오부치파로 분열했다.

이 파벌 내분이 자민당의 분열로 이어졌던 것은 정치부패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와 소장파 의원들의 입장 차이에 기인했다. 소장파 의원들은 리쿠르트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된 정치부패 스캔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정치개혁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1989년 이래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내각과 미야자와 내각은 정치개혁을 시도했지만, 야당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 반발에도 직면했다.

그리고 1993년 6월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실패로 끝난 후, 공산당을 제외한 전 야당에 의해 제출된 미야자와 내각 불신임안을 계기로 자민당 내 오자와·하타파와 정치개혁추진파의 다케무라 등이 1993년 6월 18일 자민당을 탈당하여 신생당과 신당사키가케를 창당했다.²¹⁾ 이후 실시된 7월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를 확보하

21) 小澤一郎, 『日本改造計畫』(東京: 講談社, 1993); 讀賣新聞社政治部, 『政界再編の幕開け』(東京: 讀賣新聞社, 1993).

22) 이기완, "호소카와 내각과 정치개혁," 『국제정치논총』 제41집 4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pp. 199~201.

지 못해 창당 이래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략하게 되었다.²²⁾

한편,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8월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를 수반으로 하는 비자민 연립정권을 성립시켰다. 이 비자민 연립정권은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결집했던 것일 뿐 정책일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1994년 1월 정당조성금의 도입을 포함한 정치자금 개혁과 소선거구·비례대표를 조합한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으로 한 정치개혁관련법안이 타결되자 연립여당 내 구심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정치개혁관련법안의 결착 직후 소비세율 인상을 목적으로 한 국민복지세의 제안과 그 철회 과정에서 연립여당 내 대립이 격화되어 결국 사회·사키가케 양당이 비자민 연립정권으로부터 이탈했다. 그 후 비자민 연합은 자민당으로부터 탈당하여 창당된 자유당과 신당미래이 등을 끌어들이며 신생당의 하타를 수반으로 한 하타 소수파 내각을 성립시켰지만, 2개월 만에 총사직하는 단명정권으로 끝났다.²³⁾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연립정권

〈표-4〉 1993년 이후 연립정권의 역사적 전개

년 월	수상	정당연합	비고
1993. 8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일본신당, 민사당, 신당사키가케, 사민련, 민주개혁연합(회파)	자민당의 야당전략
1994. 4	하타 스토무(羽田孜)	신생당, 공명당, 일본신당, 민사당, 자유당, 개혁의회, 사민련, 민주개혁연합	2개월 단명정권
1994. 6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자민당, 사회당, 신당사키가케	사회당 수반 내각
1996. 1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자민당, 사회당, 신당사키가케	자민당의 정권복귀
1996.10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자민당, 단독 소수파 내각	사회·사키가케 각의협력
1999. 1	오부치 게이조(小渕惠三)	자민당, 자유당	
1999.10	오부치 게이조(小渕惠三)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	
2000. 4	모리 요시로(森喜朗)	자민당, 공명당, 보수당	
2001. 4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자민당, 공명당, 보수당	
2002.12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자민당, 공명당, 보수신당	
2002.11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자민당, 공명당	

* 주: 2000년 4월 자유당의 분열로 창당된 보수당은 2002년 12월 민주당의 탈당자를 끌어들이며 당명을 보수신당으로 변경했고, 2003년 11월 10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11월 21일 당을 해체하고 자민당에 합류했다.

23) 이기완(2002), 앞의 책, pp. 157~171, 214~222.

자민당은 하타 소수와 내각에서 각의협력에 있던 사회·사키가케 양당을 끌어들이 1994년 6월 30일 역사적인 '3당 연합정책협정'을 체결하고 무라야마 연립정권을 성립시키면서 약 10개월만에 다시 정권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립내각은 55년 체제 하에서 격렬하게 대립했던 자민·사회 양당이 정권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정당체제의 일대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당은 자민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권의 자리에 복귀하는 대가로 미일안보조약 견지, 자위대 합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는 노선전환을 단행했다. 더욱이 사회당은 55년 체제 하에서 반대하고, 호소카와 연립정권에서도 격렬히 반대했던 '소비세율 인상'까지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회당의 정책전환과 양보는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의 유지에는 커다란 공헌을 했지만, 사회당 그 자체에는 파멸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사회당 내 좌우 양파의 대립을 심화시켜 1996년 9월에 민주당의 창당과 함께 사회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遠因)이 되었다.

한편, 자민당도 사회당과의 연합에 동조하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하시모토와 YKK(야마사키, 가토, 고이즈미)를 중심으로 하는 당 집행부는 사회당 및 사키가케와의 연립 우선 노선을 주장한 반면, 가키야마 세이로쿠(梶山 静六)관방장관과 나카소네 등 보수세력은 사회당과의 연립에 비판적이었다. 결국 자민당은 사회·사키가케 양당과의 연립 유지를 바라는 당 집행부와 보수세력간의 정당연합을 바라는 당내 보수파간의 대립을 초래했지만,²⁴⁾ 연립 여당의 의석수에 기초하여 예산안 통과는 물론 주요 법안을 성립시키는데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

1995년 7월에 실시된 제17회 참의원 선거에서 무라야마 수상이 이끄는 사회당은 개선 의석 41석 중에서 16석만을 획득하는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 여당 3당의 획득 의석은 간신히 과반수를 넘었지만, 사회당의 참패를 계기로 무라야마 수상의 퇴진 문제가 부상했다. 반면 자민당은 1995년 11월 하시모토를 총재로 선출하고 가토 고이치(加藤 紘一)간사장, 야마사키 다쿠(山崎 拓)정조회장 등으로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하여 정권 장악을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그 결과 1996년 1월 무라야마 수상이 퇴진하고 자민당의 하시모토가 3당 연립정권의 수상으로 취임했다. 미야자와 수상 이후 2년 반만의 수상직 탈환이었다. 하시모토 내각은 지금까지의 자민·사회·사키가케의 3여당 체제의 계속이었지만, 사회·사키가케 양당 당수가 각료로 입각하지 않아 자민당의 비중이 한층 커진 정권이었다.

1996년 10월 20일,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

24) 박철희, "일본의 체제변화와 자민당의 불안정한 우위", 『한국정치학회보』 제38권 3호(한국정치학회, 2004), p. 308.

민당은 야당인 신진당 및 민주당의 부진 속에서 그럭저럭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획득했지만,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는 참패를 당했다. 이를 계기로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는 총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으로 자민당과 거리를 두고 내각에 각료를 보내지 않는 '각외협력'으로 전환하여 자민당 단독 소수와 내각이 성립했다.

이 총선거 이후 정당간 역학관계는 크게 변화했다. 우선, 1993년 이래 의원들의 탈당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던 자민당이 오히려 신진당을 탈당했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여 1997년 말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야당측은 신진당의 부진 속에서 하타 전 수상 등이 신진당을 탈당하여 1996년 12월 26일 태양당을 창당했고, 1997년 6월 15일 신진당을 탈당한 이래 무소속으로 있던 호소카와 전 수상도 12월 26일 신당 프롬화이브를 결성했다. 더욱이 당내 파벌투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1997년 12월 25일 신진당은 오자와 그룹의 자유당, 구(舊)공명당 중의원 그룹의 신당 평화, 구(舊)민사당 그룹의 신당우애,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그룹의 국민의 소리, 구(舊)공명당 참의원 의원 그룹의 여명클럽, 오자와 다쓰오(小澤辰男)그룹의 개혁클럽 등 6개로 분열했다. 또한 사민당과 사키가케는 과반수를 확보한 자민당에 의한 하시모토 내각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자, 자민당과의 협력관계를 단절했다.²⁵⁾ 1998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하시모토 내각이 총사직하고 오부치 내각이 자민당 단독 내각으로 성립했다. 하지만 오부치 내각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되자, 자민당은 1999년 1월에 자유당과 연립했고, 10월에는 공명당을 끌어들이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을 성립시켰다. 자유당의 오자와 당수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자유·공명 3당 선거협력의 실현을 요구했지만, 이에 자민당의 오부치 수상이 난색을 표시하여 결국 2000년 4월 1일, 자유당이 연립정권으로부터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오부치 수상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밀실야합으로 모리 요시로(森喜朗)내각이 성립했다. 모리 수상은 공명당과의 연립정권을 계속하기로 하는 동시에 자유당으로부터 이탈한 노다 다케시(野田毅)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 창당한 보수당에 연립정권에의 참여를 요청했고, 이에 보수당의 찬성으로 자민·공명·보수 3당 연립정권을 유지했다.

모리 내각이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지지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과 함께 자민당 내 반발—'가토의 난'을 초래했다. 가토는 2000년 11월 모리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집행부의 노선에 반발하면서 민주당의 모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에 찬성하여 자민당 집행부를 퇴진시키려는

25) 이기원(외), 『현대일본의 정치와 사회』(서울: 태봉, 2005), pp. 38-39.

26) 박철희, 앞의 글, pp. 308-312.

공작을 전개했지만, 노
나카 히로무(野中廣務)
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지도부의 와해공작에
의해 오히려 가토파가
가토파와 호리우치 미
치오(堀内光雄)파로 분열, 가토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²⁶⁾



모리 내각이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지지를 회복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전통적인 지지
층의 이탈과 함께 자민당 내 반발이라
는 '가토의 난'을 초래했다.

고이즈미와 자민당 정치의 변질

모리파의 회장이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는 모리 내각의 정책을 정면
에서 비판하는 재정재건노선을 주장해 왔고, 정책면에서도 가토 및 민주당의 노선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하시모토파를 비롯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보수당에서는 고이즈
미의 등장을 경계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2001년 3월 19일 모리 수상의 돌연 퇴진 표명으로 본격화된 자민
당 총재선거(4/23)에서 비주류파로의 전략을 우려한 모리 전 수상의 불출마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는 자민당 재생과 파벌정치의 타파를 총재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출
마, 당내 최대 파벌에서 추대했던 하시모토를 누르고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었다. 고이
즈미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본 대중의 정치적 선호를 읽는 탁월한 능력이다. 평소 자민당의 밀실정치
와 파벌정치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왔던 고이즈미
는 2001년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지금과 같은 자민당이라면 해당하는 편이 낫다,
자민당을 바꾸자, 수상 직선제를 실시하자, 파벌을 해체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²⁷⁾
또한 모리 수상이 비주류파로의 전략을 두려워해 고이즈미에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고이즈미는 출마를 결심, 자신이 속한 모리파와도 대립
하는 양상을 연출했다. 이러한 고이즈미의 '반자민당적, 반파벌적' 자세는 밀실정치
와 파벌정치에 의해 탄생되었던 모리 내각의 실정에 대한 반발과 맞물려 일반의 예상
을 깨고 지방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둘째, YKK 그룹 및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의 선거 지원이다. 고이즈미는 자민
당 내 파벌세력의 역학관계를 고려해볼 때 국회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이 도저히

27) 大嶽秀夫, 『日本型ポピュリズム』(東京: 中公新書), p. 90.

28) 위의 책, pp. 87-89.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초 총재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YKK 그룹의 야마사키·가도와 다나카의 선거지원 약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특히 국민적 인기가 높았던 다나카의 선거지원 유세에 의해 ‘고이즈미·다나카’의 가두연설에는 기록적인 수의 청중이 몰려들었고 자발적으로 고이즈미를 지원하는 지방의원들이 속출했다.²⁸⁾

셋째, 기존의 자민당 이익정치에 대한 과감한 비판이다. 전후 일본 정치에서 정책형성은 정부·자민당(족의원),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재계, 고위관료층이라는 3자에 의해 이뤄져 왔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이 개발과 관련된 이권을 중앙 성청으로부터 지방 및 특정업체에 배분하고 그 대신 지역의 지지표와 돈을 지원받는 이익유도정치가 정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유도정치는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고, 고이즈미는 그러한 이권형 정치의 타파를 정면에 내세우는 선거 전략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01년 4월 26일 고이즈미 수상은 ‘자민당 재생’과 ‘성역 없는 구조개혁’을 주창하면서 기존의 자민당 정치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파격적인 인사를 통한 자민당의 조직원리에 대한 도전이다. 자민당 내에는 각료 임명과 관련된 세 가지 관행—파벌의 추천명부에 기초하여 인선, 당3역과 상의하여 각료 결정, 연공서열의 중시—이 있었지만, 고이즈미 수상은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각료를 임명했다. 예를 들면, 고이즈미 총재는 2001년 4월 26일에 자민당 간사장에 모리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마사키를 기용했고, 정조회장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무회장에는 호리우치 미치오(堀内道雄)를 임명하여 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파를 당 3역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시켰고, 또한 총리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나카 마키코를 외상에 발탁했다. 이러한 인사는 언론으로부터 ‘경천동지의 인사’라고 보도될 정도로 파격적인 것이었다.

고이즈미의 파격적인 인사는 2003년 9월 20일에 실시된 총재선거에서 재선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특히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인사로는 중의원에 불과 3회 당선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간사장 발탁이었다. 이는 대중적 인기가 있던 그를 통해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당선 회수를 중시하는 자민당

29) 2005년 9월 중의원 총선거 승리 이후 단행한 제3차 고이즈미 내각개편(10월 31일)에서도 고이즈미 수상은 주변 인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인사 결정을 내렸으며, ‘포스트 고이즈미’ 후보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했다. 특히 관방장관에 아베 신조(安倍晋三)자민당 간사장 대리를 기용했고 아소 다로(麻生太郎)총무상을 외상에 임명하는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우정 민영화 이후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히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정원감축을 담당할 총무상에는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다케나가 헤이조(竹中平藏) 경제담당·우정민영화 담당상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고이즈미 수상은 우정민영화 반대파 의원들의 낙선을 위해 동원했던 ‘여성 자객’들을 중용하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를 환경상 유입과 이노구치 구니코(猪口邦子)를 남녀 공동참여 담당상으로 발탁했다.

의 조직원리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⁹⁾

이러한 예상 밖의 인사를 통해 고이즈미 수상은 자민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동시에 파벌정치와 파벌의 영향력-포스트의 배분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고이즈미 총재는 이전부터 “파벌정치가 이념을 무시한 채 현실적 이익에 기초한 정치 활동을 일반화시키는 동시에 ‘돈과 파벌의 힘’을 강화시켜 이익유도정치와 금권 스캔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파벌정치의 타파를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1994년 정치개혁법의 성립³⁰⁾과 궤를 같이하여 자민당 내에서 공론화되어 파벌 해단식을 거행하고 정책집단으로 이행했지만,³¹⁾ 실제로는 파벌로서 존속하다가 재차 부활하여 자민당 정치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파벌정치는 고이즈미의 개혁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있어 파벌 영수가 ‘우향우’를 지시하면 그것에 따르던 ‘파벌의 논리’가 과거의 유물이 되어 갔다.³²⁾ 이는 2003년 9월 20일에 실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 후보가 당원표와 의원표를 각각 205표, 194표를 획득하여 총재로 선출되었는데, 이 때에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파와 호리우치파가 자파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자유투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고이즈미 후보가 지방표의 68.3%와 의원표의 54.3%를 획득했다는 것은 파벌의 영향력이 예전처럼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통한 기존의 이익유도정치에 대한 도전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정민영화 법안이다. 고이즈미가 우정민영화를 추진했던 것은 두 가지에 기인한다. 첫째, ‘철의 삼각형’에서 파생되는 기득권의 타파이다. 재정 투입자에 의해 유지되는 특수법인과 그 포스트에의 낙하산 인사가 초래하는 재정의 낭비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가 일본정치의 최대 과제는 행·재정개혁에 있으며, 일본정치의 최대 낭비는 우정사업에 있다고 주장했던 것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둘째, 정치 이권의 해체와 다나카형 정치 및 구 다나카파(현 하시모토파)의 해체이다. 1992년 미야자와 내각에서 고이즈미는 우정민영화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정상에 취임했다. 당시 우정성 관료들은 그를 철저히 따돌렸고, 가네마루, 노나카 등 자민당 내 우정족 거물 정치인들에게 보고했는데, 이것이 고이즈미 수상이 우정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즉, 고이즈미 수상의 우정개혁은 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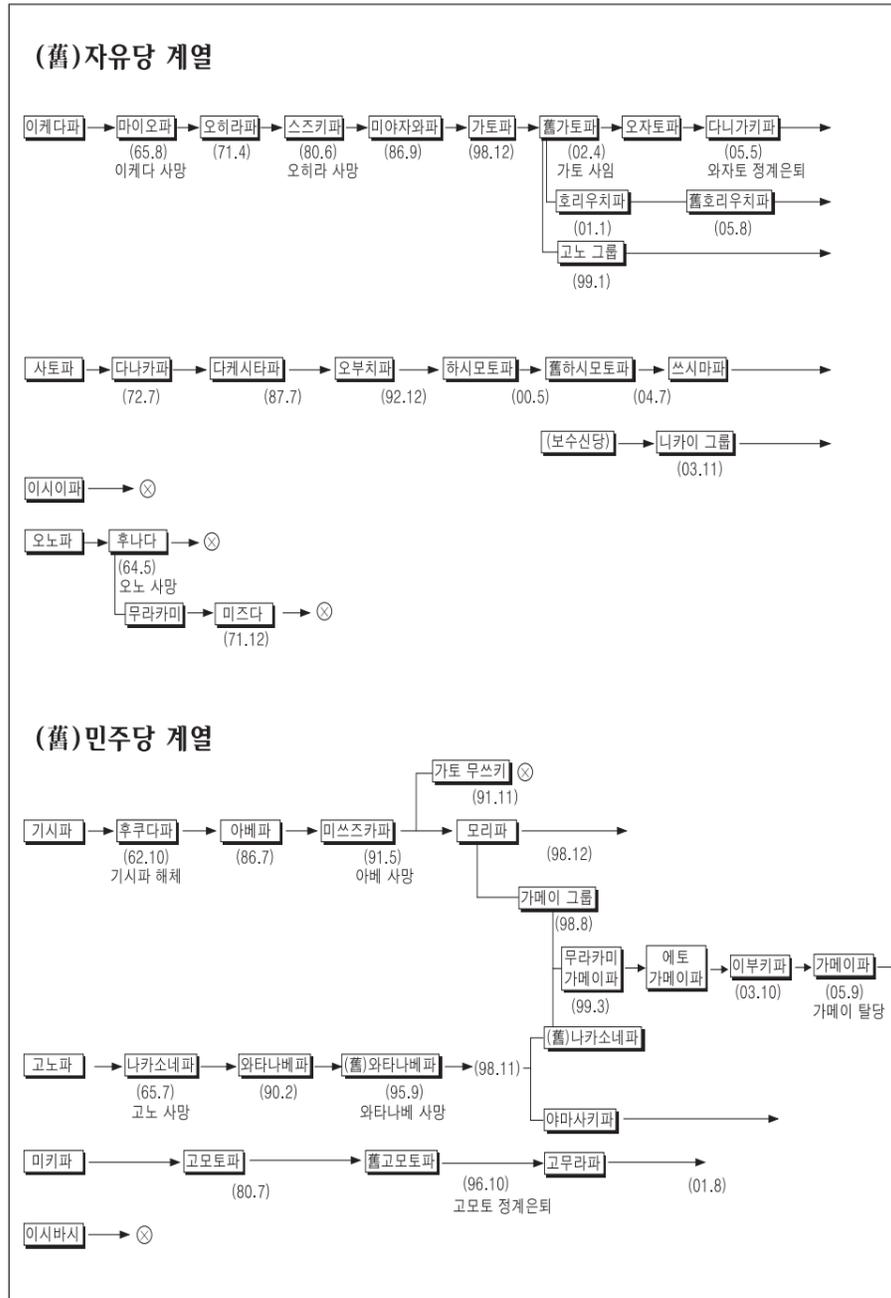
30) 이기완(2001), 앞의 글, pp. 195-211.

31) 이것은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동일 선거구에서 파벌간의 경쟁도 파벌개입의 여지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고 개정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각 의원들이 파벌로부터의 자금지원보다는 정당교부금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32) 이면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정세와 정책』 제97호(성남: 세종연구소, 2003), pp. 13-14.

33) 후지와라 기이치, “고이즈미 강수, 파벌제편 노린다,” 『동아일보』 2005/8/11.

〈그림-4〉 자민당 파벌의 계보: 1955~2005



〈표-5〉 자민당의 파벌 현황

자민당의 파벌(동칭)	회장	계	중의원	참의원
세이와세이사쿠젠큐카이(모리 파)	모리 요시로(森喜朗)	80명	54명	26명
헤이세이젠큐카이(쓰시마 파)	쓰시마 유지(津島雄二)	72명	38명	34명
고우치카이(舊호리우치 파)	공석	48명	33명	15명
긴미라이세이지젠큐카이(야마사키 파)	야마사키 다쿠(山崎楯)	37명	32명	5명
시스이카이(이부키 파)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34명	18명	16명
반쵸우세이사쿠젠큐카이(고무라 파)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15명	13명	2명
고우치카이(다니가키 파)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15명	11명	4명
아타라시이나미(니카이 그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14명	12명	2명
다이유카이(고노 그룹)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11명	10명	1명

* 주: 2005년 12월 30일 기준. 고우치카이(舊호리우치파)는 현재 회장 공석인 관계로 니와 유아(丹羽雄哉)가 회장 대행 맡고 있다. 또한 다이유카이의 회장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이지만 중의원 의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아이자와 히데유키(相澤英之) 전 중의원 의장이 파벌을 책임지고 있다.

나카파의 이권을 박탈해 모리파와 구 다나카파의 역학관계를 역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³³⁾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민족주의적 외교정책의 추진이다. 고이즈미 수상은 1980년대 말 거품 경제의 붕괴로 인해 일본의 우월성과 자긍심이 상실되는 속에서 강한 국가의 부활을 희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본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주의적 언술을 정치에 도입했다. 고이즈미는 전후 일본 국가를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는 ‘특수국가(abnormal state)’로 명명하면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보통국가(normal state)’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신사참배에 대한 주변국의 비난에 대해 “신사참배는 본래 마음의 문제로 타국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이러한 고이즈미의 정치 자세는 기존의 자민당 주류의 정치노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자민당 내 반발과 일부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지만, 새로운 정치를 희구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에 ‘고이즈미 정치’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9.11 중의원 총선거와 자민당의 압승

2005년 8월 8일 고이즈미 수상이 명운을 걸고 밀어붙인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이 자민당 내 22명의 ‘반란표’에 의해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108표, 반대 125표로 부결되자 고이즈미 수상은 중의원을 해산하는 정치적 결단을 단행했다. 이 당시 지배적인 여론은 자민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압승에 의한 ‘민주당 단독 정권 또는 민주당을

〈표-6〉 2005년9월11일에 실시된 제44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신당일본	제파	무소속
당선자수	296	113	31	9	7	4	1	1	18
공시전세력	212	177	34	9	5	4	3	1	32
해산시세력	249	175	34	9	6	-	-	1	3

중심으로 한 연립정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고이즈미 수상의 중의원 해산을 '무모한 도박'이라고 폄하했다. 하지만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자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이같이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 연출이다. 고이즈미 수상은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것을 계기로 중의원을 '불시 해산'하면서, 우정개혁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면서 무슨 개혁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개혁을 할 수 없다면 정권을 포기하겠다는 결의에 찬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는, 기존의 수상들이 개인적 스캔들 및 오직사건에 의해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더라도 당내 파벌간의 '야합'을 통해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려던 것과는 정반대의 자세로, 기존의 정치질서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수상은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는 중의원 불시해산을 통해 기성정치에 반발하는 무당파층의 기분에 동조하는 동시에 자신을 무당파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정치적인 영웅'으로 표출했던 것이다.

둘째로, 고이즈미 수상과 자민당의 선거전략, 즉 정치쟁점의 단순화와 양극화이다. 당초 일반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우정민영화 법안이 선거의 지배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이즈미 수상은 끈질기게 우정민영화만을 주장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했고, '우정민영화=개혁의 시작'이라는 신문 사설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여성 자객'까지 내세워 '정치적 대립축'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고이즈미 수상은, 자민당은 특정우편국장회라는 자신들의 지지단체와 결별했지만, 민주당은 조합과 결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의해 원칙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³⁴⁾ 이러한 고이즈미의 정치 전략은 '적'을 명확히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해가는 고도의 '정치 쇼'였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고이즈미 수상 및 자민당은 팜플렛이나 광고를 통해 이번 선거를 우정민영화 선거로 규정짓고 우정민영화에의 찬성=개혁과, 반대=수구파라는 식으로 선거쟁점을 단순화했다. 이러한 선거 전략은 자민당 내의 대립을 은폐시키는 동시에 여야당의 대립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34) "郵政選挙の結果を讀み解く,"『世界』11月號(2005), pp. 95-96.

결과적으로 야당의 존재를 무력화하는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왔다.³⁵⁾

셋째로, 우정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지역



2005년 총선에서 고이즈미는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기성정치에 반발하는 무당파층의 기분에 동조, 그 입장을 대변하는 '반정치적 영웅'으로 표출했던 것이다.

구에 '스타 여성'을 대거 공천하여 국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다. 고이즈미 자민당 총재는 우정민영화 법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던 정치인들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의원 지역구에 유명 여성 정치인을 '대항마'로 내세웠다. 고이즈미는 우정민영화 법안의 부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고바야시 고키(小林興起) 지역구에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환경상, 가메이 시즈카(亀井靜香) 지역구에는 여배우 아즈마 지즈루,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지역구에는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 기우치 미노루(城内實) 지역구에는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サツキ), 모리오카 마사히로(森岡正宏) 지역구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등의 '여성자객'을 통해 '반대표=약'을 응징하는 정의의 '여성 사도'로 이들과 자신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연출했다.

넷째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특징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자민당의 홍보 전략이다. 우정민영화 법안 부결 이후, 고이즈미와 자민당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매스미디어, 특히 TV를 통한 대중에의 지지 전략을 최대한 활용했다. 자민당은 "우정개혁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면서 무슨 개혁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개혁을 할 수 없다면 정권을 포기하겠다"는 고이즈미의 결의에 찬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방송하면서 고이즈미를 '고립된 투사', '개혁의 전도사'로 연출하는데 성공했다. 이것과 더불어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자민당 탈당파 의원들을 단죄하기 위해 '여성 자객'을 대항마로 내세운 고이즈미의 전략은 연일 매스미디어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야당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고이즈미의 홍보 전략은 자민당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고이즈미의 언사 및 이미지, 그리고 '여성 자객' 공천 인사라는 자극적인 전략 덕분에 무당파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자민당에 투표하도록 유인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민주당 당수의 강력한 지도력 부재와 당내 지지기반의 특수성에 의한 당내 대립이다. 민주당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하는 '큰

35) 読賣新聞東京本社世論調査部(編),『二大政黨時代のあけぼの』(東京:木鐸社, 2004), p. 17.

정부파'와 자민당 이상으로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는 '작은 정부파'의 노선대립 때문에 고이즈미의 우정민영화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자민당과는 달리 선거쟁점을 단순화하고 흥행선거(여성 자객)를 전개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켜 폭넓은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정책들은 자민당의 흥행선거와 선거쟁점의 단일화에 묻혀서 커다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실패했다. 또한 고이즈미 자민당 총재가 간결한 언사와 과묵한 표정으로 전통적 사무라이 상(像)의 이미지를 표출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반면, 성실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연출한 오카다의 캐릭터는 별다른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자민당과 일본정치의 미래

위에서 전술한 9.11 중의원 총선거의 결과는 기존의 일본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 자민당의 정치권력이 기존의 '55년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자민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당과 같은 강력한 반대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하며, 비록 민주당이 113석을 얻어 제1 야당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민·민주 양당의 정책적 유사성으로 인해 자민당이 주도하는 정책이 야당의 저항을 그다지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일본의 정계는 향후 자민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민주당의 견제기능 약화, 그리고 혁신정당의 몰락 등으로 급격히 '총보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민당의 보수지배체제에 강력히 저항해 왔던 민주당 내 구사회당 계열의 퇴조와 사민·공산 양당이 각각 7석과 9석만을 획득하여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예측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민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자민당이 어떻게 극복·해결하는가에 의해 '2005년 체제'의 안정과 일본 정당정치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민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민당의 부정적 이미지 불식과 개혁정치의 지속일 것이다. 고이즈미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 세력에게 '저항세력'이라는 레테르를 붙였고, 자민당을 이권정치 및 기득권 옹호세력으로 비치게 했다. 이러한 전략은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을 이루었던 농민 및 중소기업인들의 지지 철회를 초래했지만, 기존에 정치질서에 염증을 느낀 대도시의 신중간층 및 무당파층을 지지층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고이즈미의 개혁정치가 '反經世會' 정치 및 이권형 정치의 혁파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표-7〉 일본의 정당

구분	정당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자민당	총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간사장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중의원(480) 의원	296
		참의원(242) 의원	114
		당원	140만 명
	민주당	영문명	Liberal Democratic Party(LDP)
		대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간사장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중의원 의원	112
		참의원 의원	82
	공명당	당원	3만4천 명
		영문명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대표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간사장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중의원 의원	31
	공산당	참의원 의원	24
		당원	40만 명
		영문명	New Clean Government Party
		중앙위원회의장	공석
		간부회위원장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사민당	서기국장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중의원 의원	9
		참의원 의원	9
		당원	40만 명
		영문명	Japanese Communist Party(JCP)
	국민신당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간사장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중의원 의원	7
		참의원 의원	6
		당원	3만 명
	신당일본	영문명	Social Democratic Party(SDP)
		대표	와타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
		간사장	가메이 히사오키(荒井久興)
		중의원 의원	4
		참의원 의원	3
	자유연합	영문명	The People's New Party
대표		다나카 야스오(田中康夫)	
간사장		아라이 히로유키(荒井廣幸)	
중의원 의원		1	
참의원 의원		1	
신당대지	영문명	New Party Nippon	
	대표	도쿠다 다케시(徳田毅)	
	중의원 의원	1	
	참의원 의원	0	
	당원	0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입헌양정회(立憲養正會)	고가와 치카라(小川力)	1946년 결성, 국가주의적 우익단체
	대일본에국당		1951년 결성, 우익단체
	일본노동당		1974년에 결성, 신좌익당파
	제2원클럽	아오시마 유키오(青島幸男)	1983년부터 정당화
	국민당	시라이 사카에(志良以榮)	1988년에 결성된 정치단체
	스포츠 평화당	이노키 요시모리(猪木快守)	1989년 결성, 스포츠 정신을 정치에 도입
	여성당	시노하라 후사코(篠原ふさ子)	1993년 결성, 여성해방과 여성정치진출
	유신정당·신풍	우오타니 테츠오(魚谷哲央)	1995년 결성, 강경외교와 국군창설
	신사회당(新社會黨)		1996년 결성, 사회당 좌파 노선 지지
	세계경제공동체당	마타요시 미츠오(又吉光雄)	1997년 결성, 세계경제공동체 지향
	존명(尊命, 다케무)	다나카 고우(田中甲)	2001년 결성
	일본공진당(日本公進黨)	오가사오라겐지(小笠原賢二)	2001년 결성, 일본의 전통·문화·역사존중
	평화당		2004년 결성, 자연주의 경제체제의 구축

* 주: 2006년 1월 기준.

에는 오히려 자민당의 전반적 이미지 약화, 지지 세력의 약체화, 그리고 무당파층의 지지철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³⁶⁾

두 번째의 과제는 자민당 내 정치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한계의 극복이다. 일본의 수상은 끊임없이 '하야 공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국민의 지지만으로는 당선 및 재선을 획득할 수도 없다. 따라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당 국회의원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자당 국회의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정치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고이즈미 정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급속히 하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세 번째의 과제는 '고이즈미의 극복'과 포스트 고이즈미의 인지도일 것이다. 지난 총선거에서 자민당 압승의 상당 부분은 고이즈미 수상 개인의 지도력과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이즈미 수상이라는 인기 정치인이 사라진 후 자민당의 지지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아마도 2005년 9월 자민당의 압승과 같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이즈미 이후 적어도 그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고이즈미를 능가하는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민당에 대한 지지는 급락하고 선거에 대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고이즈미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종료되는 2006년 9월 시점에서 자민당 정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김성룡, "일본 '55년체제'의 형성과정 연구," 『일본평론』 제8호(서울: 사회과학연구소), 1993.
- 박철희, "일본의 체제변환과 자민당의 불안정한 우위,"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3호(서울: 한국정치학회), 2004.
- 이기완, "호소카와 내각과 정치개혁," 『국제정치논총』 제41집 제4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 이기완, "현대일본국가의 변질과 신보수주의," 『아세아연구』 제47권 3호(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4.
- 이기완,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 서울: 케이시, 2002.
- 이기완(역), 『일본현대정치사』, 서울: 케이시, 2003.
- 이기완(외), 『현대일본의 정치와 사회』, 서울: 매봉, 2005.
- 이기완(외), 『동맹의 정치학』, 서울: 매봉, 2005.
- 이기완, "고이즈미 승리와 한일관계," 『경향신문』 2005/9/20.

36) 박철희, 앞의 글, p. 313.

이면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2003,” 『정세와 정책』87호(성남: 세정연구소), 2003.

후지와라 기이치, “고이즈미 강수, 파벌재편 노린다,” 『동아일보』2005/8/11.

朝日新聞政治部, 『政界再編』, 東京: 朝日新聞社, 1993.

井芹浩文, 『派閥再編成』, 東京: 中央公論社, 1988.

石川眞澄・廣瀬道貞, 『自民黨-長期支配の構造』, 東京: 岩波書店, 1989.

猪口孝・岩井奉信, 『「族議員」の研究』,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7.

岩見隆夫, “派閥の力學,” 『ジュリスト』第35號(東京: 有斐閣), 1984.

上脇博之, “小選舉區制がもたらした自民壓勝,” 『世界』11月號(2005).

内田健三, 『派閥一政權抗爭の表と裏』, 東京: 講談社, 1983.

大嶽秀夫(編), 『政界再編の研究: 新選舉制度による總選舉』, 東京: 有斐閣, 1997.

大嶽秀夫, 『日本型ポピュリズム』, 東京: 中公新書, 2003.

小澤一郎, 『日本改造計畫』, 東京: 講談社, 1993.

小野直樹, 『戦後日米關係の國際政治經濟分析』,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部, 2002.

金子道雄(編), 『現代日本の國家と社會』, 京都: 法律文化社, 1996.

田中直毅, 『日本政治の構想』,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4.

高嶋通敏, “日本新黨のイメージ選舉と社會黨の大連合の解休,” 『エコノミスト』8月號(1993).

西川知一・河田潤一(編), 『政黨派閥』,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1996.

細川護熙(編), 『日本新黨・責任ある變革』,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3.

眞神博, “再浮上! 佐川とNTT疑惑,” 『文芸春秋』6月號(1994).

宮崎義一, 『國民經濟の黄昏: 複合不況とその後』, 東京: 朝日新書, 1995.

森田實, 『政界大亂: 自民解休・新黨創生』,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3.

山口二郎・生活經濟政策研究所(編), 『連立政治同時代の檢證』, 東京: 朝日新聞社, 1997.

山口二郎, 『政治改革』, 東京: 岩波書店, 1993.

山口二郎, 『日本政治の崩壊』, 東京: 岩波書店, 2004.

讀賣新聞社政治部, 『政界再編の幕開け』, 東京: 讀賣新聞社, 1993.

讀賣新聞東京本社世論調査部(編), 『二大政黨時代のあけぼの』, 東京: 木鐸社, 2004.

ロバートスカラピーノ・升味準之輔, 『現代日本の政黨と政治』, 東京: 岩波書店, 1962.

“郵政選舉の結果を読み解く,” 『世界』11月號(2005).

Curtis, G. L., The Logic of Japanese Politics: Leaders, Institutions, and the Limits of Chan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Kirchheimer, Otto, “The Catch-all Party,” in P. Mair(ed.),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기생적 민족주의’ 초극의 과제

石田英敬(일본 東京大學 교수) 외



현대 일본의 신민족주의

전후 일본의 신민족주의하면, 80년대 초반에 ‘전후 정치 총결산’을 주창하며 등장했던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수상이 ‘동경제관 전쟁사관’ 등의 ‘자학적인 사조’로부터 탈각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야스쿠니(靖國)신사의 공식참배 등 일련의 ‘매파’적 언동을 행한 것이 떠오른다. 나카소네 수상의 노선은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한 ‘경제대국’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국제화’를 통해 ‘정치대국’으로 연계시키려는 최초의 시도였으나, 중국 등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강한 비판을 받아 좌절했다. 경제번영의 절정(‘저팬·애즈·넘버 원’)에 있었기에, 대중소비사회의 과실(果實)에 도취해 있던 국민의 다수에게도 ‘위로부터의’ 국가주의 강매는 그다지 매력적인 것이 못되었다.

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신민족주의는, 전혀 사정을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식의 '위로부터의' 고취가 아닐뿐더러, 단순히 '아래로부터의' 요구도 아니다. 동서냉전의 종결과 함께 만들어진 새로운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정계 일부의 움직임에 호응해서, 언론인·문화인이 일부의 미디어를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언동을 집중호우격으로 흘려보내고, 여론과 매스미디어 전체의 공기를 극적으로 바꾼 상태에서, 거대 여당이 주로 정치적 마무리를 한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복잡하게 얽히고, 위정자·미디어·국민 모두를 휩쓴 '전체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카소네 수상이 주창했지만 불발로 끝난 '자학사관'의 극복이나, '일본인의 자부심'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은, 더 이상 일부의 반동세력의 선동이 아니라, 일반 학생이나 시민에게도 최신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게 되어, 지금에 와서는 '전후 정치 총결산'의 최종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밀어붙이기 헌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80년대 중반의 신민족주의와 오늘날의 신민족주의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 쇼와(昭和)천황의 사망과 현 천황의 즉위, 냉전의 종결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걸프전쟁, 민족분쟁의 격화,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나 개방정책의 진전, 전 '중군위안부' 등 피해자들에 의한 일본 전쟁책임의 고발, 거품경제의 파탄에 의한 장기 경제불황으로의 돌입, 한신 아와지(阪神 淡路)대지진, 지하철 사린가스사건, 도카이무라(東海村)우라늄 가공시설의 임해사고 등에 의한 '안전신화'의 붕괴, '학급붕괴'나 소년범죄의 '흉악화'에서 보이는 교육시스템의 파탄 등등. 이러한 상황의 격변이, 이번 신민족주의 대두의 배경을 형성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역사수정주의와 신민족주의

최근의 신민족주의에 있어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중심이 된 것은, 교육학자 후지오카(藤岡信勝)를 대표로 하는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와, 독일 문학자인 니시오(西尾幹二)를 회장, 후지오카를 부회장으로 해서, 만화가 고바야시(小林よしのり) 등이 가담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다. 그들은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을, 전승국에 의해 밀어붙여진 일본=악당론의 '자학사관'이라 하며, 역사교과서가 '반 일적' 기술에 가득차있다고, 격렬하게 교과서 비판을 전개했다.

후지오카는 '자유주의 사관'을 정의함에 있어, 메이지(明治) 국가에서 '건전한 민족주의'를 발견하는 시바(司馬遼太郎)의 문학을 인용하며, '대동아전쟁 긍정사관'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남경대학살도 '중군위안부' 문제도 '국내외의 반일세력'에

의한 날조라면서, 일본의 전쟁책임도 식민지 지배책임도 부인하였다. 즉, '건전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최악의 역사수정주의에 귀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은 『세이론(正論)』 『쇼군(諸君)』 『SAPIO』 등의 우파계 미디어, 혹은 고바야시의 인기만화를 통해서 광범위한 계층에 침투하기에 이르렀다. 고바야시의 『전쟁론』은, 매우 영성찬 논리로 일본군의 전쟁을 미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후 평화주의에 대한 터브 파괴로서 환영받고, 사리사욕의 개체(個體)를 초월하는 '공(公)=국가'의 복권을 내걸고 60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니시오의 『국민의 역사』는, 민족 나르시시즘과 대서양 루산티만 사이를 동요하며, 어디까지나 어두운 결론에 도달하는 기괴한 역사 에세이 집이지만, 조직적 구매 등에 의해 이것 또한 '베스트셀러' 화하는데 성공했다(2000년 6월 현재 약 75만 부). 그들은 풀뿌리 수준에서는, 복고주의적 민족주의 단체 '일본회의' 등과 연계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역사교과서로부터의 '중군위안부' 관련기사의 삭제와, '국가정사(正史)'가 되기 위해 구상된 그들 자신의 교과서 채택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운동이 분명히 민간의 언론인·문화인이 주도하고, 재계인이 뒤에서 밀어주는 형식을 취했지만, 정치적 수준의 움직임과 결코 뗄 수 없다는 것이다. 93년 8월, 자민당이 해야하고 연립정권 수상이 된 호소카와(細川護熙) 수상은, '저 전쟁은 침략전쟁이었다,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확인했지만, 이것에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 우파 국회의원 105명이, '역사검토 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식인을 초빙해서 '자학사관' 비판 연구회를 열고, 그 결과를 95년에 『대동아전쟁의 총괄』로서 간행했다. 후지오카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역사검토 위원회'는, 96년에 결성된 역사교과서 공격의 중심이 되는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의 모체이며, 그들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후지오카, 니시오, 고바야시 등의 주장의 대부분은, 전후에도 변함없이 보수 세력의 일부를 접해온 복고적·역사수정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지루한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것은, 그것이 교묘한 미디어전략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호소하고, 울트라·민족주의에 대한 여론의 경계를 해제하는데 성공한 점이다. 그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냉전의 종결과 함께 강화된 일본인의 굴절된 '피해자 의식'이 있다. '서방의 일원'으로서 냉전의 '승자'였을 우리가, 왜 마치 패전국처럼, 일제히 전쟁책임을 추궁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번영의 극에서 '경제패전'으로, '제2의 패전'으로 추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과거를 보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금방 '자존심'이 회복된다고 역설하는 신민족주의자의 언설에서, 한 순간의 위안을 발견한다.

기생·민족주의 로서의 신민족주의

1999년은, 신민족주의가 정치수준에서 법

적표현을 찾아낸 해로서 기억될 것이다. 일본붕괴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공(公)=국가’를 외치는 신참의 이데올로그들의 선전이 충분히 효과를 거둔 것을 확인했다는 뜻이, 이 해의 제 145 통상국회에서는 일련의 국가주의적 법률이 잇달아 성립했다.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신가이드라인 관련법, 국기·국가(國歌)법, 도청 법, 개정주민 기본대장법(改正住民基本台帳法), 개정출입국관리법, 등등. 전후보수정치가 반세기간 계속해서 꿈꿔왔지만 실현할 수 없었던 일을 단번에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사태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자공(자민당·자유당·공민당 연립) 거대 여당의 존재와, 민족적인 가치의 돌출을 비판하지 못하고, 역으로 그것을 ‘정상화’로서 용인해가는 저널리즘의 동향이었다.

신민족주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기·국가법이 중요하다. 히노마루·기미가요는 전전·전중에서는 절대주의적 천황제와 동일시되어 사실상의 국기·국가로서 국민통합의 ‘상징의 정치’에 계속해서 이용당해왔다. 그것이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정식의 국기·국가로서 법제화된 것이다. 정치와 행정의 의도한 것은, 특히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히노마루 게양·기미가요 제창의 강압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정식적인 국기·국가가 아니다’라는 반대의 근거를 박탈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강제가 아니라 수상·문부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후의 학교 현장에서는 ‘따르지 않으면 처분’이라는 형식의 강제가 일반화하고, 반대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하는 관리의 강화가 진행되었다. 국기·국가법에 한정되지 않고 이번에 성립한 법은, ‘국민’과 ‘외국인’을 보다 명료하게 나누고, ‘국민’과 ‘외국인’ 쌍방을 엄격한 감시 하에 뒀, 국가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이물(異物)’로서 배제해 가는 방향성을 갖는다. 그런데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국가’에 대한 무자각적인 귀속감·일체감에서부터, 설마 자신이 국가로부터 배제되는 쪽에 돌아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소수자에 부과되는 압력·폭력에 대해 계속해서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중요한 것은, 히노마루·기미가요로 상징되는 ‘위로부터의’ 국가의식의 주입이,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에 보이는 군사적·정치적인 대미종속의 심화와 세트가 되어 있는 점이다. 한국전쟁 시, 상징천황제는 오키나와를 희생해가면서도, 안보조약에서 ‘고쿠



일본국민은 설마 자신이 국가로부터 배제되는 쪽에 돌아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소수자에 부과되는 압력·폭력에 대해 계속해서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타이(國體)유지' 를 위한 담보를 추구했다. 마찬가지로, 전후 일본의 보수파 민족주의는 일관해서 초강대국 미국의 우산 아래서 이익을 발견해왔고, 그 의미에서 한번도 기생(종속)·민족주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반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시하라(石原慎太郎) 지사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놓고 '유사' 시에 있어 미군에의 전면협력을 약속해버리는 모순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전쟁에 국가전체가 전면협력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있어 국민통합의 강화가 불가결하고, 패권국 미국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지금 다시 '열강' 에의 길(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화)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천황제와 신민족주의

국기·국가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기미가요' 의 가사는 전전의 천황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후 일본의 국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많이 나타났다(예를 들어 가토우(加藤典洋)). 이에 대해 정부는, '기미가요(君が代)' 의 '기미(君)' 는 '일본국 및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 을 의미하고, '기미가요(君が代)' 의 '요(代)' 는 '국(國)' 을 나타낸다, 즉 가사 전체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천황을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긴 변명과 평화를 기원한 것' 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현행 헌법을 근거로 한 천황제 비판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천황제 그 자체를 문제화하는 발상이 미디어를 포함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상징천황제 민족주의가 현대 일본사회의 골수에까지 스며들어 체질화되었기 때문이다. 상징천황제에 있어 "요쿠산(翼眞)" 체질이 노정된 것은, 원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대 말의 쇼와(昭和)천황 와병시의 '자숙' '기장(記帳)' 소동, 사거(死去)와 그것에 뒤따른 세습의식의 보도내용은, 전후 일본인이 천황제의 전쟁책임을 불문에 붙이고, 쇼와천황 개인에 대한 감정적 동일화 또한 단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 성공이라는 쇼와의 '국민이야기' 의 중추로서, 상징천황을 계속해서 필요로 했다는 것을 충분히 밝히고 있었다.

현 천황의 재위 10년 기념식전에서도, 모리(森喜朗) 수상의 '천황중심의 신국' 발언에서도, 위정자 측이 현행헌법의 상징천황제를 끌어들여 '정당화' 를 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은 항상 '전전의 천황주권의 부활이 아니냐.' 라는 형식에 그쳐, 전후 천황제 그 자체를 공격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구도가 여전하다.

'천황을 때 놓은 민족주의' 라는 논의가 있다. 천황은 '더 이상 일부러 눈썹을 찌푸리면서까지 문제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는 것으로,

요미우리(梅毒)신문사 '헌법개정시안' (94년)에서부터, 후지오카(藤岡), 니시오(西尾), 고바야시(小林) 등의 교과서 비판, 후쿠다(福田和也)의 보수주의까지, 현대 일본의 신 민족주의도 '천황을 때 놓은 민족주의' 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오즈카(大塚英志)).

그러나 후쿠오카나 니시오가 모리수상의 '신국발언' 을 재빨리 지지하고, 사카모토(坂本多加雄)가 '국민이야기' 의 중심에 상징천황제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부터도 명백한 것처럼, '자유주의사관' 도 '만드는 모임' 도 천황제를 긍정하고 있다. '천황제를 때 놓은 민족주의' 를 지향한다면, 신민족주의들이 술선해서 일체의 천황제 폐지를 주장해야겠지만, 그런 일은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다. 원래 현행헌법에 엄연히 새겨진 상징천황제를 그대로 놔두고, '천황제를 때 놓은 민족주의' 따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포퓰리즘적 배외주의와 신민족주의

모리수상의 '신국(神國)' 발언(2000년 6월 15일)에 앞서 이시하라 도지사의 '삼국인(三國人)' 발언(같은 해 4월 9일)은 전자와 다른 위상에 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리 수상이 밀실의 담합에서 태어난 구정치의 상징인데 반해, 이시하라 지사는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적' 지도자이다. 취임이래, 디젤차규제나 대 은행에 대한 외형표준과세 등 '대담한'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해, 변함없는 관료정치에 짜증을 느끼던 도민의 갈채를 받았다. '신국발언' 이, '신도정치연맹' 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북고조의 압력단체에서의 내부용 립·서비스 적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삼국인' 발언은, 육상 자위대 제1사단의 창설기념회 연설이며, 근대적인 장비를 갖춘 '3군' 의 '병사들' 을 향한 '공명정대' 한 낭독이자, '열원(熱願)' 이었다.

위험한 것은, 바로 그 포퓰리스트적 수단에 호소한 배타주의적 선동이다. '삼국인' 발언의 문제성은, 단순히 재일한국인, 대만인에 대해 차별적이고 역사적인 호칭을 사용한 것 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불법입국 한 삼국인, 외국인' 이라는 식으로, 명확히 의미가 다른 말을 잇달아 뱉어냄으로써, 재일조선인·중국인이나 장기체류(overstay)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일반에 대한 불신이나 공포를 의도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들' 일본인과 '외국인' 을 적대관계에 놓고, 동경의 흉악범죄를 '누가 범하고 있느냐면 전부 삼국인, 즉 불법입국에서 눌러 앉아있는 외국인이 하고 있지 아니냐.' 는 데마고기(demagogy)를 사용하여, 외국인 = '매우 성가신 존재' 라는 배척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 도청(都廳)이나 미디어에 보내진 반응의 8할이 이시하라 옹호의 발언이었다는 것은, 이시하라 포퓰리즘 정치의 무서움과 함께, 시민사이에 민족주의적 외국인혐오가 광범하게 퍼져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이시하라의 민족주의는, 굴절된 백인 콤플렉스와 아시아인 멸시가 섞인 인종주의적 요소가 강하다. '삼국인' 뿐만 아니라 '지나(支那)' '북선(北鮮)' 등의 차별용어를 계속사용하기를 꺼리지 않은 이시하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일본인이 그 지역에서 '명예 백인' 취급받았던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 반미 민족주의자를 자칭하는 그가 '중국 상대의 전쟁'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신가이드라인에 협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데에서도, 이 구조가 일관되어 있다. 일견 '근대적인' 이시하라 포퓰리즘 정치의 근거에 있는 것은, '일본' 과의 무매개적 동일화, '일본국가' 의 '체내화' 라는, 울트라·민족주의 특유의 나르시시즘적 구조이다. '나 같은 것은, 내가 죽어버리면, 일본국가가 소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그것은 즉, 내 몸 속에 일본이 있다는 일체감이다' (고바야시와의 대담, 『SAPIO』1999년 8월 22일/9월 8일호)

민족주의의 문법

제3차 국민국가기에 있어서 일본의 민족주의

제147회 국회에서부터 중·참의원에서 헌법조사회(調査會)가 상치(常置)되어 일본국 헌법개정을 시야에 넣은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전장에서 진술한 것처럼, 이제 '전후정치의 총결산' 은 국민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수정이라는 최종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우리가 현재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대일본제국 헌법 하 50여 년간의 제1기 국민국가, 일본국 헌법에 기초한 마찬가지로 전후 50여 년에 걸친 제2기 국민국가라는 두 개의 국민국가에 이어, 제3의 국민국가가 세워지려는 조짐이다. 게다가, 현재의 정치계나 언론계에 있어, '국가형태' 를 두고 논의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의 국민국가체제의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국민-국가' 라는 국민과 국가를 분절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정의하는 구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의 결정적 무능력을 의미한다. 정치적 이성 대신에 민족주의만이 목소리가 커져 가는, 바로 그곳에 이 나라의 위기가 있다. 물론 냉전 후의 세계체제 속에서 국민국가의 존립조건은 전반적으로 재정의 되어, 많은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민족주의가 분출했다. 사회주의 진영의 명에서 해방되어 민족항쟁에 빠진 발칸의 민족분쟁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 있어 국민국가를 넘어선 통합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의 움직임도 있다. 냉전체제 하에서는 '경제대국' 이 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정치적 소인' 으로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뒷전으로 했던 일본과 같은 나라까지도, 냉전 후의 세계 속에서의

정치적 방위(方位)를 재정의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민족주의는 언제나 국민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앤더슨)의 위기 징후이자 증상이다. 병리적인 민족주의를 중화하는 장치를 얼마나 정치적 공동체의 제도로서 도입할 수 있는가가, 그 나라 정치체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여론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 비판력을 가지고 있는가, 공동체에 대한 귀속을 강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적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민족주의를 내실화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이다. 정치의 성숙도와 민족주의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에 있어 진행 중인 사태는, 정치의 무능함 때문에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향해 사람들을 무비판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의해, 정치의 부재와 통합능력의 결핍을 매우고자하는 경향의 일반화이다. 이것은 비유하면, 정치계 및 언론계의 '학력붕괴' 현상이라고 불러도 좋을 사태이다.

민족주의의 '문법'

민족주의는, 현상으로서의 일국에 고유한 가치나 정치적 주장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국민국가가 형성 되는 세계체제에 있어 공통의<문법>을 갖고 있다. 얼마나 민족주의가 자국의 민족, 문화를 독자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정체성을 역사적인 특수성, 배외적 가치에서 구한다고 할지라도, 민족주의는 근대 세계체제가 낳은 것이며, 초역사적인 것도 자연적 감정에 근거한 것도 결코 아니다.

민족주의는, 내향화된 국가의지의 담론이다.

민족주의는 항상 일의적(一義的)으로는 국가를 둘러싼 담론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국가는, 항상 다른 국민국가와의 갈등관계에 있어 파악되고 있다. '서양열강'의 지배나, 제국주의전쟁이나 식민지화, 혹은 경제 패권전쟁 등, 역사적인 정신외상(트라우마)의 장면에서 시동하여, 처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의 이야기가 시동하는 것이다. 보불전쟁 후의 프랑스든, 제1차 대전 후의 독일이든, '국민의 역사'는 그래서 언제나 내향화된 '국민의지'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민족주의가 항상 전쟁의 메타포로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 주는 감언이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계속된 정치'인 것이다.(고바야시의 『전쟁론』은, 이 의미에서, 클라우제비치의 감언을 역전시켜, 정치를 평화 시에 있어서 전쟁의 계속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 담론의 본질을 그대로 실현시킨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문맥에 있어서, 전쟁을 금한 헌법9조야말로 국가의지의 루산티만의 공격대상이 된다. 헌법의 제약에 의해 '보통국가'가 될 수 없고, '강요된 헌법'에 의해 대미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제9조 문제는 국가의지의 욕구불만(frustration)이 수렴해가는 장소로서, 민족주의의 정치적 담론의 정념원이 되어왔던 것이다. 특히 90년대 이후의 세계화시대에 있어, 'money패전'이나 '제2의 패전'이라고 불렸던 사태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담론을 자극하게 되었다.

민족주의는, 국가에 의한 국민의 지배 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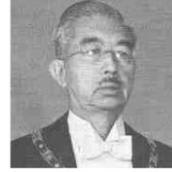
근대의 국민국가는, 사람들을 국민으로서 동질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공동체 속에 통합시켰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국가에 보다 가까운 인간과, 먼 인간을 선별하고 서열화해 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권위체계에 자신을 집어넣고, 그 권위의 후광을 얻어, 사람들에게 대해 권위 있는 입장에 서는 "이익"을 위정자에 제공하는 담론이기 때문이다. 관료조직이나 학교와 군대가, 그와 같은 권위체계를 신체화 하도록 한 역할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이지만, 천황제라는 독특한 신권적 권위의 체계를 발명한 일본의 근대국가에서는, 그 서열화와 배제의 체계가 폭력적인 지배의 맹위를 떨쳤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권위의 체계는, 학교를 시작으로 하는 기미가요(君が代)·히노마루(日の丸)의 강제에 있어 부활하고 있다. 오늘과 같이 세계문화의 혼합이 진전되고,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시대에 왜, 히노마루·기미가요인가? 거기에 있는 것은, 최소한의 공동체적 기반을 민족적인 기호에 묶어 두려는 발상이다. 정상적인 정치적 상상력이라면, 정치적 원리,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가치에 정치적 공동체의 기초를 둘 텐데, 무조건적으로 민족적인 상징을 강제하는 것에 의해, '국가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민족주의의 지적빈곤이 있다.

기업적 집단주의, 농촌적 공동체나 가족적 기반이 무너져, 학교교육의 위기가 현재화하고, 일본적인 '규율사회'가 붕괴하여, 사회적 아노미가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공적권위의 전반적인 붕괴현상이 진전되는 속에, '민족적인 권위체계'의 유지가 도모된다. '국가'와 '공공성'을 고의로 혼동하고, 국가의 권위 아래로 사람들의 동원을 선동하는 데 보이는 것처럼, 민족주의는, 국가권위의 위기를 말해주는 담론인 것이다.

민족주의는 픽션(의제擬制)전통의 담론이다.

국민국가는 근대의 세계체제가 만들어낸 픽션의 정치공동체이다. 민족적인 기억,

민족적인 역사, 달력, 여러 제식이나 의식, 기념비나 기념물, 서훈제도 등 다양한 상징제정에 의한 '전통의 발명' (홍스봄)을 통해, 이 픽



권위체계를 신체화 하도록 천황제라는 독특한 신권적 권위의 체계를 발명한 일본의 근대국가에서는, 그 서열화와 배제의 체계가 폭력적인 지배의 맹위를 떨쳤다.

션은 기초 지워진다. 근대에 발명된 국민이, 마치 역사를 관통해서 영속하는 공동체를 창조해 왔다는 것으로 여기는 환상의 공동체가 창출되는 것이다. 근대 일본 국민국가의 창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천황제가 그 '전통발명'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전후의 '상징천황제'는, 제1기 국민국가의 '상징체계'를 그대로 온존하는 것이 된다. 그 때문에 제2차 국민국가는 독자의 국가 상징계(象徴系)를 제도로서 가진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상징천황제'를 통로로 해서, 민족주의는, 전전으로의 회귀를 성취하려고 하고 있다. 오히라(大平)내각의 원호 법제화에서 시작해서, 메이지 국가의 축일(祝日)부활,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참배문제,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법제화는, 제1기 국민국가의 민족상징 복권의 도달점으로서 있었다. 역사수정주의나 '국민의 역사'가 지키려는 것은, 이 환상의 공동체로서 국민을 의미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만들어진 상징체계가, 현재의 미디어·이벤트 사회에 있어 그대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의 소거 사태의 진전을 앞에 두고, '스펙타클 사회'에 있어, 하위문화나 대중문화와 접속한 상징조작이 노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특히 국기·국가법안의 성립 후의 식전이나 이벤트가 나타내주고 있다.

민족주의는 국민의 불안을 위안해 주는 담론이다.

파시즘의 예를 들것까지도 없이, 민족주의의 대두에는, 국민 측에 있어서의 균질적인 구성의 붕괴와, 계층분화, 집단적 가치의 상실이 대응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민족주의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역사공식이다. 장기불황, 잇따른 도산, 구조조정, 실업, 자살, 가속화되는 계층분화, '새로운 격차의 시대' ('21세기의 매니페스토' (1)참조)와 '새로운 위험사회' (같은 책)에 있어, 한 때 공유되었던 '균질적인 중간대중'의 신화는 완전히 붕괴하고, '국가의 퇴장(退場)'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연대적으로도, 사회 계층적으로도, 문화자본에 있어서도 각자 떨어져 있어 '자기책임' 속에 유기(遺棄)되어 있다. 관료나 경찰의 모럴 해저드나 스캔들에 나타나 있는 위정자의 통치능력 상실이나, 금융위기에 자기중심적 대응밖에 할 수 없는 금융기업.

목표를 잃은 사회에 만연하는 불안과 갈 곳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강한 일본' 이나 '힘이 나는 일본' 의 메시지에서 위안을 구한다. 터브 깨뜨리거나 단도직입적 어투에, 관료주의적 언사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매료되는 일이 일어난다. 극우 정치가 이시하라 도지사는, 바로 그와 같은 민족주의에 의한 '위안' 회구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민족주의의 병리는 외국인 배척의 거울에 드러난다.

국민이 원래 상상된 공동체라면, 그 상상의 공동체는 그림자로서 배척되지만 그와 동시에 상상항(想像項)을 그려낸다. 세계화된 세계, 남북문제라는 근본모순에 추동되어 인구가 끊임없이 유동하는 세계, 상대화된 국경, 혼합된 문화, 눈뜬 새 없이 유통하는 정보의 홍수, 이와 같은 현재 세계에 있어, 각 국가의 민족주의 병리가 분출해오는 장소가 '외국인문제' 이다. 불황은, 사회의 수축현상을 일으켜, 그 때까지 받아들여졌던 외국인들이 '관용' 되지 않게 된다. 호황 시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불황 시에 있어 내쫓는 것, 1960년대 이후 선진공업국은 항상 이 양극을 왔다갔다 해왔고, 치안의 악화나 불황·실업이, 외국인 차별의 담론으로서, 민족주의에 환류해 간 것 또한 세계에 공통하는 경향이다.

이시하라 발언에 현저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나 체류자에 대해, 도시치안, 범죄 문제로서 결정화된 것은, 프랑스의 극우 '국민전선' 의 루·펜이나 오스트리아 '자유당' 의 헤이더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세계적 표준' 에 기초한 극우 담론이, 일본에서도 유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주의 담론은, 항상 국제정치도 국내정치도 '전쟁의 연장' 으로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민족주의는 여기에서도 외국인의 '위협' 을 둘러싼 담론으로서 등장한다. 전쟁의 담론이야말로, 국제정치의 외환과 국내정치의 내환을 잇는 마지막 동기(last motif)가 된다. 이시하라의 '삼국인 발언' 이, 자위대의 사열식에 있어 '삼군' 을 앞에 둔 연설이었다는 것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외국인 문제만큼, 국민권리의 경계('국민' 과 '비-국민' 의 구별)를 명백히 하는 쟁점은 없으며, 기본적 인권이나 복지국가나 민주주의의 '망상' 을 폭로하는 데 '적합한' 화제도 없다. 혹은, 개별적인 사건에서부터, 사법형사제도나 행정당국의 '저자세' 의 악폐를 논의하는데 적합한 재료도 없다. 그와 같이,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외적 존재로서, 외국인은 '기분 나쁜 존재' 의 역할을 맡게 된다.

역사수정주의, 민족적인 상징의 부활, '국가 형태' 의 재정의, 국가 상징의 강제와

기본적 자유의 억제, 계층분화 하는 중간계급이라는 민족주의의 항상 항(恒常項)이 맞물린 지점에서, 외국인이라는 ‘도시 속에 사는 공상의 적’을 대상으로, 극우는, 근대 법치 국이 의거하는 민주적 전제를 흔든다. 인종주의가, 시민사회의 기본원리를 침식하는 미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 때이다. 제2차 대전이후의 세계 틀, 복지제도나 사회권, 기본적 인권, 그리고, 기성의 보수정권이라면 공격을 터뜨 시 한 원칙을, 극우세력은 적나라하게 공격한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들은 ‘신선한’ 놀라움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지지를 넓히고,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기반을 침식해간다. 루산티만과 증오의 체제로 사회에 대한 지각이 변화해간다.

이상의 민족주의 문법을 되새기면,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민족주의도, 세계 속에서 보이는 ‘병리’의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역사수정주의나, 외국인 차별의 담론타입, 세계화하는 세계에 대한 영합과 반동, 포스트 냉전기의 국민국가체제의 모순 노정 등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유형화되어 있어, 세르비아나 오스트리아나 일본 등에 보이듯이, 냉전 하에 있어 억압된 민족주의의 기층이, 냉전의 종언에 의해 한꺼번에 노정되어 온 것에조차, 공통적이다.

상상의 냉전을 사는 일본

‘보통국가’론과 신민족주의

여기서, 80년대 중반의 민족주의와 오늘날의 신민족주의 사이에 있어, 냉전의 종언 및 걸프 전쟁이라는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의 신민족주의의 조짐이자 도약대가 된, 모종의 국가론이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되었던 것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보통국가’론이 그것이다.

이것은 걸프전쟁에 있어 다국적군에 대한 재정 면에서의 가담과 전쟁종결 후의 페르시아 만으로의 해상 자위대 소해정(掃海艇)파견을 계기로, UN중심주의라는 명목 아래 자위대합법화, 그 UN평화유지활동(PKO), 및 UN평화유지군(PKF)에 대한 참가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오자와(小沢一郎), 하타(羽田孜), 호소카와(細川護熙) 등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 탈당자에 의한 신생당, 일본신당 결성은, 오늘날의 연립정권 상태 화에 길을 열었지만, 그 당초 방침에서는, ① ‘보통국가’론에 의한 개헌준비의 착수, ②아시아 각국에 대한 형식적 사죄에 의한 ‘아시아 시대’에 대한 대응, ③UN 상임이사국을 위한 외교대책이, ‘미래지향’이라는 깃발아래, 신자유주의적인 자기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로서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일본

지배층의 냉전 후 세계정세에 대한 대응으로서, 모종의 합리적인 전략사고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돌출한 신민족주의는, 거품붕괴를 계기로 해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속에서, ①에 의해서 마련된 개헌에의 길에 올라타는 한편, ③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초조함(특히 중국이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을, ②에 의한 전쟁책임의 승인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의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소카와 수상에 의한, 말뿐이고,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극히 불충분한 사죄를, 일본 자본주의의 '미래' 를 위해 지불해야할 최소한의 '대상' 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공공연히, 여론의 그리고 정치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1999년에는 '국기·국가법' 의 성립이라는 국수주의적 반동이 현실화되고, 올해에는 모리수상에 의한 '신국' 발언이 튀어나오기에 이르렀다. '보통국가' 론이라는 일정한 합리성에서부터 '신국' 발언에서의 적나라한 비합리성으로, 이 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어떤 필연에 의해 전화해 간 것일까? 또, 이 과정의 종착점은 과연 어떤 사태인가?

‘신국’ 이데올로기의 파괴력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하나는, 근대의 민족주의에는, 특정 민족을, 인류의 보편적인 범형으로써, 즉 다른 민족의 모범으로서 제시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는 모방 불가능한 존재로서 예외 화 하는, 모순적인 운동이 구조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나찌·독일은 이 분열증 중 하나의 극한적 현재화(顯在化) 형태였다. 물론, 나찌는, 동시대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을 '신에 선택된 백성', 독일을 '신국' 으로 여기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보통국가' 와 '신국' 에 상당하는 대극적인 관념은, 어떤 민족주의에도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다(이런 의미에서, 민족주의는 항상 '병' 이며, '건전한 민족주의' 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아프리카트헤이트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스라엘 등에 '신국' 이데올로기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세계는, 이 이데올로기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 이후, 한편으로는 민족의 논리 밖에 나와 이 아포리아를 해소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민족이 이 분열을 인정한 한계를 넘어 현재화(顯在化)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암묵적으로 공유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동서냉전의 수혜자, 일본

그렇다면, 이 '발병'의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제2의 사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동서냉전이라는 시대, 및 냉전의 종언이라고 불리는 사태에 대해, 이 나라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다. 반세기 간 세계를 뿌리 깊게 규정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몇 배를 넘는 양의 병기가 투입된, 실태에 입각해서 말하면 결코 '냉전'이 아니었던 이 체제 간 모순의 시대로부터, 일본만큼 은혜를 입고, 이익을 얻은 국가는 없다. 냉전 덕분에 천황제는 온존되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쟁배상은 면제되고, 한국전쟁덕분에 경제부흥의 기회를 잡았으며, 베트남 전쟁덕분에 고도성장이 촉진되었다. 그리고 쇼와 천황은 전쟁책임을 추궁 받지 않은 채, 냉전시대 전체를 살아왔던 것이다(이는 일본에 있어 전쟁의 기억구조를 매우 뿌리 깊게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 모두를, '신국' 이데올로기를 펼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어떻게든 '신풍'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전후의 호경기의 통칭으로서 '진무(神武)경기'라던가 '이와도(岩戶)경기'라는 식의 명칭이 창안되어, 미디어를 통해 대중 속에 정착해간 것에서부터도, 전후경제 민족주의가 '신국' 이데올로기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

90년대 초, 냉전은 소련의 소멸과 함께 끝난다. 일본의 지배자들은, 일본은 냉전의 '승자'이고, '승자'에 어울리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예를 들어, 상임이사국)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심리적으로도 걸프 전쟁이 미국의 지배층에 있어 베트남에서의 패배를 보상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일본의 지배층에 있어 냉전에 있어서 '승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패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리고 이 보상은, 냉전이 '자유주의 진영'의 '반공 십자군'이었던 이상, 전전의 대일본제국의 치안유지법체제를 포함한 반공 전체주의도, 다소 정당화되는 지점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냉전에 독자적인 역사해석을 암암리에 항상 부여했던 것이며,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을 '파시즘 대 민주주의'의 투쟁으로 여기는 전승국 측의 해석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자유주의 진영' 내 유일한 국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의 종언은,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일본에게 유리했던 구조전체의 소멸을 의미한다. '자유주의 진영'이라는 틀이 의미를 잃고, 주변 아시아 각국이 개발독재기를 탈피하고, 일정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함과 함께, 일본은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피해국 민중과, 더 이상 어떠한 장벽도 없이 대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냉전의 '동맹자'였던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도, 냉전의 '패자'였을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도, 일본의 전쟁책임, 전후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강해졌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인도(人道)에 대한 죄'를 시작으로 하는 20세기 국제법 정신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그 때 거품이 꺼져, 80년대의 '채팬·애즈·넘버 원'적 '자존심'은 일거에 붕괴되었다. 상상 속의 '승리'와 현실의 곤경 사이의 낙차는 너무나 컸다. 고통을 견디고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과거의 영광 이미지에 과대망상적으로(나르시식하게) 동일화하는 쪽이 편했다. '힘이 나는 일본사'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

‘국민의 국가’와 공화제

그러나, 모리 수상이 공언하기에 이르기 전부터, '신국' 이데올로기는, 전후 천황제 및 그것을 지탱하는 정치세력 속에서 연명해왔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민족주의를 역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3의 점이다.

1946년 1월 1일의 소위 '인간선언'도, 천황 및 황족이 사후에 신이 된다는 신앙에 입각한 궁중의식을 전폐시킨 것이 아니었다. 또, 정치체제로서도, 헌법 1조를 둘러싼 법률학자 사이의 주류적 해석과 달리, 전후 천황은 일관해서 '한없이 군주에 가까운 존재'로서 군림해왔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공화제를 주창하는 자는, 전전과 마찬가지로 전후에 있어서도, 항상 공산주의자로 여겨지는 위협을 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점에, 일본형 냉전사상체계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성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오히려 우파적 뉘앙스조차 띤 '공화주의'를,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주창할 수 없는 이 나라는, 어떻게 강변하더라도 '보통국가'가 아니다. 일본이 상상 속의 '냉전'에서 탈피하여, '보통국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공화제를, 이 정치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형태'의 하나로서, 정치적 공공(公共)공간의 온갖 장에서, 당연하게 논의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1912년, 신해혁명에 의해 중화민국이 성립된 이래로, 동아시아의 독립국('민주국'은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은, 일본을 제외하면 항상 공화제를 채용했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시대가 끝나자, 동방국가는 '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조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서방국가는 '민국'(중화민국, 대한민국)을 썼지만, 이 두 호칭은 모두 군주제와 대비되는 공화제를 의미하고 있다. 한편, 전후 일본의 좌익운동이 체제변혁 후의 정치체제를 구상할 경우, 호칭으로서 거의 모두가 항상 '공화국'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 역시, 냉전에 규정된 언어의 선택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거꾸로 말

하면, ‘일본민국’이라는 호칭은, 냉전의 문맥에서 전혀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그 때문에 일본인의 역사적 상상력 속에 거의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이다.



‘보통국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공화제를, 이 정치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형태’로서, 정치적 공공(公共)공간의 온갖 장에서, 당연하게 논의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 모리 수상의 ‘신국’ 발언이래, 선거전 속에서 야당 각 당은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국민의 국가(民の國)’의 입장에 선다고 선언해 왔다. 그러나, 공산당을 제외하는 정당에 있어, 이 ‘국민의 국가’는 결코 공화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민의 국가(民の國)’는 ‘민국(民國)’이 아닌 것이다. 작년의 ‘국기·국가법’의 성립과정에서 명백해진 것은, 이 나라에서는 국기·국가 문제가, ‘보통국가’론(‘어떤 나라에도 국기·국가가 있다’)라는 ‘신국’ 이데올로기의 분절 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가결된 날, 일본 민족주의에 내재하는 분열증은 진정으로 한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있다.

이 법안의 성립과정과 이번의 ‘신국’ 발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비교하면, 하나의 기묘한 구도가 떠오른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기미가요’ ‘히노마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회의 의결이나 여론조사를 보는 한, 이 나라의 압도적 다수파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역시 여론조사를 보는 한, ‘신국’ 발언에는 부정적이다. 여기에, 전후 민주주의적인 정치의식이 갖는 깊은 모순이 나타나있다. 모리 수상의 머리 속에서는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지지받고 있는 이상 ‘신국’도 당연히 지지받아야 하는 것인데, 일본국민의 다수에 있어, ‘신국’이라는 관념과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관념의 과대망상 정도에 입각해서 보면 ‘기미가요’는 ‘신국’보다 작고, ‘히노마루’는 ‘기미가요’보다 작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며, 지지자의 수는 그것에 반례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노래와 이 깃발은 일본근대사에 있어 항상 ‘신국’의 노래와 깃발이었고, 그 것이 확실히 공적으로 부인된 적이 한번도 없다. 우리들의 생각은 모리 수상과 같다. ‘히노마루’ = ‘기미가요’ = ‘신국’이라는 등식은, 1945년 8월의 단절을 넘어, 냉전을 기회(‘신평’)로 삼아 연명한 천황제 일본 민족주의의 전전 전후를 관통하는 정형인 것이다. 그러나, 모리 수상과 달리, 우리들은 ‘신국’의 관념을 부정한다. 따라서 ‘히노마루’도 ‘기미가요’도 부정하는 것이다.

모리 수상의 발언을 ‘개인’의 자질문제로 축소시켜, ‘끝난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다. 이 발언을, 일본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히노마루’ ‘기미가요’ 와 ‘신국’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재고해보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생각해보면, 국가로서의 ‘기미가요’ 가, ‘신국’ 이데올로기에 의거하는 군주제 국가의 영속을 기원하는 노래인 것, 국가로서의 ‘히노마루’ 가, 태양신=아마테라스 신앙을 매개로 해서 ‘신국’ 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음은 명백하다. ‘신국’ 이 공공연히 발설되게 된 이상, 더 이상 이점을 애매하게 봐둘 수는 없다. 이 깃발, 이 노래를 그래도 아직 ‘국민의 국가’ 의 국기·국가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새로운 해석,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것을 ‘히노마루’ ‘기미가요’ (특히, 이것들의 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선 이 깃발, 이 노래를 수단으로 삼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국’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야말로, 자신의 설명을 주장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국’ 주의자와의 ‘의도하지 않은 공범 관계’ 를 끊고, ‘보통국가’ 가 ‘신국’ 으로 반전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미래의 전쟁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

극적인 수뇌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이 화해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고 있으며, 중국이 그 움직임을 전면적으로 백업하고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가 본격적으로 포스트 냉전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국이 냉전의 ‘승자’ 가 되지 않고, 북한이 냉전의 ‘패자’ 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 의해서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가능하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 실제로, 한반도에 있어 남북수뇌회담 후 진행될, 남북통일에 의해 태어날 ‘국가’ 는, 지금까지의 ‘국가’ 와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통일이 자주적인 동시에 평화적으로 실현될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 갈 것인가? 남북통일에, 어떠한 기존 국가모델을 들이대는 것도, 이상만의 국가상도 무효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본 신민족주의는, 목전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전대미문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려’ 고도, ‘알려’ 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일본을 ‘신국’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신평’ 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만일 여태껏 그러했던 것처럼 불어주지 않으면 ‘신평’ 을 (스스로) 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욕망에는, 구미에 존재하는 중국 위협론을, 일본 형 냉전 사상체계 대로 동아시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을 ‘패자’ 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이용하는 이외의 활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중국을 분열시킨다’ 는 이시하라 도지사의 ‘선전포고’ 는, 이 욕망의 솔직한 표명이다. 미국의 몇몇 전략연구소는, 작년 이

래로, 2020년대에는 동아시아에 큰 전쟁의 위기가 닥칠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일본이 '신국' 이데올로기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더 이상 일본에서밖에 통용되지 않는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있는 한, 이 미래 전쟁의 책임을, 지금부터, 이미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생 · 민족주의를 넘어서

기생제국주의의 탄생

구미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화의 공포를, 자신들만이 세계의 중앙에 위치한 선진문화국가라고 가상하고, 다른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뒤쳐진 사람으로서 배척하는, '존황양이(尊皇攘夷)' 라는 국내에서만 통용하는 '중화사상' 으로 숨기고, 권력투쟁을 통해, 실제로는 불평등조약의 강압을 받아들여 개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메이지유신' 후의, 근대국민국가로서의 일본의 걸음이 시작되었다. 한편으로는 구미 제국주의 열강에 대해, 복종하면서 조약개정을 진척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구미열강의 외교운리를 가급적 빨리 내면화한다는 자기 식민지화에 의해, 아이누 · 모시리 · 류큐(琉球)라는 주변지역을 식민지화 해갔다.

그리고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대영제국과의, 조약개정에 성공한 직후에 구미열강 수준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로서, 한반도와 중국대륙에 침략하는 청일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부터, 국제관계에 있어서 헤게모니 국가에 종속 및 기생하면서, 강대국간의 역학관계 사이에 표류하면서 부국강병해 가는, 근대 일본의 기생제국주의가 시작된다. 이 구도 속에서 한계의 지점에서 승리한 러일전쟁 후, 구미열강과 대등한 '일등국' 인 것을 강변하면서, 일본형 민족주의의 구조가 거의 확정된다.

구미의 헤게모니 강국에 대해서는, 선망 · 질투 · 공포를 품으면서도, 복수심에 가까운 원한을 불태우고(이런 감정을 니체는 루산티만이라고 명명했다), 군사적으로 일본보다 약한 대만이나 한반도를 시작으로 하는 주변지역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미 내면화했다고 강변하는 '문명' (강박 관념적인 '서양 중심주의')이라는 미명하에, 존대하고 기고만장하게 둘러싸기(동화)와, 배제(차별)를 동시에 발동하는, 폭력적인 분열 증적 지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방향을 향한 소심한 자존심과 무근거한 존대함이 교차하는 곳에, 기생 · 민족주의가 발생한다. 존대하게 될 시의 무근거함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양이(攘夷)' 를 뒷받침하는 '존황(尊皇)', 즉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라는 역사로 변환된 신화적인 '고쿠타이(國體)' 담론인 것이다. 그리고 '천황' 신화에 의해 무근거한 존대함의 공백이 충만해졌을 때, 수치심이 소거된 것이었다. 일련의 모리(森喜朗)의 '실언'은, 이러한 기생천황제·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발현이외의 것이 아니다.

반미 민족주의에서 기생·경제 민족주의로

패전 후, 이 구조가 굴절되면서 증폭된다. 헤게모니국가인 미국에 직접 점령된 것에 의해 일상적으로는 증오와 원한을 억압한 형태로 선망과 질투를 북돋는 동시에, 개개의 정치적 국면에서 원한을 폭발시켜 침예화하는 반미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한편으로는 과잉적으로 자기를 미국화해가는 욕망에 뒷받침된 형태로 일본이라는 국가의 가치를 미국적 기준으로 측정해서 자기만족하고 그 기준에서 뒤떨어져있는 주변지역의 국가를 무시하는 의식 또한 낱아 미국과의 경제적 역학관계에서 길항(拮抗)해가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욕망하는 식으로 패턴을 반복했다.

더욱이 구식민지였던, 대만, 한반도, 중국대륙의 국가들이 독립하고 논리적으로는 전승국이 된 것에 대한 선망과 질투의 동전 뒷면에 나타난 감정이 패전 후의 일시기에 '삼국인'이라는 특별한 뜻을 지닌 차별적인 단어를 유통시켰다. 이시하라(石原慎太郎)의 '삼국인' 발언은 이러한 기억을 재현한 것이다.

한국전쟁에 의해 냉전구조 속에 편입된 후에는, 중국이나 북한·남한에 대한 선망과 질투는 공포를 부채질하면서 증오와 멸시로 전화해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미국에 대한 증오와 원한은 소련이라는 다른 하나의 헤게모니 강대국을 향해 전도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레드 퍼지(공산주의자 숙청)를 계기로 해서 과잉적 반공주의로서 침투해간다. 그것에 편승한 우익 테러리즘이 사실상 용인되는 속에서 일본은 고도경제 성장기에 돌입해 갔다. 이 시기까지의 기생 민족주의가 어떤 과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변지역의 국가에 대해 존대한척 행동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고 '천황' 신화에 의해서조차 그 공백을 메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도경제 성장기에는 일본 형 공동체주의 적 기업이 발전해가는 것이 자존심과 존대함을 지탱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기업의 생산총액이 마치 '국가' 위신의 상징인 것처럼 취급되는 속에서 경제지표를 유일한 근거로 한 냉전적 기생·경제 민족주의가 구조화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기생 경제 민족주의가 기생적인 것은 미국과의 독단강화 속에서 일본이 침략전쟁에 대한

전쟁배상을 면제됨과 동시에 미일안보체제 하에서 군사비 지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어 국내의 경제부흥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생성은 경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전년의 6월 한국에서 발생한 일본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분는 대규모 대일굴욕 외교반대 투쟁은 미국의 중개에 의해 당시 한국의 박정희 쿠데타 정부 자신이 계엄령 선포하여 탄압했던 것이다. 외교 면에서도 주변지역의 친미군사독재정권의 조종을 미국에 일임 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책임 그리고 전후책임을 추궁 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권을 지키고 국내적으로는 군사독재정권보다 '민주적인 일본'이라는 자기상을 온존 하면서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을 망각하는데 부심했다. 침략전쟁의 책임을 기술한 이에 나가(家永三郎)가 교과서 재판을 일으킨 것이 한일조약 조인 10일 전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1967년의 '명치100년제(祭)' 무렵부터 과거 일본의 영광을 축복하는 역사수정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천황' 이미지가 왕자와 그 아내와 함께 무근거한 공백의 총천주로서 경제발전 위에 투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냉전적 기생·경제 민족주의가 절정에 달하는 동시에 붕괴하는 것이, 88년부터 90년에 걸쳐서이다. 이시하라와 소니의 모리다(盛田昭夫)가『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출판한 해 90년 1월 18일에 '천황에게 전쟁책임이 있다' 라고 발언한 모토지마(本島等) 나가사키 시장이 우익에게 권총으로 총격을 받고 있다. 전년 6월에는 '천안문사건' 이 있어 동구 민주화의 폭풍 속에서 11월 베를린의 벽이 무너졌다. 그 후 단숨에 냉전구조는 해체되었다. 일본정치가 '리쿠르트사건' 에 의해 비리 투성이라는 실체가 폭로된 89년 7월의 참의원선거 이후, 말하자면 55년체제의 붕괴가 거품경제의 파탄과 함께 진행되어 간다.

기생새국 민족주의

더 이상 냉전구조형 기생 경제 민족주의는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구소련에 향해진 공포와 증오와 멸시는 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정책 진전에 의해, 거품기에는 일본이 형님 역할을 했지만, 그 후 중국이 완전히 미국을 바라보게 되어, 멸시할 수 없게된 결과, 질투와 그 것의 뒷면인 증오가 강화되었다.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해서는 이 나라를 둘러싼 정확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과잉적 공포와 증오와 멸시를 대중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주변지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단순한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선

땅이나 질투가 전면에 나타났다. 그것과 연동해서 구 '중군위안부'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인근국가의 피해자들에 의한 일본의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이 일제히 고발되었다. 이 때, 패전기의 트라우마 상처가 도진 것이었다. 거기서 등장한 것이, 앞에 상술한 신 민족주의=관민일체 기생·쇄국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다.

21세기적 개국으로

21세기적 개국에 필요한 것은 건전한 수치심의 회복이다. 역사적인 남북수뇌회담에 대해, 국정선거 연설에서 '두 민족이 대립하고 있었다.' 라고 말해버리는 모리(森喜朗)와 같은 이가, 이 나라의 총리대신이라는 것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 라고 큰소리로 말할 수 있는 감수성의 발동이다. 현 정권의 중심에 있는 파워·엘리트들이 속속 내보이고 있는 수치를, "우리들은 깊어지고 싶지 않다, 우리들은 가슴을 펴고 밖에 나가고 싶다" 라는 당연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스스로의 권리로써 나라의 위정자에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그 위정자를 그만두게 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를 대표하게 한다는 능동적 감수성으로의 이행이다. 건전한 수치심을 회복하고, 소심한 자존심을 버리고 용기 있는 자존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다섯 항목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이상적인 국가모델을 기존의 헤게모니 강국에 구하고, 언제까지나 선망과 질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적 기준을 냉정하게 회의하면서 적어도, 환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자연환경, 노동조건, 안전보장 등의 전역을 고려한 '넷·글로벌리제이션', '바이오·글로벌리제이션', '에코·글로벌리제이션' 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상을, 자주적인 동시에 근린국가와의 대등한 대화 속에서 모색해 가는 것.

둘째로, 미국에 종속, 추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노선을 전환하여 일본이 독자의 자주적인 외교정책 기본노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선망과 멸시도 동시에 그만둘 때, 도대체 일본은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싶은가를 과거의 굴레에 속박되지 않고 현실 진행 중인 국제정치의 상황에 입각해서 정책화해야 한다. 한반도에 있어 남북수뇌회담 후 더 이상 무책임한 '북한공포' 를 전제로 해서 군사전략, 특히 제145회 국회에서 강행된, 소위 '신가이드라인' 을 즉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금후, 제한 미군 문제가 외교교섭의 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발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며 변야고(邊野古)에 예정된 신기지의 '15년' 한정사용과 같은 현실 은폐식 잠꼬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질투와 멸시를 극복하고 매래 전쟁을 억지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시급하게 확립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셋째로, 주변지역과의 자주적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국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되기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 책임, 전쟁책임, 전후책임 문제도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책임', '국가가 범한 인도상의 죄'의 책임은 배상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에 일괄해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위정자의 기만적 발설에 의한 수치를 수용하길 거부하고 각국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정책으로서 내놓아야 한다. 특히 천황의 전쟁책임에 관해서는 2002년의 한일공동주최에 의한 월드컵 때까지 확실히 해두고 세계전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전술한 세 가지를 실천할 시에 있어 내부용의『국민의 역사』라는 이야기로 무근거한 존대함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독립하기 위해 자기무덤을 파는 것에 다름 아니다. 통일을 향하고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도, 중국과 대만에 있어서도 단일한 '국민의 역사' 따위에 집착하는 것은 명백하게 무효이다. 그렇다면, 민족·역사를 넘어서 환태평양지역의 21세기를 전망할 수 있는 '역사'의 재 서술을 자주적 자발적인 동시에 상호 대화적으로 진행해가는 국경을 넘은 운동이 필요 불가결하다. '역사'는 과거를 회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야말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니체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루산티만의 거대한 덩어리 따위의 이야기를 하고, 그 말미에서 미래를 절망으로서밖에 보여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수치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저술한『국민의 역사』는 자원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동시에 패전 후 일관해서 전쟁책임의 기술을 억압해 온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도 그만둘 필요가 있다.' 국경 없는 역사학자 모임'에 의해 배양되어 가는 미래 지향의 전망을 제시하는 역사기술을 용기를 가지고 교과서로서 출간해야 한다.

다섯째로, 21세기적 개국에는, 당연하게도, 21세기적 내지잡거(內地雜居) 정책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의 통일 움직임은, 많은 재일 한국인·조선인에 있어서도 큰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재일의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권리조차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인 혐오를 넓히려 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간에 대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내지잡거 하는 영주외국인 사람들에 대해, 정치적 권리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인과 대등한 법적권리를 조속히 부여해야 한다. 민족주의의 '편협'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정치밖에 할 수 없는 위정자들인 것이다. (번역: 安石, 한국 민족 연구원 연구원)

서로 다른 대처태도 보이는 영토분쟁

- 일본 영토문제의 핵심쟁점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일본의 영토문제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과의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이고, 둘째는 러시아와의 북방4도(북방영토)문제, 셋째가 중국과의 조어도 제도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의 핵심쟁점들을 차례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8월에 공개된 65년 한일협정문서 속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한일양국의 영유권 주장을 고찰한다. 북방4도와 조어도 제도문제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독도영유권문제와 연결시켜서 주요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독도 문제

지난 2005년 8월26일,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협정 문서가 모두 공개되었다. 올해 1월에 공개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51년부터 65년까지, 14년간에 걸친 한일외교기록 3만5,354쪽이다.

이 글에서는 한일외교기록 속의 독도관련 문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면서 앞으

로 독도영유권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둔다.

독도 폭파론

회담과정에서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 라는 발언이 나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1월의 1차 공개 때는 일본 측에서 그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공개한 신문이 필자가 알기로는 서울신문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의 모든 일간지가 일본 측이 ‘독도 폭파 발언’ 을 먼저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사실은 일본이 독도를 무가치한 섬으로 보았다는 의미로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 한국 측에 유리한 부분이다.

‘독도 폭파 발언’ 은 일본이 먼저 꺼낸 것으로 밝혀졌다. 62년9월3일 이세키 유지로 아세아국장은 한·일 예비절충 제4차 회의에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파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했다.(중략)

김종필 부장은 이 회담을 마치고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담으로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 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 고 말해 김 부장이 ‘독도 폭파 발언’ 의 발설자로 지목돼왔다.(조선일보)

한편 그동안 JP가 한 것으로 알려졌던 ‘독도 폭파’ 발언은 이세키 유지로 일본 아시아국장이 먼저 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세키 국장은 1962년9월3일 제6차 한일 회담의 정치회담 예비절충에서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도쿄 내)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파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JP는 그해 11월13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의 회담 후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농담으로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 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 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일보)

독도문제 제3국 조정안 발언

한편, 한일회담 과정에서 김종필씨가 ‘독도문제는 제3국의 조정에 맡기자’ 고 발언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 부분은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집요한 독도문제 제기에 밀린 꼴이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함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살펴보자.

11월 13일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록에서 오히라 외상이 또다시 국제재판소 문제를 들고 나오자 김 부장은 제3국 조정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오히라 외상은 ‘생각해볼 만한 안’ 이라며 제3국으로 미국을 지적하

고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당시 주일대사관은 “김 부장 발언은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몸을 피하고 사실상 독도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상의 대안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조선일보)

일본은 1962년 2월과 10월, 11월 잇달아 일본을 방문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JP는 한국민의 감정 격화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다 11월 ‘제3국에 의한 조정’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 문서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일본의 강력한 요구를 피하고 독도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상의 대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하지만 JP가 외교적으로 잘못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 제안은 양국 모두 거부해 유야무야됐다. (동아일보) 이어 11월13일 제2차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도 오히라 외상이 국제재판소 문제를 들고 나오자 김종필 부장은 “한국민의 감정을 격화시킬 뿐이다. 제3국 조정에 맡김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일본은 생각해보자고만 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신문)

위의 3가지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면 ‘작전상’ 김종필씨가 ‘독도문제 제3국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을 일본이 거부했는지 양국이 거부했는지 애매하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일본 측이 거부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현재 한국 측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것이다.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 측 태도

일본은 53년의 제2차 회담에서부터 독도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회담이 본격화된 62년 이후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이번 문서공개로 밝혀졌다.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 측 태도를 중심으로 보도내용을 살펴보자.

고사카 외상은 62년 2월22일 김종필 당시 중정부장에게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한국 측이 응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부장은 “하찮은 섬 문제를 일본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했다. 고사카 외상은 그해 3월12일 최덕신 외무장관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공정한 제3자에게 조정을 의뢰하자”고 했으나 “그렇게 하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중대한 과오를 지적당할 것”이라며 거부당했다. (조선일보)

그 해 3월12일 고사카 외상은 최덕신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공정한 제3자에게 조정을 의뢰하자.”며 “현안이 해결되더라도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무의미한 것이다.”고까지 했다.

최 장관은 “그렇게 하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중대한 과오를 지적당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중략) 그 해 10월21일 오히라



독도 폭파 발언은 62년9월3일 이세키 유지로 아세아국장이 한·일 예비절충 제4차 회의에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라며, 독도를 폭파하자고 먼저 꺼낸 것으로 밝혀졌다.

외상은 김 부장과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다시 제기했다. 김 부장은 “독도문제는 회담 초부터 한·일 회담과 관계없던 것을 일본 측에서 공연히 끄집어 낸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이러한 보도는 일본이 현재와 똑같이 처음부터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측 태도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측 태도는 위에서도 나왔지만 시종일관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경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도내용을 살펴보자. 독도문제는 13년간의 한일회담 내내 핵심 쟁점이었다. 일본은 처음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어떡하든 독도문제를 회담 의제로 삼고자 했다. 반면 한국은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독도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 어업분과위원회에서 ‘평화선’을 부정하기 위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왔다. 평화선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한국 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주권선. 평화선 안에 독도가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의제가 아니라는 한국 입장이 워낙 강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1962년 3월 고사카 젨타로(小坂善太郎) 일본 외상은 최덕신(崔德新) 외무장관을 만나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한국이 응소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한국의 영토이므로 여기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동아일보)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 서명을 코앞에 둔 65년 6월에 주일대사에게 긴급 공문을 보내 “독도 문제에선 조금도 융통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시했다. (중앙일보)

위의 기사를 보면, 도중에서 김종필씨의 제3국 조정안이 나오기는 했으나 거의 일관되게 독도문제에는 양보가 없다는 것이 한국 측 기본 입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일협정 최종문서에는 독도문제가 어떻게 기재되었는가?

한일협정의 최종문서에는 독도문제가 어떤 식으로 기재되었는지 살펴보자.

일본은 회담 막바지인 65년 분쟁처리에 대한 교환공문 의정서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명시하려 했으나 우리 정부는 “독도는 한·일간 분쟁 대상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독도를 거론하지 않은 문안이 확정됐다. (조선일보)

회담 막바지인 1965년 일본 측이 분쟁처리에 대한 교환공문 의정서에 ‘독도’를 명문화하자고 요구했고, 우리 측이 반발하자 사토 총리는 교환공문에서 독도라는 글자를 펜으로 긁어 삭제했다. (서울신문)

위의 보도로 알 수 있듯이 ‘분쟁처리에 대한 교환공문 의정서’에서는 ‘독도’의 이름이 삭제되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매체가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 의정서에 독도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현재 독도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 조금 깊이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독도문제의 전망에 대한 보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눈에 띈다.

문서 공개로 드러난 쟁점 중, 현재적 의미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역시 독도 문제와 협정 체결 당시 논의되지 못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의 보상을 둘러싼 한일간 외교적 논란이다. 특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문서 공개로서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의 독도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독도문제는 일본 측에서 볼 때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 측은 독도문제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나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독도문제는 이 협정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태도였다. 그런데 일본은 이 한국 측의 두 가지 태도 중 첫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번째는 받아들인 것이다.

즉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일협정의 의제가 아니라면 그 후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분쟁처리에 대한 교환공문 의정서’ 속에 독도 이름이 없다고 해도 일본은 사실상 독도는 분쟁지역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금처럼 언제라도 독도문제로 한국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의 집요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 철저한 자료 발굴과 논리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독도영유권문제의 주요쟁점들

여기서는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해 한일양국에서 주요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을 고찰하고 한국 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도의 명칭 변화에 대한 쟁점

한국 측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주로 '우산도', 혹은 '삼봉도' 라고 불렸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일본 측 학자들은 '우산도'와 '삼봉도'는 '울릉도'의 또 하나의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산도'와 '삼봉도'가 현재의 독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즉 한국의 고문서에 나오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이명일도설(異名一島說)>과 <이도설(二島說)>에 대한 한일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안용복 사건을 둘러싼 한일간의 쟁점

1696년에 에도막부가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도해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독도에 대한 도해도 함께 금지했다고 한국 측이 주장하지만, 일본 측은 독도에 대한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이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논쟁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측은 에도막부가 울릉도와 함께 독도까지 조선영토로 인정했다는 증거로 안용복의 활약을 내세운다. 그러나 일본 측은 안용복이 오키(隱岐)섬을 보고 조선영토인 우산도(=독도, 마츠시마<松島>)라고 착각했다고 주장한다. 일본학자들은 한국의 고문서 『邊例集要』속에 안용복이 <마츠시마는 울릉도 보다 훨씬 큰 섬이었다>고 말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생각한 '우산도=마츠시마'는 실은 독도가 아니라 일본의 오키(隱岐)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¹⁾ 일본 측은 안용복의 잘못된 인식을 토대로 생긴 '우산도=마츠시마=독도'라는 한국인의 인식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2005년6월에 새로 발견된 자료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 의하면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소속이라고 주장했다고 확인된다. 이와 관

1) 상계서, pp.7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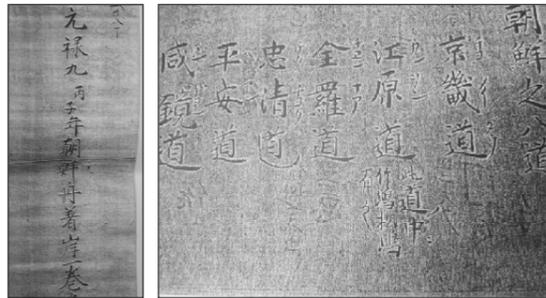
런해, 필자가 2005년 10월에 『북방사논총 7호』에 발표한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2005년 6월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 그 자료는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라는 문서이다. 여기서 元祿九丙子年이란 1696년을 뜻한다. 이 문서에 관해 한국에서는 매일경제신문이 2005년5월19일부로 보도한 바 있다. 그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7세기 후반 어부 출신 민간외교관 안용복이 일본 호키 영주를 방문해 조선 지도를 보여주며 “독도는 조선땅”이라고 주장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시마네(島根)현에서 발행되는 산인추오신보(山陰中央新報)는 17일 “시마네현 내 오래된 가문 창고에서 이 같은 기록을 담은 문서가 발견됐다”면서 “안용복은 1696년 일본 관리의 심문에 답변하며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영토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라는 제목의 이 기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강원도에 속해 있는 울릉도가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라고 설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조선8도 지도를 꺼내 울릉도가 표시돼 있음을 보여줬다.²⁾



▲그림 1 :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의 표시.
 ▲그림 2 : 조선의 8도(朝鮮之八道) 속에 강원도(江原道)가 있고 그 아래, ‘이 도중(道中)에 다케시마(竹島), 마츠시마(松島)가 있다.’고 적혀 있다. 안용복이 일본관리에게 진술한 내용이다.

필자는 발견된 문서의 복사본을 입수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그림 1) 그리고 이 문서 속에 안용복이 다케시마(竹島=울릉도), 마츠시마(松島=독도)가 강원도에 속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2) 이 문서의 발견으로 안용복이 일본

2) <http://news.media.daum.net/foreign/others/200505/18/mk/v9109184.html>(2005. 10. 9. 검색)

측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일본 측에서 안용복의 진술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도 핵심적인 부분, 즉 안용복이 일본 측에 2섬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단호히 주장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증명된 것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안용복이 일본관리에게 울릉도(다케시마<竹島>)와 독도(마츠시마<松島>)가 강원도에 속한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안용복의 이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안용복이 도일한 목적이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케 하는데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측에서 주장하듯이 안용복이 오키 섬을 마츠시마(=독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안용복이 독도의 실체에 대해 몰랐다는 결론이 나와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런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실상이다.³⁾

1696년 이후 에도막부가 독도에 대한 도해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일본 측 학자들이 내세우는 고문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안용복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해는 1699년이다. 이 사건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 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 이후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로 도해하려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나 일본의 외무성 사이트는 <1696년 울릉도 주변 어업을 둘러싼 일한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지만(「竹島一件」), 竹島(=독도)로의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한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본 측은 제시한다.

1836년에, 세키슈(石州) 하마다(浜田)의 운송선 도매상인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이, 막부가 항해 금지령을 내린 울릉도에 건너가, 대나무 등 목재를 벌채해 밀무역을 한 일이 발각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다. 이 재판의 판결문에 「마츠시마(=독도)에 항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울릉도)에 도해해」라는 말이 있다. 즉, 1696년의 다케시마 일건에서 도해금지가 된 것은 조선령인 울릉도로의 항해이며, 마츠시마(=독도)로의 항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⁴⁾

마츠시마(=독도)로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울릉도)까지 갔기 때문에 아

3) 『북방사논총 7호』, 제7호, pp.85-87

4) 竹島問題 : <http://www.geocities.jp/tanaka-kunitaka/takeshima/>

이즈야 하치에몬이 사형에 처해졌지 독도에 도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696년 이후 일본에서 독도로 도해한 예는 이 사건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하나만으로 독도에 대한 도항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있었다고 보기에는 자료적으로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이외에는 독도로 간 사람들이 17~19세기 후반까지 250년 이상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⁵⁾

필자는 이상과 같이 일본 측의 자료에 대해 논박을 시도했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도해면허자체가 외국으로 갈 때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일본영토라 하더라도 면섭에 갈 때는 도해면허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한다. 그런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1877년에 다케시마 외일도(外一島)를 일본판도 외로 결정한 태정관문서와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시킨 각의결정문서의 법적관계 연구

1877년에 다케시마(울릉도) 외일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태정관문서와 위배되는 1905년의 각의결정문서는 일본 내의 법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은 1877년의 태정관문서는 일본에게 매우 불리한 문서이기 때문에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상이다. 이 부분에 관해 <북방사논총> 7호에 실린 필자의 논문 일부를 아래에 참고로 신는다. 1877년 태정관 문서 속의 <다케시마(竹島) 외일도(外一島)>의 <외일도>는 독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877년에 일본정부는 동해 내 '다케시마(竹島) 외일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 즉 조선영토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에 일본 전국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 때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현 자체의 조사 결과에 따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포함시키라고 대답했다. 시마네 현은 이에 『일본해내(日本海内)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 지적편찬방사(地籍編纂方伺)』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5) 『북방사논총』 제7호 pp.88-89

내무성은 17세기 말에 조선과 주고받은 관계 문서들, 특히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의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그 결과 이 문제는 이미



필자는 문서의 복사본을 입수하고 문서의 발견으로 안용복이 일본 측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주장한 사실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며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고 결론을 내렸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내부 결정을 내리고도 <국가관도의 취합과 버림은 중대한 일>이라는 판단 아래 내무성은 1877년 3월 17일에 태정관에게 문의를 했다. 태정관은 자체 조사를 끝낸 뒤에 두 섬에 관해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지령문『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일도를 판도의외로 정한다』는 공문서를 1877년 3월 29일자로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이 공문서 속에 <외일도>가 바로 독도(=마츠시마)라는 결정적인 문구가 들어 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그림 3>에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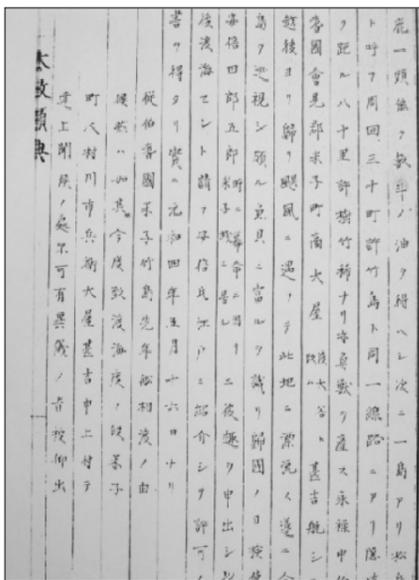
이 문서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 다음에 일도가 있다. 마츠시마(=독도)라고 부른다. 주위는 30정(町) 정도이고 다케시마(=울릉도)와 동일 선로에 있고, 오키 섬으로부터 80리 정도 떨어져 있다.

이 기록을 보면 마츠시마의 주위가 30 정(町)정도라고 되어 있다. 정(町)이란 면적과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되는 말이고, 길이 1정은 약 109m이다.⁶⁾

그러므로 30정은 약 3.3km정도가 된다. 현재 독도의 동도(東島)와 서도(西島)의 해안선을 모두 합하면 약 4km가 된다.⁷⁾ 그러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기록에 나오는 마츠시마는 독도와 주위의 길이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츠시마는 <오키 섬으로부터 80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리는 1해리를 뜻한다. 1해리는 1,852m⁸⁾ 이므로 80해리는 약 148km가 된다. 독도와 오키 섬의

6) yahoo 사전. (2005. 10.9. 검색)
http://dic.yahoo.co.jp/bin/dsearch?p=%E7%94%BA&src=top&search_x=28&search_y=12&ei=UTF-8&fr=top
 7) 김학준, 『독도는 우리 땅』(해맞이, 2003), p.36.
 8) yahoo사전:
http://dic.yahoo.co.jp/bin/dsearch?p=%E6%B5%AC&src=top&search_x=22&search_y=13&ei=UTF-8&fr=top



▲그림 3 : 문서『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일도를 판도외로 정한다』(일부분) 이 문서는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고 있는 <태정류전제2편(太政類典第2編)제96권에 수록되어 있다.>

거리가 약160km이므로⁹⁾ 여기에 기록된 마츠시마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다케시마 외일도>는 <다케시마와 마츠시마>라는 의미이고 이 공문서는 두 섬이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공문서는, 결국 메이지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라고 인정한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학자들은 이 문서의 진실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왜곡 언설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태정관에 의한 조사는 충분치 못했다. <다케시마 외일도>의 <외일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중략) 이 때 외무성에서 논의된 <

마츠시마>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이와 같이 공문서의 원문의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려는 일본 측 어용학자들의 연구는 진실을 말살하려는 음모로서 경계해야 할 것이고 은폐와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당시 서양지도의 유입으로 일본 내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칭에 혼란이 생겼는데, 일본의 독도연구자들은 당시의 명칭 혼란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외일도>가 독도였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으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일도를 판도외(版圖外)로 정한다』라는 지령문을 통해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 곧 울릉도는 말할 것도 없고, 마츠시마, 곧 독도 역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한번 독도가 조선영토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일본정부는 1905년에 독도를 무인

9) 전게서, 『독도는 우리땅』, p.35.

10) 전게서,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p.123.

도라고 주장하면서 1877년의 결정을 무시했다. 이 문제를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 정부의 속임수 -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변화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재심사가 필요하고 과거의 결정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정부가 한번 조선영토로 결정한 독도에 대해 그것을 일본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린 결정에 대한 근거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1905년의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시킨 사건은, 이러한 필수 사항이 모두 결여된 난폭한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1877년에 <다케시마 외일도>를 조선영토로 결정했을 때, 당시 태정관은 구 일본 정부인 에도막부의 기록을 상세히 조사하여 메이지유신 정부로서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1905년의 내각에서도 독도에 대한 태정관의 결정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야 만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05년의 일본의 가츠라 다로(桂太郎) 내각은 이러한 기초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해 버리고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 선점논리를 적용시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영토로 편입시켰다.

전술한 각의결정문서 속에서는 마치 독도에 대한 명칭이 당시 없었던 것처럼 꾸며 무인도의 명칭을 정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까지 서술했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칭 혼란을 교묘히 이용한 가츠라 내각의 교활함을 잘 읽을 수 있다.

서양지도의 유입으로 원래 다케시마로 불린 울릉도의 명칭이 <마츠시마>가 되어 버린 사실을 일본정부가 확인한 것은 1880년이였다. 1880년에 일본정부는 군함을 파견하여 <마츠시마>를 조사했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임을 확인했다.¹¹⁾ 이후 일본정부는 내무성 지리국이 발행하는 <조선전도>등에 나타나는 울릉도에 <마츠시마>라고 기재하게 된다.¹²⁾ 나아가 일본정부는 1883년에 각 지방장관을 통해 일본국민에게 통지를 보내, 유럽인의 발견으로 인해 명칭이 붙은 <마츠시마>와 고래로부터 알려진 <다케시마>이고, 이와 조선의 <울릉도>는 같은 섬이라고 밝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시켰다.¹³⁾ 그러므로 1880년 이전에 일본정부가 <마츠시마>라고 부를 때는 원래대로 <독도>를 뜻하는 것이므로 1877년의 공문서에 나오는 <마츠시마>는 역시 <독도>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1880년 이후, 정식으로 울릉도를 <마츠시마>로 부르게 되

11) 『日本國土政策』(2001, 政策調査研究會), p.531.

12) 상계서. 같은 페이지.

13) 상계서. 같은 페이지.

었다. 그러므로 <마츠시마>였던 독도에는 일본 이름이 없어져 서양인들이 명명한 독도의 명칭인 <리앙쿠르 락스>를 일본식으로 <량도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1905년, 일본의 가츠라 내각은 이러한 복잡한 두 섬의 명칭변화를 교묘히 이용해 일본이름이 없는 무인도인 량도도에 대한 논리를 다시 전개하면서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진상을 숨긴 채 독도를 일본으로 편입시킨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이것으로 1905년의 일본의 각의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이 틀림없다.¹⁴⁾ 이런 필자의 주장에 일본 내의 법적 근거를 추가시키면 보다 완벽한 논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1877년의 태정관문서와 1905년의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각의결정문서에 대한 연구는 일본학자들이 숨기기에 바쁜 부분이므로 한국 측의 심도 있는 연구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주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기타 주요쟁점들

기타 많은 논점이 존재하나 지면 관계상, 가장 중요한 논점만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1946년에 연합군 사령부가 SCAPIN677문서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했는데, 이 문서가 유효하다는 주장(한국측)과 대일강화조약체결로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일본 측)의 대립.

(2) 1952년 4월에 발효된 대일강화조약 조문의 일본이 포기할 '조선영토'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빠졌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독도는 한국영토로 분류되었다는 주장(한국 측)과 일본영토로 분류되었다는 주장(일본 측)의 대립.

이상의 쟁점들은 국제법상의 핵심적 쟁점들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쟁점들을 보다 깊이 연구하여 일본 측 주장을 능가할 새로운 논리와 자료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북방4도 문제

여기서는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본의 북방4도 문제를 살펴보면서 독도영유권 문제에 힌트가 되는 점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4) 『북방사논총』 제7호 pp.98-102

‘북방4도’란 어디에 있는 섬인가

북방4도는 일본 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北海道) 동쪽의 섬들이다.

그림 4의 홋카이도 동쪽에 보이는 구니시리(國後), 에토로후(択捉),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 4개 섬이 바로 북방4도이다. 이 섬들을 일본은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



▲ 그림 4. 홋카이도 지도



▲ 그림 5 쿠릴열도

‘북방4도’와 쿠릴열도

일본이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4도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쿠릴열도를 우리는 혼동하기 쉽다. 일본에서 말하는 쿠릴열도는 에토로프섬의 북쪽에 있는 우릅섬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이어지는 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림 4를 보면 북방4도와 쿠릴열도의 위치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지극히 일본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에토로후섬 북쪽에 있는 섬이 우릅섬이고 우릅섬에서 캄차카 반도로 이어지는 섬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쿠릴열도다. 그러나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북방4도를 포함하거나 하보마이, 시코탄 섬을 제외한 구니시리(國後), 에토로후(択捉)섬을 포함시켜 쿠릴열도로 정의하고 있다.

‘북방4도’에 어느 나라가 먼저 살았나

일본은 러시아보다 일찍부터 북방4도를 통치했고 태평양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북

방4도를 지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760년대에 러시아 사람 이완-초르누이가 에토로프섬에서 모피세를 징수한 적이 있었고, 일본인 탐험가 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徳内)가 최초로 에토로프섬을 탐방한 1780년대에는 에토로후섬에 사는 아이누인들 중에 러시아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18세기 중반에는 러시아인들이 이미 북방4도에 진출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은폐, 왜곡할 뿐만이 아니라 북방4도에 대해서도 일본국내 선전용으로 허위를 유포하고 있는 셈이다.

19세기의 '북방4도'

1855년에 일본과 러시아는 평화적으로 러일화친조약을 맺었고, 당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던 국경선인 에토로프섬과 우릅섬 사이를 정식으로 국경선으로 정했다.

그 후, 1875년에는 일본과 러시아는 사할린·쿠릴 교환 조약을 맺었고 그때까지 러시아영토였던 쿠릴열도를 일본영토로 정하는 대신에 일본과 러시아의 공동 통치하에 있던 사할린을 러시아영토로 정했다. 조약 체결 후, 당시의 행정구분으로 '치시마국(千島國)' 이라고 불렀던 구나시리·에토로프섬에 우릅섬 이북을 편입하여 구나시리로부터 캄차카 반도 앞바다에 있는 스텝섬까지가 일본영토인 '치시마국' 이 됐다. 즉 이 시점에서 일본은 북방4도와 쿠릴열도 전체를 '치시마국' 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20세기 전반의 '북방4도'

1905년 러일전쟁을 종료하게 만들었던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남사할린이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북방4도와 쿠릴열도를 합한 치시마국과 남사할린이 일본 영토가 된 것이다. 그 후 2차대전이 발발하여 1945년 2월에 알타에서 미·영·소 정상들이 알타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소련은 독일 항복 90일 후면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해서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것과 일본이 항복하고 나면 일본에게서 남사할린을 반환받고 쿠릴열도를 할양받겠다는 것들이 정해졌다.

이 알타회담에서의 약속대로 1945년 8월 8일에 소련은 '소일중립조약' 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대일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후인 8월 10일에 일본은 미·영·중·소의 포츠담선언에 대해 조건부로 수락한다는 뜻을 연합국에 전달했으나 거절당하자, 8월 14일에 일본최고회의에서 포츠담선언의

무조건 수락을 결정했고 이것으로 일본의 무조건항복이 사실화되었다. 9월 2일, 일본은 연합국이 작성한 항복문서에 조인하여 태평양



소련군은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을 일본의 본토 4개 섬(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과 미·영·중·소가 결정할 작은 섬들에 국한하도록 결정했다.

전쟁이 정식으로 종료되었다. 동시에 '일반 명령 제1호'에 의해, 만주와 북위 38선 이북의 조선, 사할린 및 쿠릴열도에 있는 일본국 지휘관 및 모든 일본군 부대는 소련 극동군 최고사령관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 등이 정해졌다.

그러므로 소련군은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캄차카반도 방면에서 쿠릴열도에 진입하여 북방4도까지 모든 섬을 점령,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실행에 옮겼다.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의 주권을 일본의 주된 4개 섬(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과 미·영·중·소가 결정할 작은 섬들에 국한하도록 결정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북방4도'

일본의 항복 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소련은 북방4도를 점령했다. 당시에는 러시아인들이 북방4도에 살고 있지 않았고, 일본인들만이 약1만7천명쯤 살고 있었다. 그런데 소련은 일본과의 정식적인 교섭 없이 북방4도를 소련영토로 편입시켰고 북방4도에서 모든 일본인들을 강제로 퇴거시켰다. 그 후 소련은 북방4도에 소련군 기지를 건설하고 많은 러시아인을 이주시켰다. 1952년 4월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쿠릴열도를 포기했다. 일본은 현재 이 조약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북방4도는 역사상 한번도 러시아령이 된 적이 없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란 우릅섬보다 북쪽의 섬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내용에는 북방4도를 제외한 쿠릴열도라는 표현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다. 후에 이 조약의 기초국인 미국이 북방4도는 항상 일본의 영토였기 때문에 일본에게 주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식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러일 양국간의 평화조약은 아직 미체결상태

그 후, 1956년에 '소일 공동선언'으로 일본과 소련간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때 공동선언 제9항에 소련이 북방4도 중 두개 섬(하보마이·시코탄)을 평화조약 체결 후에 일본에 양도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1960년에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내각이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강행해 소련의 반발을 샀다. 소련은 하보마이섬과 시코탄섬의 양도는 「양국간의 우호 관계에 근거한, 원래 소련령인 동지역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주장, 양도 동의를 철회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연방이 영토 문제를 계승하였고 그 상태가 북방4도를 둘러싼 현재 상황이다.

일본 측의 주장

일본 측은 북방4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러시아가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당시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1945년 이후 일본, 소련(러시아)간의 정식적인 국경 확정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현재 북방4도와 관련된 러일 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단지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했다는 사실뿐이다. 즉 1945년 이후 계속되는 소련(러시아)의 북방4도 점령 상태는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는 채, 약 6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45년 시점에서 '소일 중립조약'을 엄수해 소련에게 전혀 공격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소련에게 침공 당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1945년 이후 사할린이나 쿠릴열도라는 일본영토를 소련에게 할양해 줘야 할 이유도 없었다.

일본은 1945년 9월 2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여 일본의 영토로서는 일본고유의 영토만을 통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므로 소련에 의한 일본의 고유영토 북방4도 지배는 일본에 대한 소련의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알타회담에서 미·영·중·소가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일본이 수락한 것은 포츠담선언이지 알타회담의 결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고래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북방4도는 반드시 러시아가 일본에 반환해 줘야 하는 지역이다.

러시아 측 입장

북방4도에 대한 러시아 측 입장은 다음과 같다.

2차대전 당시 미·영·소는 연합국이었으며 일본·독일·이탈리아로 구성된 동맹국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이탈리아나 독일이 항복한 후,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항복 시킨 행위는 정당한 행위이다. 중국에서 잔인한 행위

를 계속 자행하고 있던 일본을 멸망시키는데 있어 '소일 중립조약'을 어겼다는 비난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알타회담에서 쿠릴·사할린의 할양이 합의되었고, 포츠담선언에서도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러일 간에서는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해도 러시아가 북방4도를 계속 지배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은 쿠릴열도를 포기했고 쿠릴열도의 범위는 분명히 구나시리섬까지이다.

시코탄·하보마이섬이라면 쿠릴열도가 아닌 홋카이도의 부속 도서로 볼 수 있으니 반환을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방4도 중 한 섬이라도 일본에 양도한다는 것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니 현실적으로 반환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독도문제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북방4도문제와 독도영유권문제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먼저 두 문제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독도와 북방4도를 모두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둘째, 독도와 북방4도에는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도 유사하다. 일본이 실효지배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닮은꼴이다. 셋째, 일본은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시키려는 논리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은 러시아와의 영토문제에 있어 북방4도를 쿠릴열도에서 분리시키려는 논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주장하지만 북방4도 문제에 있어서는 러일 양국간에서 평화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러시아도 유엔가맹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마음을 먹으면 북방4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러시아 측에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되도록 러시아 측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한국보다 러시아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도문제는 한일간에서 되도록이면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으나 북방4도 문제는 러일 간에서 항상 논의되는 주된 외교문제 중 하나가 되어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북방4도’ 문제가 시사해 주는 것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향해 독도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독도가 한국 것이라고 한국 측이 확신한다면 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

이 경우,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일본은 북방4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러시아에 제의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되물으면 된다. 힘의 논리에 약한 일본이 대국 러시아를 자극하는 언행을 되도록 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이다. 한국을 한수 아래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본의 속성을 간파하고 영토문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조어도 문제

일본의 영토 문제 중에는 중국과 대만간의 조어도제도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조어도제도를 센카쿠열도라고 부른다. 조어도(釣魚島)란 조어도제도 속에서 가장 큰 섬의 이름이다. 일본에서는 이 섬을 우오즈리지마(魚釣島 : 어조도)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이 섬의 명칭을 일본 측 인용문 이외의 부분에서는 ‘조어도’ 라고 쓰기로 하겠다.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

그러면 조어도제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를 살펴보자.

일본의 외무성 사이트에 실린 <센카쿠제도(=조어도제도) 영유권에 대한 기본 견해>의 원문 그대로를 아래에 제시한다.

센카쿠제도는 1885년 이후 정부가 오키나와현(沖繩県) 당국 등을 통하는 방법으로 몇 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단지 이 제도가 무인도일 뿐만 아니라, 청나라가 지배했다는 흔적이 없음을 신중히 확인한 후, 1895년 1월 14일에 현지에 표찰 말뚝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각의 결정을 실시하여 정식으로 우리나라(=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 제도는 그 이후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나라 영토인 난세이(南西)제도

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1895년 5월에 발효한 시모노세키(下關)조약 제2조에 의거해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대만 및 팽호(澎湖)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서도 센카쿠제도는 동 조약 제2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포기한 영토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제3조에 따라 난세이제도의 일부로서 미합중국의 시정 하에 놓여져 1971년 6월 17일에 서명된 류큐(琉球)제도 및 다오도(大東)제도에 관한 일본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에 시정권이 반환된 지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은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중국이 센카쿠제도를 대만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에 입각해 미국의 시정 하에 놓여진 지역에 동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종래 전혀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분명하고, 중화인민 공화국 정부의 경우도, 대만 당국의 경우도, 1970년 후반, 동중국해 대륙붕에서 석유 개발의 움직임이 표면화되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문제 삼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대만 당국이 이른바 역사적, 지리적 내지 지질적 근거 등으로 거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은 모두 센카쿠제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국제법상의 유효한 논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측 주장의 정리

이상과 같은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를 정리하면, 일본의 조어도제도 영유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조어도제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난세이제도에 속한다.
2. 1895년 1월 14일에, 조어도제도를 무인도로서 일본 영토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각의 결정을 실시했다.
3. 청일전쟁 이후의 시모노세키 강화조약(1895년 5월)에 있어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대만 및 팽호제도에는 조어도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4. 제2차대전 후,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연합국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있어서도 조어도제도는 난세이제도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 하에 들어갔다.
5. 난세이제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입각해 일정기간 미국이 지배했고, 1971년 6월 17일에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반환했을 때 조어도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

를 모두 일본에 반환했다.

6. 1952년 4월에 발효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3조에 미국의 시정 하에 난세이제도가 포함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이에 전혀 이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7. 중국, 대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후반 동중국해 대륙붕의 석유개발 움직임이 표면화된 이후부터이다.

8. 중국이나 대만의 조어도제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내용이다.

시모노세키 조약 제2조의 내용 전쟁

청일전쟁 이후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제2조 2항과 3항은 다음과 같이 일본에 할양되는 영토를 명기했다.

제2조

2. 대만 전도 및 이의 부속 제 도서.

3. 팽호 열도. 즉 영국 그리니지 기준 동경 119도에서 120도 및 북위 23도에서 24도 사이에 있는 제 도서.

그러나 이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의 2항과 3항만을 보아도 조어도제도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조어도제도의 소속을 알 수 없다.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조어도제도는 동경 123도 28분에서 124도 34분, 북위 25도 44분에서 25도 56분 사이에 점재하는 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상기 제2조 3항에 있는 팽호열도 속에 조어도제도가 속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결국 문제의 초점은 제2조 2항에 명기된 <대만 전도 및 이의 부속 제 도서> 속에 조어도제도가 속해 있는지에 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내용

그러면 대일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조어도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에 관련된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2조 (b) 일본은 대만 및 땡호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3조 일본은 북위 29도 이남의 난세이제도(류큐제도 및 대동제도를 포함한다)(중략)를 미합중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하는 신탁통치 제도 하에 두기로 한, 국제연합에 의한 미합중국의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한다.

상기와 같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대만 및 땡호제도를 포기하여 북위 29도 이남의 난세이제도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두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어도제도의 이름은 없다. 즉 조어도제도가 난세이제도에 속하는지, 대만에 속하는지 확실치 않은 것이다.

오키나와 반환 협정과 조어도제도

그런데 일본은 1971년의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의해 조어도제도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정식으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오키나와 반환 협정' 속의 관련 원문을 이하에 게재한다.

제2조

1. 미합중국은 2항에서 정의하는 류큐제도 및 대동제도에 관련하여,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3조의 규정에 입각하는 모든 권리 및 이익을,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일본을 위해 포기한다. 일본은 같은 날에, 이들 여러 섬들의 영역 및 주민에 대한 행정, 입법 및 사법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완전한 권능 및 책임을 맡는다.
2. 이 협정을 적용할 때 「류큐제도 및 대동제도」란, 행정과 입법 및 사법상의 모든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3조의 규정에 입각해, 미합중국에게 주어진 모든 영토 및 영해내의 수역 가운데 그러한 권리가 1953년 12월 24일 및 1968년 4월 5일에 일본과 미합중국 사이에 서명된 아미미(奄美)군도에 관한 협정 및 남방제도 및 그 외의 여러 섬들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이미 일본에 반환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상기의 조문을 보아도 역시 조어도제도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류큐정부를 수립할 때에 작성한 「류큐정부장전(琉球政府章典)」 속에 조어도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류큐 정부 장전」속에 나타나는 조어도제도

미국정부는 1952년 2월에 미국 민정부 포고 제13호 「류큐정부의 설립」을 공포해,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하는 ‘류큐정부’를 탄생시켰다. 여기에 미군 점령 하의 오키나와 전역(아마미군도 포함)을 통합한 중앙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권능을 분명히 한, 미국 민정부 포령 제68호 「류큐정부 장전」을 공포해 공선에 의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입법원을 설치했다. 이 「류큐정부 장전」 속에 미국이 조어도제도를 오키나와에 소속시켰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그러면 이 「류큐정부 장전」의 관련 부분을 살펴보자.

제 1 장 총칙 제1조

류큐정부의 정치적 및 지리적 관할구역은 하기 경계내의 여러 섬들, 작은 섬, 환초 및 영해로 한다.

북위 28도 동경 124도 40분의 점을 기점으로 하여 북위 24도 동경 122도, 북위 24도 동경 133도, 북위 27도 동경 133도 50분, 북위 27도 동경 128도 18분, 북위 28도 동경 128도 18분의 점을 거쳐 기점에 이른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조어도제도는 북위 25도 44분에서 25도 56분, 동경 123도 28분에서 124도 34분 사이에 점재하는 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가리킨다. 이 조어도제도의 위치는 「류큐정부 장전」이 가리키는 류큐(=오키나와) 구역 속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조항이 일본정부가 조어도제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대만의 주장

중국 및 대만에 의해 지금까지 주장된 조어도제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는 첫째, 역대의 ‘책봉사록’ 등 고문서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 둘째,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에

나타나는 「대만 전도 및 이의 부속 제도」 속에 조어도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셋째, 조어도제도와 대만이 지리적으로 가깝다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지는 일본 측 속셈까지 잘 파악하면서 북방4도와 조어도 제도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는 주장, 넷째, 역사적으로 대만 어민이 조어도제도를 사용해 왔다는 주장, 다섯째, 조어도제도를 대만의 대륙붕의 일부라고 하는 주장 등이다. 그 외에 미국이 포츠담선언에 입각해 오키나와(=류큐)를 일본에 반환했을 때, 연합국인 중화민국 정부(=대만)와 협의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포츠담선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일본의 해외 영토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등의 주장들이 있다.

조어도제도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의 차이점

그러면 조어도제도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국제법상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조어도제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 영토 범위 내에 조어도제도를 포함시킨 문서인 「류큐정부 장전」을 남긴 사실이 있다는 것에 비해, 독도영유권 문제에서는 반대로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킨 「SCAPIN677」문서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어도제도 문제에서 중국과 대만은 「류큐정부 장전」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비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은 「SCAPIN677」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조어도제도를 실효지배하고 있고, 한국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이나 대만은 조어도제도 문제에서 일본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일간의 조어도제도 문제를 개관했다. 지면 관계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다루고자 한다.

결어

일본의 세 가지 영토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각 영토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취

하는 태도는 모두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 가지 영토문제 중,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는 독도영유권문제 뿐이다. 중국, 대만과의 조어도 제도문제는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고, 북방4도 문제는 상대국 러시아와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북방4도 문제를 회부하지는 이야기를 꺼낼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상대가 러시아라는 대국이기에 때문에 사법으로 전면 대결하기를 일본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들은 유일하게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우리에게만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는 한국을 아직 약소국 정도로 보고 일본 측 논리만 내세우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자료 수집과 논리 구축 양면에서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로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일본 측 속셈까지 잘 파악하면서 북방4도와 조어도 제도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독도영유권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정치상황을 이론과 실제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

현대정치학의 이해



격변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면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기본서!!

■ 주요목차

- 1부/ 현대 정치학의 기본
- 2부/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3부/ 현대의 정치현상

교양사회 조정남 편 / 값 20,000원



특집

전후처리

피해자에 대한 상상력마저 결여

- 靖國神社 참배 위헌판결의 의미

田中伸尙 (논픽션 작가)

“일본이 입헌주의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고이즈미수상은 헌법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판고등재판소 이하 대판고재는 2005년9월30일, 대만 원주민들이 제기한 靖國소송에서, “고이즈미수상의 靖國神社 참배는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그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원고단장인 高金素梅(체우스 아리, 원주민족 타이알족으로 대만 입법원위원, 1965년생)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고이즈미수상은 위헌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10월17일 아침, 秋季例大祭가 시작된 靖國神社에의 참배를 강행했다.

靖國소송을 제기한 아시아의 전쟁피해자유족들은, 전몰한 육친이 무단히 일본의 ‘영령’으로 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게 생각하는가를 ‘靖國被害’로서 호소해 왔다. 그 가운데는 합사에 대한 고통을 더 이상 참지 못 하고 일본의 유족들과 더불어 ‘靖國의 신’으로부터 철수해 줄 것을 요구한 유족들도 있었으나, 거부되어 왔다. 따라서 유족들의 피해는 더욱 더 깊어가고 있다. 수상참배는 이렇게 일본에 의한 전쟁피해자의 유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계속적으로 가중시켜왔다.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의를 표명, 전몰자에 경의와 감사의 기분을 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 - 고이즈미수상은 참배 때 마다 이렇게 말해왔다.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비교하여도 공허하고 독선적인 이 말에는, 일본의 전쟁에 의한 피해자가

운데 약 5만여 명의 대만, 한국의 사망자들이 ‘영령’으로 합사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유족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수상의 靖國參拜에 대해서는 외교문제만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으나, 예컨대 소수 이기는 하나,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이러한 피해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것이 ‘靖國問題’를 생각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대판고재의 판결은 불충분하나 원고들의 이러한 피해에 눈을 돌려, 참배가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하는 사실에 대한 상상력을 환기시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이 판결은 사상, 양심의 자유, 신교의 자유를 넓게 인정, 또 전쟁피해자를 추도할 것인가 아닌가 등은 개인이 결정할 권리이며, 공권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수상참배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거기에 이르는 내용은 상당히 선진적이고, 전망도 좋다. 고등재판소판결을 검토하면서 ‘靖國問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정치한 사실들을 종합한 위헌판단

9월 하순에 들어, 대판지방은 아침부터 햇빛이 따갑게 내리 쏘이고 있었다. 30일 오전 10시를 조금 지나, 대판고재 2층202호 법정. 다이고꾸 세이지 재판장은 마스크의 사진촬영이 끝나자, 판결주문을 읽어 내렸다.

“원고들의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그렇게 말하고, 좌우의 배석관사들과 함께 도망치듯 퇴정했다. 겨우 4초. 골자도 요지도 없이, 전형적인 원고 측의 ‘완패’의 모습이였다. 방청석에 있던 원고의 대만 원주민유족이나 그 지원자들은 ‘부정의판결이다’ 등의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한편, 피고 측 지지자들로부터는 ‘당연하다’, ‘훌륭한 판결이다’ 라는 고함과 박수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광경은 약 30분 후에는 일 막의 에피소드로 바꿨다.

대만소송의 변호단의 중심을 담당해온 中島光孝 변호사가 판결문의 이유중에, 고이즈미수상의 참배가 헌법20조3항의 정교분리원리에 반한다고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안 것은, 오전 10시반이 지나서였다. 재판소 뒤편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원고나 지원자에게 ‘위헌판단’이라는 뉴스가 전해졌다. 지원자들이 ‘혹시라도 하고’ 준비하고 있던 ‘靖國神社 참배는 위헌’, ‘사적참배의 늘변부정’의 커다란 종이를 들자, 박수가 터져 나오고, 카메라 셔타 소리가 재판소 주변에 오랫동안 이어졌다. 2004년4

월의 福岡地裁에 이어, 두 번째의 위헌판단이었다.

헌법시행이래, 탄생한 수상은 고이즈미수상을 포함하여 25명을 헤아린다. 그러나 재임중에, 그 행위에 대해 다른 복수의 재판관으로부터 두 번이나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으면서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수상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소리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고이즈미수상의 靖國參拜을 둘러싼 소송은 2001년11월부터, 대판을 비롯 전국 6지재에서 계속적으로 8건이 일어나, 현재도 지재, 고재, 그리고 最高裁에 총 6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특히 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대만 원주민 유족이나 일본 시민들 188명은 2003년2월, 고이즈미수상, 국가, 靖國神社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臺灣소송)을 지재에 제기했다.

대만 원주민이 靖國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으나, 2001년11월에는 한국이나 일본의 유족들과 같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 했고(‘제1차아시아소송’. 현재 最高裁에 계류), ‘靖國’은 일본 국내뿐 아니라, 또 정부 차원을 넘어, 아시아의 민중들부터 문제제기를 당하게 되었다. 그 근처에는 전쟁책임에 대한 일본정부의 아주 소극적인 대응이나 피해자이면서 유족들의 양해도 없이 가해자와 함께 ‘영령’으로 합사된 것에 의한 감당키 어려운 인권침해가 있다. 대판지재는 2004년5월, 대만소송에 대해, 고이즈미수상의 靖國參拜는 사적참배라고 판단, 헌법판단을 피하고 기각했다. 그 때문에 원고들은 대판 고재에 공소를 제기했다.

靖國소송에서의 주된 쟁점은 3가지다. ① 참배가 수상의 직무행위로 행해진 것이 오페라를 관람하는 것과 같은 사적행위인 것인가. ② 수상으로서의 공적참배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20조3항에 위반하지 않는가. ③ 위헌이라고 한다면 참배행위가 원고들의 사상, 양심의 자유나 신교의 자유, 또 사망한 육친을 추도할 권리 등을 침해, 손해를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것 등이다. 판단의 내용과 수법은 재판관에 의해 다르나, 알기 쉬운 것은 ‘공사의 판단’으로부터 들어가, 위헌인가 합헌인가를 판단 그리고 권리침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수법이다.

‘大谷判決’이 고이즈미수상의 참배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다. 먼저 전후의 吉田茂 수상에서 시작되는 역대수상의 참배의 양태 등을 점검, 수상참배에 관한 정부견해의 변천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후에 2001년4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 고이즈미가 입후보한 시점으로부터, 수상취임을 거쳐 2001년8월13일의 첫 번째의 참배, 2002년4월21일의 두 번째의 참배, 그리고 2003년1월14일의 세 번째

의 참배, 특히 2004년1월1일의 네 번째의 참배에 대해서 각각 정밀하게 검토했다.

‘수상에 취임한다면’, ‘어떤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배할 것’ 이라고 말한 ‘참배공약’ 으로부터, 참배시의 내각관방장관에 의한 ‘수상담화’ 나 수상의 ‘소감’, 참배전후의 수상자신의 언동이나 국회답변, 참배 때의 의복, 헌화 때 붙여진 이름표, 참배 때의 공용차사용, 수상비서관의 수행, 참배 때의 공식직함의 기록, 예배방식, 헌금의 공비사비의 구분, 또 그 때 그 때 靖國상황, 국내해외의 반향, 국립 추도시설을 둘러싼 상황 등 모든 각도에서 상세하게 시간을 드려 사실을 파악했었다.

그렇게 하여 ‘大谷판결’ 은 사실의 집적과 시대 상황, 배경 등을 고려하여, 4회의 참배가 모두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로서 행해졌다고 인정했다. 문자수로는 약 1만자, 4백자원고용지로 25매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같은 위헌을 한 복강지재의 이 부분의 약 3배에 해당), 공사의 인정은 실로 치밀했다.

사소한 상황적 사실도 빠트리지 않았다. 예컨대 두 번째 참배 때 고이즈미수상이 靖國神社에 도착후, TV 취재진의 도착을 약 1시간 기다린 뒤 참배한 사실을, “사적참배라면,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고 인정한 것도 그러한 한 예다.

다음으로 고이즈미수상의 공적참배가 헌법20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했다. 이것은 소위 목적 효과기준의 ‘척도’ 로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참배의 목적에 대해서는, ‘예배시설인 靖國神社’ 로, 祭神을 향해 ‘외경숭배의 기분’ 을 표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고이즈미수상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참배했다고 인정돼 4차례의 참배모두 ‘아주 종교적 의의가 깊은 행위’ 로 단정했다. 주목된 것은 참배목적이 ‘전몰자추도’ 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종교성이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이다.

“추도라고 하는 행위는, 종교적인 외경숭배행위로 통하기 쉬운 면이 있으며, 실제로 종교상의 예배행위를 포함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고, “신사에서의 祭神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적인 관념에 의한 외경숭배행위와 일체로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전몰자추도라고 하면, 사회적 의례로 받아들여져, 종교성이 소멸하는 듯이 착각되기 쉽다. ‘대곡판결’ 은 그런 면에도 유의하고 있다.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고이즈미수상의 참배는 어떤 종교적 효과를 가진 것인가. 판결은 고이즈미수상은 매년 1회, 종교적 의의를 가진 공적참배를 계속, 靖國神社이외의 종교단체나 시설에 공적 참배 한 증거는 없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고이즈미수상의 참배는) 국가

혹은 그 기관이 靖國神社를 특별시하고, 혹은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듯한 인상을 사회일반에 만들어 내, 靖國神社라고 하는 특정의 종교에의 강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의 판결이 ‘인상’과 그와의 연관성으로 ‘강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라는 말을 수상의 靖國參拜의 종교적 효과를 비판하는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愛媛玉串料(부주)訴訟’에서 最高裁 대법정판결(1997년4월 2일)이 지방공공단체/국가가 靖國神社, 지방의 호국신사와 특별한 연관을 가진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된 관점이었다. 愛媛縣이 부주 등을 靖國神社에 봉납한 행위의 종교적 효과에 대해서 대법정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었다. “일반인에 대해서, 현이 특정의 종교단체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와 다른 특별한 것인 것은 인상을 줘, 특정 종교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확실히 고이즈미수상의 靖國參拜는 最高裁 대법정 판결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번 5번째의 ‘事前豫告的’ 참배도 같은 ‘인상’을 강하게 사회에 미쳤다. 이러한 ‘대국판결’은 고이즈미수상의 靖國參拜를, 헌법20조3항이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상의 靖國神社 참배에 대한 사법판단은 지재와 고재를 포함 전부 11건 나타나고 있으나, 합헌판단은 1건도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비판, 그 가운데서의 판결의 선진성

대만소송에 대한 대판고재의 위헌판단은 확실히 福岡地裁판결보다 한층 정치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위헌판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대만 원주민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부당판결이었던 것이다. 판결 후, 재판소 근처에서 열린 재판 보고집회에서, 이러한 일막도 벌어졌다.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연단에 붙여져 있던 ‘靖國參拜는 위헌!’, ‘승소’ 라는 2장의 현수막에, 원고나 지원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됐다. “대단히 신경을 쓴 판결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시민들로부터 보면, 승리일지 모르나, 그러나 역시 대만 원주민의 내심의 권리가 이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획기적 판결이라고 강조되는 것은 곤란하다. 많은 아시아인들에게는 역시 이 판결은 이해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승소’ 라는 현수막은 떼어내는 것이 좋겠다.” 회의장에 있던 제일조선인들로부터도 같은 의견이 나타났다. 이렇게 ‘승

소'의 현수막은 떼어졌다. '靖國問題'가 단순한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인 피해구제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상징적인 일이었다. 케우스 아리씨는 기자회견이나 보고대회 등에서도, "위헌이라는 것은 일본의, 일본인의 문제다. 우리들은 靖國神社에 합사되고 있는 조령을 모셔가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원주민이기 때문이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일본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격렬했다. "우리들은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제소했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은, 정의를 반영하는 최후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법정은 대만 원주민에 대해서 진정으로부터 평가받을 만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이 재판에 뛰어든 것은, 조상이나 육친이 일방적으로 '靖國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날이 침해되고 있는 인권이나 문화권을 회복하고 싶고, 靖國神社에 거부되고 있는 '조령'을 데리고 가고 싶은 '작은 바람'이었다.

원고들은 이 소송에서, 고이즈미수상의 참배에 의해 나날이 침해되고 있는 인권 등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일본의 사법부가,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때문에 아시아의 피해자들이 참가한 靖國소송은 위헌판결 뿐 아니라, '靖國被害'로부터의 구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靖國神社를 처음으로 피고로 한 배경에는 국가로부터의 특별한 협력을 얻어 전쟁 피해자를 유족들의 양해 없이 합사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전쟁책임, 전후책임, '靖國'으로부터 묻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부는 유족들인 원고가 요구하는 被侵害利益에 대해서는, "불쾌감에 지나지 않는다." 등으로 일축, 한 번도 이를 받아드린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배상청구는 모두 기각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大谷판결'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전제로서의 사상,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망자의 추대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이해, 판단을 하였다. 먼저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강제적인 방법으로 내심을 고백시키지 않는, 혹은 추지하지 않는 자유, 또 특정의 사상을 강제시키지 않은 자유뿐 아니라, "특정의 내심의 형성을 겨냥한 특정의 사상을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으로 선전하는 듯한, 내심의 형성, 변경에 대한 압박, 간섭도 금지, 사람들의 내심을 보호한다."는 것이 사상, 양심의 자유의 내용이라는 이해를 나타낸 것이다. 사상,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형성이나 변경'에 대한 '압박, 간섭' 등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종래의 사법적 이해를 한 발짝 진전시

키고 있다. “판결로, 이러한 이해는 적어도 처음”이라고, 靖國소송변호단의 加島宏 변호사는 평가했다.



지금까지의 수상의 靖國神社참배에 대한 사법판단은 지재와 고재를 포함 전부 11건 나타나고 있으나, 합헌판단은 1건도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다음으로 종교의 자

유에서는 지금까지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행위가 없는 한, 그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았으나, ‘대곡판결’은 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압박이나 간섭도 그 자유를 침해하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사람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뿐 만아니라, 압박, 간섭을 받지 않는 권리내지 이익도 가진다.” 이러한 사상,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에의 이해는, 원고들이 주장해 온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기본적인권의 핵심인 사상,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여기까지 확대한 ‘大谷판결’은, 특히 대만원주민 사망자의 추도문화 등도 고려해, 전몰자에 대한 추도에 관한 개인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들은)사상 및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 전몰자를 어떻게 회고하고 제사지낼까 아닐까에 관해, 공권력의 압박,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 이것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원고들의 사상,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특히 전몰자의 ‘제사형태’ 등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은 권리, 이익이라고 인정했다. 이것은 국가가 靖國神社습례에 의해 사망자와 살아남은 사람을 지배, 관리해 왔다는 사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전몰자를 어떻게 추도할 것인지 아닐지 등에 대해서는 ‘아시아소송’의 원고들도 일관하여, 유족들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며,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주장을 계속해 왔다. 때문에 전후가 되어서도, 일본정부가 관여하여 행해져 온 유족들의 양해 없는 전몰자합사는 이 권리, 이익의 침해에 해당, 그것도 거기에 수상이 종교적 행위로서 참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는 불쾌감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그것을 사법이 ‘대단히 완곡하게나마 처음으로 인정한 것’의 의미는 ‘靖國問題’의 핵심이 양해 없는 습례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커다란 전진이다. “이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크게 인정하고 있으며, 진정 획기적이었다.”

加島변호사는 이 해석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다. 또 ‘大谷판결’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지금부터 문제시 될 국립추도시설에 대해 생각할 때, 커다란 참고가 될 것이리라. 여기서 상기하는 것은, 남편을 강제적으로 護國神社에 습례당한 자위

관합사거부소송사건의 전말이다. 1심의 山口地裁, 2심의 廣島高裁, 는 강제합사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호소한 크리스찬인 원고 中谷康子에 대해, 자기의 신앙에 의해 남편의 죽음의 의미를 새기는 ‘靜謐한 종교적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법적이익으로서 처음으로’ 종교상의 인격권 ‘을 인정, 자위대 측에 손해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最高裁 대법정은 14:1의 대 역전으로, ‘종교상의 인격권’ 을 부정했다.

(1988년6월1일) 14명의 재판관은 ‘종교의 자유의 보장은 누구라도 자기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에 근거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강제나 불이익의 부여를 수반한 것으로 자기의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한 관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소수자인 中谷에 대하여 다수자에 관용하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인권감각을 상실한 最高裁 판결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후 17년, 좀처럼 이 ‘벽’ 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번의 ‘大谷판결’ 에서는 전몰자의 추도 때, 종교의 자유만 아니라, 사상, 양심의 자유도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여 강제뿐 아니라, 압박이나 간섭도 자유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재의 벽’ 에 햇빛이 들어가는 판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谷재판장의 판결은 최후의 부분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판결문의 결론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수상의 참배는 원고들)에 대해서 靖國神社에의 신앙을 장려하기도, 靖國神社의 제사에 찬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상,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부분에 비교해, 설득력이 결여, 결론이 애매해 지고 말았다. ‘대만소송’ 에 임하면서 여러 차례 현지를 다니면서 진력해 온 中島변호사는 “대만의 역사나 원주민의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전몰자의 제사의 권리를 완곡하기는 했으나 긍정했기 때문에, 역시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스텝으로 나갈 발판을 마련한 패소였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일보’ 나 ‘다음 스텝’ 의 갈 길은 멀다. 그래도 사법이 여기까지 판단한 것은 1심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상당히 채용되고 있는)이나 공소심에서의 체우스 아리씨의 증언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아시아 소송단’ 사무국장의 麥木政晴은 강조한다.

‘靖國問題’는 새로운 단계로

판결후의 기자회견에서 체우스 아리씨는 “우리들 원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원주민에 대하여 일본이 행한 그 책임이며, 일본의 반성, 사죄, 배상이다.” 고 말했다.

2002년부터 8회나 내일한 채우스 아리씨는 일본의 시민과 변호단에 감사하면서, 일본에서의 재판을 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했다. “바다를 건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타국에서 이 법정투쟁을 유지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커다란 벽이 있었다. 그래도 우리들 자신의 행동에 의해 우리들의 존엄을 되찾기에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었기 이었다.” 그리고 ‘승소’의 유인물이 떼어진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 “전부터 몇몇 사람들이 승소의 유인물이 이상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회의장에서 나온 것은 우리들의 3년간의 투쟁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소송의 원고 단을 이끌어 온 채우스 아리씨는 일본에서 말하면 국회의원이다. 그녀는 말할 때, 적절한 말로 문제의 소재를 정확하게 말한다. 일본의 정치가와 비교하여 수준이 높고, 훌륭 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친일파가 많아, ‘靖國問題’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일본비판의 언설이 다수파가 아니다. 채우스 아리씨는 2005년 6월7일, 공소심의 법정에서 원고본인으로 증언했다. 다음은, 그 가운데서, ‘靖國問題’에 대해 말한 증언을 소개한다. 질문자는 원고 측의 中島 변호사다.

- 靖國神社는 당신들 원주민들에 있어 가해자인 사람을 신으로 제사지내고 있는 것이나, 이것은 당신들 원주민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우리들에 있어, 이것은 대단한 고통입니다

- 반대로, 원주민으로 靖國神社에 제사지내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 입니까.

“高砂義勇隊입니다. 일본에 징용돼 남양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 고사의용대에 참가당하여 전사한 사람들은 일본군국주의의 피해자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靖國神社가, 고사의용대에 참가하여 전사한 사람들을 신으로 제사하는 것, 이것은 당신들 원주민족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죽인 사람과 같이 취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원주민은 그 피해자이며, 그 사람들과 같이 합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원주민은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고사의용대의 전사자는 어디에 모셔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다이알 족입니다. 물론 우리들 다이알 족의 고향에 모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 2002년8월12일 靖國神社로 가서, 합사되고 있는 조상들의 이름의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망자들의 제사와 인격권, 민족 문화권에 관한 증언에 들어간다.

- 張雲琴華씨는 왜 할아버지의 영혼은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그것은 靖國神社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에 그것을 알리지도 않고, 동의를 얻은 적도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그것과, 우리들이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으로 미뤄봐서, 靖國神社 속에 안치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당신들 원주민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망자를 제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물론 그 가족입니다.”

- 제3자가, 유족인 육친의 의사에 반하여 사망자를 제사지내는 것은 허용됩니까.

“그것은,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사자를제사지는 것은, 유족인 육친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 원주민의 사자를 합사한다고 하는 것은 원주민족인 당신 자신의 명예나 인격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 靖國神社는 張雲琴華씨, 혹은 당신의 요구를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 그렇다면, 유족이 제사지낼 권리를 부정, 또 당신 자신의 원주민으로서의 인격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후, 원주민족의 사망자의 조문에 대해서 재판소로부터의 질문이 있어, 체우스 아리씨는 사망자를 제사지내는 것은 가족의 행사로 “우리들 민족에 계는 신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조상, 선조의 영혼입니다. 조상의 영혼이라는 의식밖에 없습니다.” 고 설명했다. 고재판결에서의 사망자의 조문방법에 대한 판단에 체우스 아리씨의 증언이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사망자를 추도하는 영역에 공권력이나 타자의 관여, 개입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족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 체우스 아리씨의 증언으로 선명하게 부상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歿祀 取消 소송에

‘제1차 아시아소송’ 과 대만소송, 또 4국에서 제기한 소송(현재, 상고 중)에서는 처

음으로 종교법인 靖國神社가 피고로서 제소되었다. 靖國神社가 문체가 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무단합사’에 더해, 합



유족들은 ‘무단합사’에 일본정부가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 ‘舍祀絶止’를 요구했다. 대만소송 등에서는 합사취소 청구는 없었으나, 배경에 ‘무단합사문제’가 있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사취소요청에 대한 거부 있었다. 이 문제가 사법의 장에 처음으로 제기되게 된 것은, 동경지재에 이은 재한 구 일본군군인군속과 그 유족들의 전후보상재판(2001년6월 제소)로부터다. 유족들은 ‘무단합사’에 일본정부가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 ‘舍祀絶止’를 요구했다. 대만소송 등에서는 합사취소 청구는 없었으나, 배경에 ‘무단합사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최고재에 계류 중에 있는 ‘아사이소송’의 1심 단계에서, 靖國神社의 대리인은 원고 측 증인인 平野武 龍谷大學 교수에 ‘無斷舍祀’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다.

- 이 소송에서는 직접 쟁점은 아니나, 유족 원고들은, 승낙 없이 합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준비서면에도 상당히 상세한 주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인 靖國神社에 있어서는, 전물자를 제사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 (전략)증인의 생각을 말하면, 靖國神社가 전물자를 제사하기 위해서는 유족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여러 가지 권리의식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의 여러 가지의 경위로부터, 과거로 소급하게 되면, 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의 승낙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靖國神社의 제사지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약된 것이 되지 않을 가라는 질문입니다.

“(전략) 어떤 종교단체가, 예컨대, 유족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제사지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럴 경우는, 제사의 주체라든가,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이 라든가, 그러한 것을 음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략)

- 경우에 따라서는 승낙이 필요할 가요.

“물론 그렇지요.”

- 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 靖國神社에는 200만 이상의 전몰자들이 제사지내지고 있으나,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과거의 여러 가지의 경위도 있기 때문에, 승낙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곧바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경우에 승낙을 얻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합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당해 종교단체의 제사이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규제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까만.

“그럴수록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인정되면,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가 제약된다고 하는 것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어떤 관계에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미묘하기는 하나, 靖國神社측은 합사취소에 관한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가가 의문시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이즈미수상이 고재판결을 무시하고 5회나 참배를 강행한 것이 계기로 하여, 대만, 한국, 일본의 유족들이 10월19일에 臺北에서 상담한 결과, 새로운 합사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에 합의했다. ‘靖國問題’는 서서히 핵심인 ‘합사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듯하다. 그런데, 고이즈미수상의 참배 강행후의 각 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반이 비슷하다. 예컨대 조일신문의 전화조사(10월17-18)은 참배지지 42%, 반대 41%였다. 체우즈 아리씨가 법정에서 ‘고이즈미수상의 靖國參拜가, 우리들 원주민의 유족들에 있어, 대단한 마음의 상처, 슬픔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커다란 모욕이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일본 사회에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조일’ 조사의 항목에는 대만원주민유족들 피해자의 생각을 의식시키는 듯한 질문항목도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았다. 또 참배반대 이유에도 유족들의 피해를 상상시키는 항목은 없었다. 이러한 피해자부재는 ‘靖國보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타자에의 상상력이나 공감력을 상실시켜, 독선적인 사회의식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신문 미디어에도 ‘小泉化現象’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각각의 전몰자의 추도를 결정하는 것은 유족들의 사상, 양심의 자유이며, 또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공권력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권

리의 확립은 “국가를 위한 주권”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고 하는 전후 일본의 행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大阪高裁의 판결(10월11일에 확정)도, 위헌판단을 극복하여, 그러한 문제까지도 조명하는 긴 안목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 구제의 길은 멀기만한 투쟁을 계속하는 길 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 우리들은 자위관합사사건의 대법정판결로, 단 하나사람의 반대의견을 개진한 伊藤正巳 판사(당시)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 인권, 특히 정신적 자유에 관한 문제를 고려할 경우에 소수자의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 설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법의 장에서 그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지작업**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주요 목차〉

제 1 부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2. 개념 정의
3. 네이션
4. 내셔널리즘
5. 국민국가론

제 2 부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3. 러시아연방 : 마트로시카적 중층성
4. 미국 : '멜팅 포트'에서 '샐러드 볼'로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

- 현대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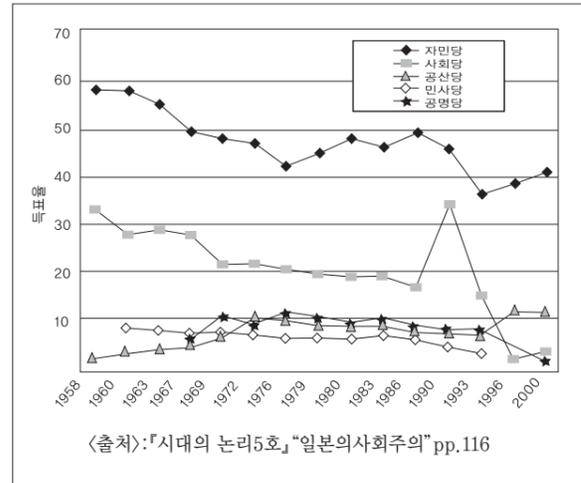
송 중 호 (한국 민족 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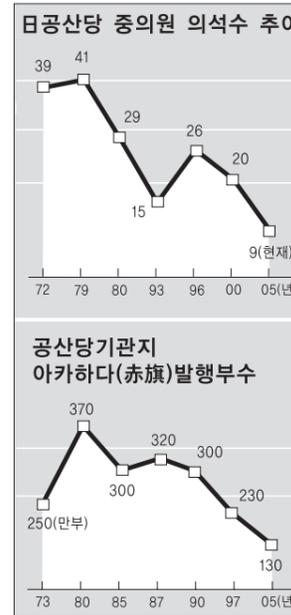
들어가며

현대 일본의 정치는 보수우경화의 경로를 걷고 있다. 55년체제가 붕괴된 1993년 이후에도 자민당은 일당우위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2005년 9월11일 중의원 선거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아젠다 독점으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자민당 단독 과반수 의석이 만들어졌다. 이에 더해 버블경제의 '붕괴후유증'에 헤어나지 못하는 일본의 침체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이즈미 내각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아소다로 외상을 비롯한 보수적인 정치인들을 내각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 정책의 반성은 커녕 이와 전면으로 대치되는 망언과 정책들을 양상하고 있다. 경제의 어려움에 정치는 보수화돼 가고 보통국가라 하여 군사대국으로 치달아 가는 일본을 두고 학자들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견제세력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사실 55년 체제의 붕괴는 자민당의 집권 실패와 맞물

〈표-1〉 정당별 중의원선거 득표율(1958~2000)



〈표-2〉 일본 공산당



려 사회당과 공산당 등 혁신계의 붕괴(표-1, 표-2)로 재 정의할 수 있다. 55년 체제 속에서 만년 야당이지만 자 민당 독주의 견제세력이었던 혁신계의 붕괴로 일본은 대안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본의 정치체제를 보수우경화로 치닫는 정치체제라고 정의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와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식민형의 정치문 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본은 “시민이 없는 식민(植民)의 나라”로 여전히 인식되는 특별한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로 취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지는 이번호를 통해 일본의 이질적인 모습을 정치, 경제, 사회의 다각적인 측면 에서 살펴봤다. 때문에 중앙정치의 보수우경화에 대척적인 이질적 모습이 또한 어딘 가에서 발견된다고 여겼다. 그 가운데 주목한 것이 지방정치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혁신계는 55년 체제 붕괴 이후 자민당을 견제하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그러나 지방 에서는 달랐다. 오히려 혁신계의 여당화가 뚜렷하게 발견됐다. 이와 같이 이질적인 모 습이 중앙과 지방 사이에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본문은 일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견제 역할을 하는 이유를 자민당과 혁신 계의 생존 경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 지방정치에서 보여주는 탈정당화(표- 3)의 요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실 탈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탈정당화 현상이 가속화되 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¹⁾ 93년 이후 사회당이 주요정당으로서 의 기능을 상실하자 이에 대한 정당 일체감을 가지고 있던 유권자는 무당파로 존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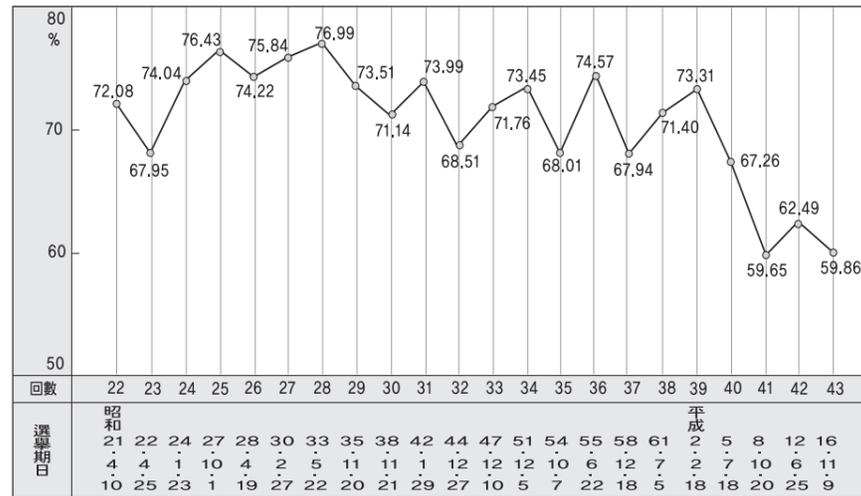
게 됐고, 투표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한편 자민당의 부패 스캔들 이후 자민당 지지자들도 무당파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마야흐



식민형의 정치문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본은 “시민이 없는 식민(植民)의 나라”로 여전히 인식되는 특별한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로 취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로 일본 정치에서도 무당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치에 대해 지지당을 잃어버린 유권자는 경제성장에 맞물려 시작된 생활보수주의와 함께 지역사회의 이권과 복지에 매달리기 시작한다. 결국 지방정부에서 나타나는 참여민주주의 성향의 민관파트너십은 이익유도형 정치와 다를 것이 없다. 때문에 집권 여당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중앙에 이어 지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이익유도형 정치에 익숙한 일

〈표-3〉 중의원 선거 투표율 변화



〈출처〉 : 『明るい選挙推進協会』 <http://www.akaruisenkyo.or.jp/> 검색일: 2006년 1월 15일.
(昭和 21년 : 1944년, 平成 2년 : 서기 1990년)

1) Inglehart는 구조적 접근법의 논리를 사용하여 탈정당화를 말하고 있다. 즉 사회, 경제적 발전과 문화의 변화는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을 대두시켰고 이러한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은 정당의 쇠퇴, 특히 좌파정당의 쇠퇴를 낳았다는 결론이다. 즉 사회의 안전과 안정성이 비교적 확보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개인적 자유와 자기표현이라는 대안적 가치를 중시하고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탈물질주의의 가치는 주로 중간계급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표현되고 있다. 사회, 경제적 변화는 계급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있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기존의 정당, 특히 좌파정당의 쇠퇴를 낳았고 새로운 운동, 즉 환경운동, 여성, 평화 등의 신좌파운동과 연결되고, 녹색당 등의 새로운 정당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Abramson&Inglehart, "Value Change in Global Perspective" (Michigan Univ.press:1995).

본이라면 무소속 후보일지라도 자민당에 가깝고,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상과 달리 지방의 탈정당화 경향은 반자민·비자민에 가깝다. 또한 이익유도형 정치와는 연계성이 없는 공산당이 지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과 중앙에서의 선거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일본 지방정치의 독특한 성격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방분권화 개혁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방분권화 속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라고 하는 3주체가 도시통치의 행위자에서 어떤 변화모습을 보이는지에 주목했다. 이는 일본 지방정치의 독특한 성격을 지방정치의 행위자 간 역학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본 정부에 의한 행정개혁 속에서의 자민당의 생존전략과 일본 혁신계를 비롯한 시민운동 그룹의 생존전략을 동시에 알아보고, 탈정당화 돼 가는 일본 국민들에게 참여 민주주의 가능성을 높인 시민참여형의 거버넌스를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존재를 의심받아왔던²⁾ 일본 시민사회의 성장과정을 확인하고, 아울러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본의 지방정치를 되짚어 보는 작업은 일본의 정치를 단순히 중앙의 보수우경화 현상 한가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향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중앙정치의 보수화된 성향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움트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사회의 시민성과 개혁성에 대한 의심을 품었던 그간의 논의에서 우

2) 일본에서는 '시민사회' 혹은 '시민운동'이라는 용어사용을 '금기시' 한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실패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기시'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을 NPO, NGO, 시민활동으로, 시민사회라는 말을 시민영역이나 시민적 공공권이라는 말로 각각 대체하고, 시민활동촉진법이라는 당초의 명칭을 비영리특정활동촉진법(속칭 NPO법)으로 변경한 것 등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등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어떻게 일본 사회의 분석에 사용했는가를 알아봐야 한다. 이는 국가와 시장(기업)의 영향력이 서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해 국가와 시장에 대해 자립적인 '시민사회'의 형성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한 만큼, 오히려 일본의 '시민사회론'이나 사회운동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고, 따라서 일반 시민에게 시민사회나 시민운동은 1960년대에 등장한 '베레렌'이나 반공해운동과 같이 기존의 계급운동을 뛰어넘는 역동성과 전투성을 가진 투쟁집단을 이론적 지탱해 주는 이념으로 각인돼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시민사회나 시민운동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NPO와 NGO 그리고 시민활동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1960년대 이후의 사회이념과 사회운동의 1990년대식 모색과정에서 탄생한 용어나 이념이라기보다는 1960년대 이래의 사회운동이나 이념과의 단절을 용어를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용어의 단절이 운동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마르크스주의가 시민사회론을 어떻게 이해해 왔으며 또한 마르크스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볼 때는 1960년대까지의 기존의 계급적 이념 운동에서 벗어나 1960년대 말부터 자립적이고 자각적인 개인(소위:무당파 시민)의 연합체로서의 새로운 운동조직이 출현하거나, 혹은 주로 공해 등 주민의 생활영역에 기반을 둔 운동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주민의 자치적 기반의 확대와 분권화 등의 문제와 관련된 자치적 주민운동이나 외국인 인권운동과 같이 기존 국민국가주의에 의해 배태된 모순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고, 이를 미래사회의 한 모습으로 규범화시키려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줄기차게 시도됐는데, 이를 시민사회론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조직적 계급운동이 쇠퇴성기를 맞이하면서 일본에서의 사회주의혁명 가능성이 접착됐던 1960년대에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은폐시키는 일종의 개량주의적 운동이나 이념으로 비워진 전통적인 시민사회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결국 시민운동의 좌우로부터의 시민권 회복을 동시에 의미한다.

경화 돼가는 중앙의 견제세력으로서의 지방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켜보고 연구하는 것은 동아시아 협력증진과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리라 전망한다.

지방정치의 약동 배경과 자민당의 생존 전략

세계화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

지방정치의 약동은 메이지 유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는 국가의 동원체제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본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지방정치의 약동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지방정치의 약동은 세계화라고 불리우는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과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작동으로 인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국가의 지방단위부터 충격에 직면하고, 이로써 국민국가의 분권화를 강요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온다.³⁾ 즉 세계화는 전 지구적 경쟁 체제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불가피하게 경쟁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국가의 제도나 운영방식을 재편하게 한다. 오늘날과 같은 문화적 다양성의 시대에 중앙 집권이 더 이상 메리트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세계화는 분권화 개혁을 야기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와 분권화는 동일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세계화로 인한 중앙·지방 관계의 재구조화 혹은 제도적 변용 요구 속에서 이뤄진다. 요컨대 세계화의 진전은 중앙·지방 관계의 변용을 포함하는 국가 구조의 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야기한 것이다.

우선 첫째, 세계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지방 정부의 정책 혁신(policy innovation) 및 제도의 혁신을 요구한다.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마련인데 해당 문제를 풀기에는 기존의 법적, 행정적 구조나 정책은 미흡하거나 심지어 장애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엔고 이후 일본에서처럼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등이 대규모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터인데, 일본의 경우 중앙 집중적 행정구조하에서 지방 정부의 정책 운용 폭은 제한돼 있고, 더욱이 3할 자치로 불리는 재정적 자율성의 결여는 그러한 지방의 적극적인 정책 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행·재정의 중앙집권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됐던 것이다.

3) Jun, Jong S. and Deil S. Wright. "Glob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eorgetown Univ Press:1996)

둘째, 위의 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 지도자들의 강력하고 창의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세계화에 따른 제반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나 중앙의 지도자에게 의존해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지방 리더십은 중앙의 정책을 받거나 중앙에 대해 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시대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하위 행정단위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의 리더가 제도적 존재였으나 발전국가 체제하에서 성장 극대화를 위한 산업 입지 정책에서 각 지역의 이익을 중앙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노력이 중심이었다. 여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개혁적인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중앙과 줄을 댈 수 있는 이익유도형 리더십일 뿐이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의 발전, 복지증진, 고용증대 등 지역에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지방지도자들의 리더십과 독자적인 창의력이 요구됐다.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 기반 정비와 인적 자원의 개발 등 적극적 지방 경영을 위해 매우 강력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이 요청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지방 리더십을 보장할 제도적 환경, 즉 분권화 개혁을 중앙에 강력히 요구하게 됐다.

셋째, 세계화의 진전은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 지역주민들은 국경의 벽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매체와 자극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시민적 정치의식과 참여의욕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요구와 비판의식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세계화는 국제세계에서의 행위주체를 국민국가 중심에서 지방정부, 시민단체, 시민 개개인으로써 확대함으로써 분권화와 참여를 대폭 확장시킨다. 한편 국가가 시민들의 변화된 글로벌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와 분권화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⁴⁾

위로부터의 지방분권화 개혁

당시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권화 개혁의 당위적인 요구들이 아래로부터 도출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분권화의 개혁론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전개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분권화 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1990년 10월에 발족한 제3차 행정개혁심의회는 ‘국제화 대응, 국민생활 중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풍요로운 생활부회’를 1991년에 설립해 지방제도개혁을 담당했다. 부의 회장인 호소카와 모리히로 쿠마모토 지사는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를 실현하는 행·재정 능력을 갖춘 지방자치체 만들기’를 목표로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중앙성청 관료들의 압

력으로 부회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좌절됐다. 그러나 분권주의자인 호소카와와 노력은 중앙 집권형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분권화 논의를 크게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특히 1993년에 들어 분권화 담론은 정치개혁 문제와 연계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단순히 담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분권기본법이라는 법률 제정에 운동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93년 6월에 중·참 양의원은 지방분권 추진을 국회에서 결의했다. 7월의 총선에서 지방분권 문제는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지방정부 측에서는 전국의 자치 6단체가 1993년 11월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각 도도부현들로부터 많은 논의와 연구 및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호소카와 정권은 1994년 1월 내각에 행정개혁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5월에는 본부 안에 지방분권부회를 설치했으며, 같은 해 4월에 제24차 비장제도조사회도 발족시켰다. 또 1995년 5월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의 벽은 중앙관료들의 저항이었다. 물론 중앙관료 전체가 분권화에 저항한 것은 아니었다. 제도 운용을 담당하는 총괄 관청과 개별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사업 관청 간에는 이해관계와 입장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개별 사업관청은 모두 그 폐지를 수용했고 총괄관청인 자치성도

지방분권화 일지	
● 1993. 6	: 지방분권의 추진에 대한 결의(중·참 양원의 결의)
● 1994. 12. 25	: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방침(각료회의에서 결정)
● 1995. 7. 3	: 지방분권추진법시행(5년간의 한시법)
● 1995. 7	: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발족(내각총리(수상)의 직할기관)
● 1996. 3. 29	: 중간보고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1996. 12. 20	: 제1차 권고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기관위임사무 폐지후의 사무구분, 국가의 관여, 국가와 자치체간의 관계, 각 행정분야에서 권한이양
● 1997. 7. 8	: 제2차 권고 기관위임사무 폐지후의 사무구분, 국가의 관여, 국가와 자치체간의 관계, 필치규제의 수정과 국가의 지방출장기관의 분질, 국고보조·부담금의 정리와 합리화, 지방재원의 확보,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새로운 관계, 자치체의 행정체제의 정비·확립
● 1997. 9. 12	: 제3차 권고 지방사무관제도의 수정, 기관위임사무중 ①주유군용지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한 사무, ②주유군 등 노무자의 노무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구분과 국가관여
● 1997. 10. 9	: 제4차 권고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의 방향, 국가의 관여기준과 종전의 자치단체(위임)사무의 방향, 국가와 자치체간의 계층처리 절차, 시정촌의 규모 등에 따른 권한이양
● 1998. 11. 19	: 제5차 권고 공공사업의 수정, 국가가 책정 또는 관여하는 각종 개발/정체계획의 수정
● 1999. 7. 8	: 지방분권일괄법의 성립
● 1999. 7. 28	: 제6차 권고 연기(稅財源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지향으로 연기)
● 2000. 7	: 지방분권추진법 실효, 지방분권추진위원회 해산
● 2001. 1. 6	: 중앙성청 재편(자치성은 총무성으로 통합)

4) 시민참가의 조직화는 중앙통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지방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정책적 이노베이션을 관찰함에 있어서 중앙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이 가능하다. 사실 지방정부의 개혁, 혹은 중앙-지방 관계의 개혁에 있어서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허약성이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시민참가의 중대는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장권, "한국과 일본의 분권화 개혁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거버넌스』 pp. 228(아연출판부:2005) 재인용.

근대 이후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흐름

	지방제도 개혁의 변천 (위로부터의 개혁)	지방 민주주의의 움직임 (아래로부터의 개혁)	장기적 추세
1890대 ?	메이지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창설 (제1의 개혁)	←자치권 확충운동의 활발화	(행정기능의 비대화)
1945년 ?	점령개혁에 의한 민주화·분권화 (제2의 개혁)		
1950년대	역코스기의 수정		
?		←주민운동의 분출, 혁신자치체의 대두 ←지방의 시대 제창	고도성장기에 있어서의 일본형 '신중앙집권'
1980년대	행정개혁주도의 시대		新新중앙집권
1990년대	분권 개혁의 시대(제3의 개혁)		

〈출처〉 : 오수기 사토루, “일본의 지방분권”,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거버넌스』, pp188.

찬성했다. 그러나 법정수탁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할 때는 개별 사업관청별로 강하게 저항했다. 그래서 정책영역별로 자치사무 이관에서 차이가 생겼다. 한편 지방세 확충 문제는 총괄관청인 대장성이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보조금 개혁의 경우 개별 사업 관청이 자기 관할 보조금을 폐지하는 데 적극 반대했고 총괄관청인 대장성도 저항했으므로 결국 보조금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가들의 경우, 표와 연결되는 분야의 개혁에는 깊이 개입했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같이 표와 연결되지 않는 분야의 개혁에는 방관했다. 즉 보조금의 지방 이양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개별 사업관청과 족의원이 협력해 강하게 저항했다.⁵⁾

또한 당시 일본은 중선거구제인 까닭에 자민당의원들을 포함한 일본의 정치가들로 하여금 개인 후원회 중심의 선거운동을 중요시하게 했으며, 따라서 지역에 기초한 이익집단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민당 의원들의 경우 이 경향은 더했는데, 그것은 야당과 달리 자민당은 풀뿌리까지 조직화된 안정적 지지 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⁶⁾ 따라서 선거의 당락은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으므로, 재선을 노리는 자민당의원들은 자기 선거구 내의 이익집단 등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국민전체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의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는 소속의원들이 이러한 사익 제공 노력을 저지할 수도 없었다. 주어진 선거제도 하에서 자당 의원

5) 김장권, “일본 중앙-지방 관계의 변용 1990년대의 분권화 개혁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일본은 회생하는가』, pp.41(삼성경제연구소: 2003).

6) 사회당의 경우 공공부문 노조인 총평의회에 의해, 민사당의 경우 민간부문 노조인 총동맹, 공명당의 경우 불교도 단체인 장가학회, 그리고 공산당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잘 조직화된 당원들에 의해 안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들의 재선을 가장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그리해 당의 다수당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는)최선의 방법이 바로 개별적인 사익의 제공임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의 분권화 개혁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지역의 이익유도형의 이권 정치를 방조하는 성격이 짙었다.⁷⁾ 그러나 1993년에 들어 리크루트 사건과 사가와큐빈 사건 등 정치스캔들이 발생하면서 정치개혁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권화 담론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혁신계의 생존 전략

혁신자치체의 등장과 주민운동의 확립

55년 체제가 정착돼 가면서 중앙정당정치의 보수 대 혁신의 대립구도는 1963년 제 5회 통일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정치에까지 재현된다. 이른바 “혁신자치체 시대”가 막을 연 것이다. 이러한 혁신자치체는 일본사회가 고도성장의 후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등장해,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는 1975년 제8회 통일지방선거에 최고조에 이른 후 쇠락의 길을 걷는다. 따라서 혁신자치체 시대는 일본의 고도성장 후기와 대체로 일치하고, 이 시기의 공해·도시문제의 분출과 이로 인한 주민운동의 확산·격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혁신자치체는 중앙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지배체제를 풀뿌리부터 타파하려는 혁신세력의 지방교두보로서의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중앙과는 별개의 지방정치 또는 지방자치가 그 고유 영역을 찾기 위한 실험무대였다고 볼 수 있다.

혁신자치체의 증대는 양적으로 첫째, 시·정·촌에서부터 시작해 대도시권으로 이어지는 도시자치체의 혁신수장화(革新首長化)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63년 2월 기타큐슈(北九州)시장선거에서 사회당 요시다(吉田法晴)가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4월 제5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중의원이었던 사회당 아스카타 이치오(飛鳥田日雄)가 요코하마 시장에 당선되는 등, 새로운 혁신수장이 속속 등장했다. 그 결과 1975년 통일지방 선거에는 전국 혁신시장회 회원의 전체 643시 중 20%이상, 혁신계 무소속시장을 포함하면 35%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경우 1967년의 미노베가 사회당·공산당 추천으로 도쿄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해, 1975년에는 도쿄도를 포함 10개의(도도부현)광역시가 혁신자치체가 됐다.

7) 최태욱, “세계화 시대의 공공정책 변화와 정치기업가의 역할: 일본 대점법의 개정사례”, 『세계화 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 pp.64-69.

한편, 질적으로 이와 같은 혁신자치체의 증대가 가능하게 된 것은 사회당·공산당 및 이 양당을 지지하는 노조지구당, 민주단체가 “선거공투”를 형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1967년 도지사 선거에 사회당, 공산당 양당은 밝은 민주당정 실현 등 8항의 정책협정을 체결하고, 위에는 학자나 문화인을 놓고, 가운데는 사회, 공산당, 아래는 노조와 민주단체가 맞는다는 「공투조직=밝은 혁신도정을 만드는 모임」을 결성했다. 미노베가 승리하자, 이러한 사회당, 공산당 양당의 정책 협정과 선거 공투의 파위가 확인돼 혁신자치체가 확산되는 동인이 됐다. 또한 혁신자치체가 등장, 증대한 사회적 배경은 신중간대중의 형성을 들 수 있다. 고도성장에 의한 생활의 윤택화, 핵가족화, 고학력화가 중간, 중류의식을 확대했다. 더욱이 성장은 소득수준의 평준화와 생활양식의 등질화를 가져왔다.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계급적 이데올로기 정치의 쇠약화, 즉 탈정치화를 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개발, 도시정책의 후유증에 대해 저항하는 성향으로 이어졌다.

또한 혁신자치체의 등장 배경으로 ‘공배와 각종 도시문제의 발생’을 들 수 있다. 특히 공해는 그 발생 규모가 전국적이었고, 하수도 미정비나 분뇨, 쓰레기장의 불편 등의 문제는 국가나 자치체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1955년 이후 현저히 나타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1960년대 이르러 더욱 커져 민족의 대이동 상태에 이르게 된다. 1975년에는 3대 도시권에 총 인구의 48%가 모여 살게 됐다. 이러한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집중은 주공(住工)의 혼재화, 과밀화, 무계획적 택지개발을 가져와 지가 급등, 주택난, 교통난, 폐기물 처리 난, 도로, 하수도 미정비, 학교·보육소 부족 등 여러 가지 생활 곤란을 야기 시켰다.

공해·도시문제의 전국적인 분출을 계기로 1960년대 후기부터 ‘시민·주민운동’이 일본열도를 들끓게 했다. 이러한 주민운동은 기성정당, 노동조합, 지역단체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지역생활자로서의 개개주민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직화한 운동이었다. 또한 운동조직의 기반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공간적, 상징적 영역이었고, 계급·계층적인 이해와 관련 없는 탈 이데올로기적이며, 기성 정당이나 정치가를 배제하고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취하려는 탈정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물리적 실행행사라고 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⁸⁾

이와 같이 도시권으로 유입된 주민과 특히 핵가족화와 함께 도심부로부터 도시의 광지역으로 거주 장소를 옮겨야 하는 청장년층이나 주부, 샐러리맨 층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현상인 탈정당화에도 불구하고 도시문제에 직면하여 정치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즉 이들은 자민당 정부의 공해대책이나 도시정책에 대해 깊은 불신감을 가졌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지체됐고, 이것에 반해 대화나 참가라고 하는 “입력루트”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애쓰는 혁신자치체의 자세는 크게 공감을 얻었다. 이것이 새롭게 정치화 성향을 띠게 된 유권자층을 혁신계



혁신자치체가 등장, 증대한 배경은 생활의 윤택화, 고학력화 등의 영향으로 신중간대중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정치의 쇠약화, 개발정책의 후유증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로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결국 이들의 집단행동과 정치화가 1959년 통일선거 이후 하락한 수장, 의원선거 투표율을 반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됐고, 혁신자치체를 성립시키게 된 것이다.

혁신자치체의 실패와 새로운 도약

혁신자치체의 정책은 오일쇼크와 재정위기에 처하자 한계에 봉착한다. 1973년 오일쇼크가 도래했고 시빌미니멈의 중기계획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외부로부터는 복지남발이나 인건비 과잉이라는 비판이 난무했고 재정전쟁을 선언했으나 신재정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시민참가 또한 '시민을 정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럴 가치가 있는 정치를 만드는 것' 등의 시민의 관심환기를 촉구하는 캠페인 수준에 그쳤다. 또한 시민참가는 의회 등에 의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됐고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했다. 시빌미니멈 또한 일본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일개 혁신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달성이자 '저항권의 구체적인 표현' 이상의 것은 되지 못했고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기초한 '물욕'의 대상으로 간주되기조차 했다. 시민의 권리의식의 신장이나 공적서비스영역의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공적영역에 대한 오해와 근시안적 편의주의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다.

따라서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저항형의 시민운동은 감소한다. 지방정치 차원에서도 점차 혁신계와 보수계가 제시하는 정책이 상당히 근접해 쟁점이 분명하지 않게 됐다. 혁신자치체와 시민운동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제시했지만 그것은 결국 고도성장의 틀 안에서 과거의 행정의존적인 형태로 이뤄진 셈이었다. 당시 혁신자치체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해 공해, 환경, 복지 등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는데, 이는 고도성장에 따른 폐해들을 시정하기 위한 비용이었지만 그 재원은 고도성장에 의한 세수증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

8) 최종만, "정계개편과 지방정치의 약동", 『일본의 자치체 개혁』, pp.206-212(나남:1998).

서 오일 쇼크 이후 일본경제가 저성장기로 들어서게 되자 혁신자치체는 재정 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고, 더 이상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 한편 당시의 시민운동은 아직 스스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만큼 성숙되지 못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행정에 요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자치체가 이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예산을 배분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면 운동이 쉽게 정체돼버리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저항형 시민운동의 약화와 더불어 1970년대 후반부터 혁신자치체는 급속히 감소해 1978년에는 교토부, 79년에는 오사카부 등 주요 광역자치체에서도 혁신계 후보가 패배함으로써 혁신자치체의 시대는 거의 막을 내리게 됐다. 혁신자치체의 퇴조에는 보수계의 혁신 무너뜨리기 전략, 사회당·공산당과 총평을 축으로 한 혁신계의 통일 전선의 분열, 혁신자치체의 재정위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혁신자치체 및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 자체에 있다.⁹⁾

그리고 1980년대에는 지역차원에서 시민들의 네트워크형 조직들이 형성돼 과거의 다양한 운동들이 추진세력이 됐다. 1980~90년대에는 예컨대 인권이나 국제화같은 문제들도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된 과제로서 파악하고 풀어가려는 지향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일상생활권인 지역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활동목표를 갖는 시민운동 그룹들이 형성됐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시민운동은 쟁점이 다양화되고 참가와 대안제시를 중시하게 됐으며 풀뿌리 차원의 네트워크형운동으로 확산되는 길을 만든다.

탈정당화와 자치적 커뮤니티의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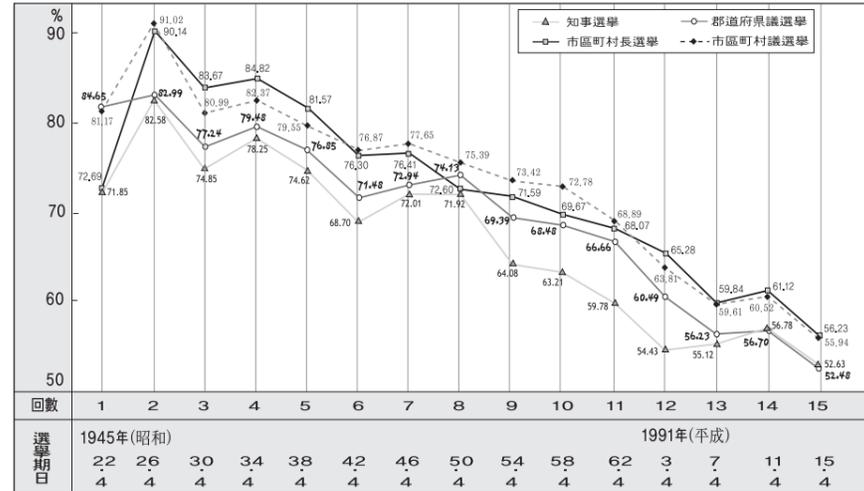
가속화하는 탈정당화와 공산당의 약진

일본 지방자치제도는 미국 연합군군사령부(GHQ)의 지시에 의해, 1947년 4월에 일제히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1947년 5월 시작됐다. 그 이후 통일지방선거가 4년마다 시행됐으나 점차 통일지방선거는 뚜렷하게 무당파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9) 한영해, "새로운 사회관계의 모색", 『일본사회개설』, pp.312~313(한울:2001)

혁신수장이 보수자치체와 상이했던 점의 하나가 광청(廣聴)-대화-참가라고 하는 시민참가의 확대·유도 시책의 전개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보면 광청은 일반통행적으로 추진되는 친절행정의 단계이고, 대화는 쌍방통행적으로, 이를 통해 주민의 이기주의와 행정의 공공성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단계이며, 참가는 자유통행으로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의 창조 단계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식으로 아스카 요코하마 시장은 홍보실을 시민상담실로 확충해 이를 청사 1층으로 이전하고 시장·간부가 직접 시민을 응대했으며 시내 각지에서 주민집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방식과 일반공모에 의한 시장모니터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위원회 등 시민이 참가하는 여러 위원회를 창설했다. 이것들이 종래의 보수자치체에서는 없었던 참신한 주민 직결루트의 개설로서 다른 혁신자치체는 물론 보수자치체에까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져 전파됐다. 최중만, "정계개편과 지방정치 약동", 『일본의 자치체 개혁』, pp..210(나남:1998) 이는 후술하는 시민참여형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있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경험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4〉 탈정당화의 경향을 보이는 일본의 지방정치



〈출처〉: 『明るい選挙推進協会』 <http://www.akaruisenkyo.or.jp/> 검색일: 2006년 1월 15일.

아사히(朝日)신문의 선호정당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호정당이 없다', '모르겠다/무응답'을 합한 "무당파층"이 60%나 됐다.

더욱이 20대의 젊은층에서는 무당파층이 81%나 돼 정당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문제점을 제기하게 됐다.(〈표-5〉는 전국자원과 지방별·세대별 투표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점차 여성의원도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도 매우 특징적인 것이다. 또한 공산당이 부상해 과거 어느 때보다 의회에 진출한 비율이 높아진 것이 지방선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장 후보자들의 정당 합승(相乗り)현상은 사라지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책이나 정당선택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정당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앞서 서술한 것〈표-4〉와 같이 1947년 이후 일관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에 있다. 1967년에서 1975년의 투표율이 증가한 시기는 일본의 혁신자치단체가 등장해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던 때였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볼 수 있게 했던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기존의 정당정치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있고 이것이 기존 정당에서 유권자들을 이탈하게 하는 요인인 것이다. 일본 지방선거의 다른 한 특징은 정당지지의 현상과 '무당파층'의 득세이다. 이는 무소

〈표-5〉 제43회 통일지방선거 투표율

1. 全國

〈출처〉 : 『明るい選挙推進協会』

年齢階層別	有権者數(人)			投票者數(人)			投票率(%)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20~24歳	10,801	10,573	21,374	3,349	3,575	6,924	31.01	33.81	32.39
25~29歳	12,243	11,980	24,223	4,499	4,820	9,319	36.75	40.23	38.47
30~34歳	12,826	12,387	25,213	5,618	6,039	11,657	43.80	48.75	46.23
35~39歳	10,926	10,856	21,782	5,828	6,351	12,179	53.34	58.50	55.91
40~44歳	10,860	10,810	21,670	6,623	6,972	13,595	60.99	64.50	62.74
45~49歳	11,740	11,675	23,415	7,677	7,905	15,582	65.39	67.71	66.55
50~54歳	14,689	14,740	29,429	9,996	10,155	20,151	68.05	68.89	68.47
55~59歳	13,474	13,753	27,227	9,628	9,887	19,515	71.46	71.89	71.68
60~64歳	11,872	12,730	24,602	9,097	9,794	18,891	76.63	76.94	76.79
65~69歳	10,553	12,049	22,602	8,438	9,439	17,877	79.96	78.34	79.09
70~74歳	9,141	11,109	20,250	7,402	8,417	15,819	80.98	75.77	78.12
75~79歳	6,834	9,604	16,438	5,399	6,597	11,996	79.00	68.69	72.98
80歳以上	5,841	12,898	18,739	3,779	5,975	9,754	64.70	46.33	52.05
計	141,800	155,164	296,964	87,333	95,926	183,259	61.59	61.82	61.71

2. 區部

年齢階層別	有権者數(人)			投票者數(人)			投票率(%)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20~24歳	1,976	1,933	3,909	603	609	1,212	30.52	31.51	31.01
25~29歳	2,251	2,271	4,522	725	794	1,519	32.21	34.96	33.59
30~34歳	2,552	2,579	5,131	1,016	1,145	2,161	39.81	44.40	42.12
35~39歳	2,187	2,198	4,385	1,054	1,146	2,200	48.19	52.14	50.17
40~44歳	1,562	1,905	3,467	1,112	1,121	2,233	71.19	58.85	64.41
45~49歳	1,916	1,899	3,815	1,144	1,190	2,334	59.71	62.66	61.18
50~54歳	2,387	2,501	4,888	1,514	1,605	3,119	63.43	64.17	63.81
55~59歳	2,388	2,509	4,897	1,575	1,680	3,255	65.95	66.96	66.47
60~64歳	2,191	2,382	4,573	1,619	1,746	3,365	73.89	73.30	73.58
65~69歳	1,875	2,156	4,031	1,441	1,612	3,053	76.85	74.77	75.74
70~74歳	1,467	1,765	3,232	1,158	1,246	2,404	78.94	70.59	74.38
75~79歳	1,005	1,392	2,397	768	893	1,661	76.42	64.15	69.29
80歳以上	806	1,617	2,423	496	726	1,222	61.54	44.90	50.43
計	24,563	27,107	51,670	14,225	15,513	29,738	57.91	57.23	57.55

3. 市部

年齢階層別	有権者數(人)			投票者數(人)			投票率(%)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20~24歳	4,696	4,593	9,289	1,346	1,486	2,832	28.66	32.35	30.49
25~29歳	5,385	5,384	10,769	1,903	2,086	3,989	35.34	38.74	37.04
30~34歳	5,568	5,410	10,978	2,359	2,517	4,876	42.37	46.52	44.42
35~39歳	4,708	4,689	9,397	2,467	2,628	5,095	52.40	56.05	54.22
40~44歳	4,662	4,823	9,485	2,767	2,979	5,746	59.35	61.77	60.58
45~49歳	4,992	5,069	10,061	3,146	3,290	6,436	63.02	64.90	63.97
50~54歳	6,207	6,399	12,606	4,090	4,244	8,334	65.89	66.32	66.11
55~59歳	5,775	6,181	11,956	4,051	4,378	8,429	70.15	70.83	70.50
60~64歳	5,080	5,612	10,692	3,841	4,277	8,118	75.61	76.21	75.93
65~69歳	4,492	5,107	9,599	3,569	3,938	7,507	79.45	77.11	78.21
70~74歳	3,779	4,603	8,382	3,002	3,467	6,469	79.44	75.32	77.18
75~79歳	2,810	4,035	6,845	2,221	2,719	4,940	79.04	67.39	72.17
80歳以上	2,375	5,369	7,744	1,558	2,461	4,019	65.60	45.84	51.90
計	60,529	67,274	127,803	36,320	40,470	76,790	60.00	60.16	60.08

3. 市部

年齢階層別	有権者数(人)			投票者数(人)			投票率(%)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20～24歳	4,696	4,593	9,289	1,346	1,486	2,832	28.66	32.35	30.49
25～29歳	5,385	5,384	10,769	1,903	2,086	3,989	35.34	38.74	37.04
30～34歳	5,568	5,410	10,978	2,359	2,517	4,876	42.37	46.52	44.42
35～39歳	4,708	4,689	9,397	2,467	2,628	5,095	52.40	56.05	54.22
40～44歳	4,662	4,823	9,485	2,767	2,979	5,746	59.35	61.77	60.58
45～49歳	4,992	5,069	10,061	3,146	3,290	6,436	63.02	64.90	63.97
50～54歳	6,207	6,399	12,606	4,090	4,244	8,334	65.89	66.32	66.11
55～59歳	5,775	6,181	11,956	4,051	4,378	8,429	70.15	70.83	70.50
60～64歳	5,080	5,612	10,692	3,841	4,277	8,118	75.61	76.21	75.93
65～69歳	4,492	5,107	9,599	3,569	3,938	7,507	79.45	77.11	78.21
70～74歳	3,779	4,603	8,382	3,002	3,467	6,469	79.44	75.32	77.18
75～79歳	2,810	4,035	6,845	2,221	2,719	4,940	79.04	67.39	72.17
80歳以上	2,375	5,369	7,744	1,558	2,461	4,019	65.60	45.84	51.90
計	60,529	67,274	127,803	36,320	40,470	76,790	60.00	60.16	60.08

4. 町部

年齢階層別	有権者数(人)			投票者数(人)			投票率(%)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20～24歳	2,611	2,472	5,083	825	868	1,693	31.60	35.11	33.31
25～29歳	2,918	2,668	5,586	1,139	1,173	2,312	39.03	43.97	41.39
30～34歳	2,915	2,725	5,640	1,303	1,409	2,712	44.70	51.71	48.09
35～39歳	2,478	2,384	4,862	1,386	1,480	2,866	55.93	62.08	58.95
40～44歳	2,486	2,437	4,923	1,591	1,701	3,292	64.00	69.80	66.87
45～49歳	2,857	2,898	5,755	1,985	2,065	4,050	69.48	71.26	70.37
50～54歳	3,649	3,614	7,263	2,594	2,625	5,219	71.09	72.63	71.86
55～59歳	3,295	3,203	6,498	2,475	2,377	4,852	75.11	74.21	74.67
60～64歳	2,814	2,993	5,807	2,229	2,361	4,590	79.21	78.88	79.04
65～69歳	2,469	2,927	5,396	2,022	2,331	4,353	81.90	79.64	80.67
70～74歳	2,380	2,887	5,267	1,948	2,246	4,194	81.85	77.80	79.63
75～79歳	1,765	2,477	4,242	1,406	1,744	3,150	79.66	70.41	74.26
80歳以上	1,566	3,514	5,080	1,013	1,624	2,637	64.69	46.22	51.91
計	34,203	37,199	71,402	21,916	24,004	45,920	64.08	64.53	6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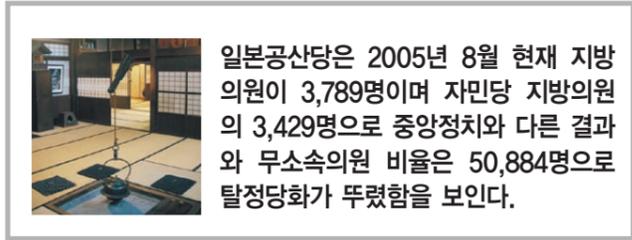
5. 村部

年齢階層別	有権者数(人)			投票者数(人)			投票率(%)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20～24歳	1,518	1,575	3,093	575	612	1,187	37.88	38.86	38.38
25～29歳	1,689	1,657	3,346	732	767	1,499	43.34	46.29	44.80
30～34歳	1,791	1,673	3,464	940	968	1,908	52.48	57.86	55.08
35～39歳	1,553	1,585	3,138	921	1,097	2,018	59.30	69.21	64.31
40～44歳	1,736	1,645	3,381	1,153	1,171	2,324	66.42	71.19	68.74
45～49歳	1,975	1,809	3,784	1,402	1,360	2,762	70.99	75.18	72.99
50～54歳	2,446	2,226	4,672	1,798	1,681	3,479	73.51	75.52	74.46
55～59歳	2,016	1,860	3,876	1,527	1,452	2,979	75.74	78.06	76.86
60～64歳	1,787	1,743	3,530	1,408	1,410	2,818	78.79	80.90	79.83
65～69歳	1,717	1,859	3,576	1,406	1,558	2,964	81.89	83.81	82.89
70～74歳	1,515	1,854	3,369	1,294	1,458	2,752	85.41	78.64	81.69
75～79歳	1,254	1,700	2,954	1,004	1,241	2,245	80.06	73.00	76.00
80歳以上	1,094	2,398	3,492	712	1,164	1,876	65.08	48.54	53.72
計	22,091	23,584	45,675	14,872	15,939	30,811	67.32	67.58	67.46

〈표-6〉 일본 공산당 지방의원수(3,739인) 2005년 8월 4일 현재

日本共産黨議員數							うち女性議員數					
현명 県名	黨議員	현 界	정령 政令	구 區	시 市	정촌 町村	界	政令	區	市	町村	議員數
北海道(홋카이도)	241	4	8	-	79	150	3	5	-	28	36	72
青森(아오모리)	38	2	-	-	19	17	1	-	-	5	3	9
秋田(아키타)	66	1	-	-	40	25	0	-	-	8	2	10
岩手(이와테)	70	1	-	-	27	42	0	-	-	6	7	13
宮城(미야기)	72	2	6	-	31	33	1	4	-	9	9	23
山形(야마가타)	53	1	-	-	25	27	0	-	-	9	3	12
福島(후쿠시마)	95	2	-	-	27	66	1	-	-	12	8	21
東京(도쿄)	269	13	-	147	97	12	6	-	56	41	2	105
埼玉(사이타마)	233	4	10	-	146	73	4	5	-	72	35	116
茨城(이바라기)	77	2	-	-	53	22	2	-	-	22	9	33
栃木(토치기)	41	0	-	-	14	27	0	-	-	4	5	9
群馬(군마)	68	2	-	-	35	31	1	-	-	11	5	17
神奈川(가나가와)	94	4	14	-	48	28	3	6	-	21	9	39
千葉(치바)	132	4	6	-	82	40	1	2	-	33	9	45
山梨(야마나시)	28	2	-	-	19	7	1	-	-	6	3	10
長野(나가노)	176	7	-	-	53	116	4	-	-	20	30	54
新潟(니이가타)	79	1	-	-	58	20	0	-	-	12	3	15
石川(이시카와)	21	1	-	-	10	10	1	-	-	7	0	8
富山(토야마)	18	1	-	-	8	9	1	-	-	2	2	5
福井(후쿠시마)	20	1	-	-	12	7	0	-	-	2	1	3
静岡(시즈오카)	85	3	5	-	51	26	0	2	-	15	5	22
愛知(아이치)	161	0	9	-	100	52	0	4	-	41	12	57
岐阜(기후)	68	1	-	-	47	20	0	-	-	20	6	26
三重(미에)	67	0	-	-	33	34	0	-	-	12	12	24
大阪(오사카)	182	9	13	-	138	22	2	3	-	57	10	72
兵庫(효고)	144	8	10	-	89	37	4	4	-	32	7	47
京都(쿄토)	152	12	20	-	60	60	3	8	-	23	18	52
滋賀(시가)	70	2	-	-	42	26	1	-	-	13	11	25
奈良(나라)	64	3	-	-	28	33	3	-	-	9	9	21
和歌山(와카야마)	63	4	-	-	21	38	1	-	-	5	7	13
岡山(오마야마)	54	3	-	-	32	19	1	-	-	14	4	19
廣島(히로시마)	48	1	5	-	28	14	0	3	-	8	4	15
山口(야마구치)	66	2	-	-	41	23	0	-	-	13	5	18
鳥取(토토리)	26	0	-	-	10	16	0	-	-	5	4	9
島根(시마네)	32	1	-	-	19	12	0	-	-	7	5	12
香川(카가와)	32	1	-	-	12	19	1	-	-	4	5	10
愛媛(에히메)	26	2	-	-	17	7	1	-	-	6	0	7
徳島(토쿠시마)	44	4	-	-	16	24	2	-	-	3	3	8
高知(코치)	88	6	-	-	33	49	1	-	-	8	6	15
福岡(후쿠오카)	114	4	16	-	40	54	2	3	-	13	15	33
佐賀(사가)	34	0	-	-	14	20	0	-	-	4	5	9
長崎(나가사키)	33	1	-	-	15	17	0	-	-	2	4	6
熊本(쿠마모토)	36	1	-	-	17	18	0	-	-	3	2	5
大分(오이타)	35	1	-	-	27	7	1	-	-	10	1	12
宮崎(미야자키)	35	0	-	-	15	20	0	-	-	3	9	12
鹿兒島(가코시마)	41	1	-	-	22	18	1	-	-	8	3	12
沖繩(오키나와)	48	3	-	-	23	22	1	-	-	6	2	9
全國	3,739	128	122	147	1,873	1,469	55	49	56	674	355	1,189

〈출처〉 : 일본 공산당 (<http://www.jcp.or.jp/giin/index.html>) :검색일 2006년 2월1일).



일본공산당은 2005년 8월 현재 지방 의원이 3,789명이며 자민당 지방의원 의 3,429명으로 중앙정치와 다른 결과와 무소속의원 비율은 50,884명으로 탈정당화가 뚜렷함을 보인다.

속 출신의 지방의원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기존의 집권당이나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무소속 의원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지지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참신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을 찾고 있다. 위의 <표-6>에서와 같이 일본 공산당이 지방의원 수에 있어서 2005년 8월 현재 3,789명을 차지하는 것은 집권정당인 자민당의 지방의원 수 3,429명과 견줘볼 때 상당한 수치임에 분명하다. 또한 공명당이 3,283명, 민주당 879명, 사민당 793명이다. 한편 무소속 의원의 비율은 50,884명으로 지방정치의 탈정당화와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바라는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산당의 경우 55년 체재 붕괴 이후 사회당과 자민당에서 분당한 여러 군소정당들이 일관된 정책이나 이념 없이 이 합집산에 의해 움직여 온 것과는 달리 일관된 정책 입장과 유연한 대중정당으로의 변화를 보였던 것이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작용으로 일본 정당들은 정당들의 담합에 의해 후보자를 옹립하는 정당의 합승(相乗り)을 하고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가 다양한 후보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다. 합승에 의한 입후보 지역은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정당의 합승현상이 그만큼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적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당의 합승현상은 대개 일본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보수 정당들이 연합해 후보자를 옹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기존 정당이 유권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까닭에 단체장 선거에서는 공산당을 제외한 타 정당들이 대연합을 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승리하기 어렵지만,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는 공산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7>후보자들의 정당 합승(相乗り)현상

구분	지사					시구청				
	1975	1979	1983	1987	1991	1975	1979	1983	1987	1991
혁신자치제	10	3	5	3	5	153	134	92	74	68
연합(보수·중도·혁신)	15	30	30	34	32	44	153	302	361	350
기타(단독·무소속 등)	22	14	12	10	10	469	382	280	241	261
합계	47	47	47	47	47	666	669	674	676	679

공공성의 담당자로서 커뮤니티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 참여와 자치에 있다고 할 때, 이는 공공성의 담당자로서 국가나 행정이 아닌 주민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성의 구조 전환”을 위한 모색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민운동은 주민자치와 주민 참여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장과 국가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영역이 생활세계에 침투하게 되는데, 세계화 시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속에서 이것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노골적인 시장과 국가의 영역 확대에 견제세력으로서 주민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민의 생활 세계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침투 상황에 대응해 주민자치는 생활세계를 다시 일으켜 시장과 국가의 침투를 멈추게 한다. 그 방법이 결사체론이다. “NPO, NGO, 볼런티어 활동, 사회운동” 등의 결사체의 활동 속에서 언어론적 전회를 통한 생활세계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과 시장과 국가로 이뤄진 시스템의 변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생활세계의 언어론적 전회를 실현해온 것이 결사 혁명이며, 역사적으로는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기타의 시민혁명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세계의 언어론적 전회라는 것은 ‘생활세계의 합리화’다. 생활세계의 합리화라는 것은 베버의 용어에서는 주술(呪術)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이며, 동시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대화)적 행위가 문화적·사회적 영역,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나 가정이나 지역 등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¹⁰⁾ 즉 이것은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대화)적 참여 속에서 이뤄진다. 다시 말해 생활자의 입장에 서서 그 동안 국가와 행정이 담당해 온 공공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운동의 잠재력으로서의 주민자치 조직이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형태는 어떠한가. 그것은 분명 그 결성의 계기를 “거주”로 하되 맥키버가 말하는 association 조직으로서 제도화된 지역 공동체 조직을 말한다. 여기서 제도화됐다는 것은 자치체와의 관련이 강하며 주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초에 국민 생활심의회 조사부회의 커뮤니티 문제 소위원회에서 제기한 “커뮤니티 행정”의 제도화는 구체적으로 “주민협의회”라는 새로운 주민

10) 사토 유시유키, 송석원 옮김, 『결사와 시민사회』, 『NPO와 시민사회』, pp.178(아르케2004).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단서를 갖고 있어 당파적 대립을 갖지 않는다는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이 새로운 커뮤니티 조직도 실질적인 주민자치와는 달리 주민 참가라는 단순한 행정 협력의 장이 됐다.

그러나 이런 공동성의 회복 혹은 새로운 공동성의 형성은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의 계기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공공성의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과 그 담당자로서의 등장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일본 사회의 구조 변동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기를 통해 “생활의 개인화”와 “생활의 사회화”가 진전돼 사회적 공동소비의 영역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고도 성장기의 대량 생산과 결부된 개별 소비의 증대는 생활의 재생산이 점점 사회적 기반과 결부된 것이다. 이 시기의 개별 소비 기반의 담당자는 국가나 자치체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었다. 예를 들어 “도요타” 시와 같은 기업 도시의 경우, 관련 산업을 포함해 도요타 자동차 노동자의 소비 생활 기반이 전적으로 기업 시설에 의해 성립되고 사회복지조차도 기업 복지에 의존하게 돼 공공 복지가 오히려 기업 복지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생활 기반을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적 노사 관계”의 확립도 이 시기에 성립했으며, 지역 발전이 곧 기업 발전이라고 생각돼 공공성의 실질적 담당자로서의 자치체가 기업에 지원을 우선하는 개발의 논리 구조가 성립됐다.¹²⁾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사회 자본의 무임승차자였고 주민 자신은 공공성을 창출 혹은 관리할 주체로서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체제는 필연적으로 “4대 공해 재판 사건”과 같은 공해 문제와 각종 도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로서 70년대 초반에 주민 운동이 분출하게 됐다. 이 시기에 커뮤니티 정책의 기점이 된 “국민 생활 심의회 조사부회”의 커뮤니티 보고서가 제출됐다.¹³⁾ 이런 일련의 흐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공공성에 관련한 주민 운동은 이 시기를 전후로 반공해, 반개발의 “저항형”에서 생활 기반 정비의 “요구형”으로 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도시형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도시 주민이 주민 운동을 통한 정치세력으로서의 등장가능성을 시사했으며

11) 이러한 공동성이나 사회적 연대의 물적 기반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변화해 왔지만 현대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규정된다. 우리가 주민자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공동성을 회복하는 계기와 그 구체적 구현의 공간으로서 커뮤니티는 매우 중요한 분석개념이다. 이런 의미로 커뮤니티를 특정한 지리적 공간이나 규범적 차원의 실체라는 의미로서가 아닌 좀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의미로서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공공성의 회복을 도모하는 방법론적인 함의를 가지며, 유연하다는 것은 분석의 대상이 경우에 따라 행정단위, 공간적 단위, 지역조직 단위 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송정기, “공공성의 구조 전환과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정치』, pp.78-92(대화출판:1995)

12) 송정기, 같은 책 p.80

13) 여기서 거론된 커뮤니티란 “생활의 장에 있어서 시민으로서의 자주성과 책임을 자각한 개인 및 가정을 구성 주체로 해 지역성과 각종 공동 목표를 가진 개방적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신뢰감이 있는 집단”으로 규정해 근대 시민사회에 전형적인 자주성과 책임성에 착목해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한 정의를 하고 있다.

국민 생활 심의회 조사부회 國民生活審議會 調査部會 『コミュニティ：生活の場における人間性の回復』(大蔵省:1969).

사회자본으로서의 생활기반 정비의 역할이 기업에서 국가나 자치체로 이행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저성장기의 대규모 인구의 도시 유입에 따라 생활 기반 공급에 대한 기업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도시 정책에 대한 주체로서의 국가나 자치체에 대해 주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묻게 됐다. 이 시기에 “Civil Minimum” 이 제기된 것은 도시 정책의 주체를 문제시한 바로 이런 공공성의 담당자에 관한 구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 문제와 지역 문제를 계기로 주민 운동이 발생한 결과 혁신 자치체의 등장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후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혁신자치체는 실패하지만 그 경험은 온전히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남게 된다. 더욱이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자민당은 1980년대 이후로 행·재정 개혁을 실시 “작은 정부”를 만들기 시작한다.¹⁴⁾ 이러한 토양 하에 1982년과 1983년 노인의료비용의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고, 1985년에는 기초 연금을 통합하고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런 일련의 국가 복지부담 축소 조치들은 사회적 저항 없이 전개됐다. 이는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공공서비스의 주체가 된다는 이념이 확산된 덕분인데, 당시 민주적 분권화와 반관료적 시민주권의 정신으로 이러한 이념이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¹⁵⁾

<표-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의 누적적 장기 채무 잔고는 1991년 말에 278조 엔(GDP대비 120%)에서 1999년 말에 약 600조 엔(GDP 대비 120%)로 늘어났다. 이는 영국 57%, 독일 60.6%, 프랑스 64.8%, 미국 65.2% 등과 비교할 때 훨씬 클 뿐만 아니라, 16%에 달하는 만성적 적자국인 이탈리아도 제친 수치이다.

이처럼 국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장래 사회보장 예산 확보가 압박을 받을 것

〈표-8〉 주요 국가 재정적자 (GDP 대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1990	1.9	-4.3	-1.5	-2.0	-2.1	-11.0	-5.8
1995	-4.2	-3.1	-5.8	-3.3	-5.6	-7.6	-5.4
1999	-7.0	1.0	1.3	-1.4	-1.6	-1.8	2.2
2000	-6.3	2.2	1.9	1.5	-1.3	-0.3	3.4

*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69.

14) 1980년대 후반 들어 일본정부는 국고지출금의 보조부담을 인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민생비 부담 증가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로 보전해줌에 따라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그다지 악화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비에의 재원분담이 감소하는 등 일부 사회보장 분야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분권화와 민영화로 키워드로 하는 작은 정부와 민활과 자조적 복지이념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 정책은 1980년대를 거쳐 사회보장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15) Yamamoto Tadashi. "Deciding the Pulic Good",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1999).

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복지개혁이 행·재정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보장비 지출의 억제라는 피동적 형태로 추진됐다면, 1990년대 복지개혁은 좀더 적극적인 형태의 시장 지향적 복지 정책의 추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시장 지향적 복지정책의 핵심 축은 바로 민활, 즉 민간, 시민단체들을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1990년대 들어 이른바 '소자·고령화사회' 현상으로 일본의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사회보장 수요를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상황은 이런 공공서비스 정책 전환을 가속화 시킨 것이다.¹⁶⁾ 즉 NPO, NGO, 볼런티어 활동, 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자가 국가와 시장이 아닌 주민, 시민으로 전환되며 구체적으로 시민참여형의 지방정치를 마련하게 된다.

시민참여형의 지방정치 출현

시민참여형의 지방자치체의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분과 실재를 구분해야 한다. 명분상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참가라는 말이 90년대의 시대적 과제로 유행어가 돼있다.¹⁷⁾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민당 보수정권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정·관·재 유착의 폐해를 극복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행정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¹⁸⁾

반면, 실제적인 측면은 1980년대에는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를 막론하고 재정지출의 축소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이 강조, 행정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업무처리를 효율화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작은 정부화가 지향됐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체 행정의 특성에 비춰보면 이윤의 극대화를 원리로 하는 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의 증대를 억제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체로서는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시민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분권화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따라서 지방자치체는 주민과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를 확보해 요구를 수렴하는 행동에 나서게 됐다. 예를 들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가가 이뤄지는

16) 이숙중,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일본 시민단체의 대두", 『작은정부와 일본시민사회의 발흥』, pp.36. (한울: 2005).
 17) 입시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이 개성과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문화적·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권형 행정시스템으로 전환, 하는 방향이 제시돼 있다.
 18) 田中直毅, 『日本政治の構想』, (일본경제신문사)1994 pp.373-385.

심의회 방식 - 행정의 각 부문에 심의회, 조사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각종 단체의 리더가 위원으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수렴되고 이견을 조정한다.

단체간담회 방식 - 지방자치체의 수장이나 간부가 단체 리더들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시정간담회 방식 - 정내회, 자치회, 커뮤니티 센터를 단위로 수장이나 간부가 주민과 직접 대화해 요구를 파악한다.

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공공재 공급 기능이 원천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지방자치체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사회통합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사이에 합리적인 역할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양자의 분업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내부의 조직적 합리성과 지역사회의 통합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규정법 등과 맞물려 진행된 분권화 개혁 등의 일련의 노력은 그 결실이 요원해 보인다. 금권선거와 정치부패를 없애자는 개혁과제가 법제화로 인해 어느 정도 제도화됐으나 정치인의 부패스캔들은 더욱 잦아졌고, 외교정책은 보수화돼만 갔다. 위에서 언급한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행정은 더욱 멀어만 보인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정치실정은 유권자들에게 현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토를 증대시키게 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탈정당화 현상은 뚜렷하다. 지난 다섯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율이 30%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특정 정당 후보자 당선율 가운데 장기 집권당인

〈표-9〉 지방선거에서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

정당명	1983	1987	1991	1995	1999
자민당	46.8	44.7	47.0	38.9	37.7
민주당	-	-	-	-	8.0
신진당	-	-	-	6.8	-
자유당	-	-	-	-	0.8
사키가케	-	-	-	0.5	0.1
사민당(구사회당)	14.4	15.9	15.0	11.6	3.4
민사당	4.5	4.3	-	-	-
공산당	9.3	8.9	6.3	6.6	10.5
공명당	6.3	6.7	6.2	6.4	6.7
기타 제파	1.7	1.4	1.2	3.1	2.8
무소속	16.1	18.1	20.8	26.1	30.1

* 출처 : 이숙중(2005) pp.42 .

19) 이숙중, 같은책 pp.41 .



공공재 공급 기능이 원천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지방자치체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사회통합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사이에 합리적인 역할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자민당 후보자의 당선
을 하락은 가장 괄목할
만하다.¹⁹⁾

또한 지방선거에서
제파로 분류되는 당선
자 가운데는 지역정당

후보자가 있다. 지방정당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지방선거에만 후보자를 내는 시민운동의 하나로, 지역정당은 종종 해당 지역의 대리인 운동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시민운동이 일본의 주민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앞서 밝힌 공공성을 담지 하는 참여형의 시민 거버넌스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²⁰⁾ 혁신자치체의 쇠퇴 이후 일상생활권인 지역을 근거로 해서 네트워크형운동으로 성장한 시민운동 그룹들이, 비로소 공공성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찾은 것이다.

시민참여형의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는 지역과 단체의 대표적인 예가 '생활자 네트워크'다. 그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일상의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슬로건을 내세운 단체이다. 따라서 먹거리의 안전, 지역복지, 환경 등 생활 속의 문제 해결을 당면 과제로 하고 있다. 현재 6명의 도의회의원과 57명의 시·구의회의원을 배출해 도쿄도 내에서는 기존의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지역정당으로 등장했다. 특히 1999년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는 도쿄도 구니타치 시에서 3선에 도전하는 지역 토호 출신의 현직 시장을 물리치고 '생활자 네트워크' 출신의 우에하라 히로코를 시장에 당선시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²¹⁾ 도쿄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시민네트워크 홋카이도,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등 목표와 활동방식을 공유하는 전국의 조직들과 연대를 통해 전국적 조직 기반을 형성해 가고 있다.

'생활자 네트워크'는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의 유권자-정치관계의 변호를 통해 지역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생활자 네트워크'에서는 이를 대리인 운동으로 칭하고 있다. 대리인 운동은 시민들의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 쓰레기, 물 문제 등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간접민주제 하에서는 납세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운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생활정치운동이다. 대리인 운동은 생협이 의원을 대표가 아닌 대리인으로 규정한 데서 나온 것으로 이 대리인이라는 개념에는 기존에 대표자와 대표되는 사람들이 단절돼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의원은 철저히 생활자네트워크를 통해 유권자를 대

20) 이종구, "혁신자치체와 주민의 정책참가" 『일본역사연구』(일본사학회: 1996).
21) 우에하라 시장은 2003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리해 활동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즉 대리인 운동은 기존의 화석화된 대의제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생활자 네트워크의 기본이념

-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시민이 결정 하는 시민자치를 권한다
- 지방자치기본법을 제정, 지방분권을 권장하며, 시민에의 분권을 실현한다
- 자치체의 헌법 [자치기본조례]를 개정해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정부를 만든다
- 공공서비스는 시민의 합의와 참여로 개편, 새로운 공공을 만든다.
- 의회를 시민에게 열어 의회개혁을 한다.

최소단위인 지역에서 민주적 시민자치를 실현시키려는 실험이다.²²⁾

그러나 여러 정치실험으로 먼저 지역에 시작 한 정치적 실천은 지역사회 시민생활에 밀접한 이슈들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현안이 해결된 이후 지속적인 정치적 참여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치가 직업화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리인의 활동 제한은 지속적으로 대리인을 배출해야하는 과제와 더불어 2회의 임기 이후에도 의회 및 지방정부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장애로 작용한다. 이들 문제들은 '생활자 네트워크'가 기존의 정치와 다른 정치적 조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자네트워크가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만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맺으며

본문에서는 일본 정당정치의 보수·우경화 현상과는 반대로 일본의 지방정치에서는 혁신과 시민참여형의 진보·개혁적인 정치가 이뤄지는 일본정치의 이질적인 측면을 살펴봤다. 지방의 탈정당화 현상과 자민당의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분권화 개혁, 혁신자치체의 실패와 그 실패의 경험이 만들어낸 시민참여형의 거버넌스는 일본 정치의 특징을 보수·우경화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일본은 거버넌스의 시민참여를 만드는 사회적 분화와 조직화의 정도가 한국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한국의 그것보다 훨씬 더 수동적이고 체

22) 한영혜, "현대일본 시민운동의 흐름",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pp.104 (한울 : 2004)

권력구조지도상의 국가별 형태²³⁾

구분	통치형	합치형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독일, 스위스, 인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일본, 벨기에
구분	프랑스, 한국, 영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제 순응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수동성과 순응성은 일본의 정치체제를 표면적으로 다원주의로 보고자 하는 시도를 백빠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다원주의의 사회적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세력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체제, 혹은 국가의 주도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정치체 한국이나 서구의 정치와 구분 짓는 특수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문화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도 역시 역사적으로 형성돼 온 양국의 정치적 환경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외침과 반란이 잦았던 한국의 현실이 국민 대중의 정치적 활성을 낳았고, 외부로부터 고립된 통일천하에서 수동적인 생활에 젖었던 일본인들의 전통이 현대의 정치적 수동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²⁴⁾

그러나 그 내부의 특질은 또한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 시민운동, 혁신계 그룹에서조차 통치형의 중앙 집중적인 운동을 지향한다면, 일본의 경우 주민운동이 분권화 되어 지역의 공공성의 담당자로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아렌트 레이파트라의 『세계권력구조지도』에서 한국을 「통치·단방형」 일본을 「합치·연방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결국 일본의 경우 시민참여형의 거버넌스가 “생활정치”로부터 국가 권력이나 대기업을 비판, 견제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지방수준의 정치와 행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중앙의 정치와 행정에 시민참여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현재 일본정치의 어두운 측면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일본 주민운동의 현주소는 국가 시스템 개혁에는 부진해 정치 시스템을 다원주의로 평가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아렌트 레이파트라의 분석을 빌리자면 지역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에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공공성의 담당자로서 지역 결사체들의 자조정신과 개혁정신에 힘입은 것으로 주민들의 참여의 장이 확보된 일본 지방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23) LIJPHART, 1984, 1999 Patterns of Democracy - 84년의 경우 일본을 레이파트라는 정치과정에서의 중간차원 그리고 구조차원에서는 연방주의적 협의민주주의가 나온다고 했으나 99년에는 과정과 구조에서 모두 연방형의 협의민주주의 체제라고 분석한다.

24) 김영명, “한일정치체제 비교”,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pp.153~155 (경인문화사: 2005).

〈참고문헌〉

- 권혁태, “일본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아시아의 시민사회』(아르케:2003)
김영명, “한일정치체제 비교”,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경인문화사:2005)
김장권, “한국과 일본의 분권화 개혁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거버넌스』(아연출판부:2005)
——, “일본 중앙-지방 관계의 변용 1990년대의 분권화 개혁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일본은 희생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2003)
사토 유시유키, 송석원 옮김, “결사와 시민사회”, 『NPO와 시민사회』, (아르케:2004)
송정기, “공공성의 구조 전환과 주민자치”, 『삶과정치』, (대화출판:1995)
안성호, 『스위스 연방 민주주의 연구』(대영문화사:2001)
이숙중,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일본 시민단체의 대두”, 『작은정부와 일본시민사회의 발흥』, (한울:2005)
이종구, “혁신자치체와 주민의 정책참가” 『일본역사연구』(일본사학회:1996)
최종만, “정계개편과 지방정치의 약동”, 『일본의 자치체 개혁』, (나남:1998)
최태욱, 『세계화 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 “세계화 시대의 공공정책 변화와 정치기업가의 역할 : 일본 대점법의 개정사례”
한영혜, “새로운 사회관계의 모색”, 『일본사회개설』, (한울:2001)
——, “현대일본 시민운동의 흐름”,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한울:2004)
Jun, Jong S. and Deil S. Wright. “Glob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eorgetown Univ Press:1996)
Yamamoto Tadashi. “Deciding the Pulic Good”,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1999)
國民生活審議會 調査部會 『コミュニティ : 生活の場における人間性の回復』(大藏省:1969)
田中直毅, 『日本政治の構想』, (일본경제신문사)1994pp373~385



친미와 경제 내셔널리즘의 이중성

-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일본의 인식

이상혁 (고려대학 대학원)



들어가면서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담론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¹⁾ 한상일에 의하면 냉전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 유교적 문명을 바탕으로 한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수용과 발전, 90년대에 나타난 아시아 국가의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 유럽의 EU와 북미의 NAFTA의 성과와 같은 지역주의(regionalism)의 강화 등이 그 배

1) 한국의 경우 최근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제로 한 국내의 학술회의가 빈번히 개최되었다. 또한 한중일 3국 지식인의 연대를 모색하는 <한국 동북아시아학인연대>, <한일 연대21>, <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 등등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한상일(2004), ‘동아시아 공동체론: 실체인가, 환상인가?’ 『동양정치사상사』 (제4권 1호), p.7. 한편 일본에서는 갑작스럽게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모든 신문의 기사 색인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련된 것을 검색했을 때, 1995~2000년까지는 총 18개의 기사밖에 검출되지 않았는데 비해, 2001년에는 29개, 2002년에는 38개, 2003년에는 133개, 2004년에는 386개, 2005년 5월 11일 현재 222개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3년 이후의 증가가 눈에 띈다. 미야지마 히로시(2005), ‘일본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현주소’, 『역사비평』 (2005 가을호), p.223.

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념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서양에 의한 지배의 기초가 된 근대성과 발전, 과학과 이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대두했다. 그리고 동양적 사유와 논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적'인 것에 관심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담론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차대전 패배 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던 일본에게 있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초 162 통상국회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선언한 일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논의와는 달리, 현실은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 한중일의 갈등양상이 고조되고 있고 북일관계 역시 남북문제로 인해 교착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게 있어 동아시아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동아시아에게 있어 일본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근대국가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세계질서 속에서 자국을 어떻게 위치지우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근대화를 통해 단순히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아시아를 보는 시각까지 받아들였다. 즉 아시아를 하나로 보는 시각은 아시아의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일찍 일본에서 확립된 것이며, 아시아주의에 대한 한국과 중국에서의 논의는 대부분이 일본의 그것에 대한 대응 혹은 비판으로 생겨났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론 또는 아시아주의는 근대 일본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론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존재하게 됐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역사의 진행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질됐고,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나타난 것의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이 앞으로 아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자 한다.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론²⁾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에서 시작하여 우리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아공동체론'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19세기 후반부에 태동하여 1900년대와 1930년대 동아시아의 질서를 확정지어준 중요한 이념적 바탕으로 기능했던 특수한 종류의 '역사적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특수한 '역사적 조형물'이 19세

기말에는 아시아연대, 30년대에는 동아협동체, 40년대에는 대동아공영권으로 나타났
다.³⁾

아시아 연대

19세기 중엽 이후 급격하게 변동하는 세계질서와 아시아의 변화 속에서 태동한 아
시아연대론(또는 대아시아주의)은 그 후 일본의 위상과 지위확립을 위한 하나의 이념
적 틀로 작용했다. 아시아연대론의 시작은 19세기 중엽이후 나타난 '서세동점'이라는
국제정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연대론은 서구 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의 독립을 보전하고 나아가서 동양의 평화와 질서를 아시아인 스스로가 확립하
며, 동아시아 민족들이 누릴 수 있는 공영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의 이웃국가들, 즉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긴밀한 연
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양세력의 동아시아 진출로 인한 민족적 위기의식은 근대 일본의 민족주의를 생
성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의 하나인 동시에, 근대 일본의 정치사로부터 정책수
립의 각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의식
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강화되었다. 첫단계는 200년 가까이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
던 일본 근해에 서양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1790년대의 상황이었다. 19세기에 들어
서면서부터 서양의 출현은 더욱 잦아졌고 그 규모도 커졌다. 위기의식을 강화시킨 두
번째 단계는 중국에서 벌어진 아편전쟁과 그 결과였다. 세계질서의 중심국가로 인식
되고 있던 중국이 아편전쟁(1840-1842)에서 '오랑캐'인 영국의 소규모 군대에게 패
배한 것은 일본 지배계층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었다. 셋째 단계는 '흑선(黑船)의 충격
이었다. 서양선박의 일본근해 출현과 아편전쟁의 충격이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것이었
다면 '흑선'의 출현은 전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었다. 일본을 개국시키기로 한 결정
에 따라 미국의 페리 제독은 1853년 도쿄만에 나타나 일본의 개국을 강요했다.

위기의식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처 방안에 모색케 했다. '쇄국'과 '개국'이 소용돌
이치는 막부 말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일본은 '개국'을 택하고 이를 위해 메이지 유신
이라는 체제변혁을 단행했다. 이후 일본은 서양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동시에 일

2)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정리함에 있어 다음의 세 논문을 참조하였음. 한상일(2005), '동아시아 공동체론: 실제인가, 환상인
가?' 『동양정치사상사』 제4권 1호, pp.9~15, 김경일, 강장일(2000),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
로', 『역사연구』 제8호, pp.280~324. 박한규(2004), '아시아주의를 통해 본 전전 일본의 동아시아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제
20호, pp.204~223.

3) 한상일(2004), p.8.

본의 지배계층은 공통의 위기상황에 있는 중국, 한국과의 연대, 즉 아시아연대를 통한 위기극복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이러



공영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의 이웃국가들, 즉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긴밀한 연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연대의 이념은 막말이래 순치보거(脣齒輔車)라는 비유로써 설명되어왔다. 즉 한국이나 중국이 서양의 세력권 안에 놓이게 되면 일본의 존립 역시 위태롭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동생공사(同生共死)의 운명공동체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양에 대항하기 위한 순치보거의 연대라는 대의명분 뒤에는 일본의 독립보존과 번영을 위하여 아시아를 지배해야 한다는 맹주의식이 함께 하고 있었다. 동양의 선각자인 일본은 시대에 뒤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지도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는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이웃인 한국과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연대'의 대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배'의 대상이었다.

동일한 문명과 운명공동체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연대론은 당시 주변 아시아 여러 나라의 혁명가와 개혁가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아시아연대를 통한 '안으로의 개혁과 밖으로 독립'이라는 이상은 '환상'에 불과했다. 일본은 연대를 내세우고 강조하면서 연대의 상대인 이웃 국가들을 침략과 식민지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뿌리가 같은 문화와 인종, 같이 살고 죽는 운명공동체, 아시아 공동의 번영을 지향한다는 동아연대론은 실제로는 동아시아 민족의 단결을 방파제로 하여 일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후 전개된 동아시아의 역사는 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웃국가에게 일본은 희생을 강요한 것이었다. 그럼으로 선린과 협력을 표방한 아시아연대라는 이념이 행동에 있어서는 결국 일본이 직면한 위기극복과 동아시아에로의 세력을 확장하는 수단이었고, 대륙진출의 이데올로기적 위장으로 활동되었음을 볼 수 있다.

동아협동체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또 다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이 맞은 위기가 서양체제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였다면, 30년대 후반부의 위기는 서양화의 모순과 서양으로부터 고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였다.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일본은 연대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한국과 중국을 지배의 대상으로 치환하고 이 지역을 식민화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점으로 하여 일본은 그 세력을 대륙으로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삼국간섭(1905)을 통해서 서양 열강의 지원없이 대륙으로의 팽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한 일본은 영국과의 동맹(1902)과 미국의 협조(태프트-가쓰라 비밀협약, 1905)를 확보함으로써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대륙진출을 사실상 인정받았다.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아시아의 패자로 등장했다. 메이지시대가 막을 내리는 1912년 일본은 대만, 사할린반도의 절반, 팽호열도, 한반도, 중국의 일부인 관동주를 식민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였다.

다이쇼(大正)기를 맞은 일본은 한편으로는 정당을 근거로 한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일본은 다이쇼기에 이르러 정치적으로 의회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산업사회를 실현함으로써 메이지 이후 국가목표로 설정했던 '서양'을 따라잡는 듯 했다. 그러나 정치는 부패로, 경제는 불황으로, 그리고 사회는 방향을 잃은 혼돈의 상태로 변하고 있었다. 일본을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서양체제에 연착륙함으로써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전후 일본은 점차 서양체제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보였고 서양과 대결구도를 만들어나갔다.

안과 밖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내우외환은 일본에 커다란 위기감을 주었다. 다시 일본은 탈출을 위한 탈출구를 아시아의 연대에서 찾았다. 동아협동체가 바로 그것이었다. 1938년 중국과의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일본이 택해야 할 국가진로로 제기하고 나섰다. 교토학파가 제기한 '근대의 초극' 과도 맞물려 있는 동아협동체론은 그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유럽중심의 세계사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독자적 질서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동아협동체론은 먼저 중일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중일전쟁이라는 것은 그동안 흔히 역사에 나타난 국제전쟁에서 볼 수 있는 영토나 자원이나 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성전' 이고, '동양의 항구적 평화의 틀' 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일본과 중국의 '근원적 제휴' 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역설했다.

파국을 보이고 있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양중심의 세계사를 극복하고 동양중심의 세계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국, 만주, 일본을 하나의 정치, 경제 공동체로 통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양의 통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셔널리즘', 특히 일본을 향해서 불태우고 있는 중국의 민족

주의로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협동체론은 결국 일본의 중국침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1938년 11월 일본군이 광둥과 무한 점령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일중전쟁을 '성전' 이라고 선언하고, 이는 동아시아의 영원한 안정을 확보하고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질서 건설' 이라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일만지(日滿支) 삼국은 동아신질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고, 상호의 선린우호, 공동방위, 경제제휴를 실시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동아협동체라는 이름아래 중국침략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대동아경영권의 논리로 발전했다.

대동아공영권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이 내건 슬로건은 '동아신질서' 로 일본, 만주, 중국 3국의 '공존공영' 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럽에서 히틀러 등이 내놓은 신질서 지향의 대외정책에 대응하여 일본을 동아시아 세계의 맹주로 위치지으려 한 것이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에 침입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군부는 국면타개를 위해 남진정책을 추진했다. 1940년 7월 발족한 내각도 종래의 '동아신질서' 에 '남방' 을 추가하여 '대동아 신질서' 를 내세웠다.⁴⁾ 1938년의 동아신질서 구상은 일본, 만주, 중국만을 지역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었으나, 대동아공영권의 지리적 개념은 이제 동남아시아와 인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동아공영권의 핵심적 내용은 서양의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등장한 강권지배적 패도적 문화를 대체하는 아시아 전체 민족의 협동과 화해에 바탕한 새로운 동양문화를 재건하고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오랫동안 동서문명의 대립이라는 이원적 이미지에 시달리고 외국의 자원과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일본국민들에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요컨대 그것은 유럽에서 독일 진격작전의 성공과 동남아시아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식민지배의 공백을 배경으로 일본에서의 '남진'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면서, 서구 열강의 블록경제 건설에 대항하여 경제적 필요물자를 입수할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 고려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⁵⁾ 그러나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의 독선적 주장에 불과하였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식민지주의와 침략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시아인들에게는 결국 서양의 제국주의를 대신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의 지

4) 윤건차(2000),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대동아공영권론에서 이시하라 발언까지', p.42.

5) 김경일, 강창일(2000), pp.318-319.

배하에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⁶⁾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평가

- 이노구치 다카시⁷⁾와 윤건차⁸⁾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서양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협력적인 연대 추구라는 이상과 달리 아시아의 아시아 지배라는 파국적인 결과로 귀결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절에서는 일본학자 이노구치 다카시와 재일한국인 학자 윤건차의 논의의 비교를 통해 답해보고자 한다.

서구와 아시아 사이에서의 일본

이노구치는 일본에게 동아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50년간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의식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위치짓는지 검토하고 있다. 즉 일본인들의 생각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이 일본의 근대 역사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중간지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2차대전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은 근대역사의 연속성, 민족적 일체감의 완고성, 전쟁의 기억에 대한 기반을 두고 있고,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일본인들은 2차대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일본인들에게서 2차대전은 여러 차원의 의미를 지닌 복합적인 전쟁이었다. 일본이 근대 들어와서 처음 서양을 만났던 때부터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서양의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문명적 공세에 포위되었다고 느꼈다. 일본이 서양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군대와 산업, 그리고 정부-를 근면과 끈기와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근대화하였다. 일본은 열강들의 제국주의 게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결국은 1895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1905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두 번 모두 승리하였다. 일본은 또 산업화라는 게임에서도 두드러져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동양의 국가로서는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또 일본은 19세기 말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함으로써

6) 박한규(2004), p.220-221.

7) 다카시(1995), '2차대전 이후 일본과 아시아', 『계간 사상』, p.219-233.

8) 윤건차(2000) p.42.

비서양 국가로서 최초의 근대적인 정부를 가지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세가지 게임, 즉 제국주의 게임, 산업화라는 경제게임,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문명의 게임에서의 일본의 성공은 1930년대 말 일본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하였다. 무역과 투자, 그리고 여타의 식민주의적 활동에서 서양의 국가들이 일본 앞에 설치한 장벽 때문에 일본은 어쩔수 없이 군사적인 행동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서양의 강대국들과 장래 대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주변지역을 점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시아인들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만이 아니고 동시에 서양의 국가들에 의해서도 희생당했다. 아시아는 두 제국주의 세력의 경쟁의 장이 되었던 것이고, 일본이 수행한 전쟁의 명백한 변론이 어려워지는 것이다.⁹⁾ 그래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아시아국가들의 견해, 즉 2차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측의 시각에 바탕을 둔 아시아국가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기 힘든 것이다. 이는 아시아와의 심리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일본인들에게 일본을 아시아의 일부로, 일본을 아시아 속에서 위치시키는 것보다 일본과 아시아를 따로 분리시켜 일본을 아시아의 옆에 나란히 병렬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더 편안한 것이다.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

이노구치가 서구와 아시아 사이에서의 일본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음을 강조하는 반면, 윤건차는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해서 논하려면 일본 근대의 국가형성, 민족형성 문제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근대사는 대만, 조선 등 식민지 지배 등의 아시아 침략의 역사였으며, 일본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민족문제, 즉 이민족 지배문제였다. 근대 일본을 규정한 국체 개념인 ‘황국’ 이념도 이민족 지배와 관련시켜 고려해야 하는데 그 도달점이 소위 ‘대동아공영권론’ 이었다.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막말 유신기의 일본은 복고적 색채를 지닌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서구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침략

9) 일본의 근세사에는 전쟁시기에 관해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좌파의 해석은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는 한편, 마찬가지로 서양국가들의 잘못된 점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은 전쟁기간 공산주의자들이 투옥되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자신들을 저항세력, 희생자로 묘사하는 것이다. 결국 좌파의 해석은 평화주의의 교훈을 제시한다. 둘째, 중도 우파의 견해는 일본의 덜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키고 서양세력의 사악한 측면에 대한 지적도 완화된 정도로 그친다. 이러한 입장은 역사에 대한 패권주의적(이는 안보리의 5대 상임이사국과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을 받아들인다. 일본인 대다수는 일본의 근대역사에 대한 연합국측의 해석, 즉 일부 군부도당이 일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으며, 일본인들 역시 대다수가 피해자였다는 해석을 받아들였다. 셋째, 근대 일본역사에 대한 우파적 해석은 일본의 태평양전쟁이 서양세력의 급수조치에 대한 자기방어였으며 서양의 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는 전쟁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합리화한다. 이노구치 다카시(1995), p.230.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타개해나가려 했던 것이다. '통합의식' 을 만들어내는 국가이데올로기 장치인 국민교육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서구숭배사상, 천황제이데올로기, 아시아 멸시관이라는 3개의 구성요소로 '일본인' 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만들어냈다. 근대 일본에서 '민족' 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880년대 후반이고 그것이 확립· 정착된 것은 1900년대 전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였다. 근대 일본에서의 '민족' 의 관념(의식)이 성립되고 또 전전(戰前)의 일본인을 속박한 '일본민족' 이라는 범주가 형성된 것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 심화되던 시기, 특히 대규모 대외 침략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였다는 의미이다.

근대 일본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유럽과 아시아' 라는 이분법에 따라 소위 '앞선' 유럽과 '뒤떨어진' 아시아로 이념화된 가치개념이 포함되었다. 원래 '아시아' 라는 개념은 소위 '오리엔탈리즘' 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근대 유럽이 자신의 사회와 문화를 인식할 때 비유럽적인 것 모두를 아시아로서 통괄하여 인식하려 했던 것으로서, 하나의 실체· 실재라기보다는 자기인식의 반사경으로서 시대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역사적 관념이다. 말하자면 서구적 개념에서 세계란 근대 유럽이고, 거기서 배제되거나 혹은 그것에 대립된 것이 아시아이다. 따라서 그러한 유럽적인 자기인식방법론을 받아들이는 한 근대 일본인의 사고· 행동· 정서, 기타 생존양식 거의 모두는 직접· 간접으로 아시아를 보는 관점의 동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일본민족 아이덴티티의 근저에는 유럽 자본주의 문명을 정점으로 하고 아시아 후진제국을 밑에 두는 국제적 계층질서관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념은 약육강식의 국제상황에서 세계를 문명과 야만의 대립으로 보고 서구숭배의 충동을 고조시키면서 동시에 아시아 멸시관을 강화하여 아시아 여러민족에 대한 일본의 사명감을 강조하고 일본민중을 분발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시아 멸시관 중 가장 첨예한 것이 조선 멸시관이었는데, 그것이 아시아 침략의 중추였던 조선에 대한 수탈, 침략, 식민지 지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근대 일본사에서 아시아는 늘 골치아픈 대상이었다. 아니 근대 일본역사 속에서 아시아는 늘 최대 문제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근대 일본의 많은 지식인· 사상가, 더욱이 일반민중이 지녔거나 강요받은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아시아의 일원이어야 할 일본이 구미 열강에 대항하여 아시아를 침략한다는 '이중성' 이 내포되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쌍방으로부터 내몰리는 역사에서 언제나 '피해자' 의식을 지녀왔다. 이를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후진제국주의 국가' 일본은 '천황' 과 '일본민족' 이데올로기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서구지배에 대항하는 동양의 '연대', 동양의 '원리' 를 주창하여 신화적으로 동양이라는 집단 아이덴티

티를 창조하여 서구 대 동양이란 축의 가치를 역전시키고 그것을 아시아 침략의 '대의'로 삼았다고 총괄할 수 있다.



일본을 아시아 속에서 위치시키는 것보다 일본과 아시아를 따로 분리시켜 일본을 아시아의 옆에 나란히 병렬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더 편안한 것이다.

전후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과 정책

- 탈냉전기 보통국가화와 안보·경제내셔널리즘의 등장¹⁰⁾

그렇다면 전후의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과 정책은 어떠한가?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은 근대 행보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후 일본은 일본 근대사의 세가지 특징-구미 열강의 침략, 천황제 국가의 창출, 아시아 침략-을 형태는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일본 전후사를 정리한다면 그 특징은 미일안보체제, 천황제 민주주의, 과거의 은폐·망각·미화라는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후 일본에서 특징적인 것은 굴절된 아시아 인식이다. 전전에는 그렇게도 높았던 '동양'과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패전 후 곧바로 사라지고 아시아와의 단절, 아시아 망각이 시대의 주류가 되었다.¹¹⁾

전후 일본은 자국이 저지른 침략전쟁에 대한 가해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보상을 철저히 함으로써 아시아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일본이 택한 길은 평화헌법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여 스스로의 군비부담을 줄이고 경제지상주의를 목표로 하는 요시다 노선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의 경제가 회복, 발전되면서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도 발전하게 되었다.¹²⁾ 아이러니컬하게도 최초의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는 일본이 일부 아시아국가들에게 전쟁배상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러한 전쟁배상금은 일본이 2차대전 기간중에 아시아국가들에게 끼쳤던 고통과 만행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분노를 달랠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일본은 당시 일본의 보잘것없는 산업능력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개척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전쟁배상금으로 일본은 아시아국가들과 관계

10) 송주명(2001), '탈냉전기 일본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정책: '아시아주의'와 '친미 내셔널리즘'의 동요', 『일본연구논총』, 제14호, pp.1~31의 논리구조를 따라 진행하였음.

11) 윤진차(2000), p.43.

12) 김준섭(2000), '새로운 전후'와 '보통국가' 노선, 『일본연구논총』 제13호, p.49.

를 정상화할 수 있었고, 그러한 관계정상화는 또 일본과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제관계의 확대를 가져왔다.¹³⁾ 그러나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였다. 즉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일본은 언제까지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탈냉전기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친미 내셔널리즘

1989년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을 기반으로 성립·유지되어 왔었던 요시다 노선은 더 이상 일본의 국가진로로서 기능하기 힘들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이 요시다 노선의 성립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1991년에 발발한 걸프전은 탈냉전의 일본의 국가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걸프전에서 미국은 일본이 더 이상 요시다 노선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만일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여 종래의 노선을 견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했다. 즉 요시다 노선의 견지가 요시다 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을 초래한다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국제무대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한다면 그것 역시 통상국가를 내걸고 있던 요시다 노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어떠한 형태로 미국의 요구에 답하더라도 요시다 노선으로의 회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본은 걸프전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다.

결국 탈냉전에 있어서의 일본의 국가진로에 관한 논의는 미국과의 관계를 상수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미국에 협력하여 국제질서의 형성에 참여하되 군사적인 면에서의 협력에는 최대한도로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보수분류의 정책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타난 것이 오자와 이치로였으며, 그가 새로운 일본의 국가진로로서 제시한 것이 '보통국가' 노선이었다. 오자와의 '보통국가' 노선의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를 일본에 있어서 사활적인 국가이익으로 보고 일본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서 세계질서의 유지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 질서유지에 필요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적 요인: 미국의 '친일' 보수정권

2000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 보수적인 부시 공화당 정권이 성

13) 이노구치 다카시(1995), p.222.

립되면서 클린턴 민주당 정권의 자유주의적 동아시아 정책들은 수정되기 시작했다. 미국 행정권의 동아시아 정책 수정은 크게 보아 다음의 네가지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은 일본의 보수우파들이 안보 내셔널리즘 프로젝트를 추구하는데 '최적'의 국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정책수행의 방법에 있어 부시 행정부의 외교팀의 기본사고는 현실주의, 일방주의, 냉전적 사고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대중국정책의 변화로서 클린턴 행정부가 관여정책 틀 하에서 중국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던 데 반해, 부시 행정부는 보다 복합적인 현실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북한 정책의 수정으로서 미국 부시정권은 집권 이래 한국의 대북햇볕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표명해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보수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부시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수정으로 중국의 전략적 위치는 견제대상으로 폄하되었고, '친중인맥'도 청산되었다. 대신 일본의 전략적 위치는 대폭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다. 가령 리스 안보 보좌관은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위해 군사적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보수적 리더십과 보수우파의 '친미' 내셔널리즘 전략

안보 내셔널리즘 프로젝트가 전면화될 수 있는 국내적 조건은 보수우파적 지향이 강한 고이즈미 리더십이 강력한 대중적 지지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고이즈미 자신은 전전 국가주의에 일정한 공감을 갖고 있는 보수적 안보 내셔널리스트인데, 그는 수상 선출 후에 헌법 9조의 개정 및 집단 자위권 용인, 나아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결행, 이등회 전 대만총통의 방일허가 검토, 역사교과서문제 대한 '불개입' 등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편 보수우파들은 고이즈미 내각과 미국 '친일' 보수정권의 수립을 자신들의 안보 내셔널리즘 프로젝트를 급진전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보수파들은 '약한 일본'론과 '병마개론'의 특질을 가진 클린턴 행정부보다는 '강한 일본'을 조장하는 부시정권이 자주적 군사화를 추진함에 있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본다. 결국 미일동맹은 '일본통제의 틀' (이른바 '병마개론')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보수적 세력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동맹하는 틀로 그 성격이 '재정의' 되는 것이다. 이 미일동맹의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헌법개정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일본에 대해 집단 자위권을 용인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 보수우파 세력들은 미국의 요구(외압)를 활용해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고

‘미영동맹’의 형태로 평등하고 자립적인 미일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을 첫 전략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보수우파들의 새로운 전략과 관련하여, 2001년 10월 말 성립된 「반테러 조치법」의 경우 집단자위권의 용인으로 전진하는 획기적 내용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의 성립으로 자위대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 지역이나 미일안보조약 및 미일방위협력지침상의 ‘주변지역’이 아닌 제3국의 타국영토에서 ‘준(準)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문제와 ‘친미’ 내셔널리즘의 ‘탈아적’ 경향

고이즈미 정권 하의 안보 내셔널리즘은 ‘미일동맹의 보수적 재정의’와 ‘국민적 정체성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노력을 불가분하게 결합시키고 있다. 역사인식의 국가주의적 재해석문제는 안보 내셔널리즘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대두한 것이었다. 따라서 역사 ‘재해석’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반감을 정면 돌파하려는 ‘아시아 무시’의 태도 또한 그 만큼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보수적 안보 내셔널리즘의 이념을 강화하고자 하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일본은 단지 ‘검정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과 중국이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도 고이즈미 자신의 참배 결행을 아시아가 일방적으로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고이즈미 정권의 태도는 ‘재발’한 ‘역사인식’의 문제가 안보 내셔널리즘 프로젝트의 핵심고리이며 포기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는 아시아전략을 결여한 고이즈미 수상의 일방적 친미주의, 즉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만, 결과적으로 아시아와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사고방식이 ‘탈아적’ 요소를 갖도록 하였다.

세계화 시대... 경제 내셔널리즘으로서 ‘새로운 아시아주의’¹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지역통합이나 지역 구상 등의 동아시아론이 거의 금기시되어왔다. 그것은 전전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악몽같은 기억이 강하게 의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미국의 우산 아래 특별한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GATT와 그 후신인 WTO가 주도하는 포괄적, 다각적인 자유무역 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일본으로서는 지역적인 경제통합에 대해 반

14) 송주명(2002), ‘일본, 새로운 아시아주의’, 국제지역연구 11권, 1호의 논리구조를 따라 진행하였음.

대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이 당연했다. 그런 일본에서 최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무엇보다 EU와 NAFTA같은 경제 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1997년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 통합뿐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ASEAN의 주도하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시종일관 반대입장에서 있었는데, 일본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해온 것이 사실이다.¹⁵⁾

그러면 왜 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대두했는가? 사실 1980년대부터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일본외교사, 특히 경제 외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아시아의 부활'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미 전략적 관계의 상대화를 포함하는 아시아 중시, 혹은 아시아 통합의 경향이 하나의 선명한 외교노선으로 대두했다. 이 새로운 경제외교노선은 '자유무역협정' 정책이나 '엔의 국제화' 정책 등을 통해 현실화 되었으나, 분명한 것은 이 노선이 현재 세계경제질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근본적 문제를 인식한 위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패권질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때 일본이 추구하던 아시아 외교와는 달리, 미국패권질서의 장기적 해체과정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하나로서 새로운 아시아 중시노선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¹⁶⁾ 이 글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상대화시키면서, 중기적으로 일본과 아시아국가들의 결합(경제적 통합)을 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에 예비코자 하는 최근 일본의 경제외교사조를 '새로운 아시아주의'라 칭한다. 먼저 우선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대두하게 된 국제적인 맥락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일본의 경제대국 위상

먼저 한가지 점검해 두어야 할 점은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세계경제체제에서 일본의 경제대국으로의 지위상승을 거시적인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1980년대에 세계 GDP의 10%를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가령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경제의 비중이 31.7%였던 데 비해, 일본은 6.4% 정도만을 차지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까지 미국비중의 지속적인 감퇴에도 불구하고, 일본비중은 약 15%대까지 상승하게 된다.

15) 미야자마 히로시(2005), p.228.

16) 이원덕(2005),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연구논총, 제22호, pp.73-75.

〈표-1〉 세계 GDP에서 주요3국의 비중 변화(단위: 100만 \$)

	1970	1980	1985	1987	1988	1989
세계	3,180,900	11,622,400	12,661,300	17,292,220	17,292,220	20,204,000
일본	230,736(6.4)	1,059,282(9.1)	1,325,996(10.5)	2,374,979(13.7)	2,374,979(14.8)	2,834,232(14.0)
서독	184,508(5.8)	813,498(7.0)	621,770(4.9)	1,114,639(6.4)	1,172,533(6.1)	1,176,632(5.8)
미국	1,009,220(31.7)	2,688,470(23.1)	3,976,470(31.3)	4,452,878(25.7)	4,809,081(25.0)	5,132,001(25.4)

* 주 : ()는 비중.

〈자료〉: 송주명(2002)에서 재인용

한편 이러한 지위변화는 일본 경제활동의 국제체제에 대한 영향력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며, 그에 따르는 국제적 행동패턴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다. 가령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태도와 역할 면에서 경제적 소국은 수동적(reactive)이며 질서의 일반적 수혜자(takers)인 반면, 경제대국의 단계에 접어들면 태도면에서 적극성(proactivity)을 담보하게 되고 역할면에서는 질서의 '창조자/제공자' (makers)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전 '아시아주의'가 제국주의 일본과 타 제국주의체제 간의 식민지 분할경쟁의 산물이었다면, 전후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세계적으로 격화된 경쟁에 처한 경제대국 일본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역 신질서 형성의 의사표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¹⁷⁾ 그러나 일본은 왜 80년대 경제대국화와 더불어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모색을 할 수 없었을까? 경제대국의 반열에 접어든 후 왜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정책환경의 관성(내향적 산업정책의 관성, 아시아 지역주도에 대한 내외의 반발 등)과 관련된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패권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국가 간 마찰과 이것이 야기하는 사회심리적 대항의식, 나아가서는 경기침체와 종래 체제유지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 등 순차적 사건전개의 시간소요를 들 수 있다. 가령 80년대의 경우, 패권구조의 변동에 따르는 심각한 경제적 마찰은 존재하였으나 성장지속으로 인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 이것이 미국에 대한 사회심리적 대항의식을 이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격적인 대미대항의식은 90년대 들어 두 번의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발현되게 된다. 첫째, 90년대 초반의 초엔고 불황 속에서 전개된 미·일 마찰이다. 둘째 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경제위기와 그 효과의 일본역류를 들 수 있다.

외압의 구조: 패권의 성격

한편 80년대와 90년대 미·일 관계를 연계하는 정치세력간 네트워크의 차이와 그

17) 김기석(2005), '반응국가 가설과 일본 대외경제정책 연구 - 가설의 유용성 검토', 『국제정치논총』 제45권 3호, pp.241-244.

로 인한 외압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점 또한 1990년대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발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령 1980년대의 경우, 경제마찰의 격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레이건과 나카소네 간의 반공 신보수주의 동맹이 강고하게 존재했다. 이러한 동맹구조는 경제관계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다소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비해 1990년대의 시기는 양국 모두에 '오접(誤接: mismatch)' 요인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93년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등장했고, 일본은 90년대 전반에 걸치는 자민당의 복조(復調)에도 불구하고 연립정권의 시기가 지속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안보문제에서 합리적인 동아시아정책을 취하게 되었지만, 이 문제를 양국간에 조정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비용이 지불되었으며, 클린턴정권 초기 일본시장 개방정책(수치목표설정 등)이 일본 정책당국 및 여론그룹의 예상외의 반발을 야기했다. 나아가 아시아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본의 적극적 대응부족이 미·일 간 불신과 대립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비판은 일본국내의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중시정책, 즉 '일본우회(Japan Passing)' 론, 미·일간 네트워크의 결여 등의 문제가 일본 국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일본은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새로운 생존방식으로서 지역주의적 접근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좌절의 아시아: '따라잡기(Catch-Up)위기의 초극' 서 '새로운 아시아주의'

한편 미국에 대한 일본측의 '대항의식'이 강화되더라도, 아시아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본경제의 태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엔의 국제화나 자유무역협정 정책과 같은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일본의 신중상주의적 대외경제관행 등으로 발생했던 대일불신감은 아시아 경제 위기로 파생된 각국의 통화부족, 수출부진, 경기침체, 금융체계의 혼란 등 난관 속에서 일거에 약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시아 위기의 심화 속에서 이 위기에 대해 기동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책을 제시해 줄만한 국가는 역시 경제대국인 일본뿐이었다. 일부 국가들의 잠재적 대미대결자세, 아시아국가간의 연대의식이 '성장과 번영의 아시아'가 '좌절의 아시아'로 일시적으로 퇴보함으로써 발생했듯이, 아시아로부터 제기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근대의 초극'이 아닌 '캐치업 위기의 초극'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민족주의자들은 일본과 아시아의 친근성 혹은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적 결합의 필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쨌든 일본의 '새

로운 아시아주의자' 들은 아시아와 일본의 공감 위에서 '동아시아 모델' 즉 '캐취업 체제'의 위기를 낳은 국제금융·통화질서와 미국주도의 무역자유화체제를 비판하면서, 아시아지역의 통합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왔던 것이다.¹⁸⁾

‘신 아시아주의’의 사회경제적 조건

-일본기업의 국제네트워크와 아시아위기¹⁹⁾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외교노선은 1990년대 초반 혐미적(嫌米的) '아시아주의' 정치카드와 달리, 일정한 국제적 전제와 경제적 기초를 갖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지역주의적 본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혜성 여부 등 그 결과적 특질과 무관하게, 이 노선 나름의 논리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단히 재생될 수 있는 일종의 물질적 기초(사회경제적 기초)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최근 고이즈미 정권의 '친미 내셔널리즘' 혹은 '신타아론' 적 대외정책경향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외교사조의 하나로서 '새로운 아시아주의'에 대한 현재적 검토가치는 충분하다. 이 절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해 간략히 분석할 것이다.

이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한 분석은 1980년대 말 이후 1990년대까지 일본기업들의 아시아 국제분업양상의 특징을 통해 일본기업의 아시아중시경향의 양적 조건을 확인하고, 아시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어떠한 요구들이 어떠한 산업을 중심으로 본격화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아시아주의' 등장의 물질적 조건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최근에 나타나는 일본기업의 새로운 분업경향이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구체적 정책사례인 '엔의 국제화' 정책과 '자유무역협정' 정책에 대해 주는 정책적 함의를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80년대 이후 아시아 국제분업-양적 측면

우선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제조업 대아시아 해외투자 상황을 통해 일본의 국제분업 속에서 아시아가 점하는 비중을 보도록 하자. 우선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전세계 누적투자액이 572억 달러였는데 112억 달러가 아시아로 유입되었고, 이중 73억 달러가 ASEAN 국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중은 아시아 전체로는 약 20%, 그리고 ASEAN의 경우 총투자액의 13%를 차지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큰 비중이

18) 김용복(2003), '일본의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엔의 국제화' 『일본연구논총』, 제18호, pp.16-20.

19) 송주명(2002)을 인용함.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대다수의 투자가 선진국을 향하고 있고 발전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 모든 나라



전후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세계적으로 격화된 경쟁에 처한 경제대국 일본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역 신질서 형성의 의사표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에서 거의 없었음을 상기할 때,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 경제위기가 일어난 1997년까지 확대되어 나타났다. <표-2>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일본기업 해외투자 상황을 누적액면에서 보면, 아시아지역은 전세계 해외투자에서 19%를 점하며, 제조업의 경우 32%라는 막대한 액에 이른다. 이는 80년대의 투자규모를 현격히 초월하는 액수이다. 이는 일본산업에 있어서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이 특히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본 대외경제정책 - 국제금융정책 및 통상정책 - 의 아시아 중점 이동의 기반이 되어 왔다.

특히 버블이 붕괴된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제조업 해외투자를 보면, ASEAN 주요5개국 -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과 중국의 누적액은 아시아 전체투자의 51%와 32%에 이르러, 아시아지역 중 ASEAN과 중국이 일본대외경제정책의 핵심적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아 아시아 지역투자의 주도산업들은 <표-4>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기, 화학, 철·비철, 자동차, 기계 등 현재 일본의 주력산업들이다. 일본국내의 주력산업들은 아시아와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전체 해외투자액의 약 1/3을 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ASEAN과 중국지역을 전략적 거점으로 통합해 왔다.

한편 일본산업의 대아시아 '국제분업' 양상은 금융면에서도 잘 드러난다.²⁰⁾ 금융산업의 경우, 초저금리가 지속되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진출하였다. <표-5> 는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7년을 기준으로 한 일본은행들의 대아시아 융자잔고를 타국가 은행들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행들은 중국, 한국, 타이, 말레시아, 인도네시아에 거액을 융자하고 있었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융자규모 또한 구미제국들의 융자를 최소한 두배이상 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민간은행들은 공식집계만으로 951억달러, 즉 당시환율로서 약 12조엔 이상을 아시아지역에 융자하고 있었다. 일본의 산업과 금융기관은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 실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이 산업들은 일본 국내의 주력산업으로서 90년대 초중반 통산성 및 외무성, 재계, 일부정치인들의 아시아중시 정책정향을 광범위하게 조건지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산업들의 대규모 아시아진출에 기반한 '새로

〈표-2〉 1990년대 일본의 지역별 해외투자현황 (단위: 억円)

지역	90~97	%	98~2000	%	90~2000	%	51~99누계(100만달러)	%
지역	195,383	45	55,202	31	250,585	40	305,576	42
	60,482	42	31,848	42	92,330	42		
아시아	84,474	19	22,900	12	107,374	17	125,965	17
	46,332	32	13,672	18	60,004	27		
유럽	89,048	20	73,693	41	162,741	26	156,728	22
	25,716	18	24,741	33	50,457	23		
중남미	39,223	9	22,982	13	62,205	10	8,706	12
	6,246	4	3,718	5	9,964	5		
기타	31,791	7	5,472	3	37,263	6	51,757	7
	5,831	4	1,811	2	7,672	3		
합계	438,919	100	180,249	100	620,168	100	723,732	100
	144,637	100	75,790	100	220,427	100		

〈표-3〉 일본제조업의 아시아 지역별 투자현황 (단위: 억円)

국·지역	93~97	%	98~2000	%	51~2000	%
ANIEs3	3,874	11	2,973	22	17,204	19
ASEANS	17,289	51	7,460	54	54,445	60
중국	10,786	32	2,470	18	15,564	17
기타	1,702	5	734	5	2,943	3
합계	33,833	100	13,672	100	90,947	100

〈표-4〉 아시아지역 일본 제조업의 업종별 진출상황 (90년대) (단위: 억円)

업종	아시아전체					
	93~97	%	98~2000	%	90~2000	%
식품	1,696	4	583	4	2,279	4
섬유	3,540	7	690	5	4,230	7
목재, 펄프	904	2	245	2	1,149	2
화학	7,619	16	1,957	14	9,576	16
철, 비철	4,865	11	1,965	14	6,830	11
기계	3,970	9	965	7	4,935	8
전기	12,248	26	3,471	25	15,719	26
수송기	4,518	10	2,335	17	6,853	11
기타	6,973	15	1,460	11	8,433	14
제조업체	46,332	100	13,672	100	60,004	100

* 자료: 송주명(2002)에서 재인용.

〈표 5〉 97년 6월말 현재 일본은행들의 대아시아 용자잔고 (단위: 억\$)

국가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합계
	용지역	비율					
중국	187	32.3	73	29	69	73	579
인도	38	20.4	33	20	18	14	188
인도네시아	232	39.4	56	46	43	48	587
한국	237	22.9	108	100	61	101	1,034
말레이시아	105	36.4	57	24	20	29	288
피리핀	21	14.9	20	28	11	17	141
대만	30	12	30	25	32	52	252
타이	377	54.4	76	40	28	51	694

* 자료: 송주명(2002)에서 재인용

운 아시아주의'의 사조는 1997년 이전까지 아직 추상적인 경향성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책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엔의 국제화' 및 '자유무역협정' 정책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됨에 있어서, 아시아 경제위기가 일본산업의 국제네트워크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변수가 특히 중요하다.

아시아 경제위기와 일본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한편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제조업 및 금융업의 타격은 일본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으로 증폭되어 돌아오게 된다. 우선 금융업의 경우, 본국은행에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겨주게 되었고, 은행들이 자기방어적 태도를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은행들은 대출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용자를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부실채권으로 인한 증권 및 은행의 몰락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용자회피로 인해 대규모의 토목업자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빈발하게 되었다. 이제 아시아의 위기가 은행들의 네트워크를 타고 곧바로 일본경제를 '공격'하게 된 셈이었다.

제조업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통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경제 위기는 일본의 현지 제조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영향력은 산업별 특성과 국제분업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통화위기로 인한 외환차손(外換差損)은 산업전반에 걸친 부정적 요인이었다. 한편 통화위기가 야기한 수출가격 인하와 현지조달가격의 저하는 일부산업들에게 긍정적 영

20) 김용복(2003), pp.5-6.

향을 미친 반면, 현지수요의 저조와 수입가격의 상승이 상당수 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진출기업은 대상시장의 성격 및 현지조달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현지조달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현지판매 비율이 높을수록 피해의 정도는 크게 나타나며, 그 역의 경우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이에 따라 추산컨대, 현지진출 일계산업 전반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과 더불어, 특히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일반기계산업, 비철금속산업의 타격이 심했으며, 정밀기계와 전기산업은 비교적 피해가 작은 편에 속했다. 그리고 피해의 내용을 보건대, 외환차손, 현지차입부담증가, 부품·원료비용의 증가, 자금순환의 난관, 판매의 저조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외환차손의 경우 안정적 국제통화제도의 형성이, 현지차입이나 자금순환난관에 대해서는 현지에 대한 유동성의 공급이, 부품·원료비용 및 판매시장저조의 문제는 일본시장과 현지시장을 연계하는 자유무역체제의 형성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는 통화제도면에서 '엔의 국제화,' 유동성 공급면에서 '신미야자와 구상,' 국제시장제도면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정책적 문제의식으로 귀착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선택지는 일부의 산업들이 불안정한 부수익 효과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주도 산업전반이 합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해가 컸던 철강, 자동차, 화학산업 등이 보다 적극적인 주도세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위기를 배경으로 한 산업의 '아시아경제통합'의 요구는 일본 주력산업을 대변하는 최대의 재계단체 경단련의 움직임에서 잘 확인된다. 가령 경단련은 1998년 4월부터 '엔의 국제화' 정책을 내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초부터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내적 움직임은 2000년 들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조직화되었으며, 정부에 공식적인 정책요구를 하게 된다. 요컨대, 경단련은 2000년 3월 「아시아경제 재구조화를 위한 제언」과 「엔의 국제화를 위하여: 무역결제통화로서 엔의 국제화에 대해」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 통상정책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라는 정책제언을 행한 바 있다.

수직네트워크형 국제분업과 비용해적 '신중상주의 지역질서'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추진자들은 나름대로 관료적 '경제민족주의' 신념 위에서 일본이 아시아로 융해되지 않는 신중상주의적 지역질서를 구축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러한 신념은 특정한 구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익 위에서 보다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이래 진행되어 온 해외투자를 통해, 일본과 아시아는 '수직네트워크형' 국제분업구조를 형성하게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전개 속에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기반에 있어서도 최근 일본산업의 아시아중시경향은 더욱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되었다. 요컨대 이 '수직네트워크형' 국제분업구조는 일국적 산업전략으로서 산업정책에 의해 매개된 해외투자의 결과물이다. 가령 길핀(Gilpin)이 지적했듯이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적 해외투자는 명백히 수출대체적인 효과를 갖는 투자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 일본의 대아시아 해외투자는 대외적 산업재편을 촉진하면서도 고도화된 국내투자에 대해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국가적 수출대체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산업정책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를 전략적으로 조절해낸 셈이다. 이리하여 국내수출과 해외투자는 균형을 이룰 수 있었으며, 고도화된 국내산업과 표준제품생산의 해외투자산업이 일종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이 수직적 네트워크는 현지와 일본간의 구조적 비대칭적 무역연계를 형성한다. 즉 네트워크의 정점인 일본에서는 국내시장을 조직화한 산업구조고도화와 수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현지국가의 경우에는 대일 수출보다는 거의 제3국 수출에 의존하면서도 지속적인 자본재·부품의 대일 수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본기업의 사적이익과 국가의 공적이익은 평행하게 동시 달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직네트워크' 관계를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철저히 긍정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아시아와의 융해보다는 아시아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아시아를 일본산업의 광범위한 시장이나 배후지로서 개척하는 신중상주의적 지향을 공고화하게 된다.

맺음말

-요약과 전망²¹⁾

우리는 지금까지 1990년에 본격적으로 대두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이 실제 일본의 역사 속에서 서양과 아시아 사이에서 그리고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왔고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 수상이자 동아시아 공동체 평의회의 회장인 나카소네의 "일본이 선진국의 일원임과 동시에 일·

21) 송주명(2002)을 인용함.

미관계를 기축으로 한 태평양 국가이며 또한 동아시아 국가이기도 하다는 복수의 정체성에 서있기 때문이다”²²⁾ 라는 발언은 미국과 아시아 사이에서 전략적인 위치지움과 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은 이른바 ‘친미 내셔널리즘’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고이즈미 자신의 ‘보수개혁’ (신보수주의)적 지향과 미국 부시 행정권의 현실주의적 외교기조가 기묘하게 합치되는 상황에서, 아시아보다는 미국의 그늘 아래서 보수 우파적인 내셔널리즘이 보다 중요한 경향으로 대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은 이 ‘친미 내셔널리즘’의 외교사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약간 과도하게 해석하자면 전전의 ‘탈아론(脫亞論)’적 저류가 재생되는 듯한 인상마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전후 미국과 일본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상대화하면서, 아시아 지역통합을 향후 일본의 핵심적 전략적 선택지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의 조건 속에서 ‘경제대국’ 적 대응방향, 미국정권과의 오점 및 갈등증폭 요인의 강화, 아시아 위기 속에서 아시아의 선택지 축소와 일본위상의 성장 등 세가지 국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면서 대두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그것이 발원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 산업적 지지와 구조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먼저 산업적 지지면에서 80년대와 90년대 일본산업의 해외투자과 융자를 통해 추진된 실질적 아시아지역통합은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일반적 경향을 야기했으며, 일본산업 전반을 타격한 아시아경제위기 속에서 철강, 자동차, 화학, 기계산업 등 피해산업을 선두로 일본의 주력산업 전반이 글로벌 경제의 폐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명시적인 통합제도의 요구를 배경으로 ‘새로운 아시아주의’는 정책수준으로까지 구체화되었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까지 형성되어 온 일본과 아시아간의 산업간 수직네트워크라는 구조는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신중상주의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전개 속에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기반에 있어서도 최근 일본산업의 아시아중시경향은 더욱 거세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표면의 ‘친미 내셔널리즘’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새로운 아시아주의’의 동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이니셔티브로 확대될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2) 미야자마 히로시(2005), p.229.

〈참고문헌〉

김경일, 강창일(2000),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8호, pp.269~332.

김기석(2005), '반응국가 가설과 일본 대외경제정책 연구 - 가설의 유용성 검토', 국제정치논총 제45권 3호, pp.241~244.

김용복(2003), '일본의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엔의 국제화', 일본연구논총, 제18호, pp.3~29.

김준섭(2000), ''새로운 전후'와 '보통국가' 노선', 일본연구논총 제13호, pp.31~58.

미야지마 히로시(2005), '일본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현주소', 역사비평, 가을호, pp.222~249.

박한규(2004), '아시아주의를 통해 본 전전 일본의 동아시아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제20호, pp.199~229.

송주명(2001), '탈냉전기 일본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정책: '아시아주의'와 '친미 내셔널리즘'의 동요', 일본연구논총, 제14호, pp.1~31

송주명(2002), '일본, 새로운 아시아주의', 국제지역연구 11권, 1호

윤건차(2000),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대동아공영권론에서 이시하라 발언까지', pp.37~53.

이노구치 다카시(1995), '2차대전 이후 일본과 아시아', 계간 사상, p219~233.

이원덕(2005),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연구논총, 제22호, pp.73~75.

한상일(2005), '동아시아 공동체론: 실체인가, 환상인가?' 동양정치사상사 제4권 1호, pp.7~34.



도서관내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기제를 통해 규명한 현대의 정치현상

현대정치의 이념구조

■ 주요목차

- 현대의 정치이념
- 소련의 정치이념
- 중국의 정치이념
- 개도국의 정치이념

조정남 저 / 값 15,000원



교양사회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일지

정려정 (한국 민족연구원 연구원)

최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회원기업의 임원과 관리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차기 총리에 어울리는 정치가' 3위로 뽑힌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는, 언젠가 그의 망언을 추궁하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망언이란, 발언의 의미와 효과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뱉은 말이다. 나는 충분히 그 점을 인식하고 확신을 갖고 말한다. 그러니 나의 발언은 망언이 아니고, 굳이 표현하자면 폭언이다.' 비단 이시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아니 폭언은 대개 대중적 기반을 얻기 위한 확신과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져왔다. 이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제3차 개각 단행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정당성을 공공연히 발언해 온 아사 다로(麻生太郎)와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포스트 고이즈미'라는 지지를 얻으며 각각 외무장관과 관방장관으로 기용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움직임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우려와 달리, 작년 8월 0.3%의 미미한 교과서 채택률을 보임)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움직임과 얽혀 제국주의 만행을 미화하고 일본내 극우 세력을 결집시켜, 나아가 대동아 공영사상까지 펼칠 수 있음을 해방 이후의 여러 망언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망언'은 한국, 중국과의 외교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 일본내의 정치 구도를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1953년 3차 한일 회담에서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한국 통치는 한국에 유익한 것 이었다"는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의 발언은 이후 4년간 한일회담을 표류하게 했다. 또한 작년 11월 30일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간사 강연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외교카드가 될 수 없다.'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국과 중국이 외교문제로 삼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에 중국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당분간 정상교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1986년 "한일합방은 합의 아래 성립된 것"이라고 발언한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문부성장관, 1988년 "아시아 전체가 백색 인종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대동아전쟁의 결과 독립을 이루었다."고 언급한 오쿠나 세이스케(奥野誠亮) 국토청장관, 1994년 오쿠나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쿠라이 신(櫻井新) 환경청장관, 1995년 '한일병합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한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총무장관이 한국,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의 비난을 받고 경질되기도 하였다. 에토 이외 에도 와타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외무장관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 등의 '망언'이 난무했던 '전후 50년의 해'인 1995년을 기점으로, 망언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었고 전후 60년을 넘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45년 이후 60년간 언급된 '망언'은 대동아공영권 긍정,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참배 정당화 주장, 위안부 진위 발언, 역사 교과서 문제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이렇게 일본 극우 정치세력의 발언이 거침없고 출기차게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한국이 서명국 자격을 얻지 못하고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반성, 사죄에 대한 조문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본지에서는 1945년부터 최근까지의 일본 정치인들의 굵직굵직한 망언들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후 배상, 보상에 대해 일본 스스로가 해결할 뜻을 일깨우고, 일본정치의 우경화 정도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1940년대

▶ 1945.8.15.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대동아전쟁 종결에 관한 조서'



〈히로히토〉

“짐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써 시국을 수습코자 총량한 너희 신민에게 고한다.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영·중·소 4개국에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토록 하였다.” (중략) “일찍이 미·영 2개국에 선전포고를 한 까닭도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데서 나온 것이며, 타국의 주권을 배격하고 영토를 침략하는 행위는 본디 짐의 뜻이 아니었다.” (중략)

“짐은 제국과 함께 시종 동아의 해방에 협력한 여러 맹방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참기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 어려움을 견뎌, 이로써 만세를 위해 태평한 세상을 열고자 한다”

해설 망언의 계보와 근원을 따지자면 탈아론을 펼친 19C 말의 후쿠자와 유키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본격적인 망언의 시작점은 지난 60년간 일본 극우 정치인들에게 대동아공영권의 정당성에 관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일왕 히로히토의 '대동아전쟁 종결에 관한 조서'로 설정할 수 있겠다. 1945년 당시, 프랑스 언론인 로베르 길랭은 히로히토의 '종전 조서'가 “옛 군인들이 자기 좋을 대로 역사를 다시 쓸 기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고 예상은 적중했다.¹⁾

▶ 1948.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도쿄 대학 교수

“일본의 조선통치가 구미 강국의 식민지 통치보다 심하게 조선인을 노예적으로 착취하고 그 행복을 유린했다는 논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항변의 여지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뜻대로 안 된 많은 실패도 있지만, 일본의 조선통치는 이상으로서 이른바 식민지 지배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중략)

제 1 차 세계대전 전야, 20세기 초두의 세계정세 및 세계사조와 그 때까지의 조선의 상태를 돌아볼 때, 이것은 반드시 일본만이 책망을 들어야 할 탐욕스런 팽창정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중략)

조선 경제가 그토록 비참한 상태에서 병합 후 불과 30여년 사이에 지금과 같은 일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분명 일본이 지도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중략)

재정면에서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원조는 정산해 보면 플러스이다.”²⁾

해설 1947년 대장성 내에 설치된 재외재산조사회는 1950년에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대

1) 신기섭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 칼럼 '유레카' 2006. 2. 5.

2)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 재외재산조사회 편,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대한 역사적 조사" 제11책, 대장성, 발행년월일 불명, p.2,4,25,57.

한 역사적 조사”라는 이름의 전 35권(총목록을 합치면 36책)의 책을 비밀리에 출판했다. 이것은 조선, 대만, 가라후토(사할린)등에서 일본인이 형성했고 패전과 함께 연합국에 의해 접수된 재산의 실태를 밝힌 것이었다.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이들 지역에서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 그것을 거부하거나 삭감했던 것이다. 조선편은 전 10책으로, 전쟁 전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대륙병참기지원’이나 ‘북선(北鮮)루트론’을 제창한, 조선론의 권위자 스즈키 다케오(전쟁 후에는 도쿄대학 교수)가 편집했다. 그 중에서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은 조선편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비밀리에 출판되어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언으로서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일본 보수파의 조선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³⁾

▶ 1949. 외무성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

(1) 우선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일본의 이지역에 대한 시정(施政)은 결코 이른바 식민지에 대한 착취정치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중략) 각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과 근대화는 오로지 일본측의 공헌에 의한다.(중략) 일본의 이들 지역에 대한 통치는 ‘반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중략)

(2) 다음으로 이들 지역에서 긴 세월을 걸쳐 평화적인 생업을 영위하고 있던 일본국민은 전부 추방당했고, 일본 자산은 공유재산뿐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 평화리에 축적된 사유재산까지 이미 사실상 박탈당했으며, (중략) 이 같은 가혹한 조치는 정말로 국제관례상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3) (중략) 이들 지역은 모두 당시로는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상 보통이라고 인정받고 있던 방식으로 취득되고, 세계각국도 오랫동안 일본령으로 승인하고 있던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이들 지역을 포기하는 데 이의는 없지만, 과거의 이들 지역의 취득 및 보유를 가지고 국제적 범죄로 보고, 징벌적 의도를 배경으로 이들 지역의 분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 해결의 지도원칙으로 삼으려는 것은 승복할 수 없는 일이다.”⁴⁾

해설 이것은 불과 5쪽의 팜플렛을 발췌한 것이다. “문서가 작성된 1949년 당시에는 대일 강화에 관하여 각국으로부터 배상문제 등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미국 측에 참고자료로서 제출한” 것이다.⁵⁾

자료를 조선에 맞춰 읽어보면, 일본은 조선에서 좋은 일도 했고, 한국병합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셈이 된다. 이것도 1982년 9월 20일까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언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다. 그러나 정부관계자의 조선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점에서는 앞의 자료와 같다.⁶⁾

3) 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최혜주 옮김, 『일본 망언의 계보』, pp.236-237, 1996

4)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마이크로필름, “대일 평화조약관계준비 연구관계” 제5권, pp.740-742.

5) <아사히신문>1982년 9월 20일자

6) 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최혜주 옮김, 『일본 망언의 계보』, pp.237-238, 1996.

1950년대



〈요시다시게루〉

▶ 1951.9.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

“재일 한국인은 뱃속의 벌레다.”
 <제1차 한일회담 직전 일본국회 연설>

▶ 1953.10.15.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제3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일본측 수석대표의 발언을 기록한 외교문서.

구보타 간이치로 : 일본측으로서는 대한청구권이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보하여 접근하려는 마음도 충분히 갖고 있다. 당신들에게는 청구권이 있고, 우리에게에는 없다는 것은 곤란하다.

홍진기 : 양보하여 접근하려고 한다지만, 일본이 말하고 있는 청구권과 한국이 말하고 있는 그것과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한국이 말하는 것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데 따르는 청산문제이다. 일본의 주장은 정치적이다. 성질이 다른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측이 그러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바꿀 수 밖에 없다.

구보타 : 일본측의 청구권도 법률문제이다.

홍 : 한국의 국회에서는 수원의 학살사건, 한일합병조약 직후의 학살사건, 또는 36년간의 통치동안 치안유지법으로 투옥, 사망한 점 등에 대한 청구권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 또 조선쌀을 세계시장보다 부당하게 싼 값으로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 가격의 반환을 요구하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 정도로 타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일본이 이런 청구권을 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우리는 순법률적인 청구권만을 내고, 정치적 색채가 있는 것은 그만두었다. 그런데도 일본측이 36년간의 축적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한국측으로서도 36년간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 수 밖에 없다.

구보타 : 한국측에서 국회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청구권을 낸다면, 일본으로서는 조선의 철도나 항만을 만들고, 농지를 조성하고, 대장성이 당시 많은 해는 2천만엔도 내놓았다. 이것들을 돌려달라고 주장해서 한국측의 청구권과 상쇄하면 되지 않겠는가.

(한국측 각 위원들 흥분한 표정으로 각자 발언한다.)

홍 : 당신은 일본인이 오지 않았다면 한국인은 잠만 자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하는 것인가. 일본인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잘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구보타 : 좋아졌을지도 모르지만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사건으로서 말하지만, 내가 외교사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당시 일본이 가지 않았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장경근 : 천만엔이나 2천만엔의 보조는 한국인을 위해 낸 것이 아니라 일본인을 위해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경찰서나 형무소를 만들지 않았는가.

유태하 : 구보타씨, 그런 말을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일본측에서 옛날 일은 흘려보내고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다르지만.

구보타 : 서로 장래의 일을 생각해서 하고 싶다. 법률적인 청구권 문제로 말을 진행하고 싶다.

홍 : 법률적이라고 해도, 당시 일본인의 재산이 한국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축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구보타 : 자세한 것을 말하려면 한이 없다. 다만 36년간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기구하에서 평등하게 취급되었던 것이다. 시대를 생각하기 바란다.

홍 : 무엇 때문에 카이로선언에 '조선인민의 노예상태' 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구보타 : 사건이지만 그것은 전쟁중의 흥분한 심리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나는 노예라고 생각지 않는다.

장 : 일본이 재산을 불린 것은 투자나 운영능력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본인이 토지를 산 것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 총독부의 정책으로 산 것이지 기회균등은 아니었다.

구보타 : 일본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조선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홍 : 구보타씨는 서로 도와주는 정신이라든가 양보하여 접근하려고 한다지만, 우리는 양보할 여지가 없다.7)

해설 1953년 10월 15일에 열린 제3차 한일회담 재산청구권분과위원회 제2회 회합에서,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의 발언이 한국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구보타 발언이 단순히 실언이 아니었음은 앞서 언급한 외무성의 '할양지에 관한 경제적,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구보타 발언에 대해 오카자키(岡崎勝男)외무장관은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말했다 뿐이다." 라고 옹호했다.

한편 변영태 외무장관은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그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한 침략근성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제3차 회담은 끝내 결렬되었고,8) 한일 회담은 4년간 표류하였다. 1958년 일본이 기시 노부스케(吉田信介) 총리 때인 1957년 12월 구보타 발언과 역청구권9)주장을 철회하며 4차 한일회담이 재개되었다.

이후, 4.19 항쟁, 5.16 군사 쿠데타 등으로 회담은 다시 중단되었다가 1965년 7차 회담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반성, 사죄에 대한 조문이 전혀 없어 현재까지 한일 간 갈등의 원인으로 남아 있다.

7) '외무성의 회의의사록에 남겨진 구보타와 한국측 대표간의 응수', <<아사히신문>> 1953년 10월 22일자.
 8) 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최혜주 옮김, 『일본 망언의 계보』, p.240, 1996.
 9) 일본은 제 5차 회의(1952.3.6)에서 '재산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 기본 요강' 의 형태로 "일본인의 한국내 사유재산에 대해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역청구권을 주장, 1차 한일회담이 결렬되었다.

◆ 참고

13년 8개월 간 진행된 '한일 협정' 체결 과정 ¹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국 자격을 얻지 못함으로써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 ● 강화조약 4조 비(B)항의 "일본은 한국에서 미 군정 또는 그 지령에 의한 일본 국민의 재산 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권 협상을 벌임. 				
제1~3차 회담 (1952.2.15~1953.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차 회담에서는 회담 자체에 대한 일본측의 소극적 태도와 양국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대립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함. 				
제1~3차 회담 (1952.2.15~1953.10.21)	<table border="1"> <tr> <td>1차 회담</td> <td>● 한국측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을 제시했지만 일본측의 대한 일본인 재산청구권 주장 등이 전이 노출돼 결렬됨.</td> </tr> <tr> <td>3차 회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36년간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일측 대표 구보타의 망언으로 결렬됨. ● 4~6차 회담은 회담은 열렸지만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양측의 이견 등으로 교섭이 부진. </td> </tr> </table>	1차 회담	● 한국측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을 제시했지만 일본측의 대한 일본인 재산청구권 주장 등이 전이 노출돼 결렬됨.	3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36년간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일측 대표 구보타의 망언으로 결렬됨. ● 4~6차 회담은 회담은 열렸지만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양측의 이견 등으로 교섭이 부진.
1차 회담	● 한국측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을 제시했지만 일본측의 대한 일본인 재산청구권 주장 등이 전이 노출돼 결렬됨.				
3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36년간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일측 대표 구보타의 망언으로 결렬됨. ● 4~6차 회담은 회담은 열렸지만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양측의 이견 등으로 교섭이 부진. 				
제4~6차 회담 (1958.4.15~1964.4)	4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측이 1957년 12월 구보타 망언을 정식 취소함으로써 1958년 4월 15일 4차 회담이 재개. ●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중단. 			
	5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9 혁명 이후 집권한 민주당 장 면 정권하에서 개최된 5차 회담에서 양국은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 ●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회담 중단. 			
	6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반공외교부 구축에 따른 회담 재개 요구로 1961년 10월 20일 6차 회담 시작.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방일, 이케다 하야토 총리와 면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교정상화를 한다는데 합의함. ● 1962년 10월 20일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도쿄에서 오히라 마사 일본 외상을 만나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1억달러 이상'으로 청구권 문제를 매듭짓고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작성함. 그러나 6차 회담은 어업회담에서 수역문제에 대한 이견과 국내에서 1964년 4월 한일회담의 종단을 요구하는 시위 격화로 또다시 멈춤. 			
제4~6차 회담 (1958.4.15~1964.4)					
제7차 회담 (1964.12.3~1965.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차 회담에서 본격적인 교섭과 조인이 이루어짐. ● 7차 회담 개최 후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이 1965년 2월 17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방한, 서울에서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임시조인함으로써 한일협정에 전기를 이룸. ● 이를 발판으로 1965년 6월 22일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외상이 도쿄 일본총리 관저에서 '한일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일회담은 13년 8개월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림. ● 한일협정 서명 이후 한국에서는 야당의 보이콧 속에 같은 해 8월 14일 찬성 100표, 기권 1표 등으로 국회 비준을 완료했으며 일본측은 11월과 12월 중의원과 참의원 비준을 각각 마침. ● 그러나 한일협정은 한일합방이 원천무효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독도 및 정산대 문제, 재일교포 법적 지위 등 다수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완의 협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오고 있음. 				

▶ 1958.6.11. 사와다 렌조 (澤田廉三) 제4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38선을 압록강까지 밀어붙여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일본외교의 임무이자 한일교섭의 목적이다. 한일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사소한 것들로, 우리는 이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한일회담의 정부대표를 둘러싼 모임> ¹¹⁾

▶ 1958.7.28. 오노 반보쿠 (大野伴睦) 자민당 부총재

“가능하다면 한국, 대만과 더불어 일본합중국을 형성해 대동아공영권을 재건했으면 좋겠다.” ¹²⁾



<오노 반보쿠>

10) 정부는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공개 했다. 1월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5권의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이어 13년 8개월에 걸친 156권, 3만 5천 354쪽의 한일회담 전 과정의 문서가 모두 공개된 것이다.

11) 한일문제연구원, <http://1945815.co.kr/true/mangun.php>

1960년대



〈기시노부스케〉

▶ 1960.1.23.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총리

“일본의 자위권은 한국과 대만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 1961.7.1. 이케다 하야토 (池田勇人) 총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입술과 이빨의 관계다. 이 나라의 치안 유지는 절대로 필요하다. 한국을 나의 일처럼 다루고 육성해 나갈 생각이다.” <저펜 프레스>

▶ 1961.7.21. 아라키 마사오 문부과학상

“일본인은 아프리카인이거나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 행복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민족 차별적 발언으로 양국간 긴장 고조.

▶ 1962.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의 길을 따라 다시 조선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존 케네디 미 대통령으로부터 “조선은 일본 자신의 문제”라는 언질을 받은 후>

▶ 1962.8. 오카자키 가쓰오 (岡崎勝男) 외무 차관

“첫째로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해야 ... 한국과 대만을 앞으로 일본의 안전을 위해 확보한다는 정책을,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정치가가 실제로 생각해 봐야한다.”
<일본의 안전보장>

▶ 1962.10.5.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

“조선합병 이후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 한일합방을 위해 노력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예를 따라 일본은 한국에 새롭게 파고들어야 한다.”
<제43회 참의원 회의>

▶ 1962.11. 기타자와 나오키치 (北澤直吉) 자민당 외교 조사회 회장

“일본의 바로 발 언저리인 한국 문제조차도 처리하지 못한대서야 ... 역시 아시아의 평화, 아시아의 번영이라는 것은 일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안전보장>

▶ 1963.1.26.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

발언1 : “조선을 병합한 이후 일본의 비행에 대해서는 나는 전문이 적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12) 한일문제연구원, <http://1945815.co.kr/true/mangun.php>

해설 제6차 한일회담의 예비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던 1월 26일, 공산당의 노사카(野坂參三)가 “조선인민에 대한 이러한 비도덕적인 여러 가지[식민지화나 노예노동의 강요]에 대해서 총리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 단상에서 분명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이케다(池田勇人) 총리의 답변이다.¹³⁾



〈이케다 하야토〉

발언2 : “<숙부 고토 신페이(後소新平)에 대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전형적인 파이오니어라는 평가도 있다. 세계의 조류가 그러했고, 서구제국주의가 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때, 아시아-아프리카를 통틀어 서구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일본 이외에는 없었다. 청일전쟁은 결코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며, 러일전쟁은 러시아제국주의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었다. 이것은 일개 역사학도로서,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나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명은 세계사적으로 보아 러일전쟁에서 시작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역시 일본의 지향은 좋든 싫든 상관없이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과의 운명공동체이며, 그 해방, 독립, 그리고 공존공영이라는 것이어야만 한다.

일본이 메이지 이래 이처럼 강대한 서구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고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을 경영하고 조선을 합병하고 만주에 5족공화의 꿈을 건 것이 일본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의 제국주의이며 고토 신페이는 아시아 해방의 파이오니어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¹⁴⁾

해설 『동화와 정치』중에서. 이로부터 2년 뒤(1965)에 외무장관이 된 시이나는 한일기본조약의 가조인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도착성명에서 “양국간의 오랜 역사에서 불행한 기간이 있었음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 깊이 반성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시이나는 결코 본심에서 ‘깊이 반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일기본조약의 가조인을 눈앞에 둔 ‘한국의 분위기’를 ‘진정’ 시키기(당시 서울에 파견되어 있던 외무성 조사관 마에다의 말) 위해 ‘깊은 반성’을 해 보인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¹⁵⁾

▶ 1963.12.3. 오노 반보쿠 (大野伴睦) 자민당 부총재

“박대통령과 나는 부자지간과 같은 관계이다.”
<제3공화국 대통령 취임 경축사절로 방한 직전.>

▶ 1965. 사와다 렌조 (澤田廉三) 4,5차 한일 회담 일본 수석대표

“우리는 (다시) 일어나 38선을 압록강 바깥으로 되 물리치지 않고서는 조상을 뵈면 면목이 없다. 이것은 일본 외교의 임무다.” <일·한 문제를 생각 한다>

13) 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최혜주 옮김, 『일본 망언의 계보』, p.241, 1996.
14) 시이나 에쓰사부로, 『동화와 정치』, 동양정치경제연구소, pp.58-59.1963.
15) 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최혜주 옮김, 『일본 망언의 계보』, p.242, 1996.

▶ 1965.1.7. 다카스기 신이치 (高杉晋一) 제7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36년간은 착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로 한 것이다.(중략)

‘일본은 조선에 대해 36년간의 통치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도 있지만, 사과하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 교섭은 쌍방의 존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감정으로서도 사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아마 20년쯤 더 일본과 붙어 있었다면 그렇게는 안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패전으로 좌절되었지만, 20년쯤 더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대만의 경우는 성공한 예이지만...

일본은 조선에 공장이나 가옥, 산림 등을 다 두고 왔다. 창씨개명도 좋았다. 조선사람을 동화해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지, 착취나 압박 같은 것은 아니다. 과거를 말하면 상대방도 할 말은 있겠지만, 우리쪽에는 할 말이 더 많다. 그러므로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일본은 친척이 된 기분으로 말을 끝맺는 것이 좋다.”



▲ 이동원 외무장관(왼쪽)과 시이나 일본외상 등 양국 대표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해설 1965년 1월 7일, 제7차 한일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다카쓰기 신이치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다카쓰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외무성 간부의 충고를 받고 기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로 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아카하타>>가 폭로함으로써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다카쓰기는 한일회담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그것은 공산계의 작위적 보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 2월 9일호)라고 줄곧 발뺌했다.¹⁶⁾

▶ 1965.3.15. 시이나 에쓰사부로 (椎名悦三郎) 외무장관

“1905년의 보호 조약은 청일 전쟁 후의 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1910년의 한일 합병은 양국에서 필요한 일이었으며, 조선이 사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참의원 예산 위원회>

▶ 1965.3.17.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橋本登美三郎) 내각 관방장관

“아시아에서야 일본을 형님으로 여기는 것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니까.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장남이고 한국이 막내와 같으니까.” <주니치 신문>

16) 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최해주 옮김, 『일본 망언의 계보』, pp.242-243, 1996.

17) 『제50회 국회 중의원 한일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p. 2.



〈사토 에이사쿠〉

▶ 1965.11.5. 사토 에이사쿠 (佐藤榮作) 총리

“1)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사로 이 조약[한국합병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¹⁷⁾

2) 이것이 여러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조약인 한 이것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음은 굳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¹⁸⁾

해설 1)은 11월 5일 사회당의 이시바시 마사시(石橋政尙)의 “병합에 관한 조약, 이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지”라는 질문에 대한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답변이다. 이것에 이어 11월 19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공명당의 구로야나기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가”라고 질문했지만, 답변은 2)와 같은 것이었다. 사토 총리의 “병합조약은 합의에 따라 체결되었다.”라는 발언과 견해는 그 뒤로도 유지되었다. 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총리의 견해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때이다.¹⁹⁾ 한편, 사토 총리는 재임 기간(1964~72년) 동안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체결하는 등 핵무기 정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4년 손 맥브라이드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 1969.11.24. 마쓰모토 순이치 (松本俊一) 외무차관

“한국의 안전이 침범당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이 침범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일본 자위대도 출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사히 신문>

1970년대

▶ 1974.1.24. 다나카 가쿠에이 (田中角榮) 총리

“과거 일본과 조선반도의 합방시대가 길었습니다만, 그 후 한국이나 그 밖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면 긴 합방의 역사에서 지금도 민족의 마음에 심어져 있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김양식을 가지고 와 가르쳐 주었고, 나아가 일본의 교육제도, 특히 의무교육제도는 지금까지도 지켜가는 훌륭한 것이라고들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정말로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아세안 5개국 순방에서 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가 남긴 것』

해설 1월 24일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공명당의 다케이라가 일본에 대한 경제협력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것에 대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의 답변이다.

18) 『제50회 국회 참의원 회의록』, 제8호, p.18.
19) 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최혜주 옮김, 『일본 망언의 계보』, pp.243-244, 1996.

▶ 1975. 이시이 미쓰지로(石井光次郎) 외무성 참사관

“한국은 야만국이다.”

▶ 1979.3.21. 사쿠라다(櫻田武) 경단련 회장

“1)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과거 일본 식민지시대의 훌륭한 교육 덕분.(중략) 36년간의 일본 통치의 공적은 한국에 근대적인 교육제도, 행정조직, 군사제도를 심어준데 있다. (중략) 당시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고 있다.

2) 깊이 생각하면, 오늘날 한국 혁명정부의 경제발전은 일본 교육의 결과이다. (중략) 일본은 한국인의 문맹퇴치에 기여한 바 크다. (중략) 소학교 1학년 때, 한일합방 축하행렬에 붙어서 일장기를 흔들었던 것이 생각난다.”



〈사쿠라다〉

해설 1979년 3월 21일, 경단련 회장인 사쿠라다는 한국경영자협회 주최의 국제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발언했다. 동국대학교 최성실 교수 등이 “일본은 과거 한국인에게 경제 과학 기술 등 중요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봉쇄하고, 우수한 인재를 매장시켜 발전을 저해했다.”라고 반박하자, 사쿠라다는 “잘 모르는 것을 말한 것 같다.”(<<동아일보>> 23일자)라고 사죄했다.

3월 27일자 <<동아일보>>가 사쿠라다 발언은 구보타 망언(1953.10.15)이나 다카쓰기 망언(1965.1.7)보다 “대한 경시의 정도가 더 심하다”라고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 전역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일본의 잡지 <<세계>> 6월호도 사쿠라다 망언을 비판하며, 일본 정재계 인사들의 대한(對韓) 의식을 문제삼고 있다.20)

1980년대

▶ 1981.8.19. 소노다(園田) 외상

“한국이 국방이나 안보를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돈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일정상회담>

▶ 1982.7.23. 마쯔노 유키야스(松野幸泰) 국토청장관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도 잘못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일병합도 한국에서는 일본이 침략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당시 국내정세등도 있어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일본으로서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한국이나 북한, 중국 등이 한창 비판하고 있을 때인 7월 23일, 마쯔노(松野幸泰) 국토청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언해, 불에 기름을

20) 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최해주 옮김, 『일본 망언의 계보』, pp.245-246, 1996.

끼엌는 양상이 되었다.

▶ 1984.2.10. 아베 외상

“독도는 국제법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평화적 수단으로 꾸준히 해결을 추진하겠다”

▶ 1984.8.10. 마쯔노 유키야스(松野幸泰) 국토청장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나이(안중근 의사) 를 한국에선 영웅으로 미화한다.”
<역사 교과서 문제로 열린 기자회견>

▶ 1986.9.16.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曾根康弘) 총리

“아시아로부터 일본이 고립되면 과연 아시아를 위해 제일선에서 전사했다고 생각되는 성실한 일본의 장병, 영령들이 좋아할 것인가”
<중의원 본회의> (마치 일본 전사자들이 아시아를 위해서 전사한 것 같은 그릇된 태평양 전쟁관 피력).



〈나카사네야스히로〉

▶ 1986.9. 구라나리 외상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문제임을 제기한다” <한일외상회담>

▶ 1986.10.28. 가메이 시즈카(龜靜井香) 국가기본문제 동지회 대표

“현재처럼 한국과 중국이 교과서 문제, 참배 문제 등에 간섭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10년 20년 후 한일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주일 한국대사 이규호 씨를 예방한 자리>

▶ 1987.12.15. 니시무라 도시조 (西村敏哉) 히로시마 시의회 의원

“장차 또 한일합병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만만세다. 우수한 교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다. 또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일본이 만주사변으로 막았고, 러일전쟁때 러시아로부터 지켰다.” <히로시마 시 본회의>

▶ 1988.4.22. 오쿠노 세이ске(奥野誠亮)국토청장관

“아시아 전체가 백색 인종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대동아전쟁의 결과 독립을 이루었다.”
1995년에도 ‘자위전쟁’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킴.

▶ 1989.2.14. 미무라 오사무 (味村治) 내각법제국 장관

“일황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 어느 쪽을 보더라도 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전범 히로히토 일왕 사망으로 전쟁책임에 대한 논쟁 야기.

▶ 1989.2.18.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총리

“침략전쟁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으며, 총괄하여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의 역사가가 평가해야 할 문제다.”
<국회 답변>



〈다케시다〉

▶ 1989.8. 모리타 아키오 (監田夫) 소니회장,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정치인

“경제적 성공을 거둔 한국·대만·싱가포르 등은 한때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으며, 이 같은 일본 통치는 많은 긍정적 변화 초래...미국은 필리핀에 게으름만 가르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모리타 아키오〉

1990년대

▶ 1990.5. 오자와 이치로 (小澤一郎) 자민당 간사장

“(천황폐하의 ‘말씀’ 내용은) 발을 들여놓고 들여놓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가 의논할 것은 아니다. 천황폐하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다. (과거 식민지 지배나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면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 이상 땅에 엮드려 조아릴 필요가 있는가. 상식선도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의 일에 눈을 돌려야 한다. 천황이 정치에 연루되어서는 안되며 천황의 이름을 빌려 권위로서 사용한 것이 과거 역사의 잘못이다.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해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천황의 ‘말씀’ 이 문제가 되었을 때(14일)의 발언이다. 이것은 당초 자민당의 수뇌의 발언으로 소개되었는데, 16일 오자와 이치로 자민당 간사장은 자신의 발언임을 인정하면서, 이 발언에 대해 한국측이 강하게 반발해 양국관계가 험악해진데 대해 진사(陳謝)했다.

그러나 6월 1일자 <<주간 아사히>>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천황을 정치의 무대로 내놓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땅에 엮드려 조아릴 필요가 없다’ 는 등의 말은 애초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중략) 예를 들어 (천황을 정치의 무대로 끌어내려고 한다면) 머리를 숙이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니 더 숙여라, 또는 허리가 직각이 되도록 머리를 숙여라든지, 손을 짚고 사죄하다가 나중에는 땅에 엮드려 조아려야 하는 사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이 양국민의 감정적 대립을 초래할 뿐, 한일우호에는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밝혔다.²¹⁾

▶ 1990.6.6 시미즈 츠타오(清水傳雄) 노동성직업안정국장

“군위안부의 업무는 국가업무와 무관, 민간업자들이 한 일로 실태조사 어렵다”

▶ 1991.4. 오노 마사야키 (小野正明) 주일 대사관 참사관

“정신대 강제연행 사실 없다.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상 체결로 종결되었다.”

▶ 1992.2. 가미사카 후유코(上坂冬子) 작가

“최소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안부는 필요악이었다. (위안부가 없었다면) 일

21) 다카사키 소오지 저음, 최혜주 옮김, 『일본 망언의 계보』, pp.251-252, 1996.

본군이 근처 민가의 부녀자를 범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전쟁 비즈니스 일환에서 파생한 일이다.” <주간 포스트>



(가미사카 후유코)

▶ 1994.5.4. 나가노 시게토(永野茂門) 법무상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생존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다. 위안부는 당시 공창(公娼)이었다.” <취임 후 첫 기자 회견>

▶ 1994.10.24.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통산장관

“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구미 열강으로부터 아시아 제국을 구하기 위한 방어 전쟁이었다.” <중의원 회의 발언>

▶ 1994.12.22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총리

“개인보상 불가, 종군위안부정책은 국제법위반이 아니다. 경찰청 조사결과에 해당한다”

▶ 1995.3.16.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진당 의원

“일본 국민 전체의 반성이 정해져 있으나, 적어도 내 자신은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세대인지라 반성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중의원 외무 위원회>

▶ 1995.3.16. 오키노 세이스케(奥野誠亮) 자민당의원

“한국은 『일제 지배 36년』이라고 하지만, 이미 50년이 지났다. 일본은 비전투원이 당하기도 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도 떨어졌다. 시베리아에는 60만 명이 끌려갔다.” <도쿄 `종전 50주년 국민위원회`의 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 1995.4. 오키노 세이스케(奥野誠亮) 자민당의원

“당시는 조선도 좋아져라, 대만도 좋아져라 하며 노력했다. 창씨개명이나 일본어 교육도 조선이 일본국이 되고 일본인이 되었으니까. 일본인과 똑같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월간 국회 뉴스>

▶ 1995.6.3. 와타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 외무장관

“일본은 한국을 통치한 적이 있지만, 식민지 지배라는 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의 공문서에는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 (중략) 한일병합조약은 원만히 체결된 것으로,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중략) ‘식민지 지배’ ‘침략전쟁’으로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전후처리를) 전부 다시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각오가 없는데 다시 꺼내면 곤란하다.”

해설 와타나베 미치오 전 외무장관이 자민당 토치기현 연합회의 대회인사나 그 후의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국의 이홍구 총리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일본측도 이러한 반역사적 발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을 그만두고 깊은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말했다. 와타나베는 5일, ‘원만히’라는 부분을 취소하고 사과했다.²²⁾

22) 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최혜주 옮김, 『일본 망언의 계보』, pp.253-254, 1996.

▶ 1995.8.9. 시마무라 요시노부 (島村宣伸) 문부과학상

“서로 침략을 하는 것이 전쟁 아닌가. 그걸 언제까지고 들쭉시는 일이 과연 현명한가.”
<문부성의 기자회견>

▶ 1995.8.10. 사쿠라이 신 (櫻井新) 환경청장관

“아시아는 일본 덕택으로 유럽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고, 반세기만에 엄청난 경제 부흥의 기세가 생겨난 것이다.”
<각료회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



(사이쿠라 신)

▶ 1995.10.11. 에토 다카미 (江藤隆美) 총무청장관



(에토 다카미)

“다만 한일병합이라는 것은 만일 제일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에 도장을 찍은 총리 이완용. 싫으면 거절했으면 그만이다. 일본도 나뉘었다. 일본도 강제로 도장을 찍도록 했으니까, 군대를 전국에 배치해 결코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1주일 후에 (조약을) 발표했다.(중략) 그러나 일본은 좋은 일도 했습니다. 고등농림학교를 세웠습니다. 서울에는 제국대학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 도로, 철도, 항만정비, 산에 나무도 심었다.(중략) 그러나 궁지 높은 민족에 대한 배려를 극히 결한 것도 사실. 그것이 지금 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번째가 창씨개명. 나는 그 당시 조선인 이름을 가진 동급생이 몇 명과 같이 공부하고 있었다. 국민 모두에게 창씨개명을 시켰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본래 이름으로 육군중장이 된 사람도 있다.(중략) 일본인이 보면 거기(조선반도)는 결코 식민지라는 의식은 없었다. 내지·외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지의 수준으로 높이려 한 것이지요. 이 왕조의 금은보화를 일본으로 갖고 가서 장식할 생각은 없다. 루브르 미술관이나 대영박물관은 세계 속에서 날치기 했지만, 일본은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중략) 일본 경제계나 예능계에 한국인 크게 활약하고 있다. M H, M K, I H 모두 그렇다.(주: 발언은 실명) 야구선수도 L의 사장도 모두 그렇다. 아카사카, 록본기에 가보라. 한국사람들 뿐이다. 빠짱코점의 7할은 조선반도 출신이다. 일본은 그런 일은 안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모든 계층에서 한국이 활약할 수 있게 된 것은 한일병합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설 각료 회의 종료 후 총무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으로부터 에토 다카미의 사임요구를 받았지만, 무라야마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10월 중순 예정됐던 정상회담이 취소 되고, 11월 오사카APEC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결국 당시의 제1야당인 신진당이 에토 장관의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주석이 공동성명을 내어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민당 영수의 권고로 에토는 사임했다.

〈 망언으로 내각에서 경질 된 각료들 〉

1986. 후시오 마사유키 문부성장관 1988. 오구나 세이스키 국토청장관
1994. 사쿠라이 신당시 환경청장관 1995. 에토 다카미 총무청장관

▶ 1995.10.17. 고노 요헤이 (河野洋平) 외상

“남북분단의 직접적인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노 요헤이

▶ 1995.10.19.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총리

“한국합병 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의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다.” <공산당 요시오카 의원이 총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1995.11.22. 가메이 시즈카 (亀井静香) 자민당 조직 홍보 본부장

“국가의 역사에는 영광도 굴욕도 반성도 있다. 뭉땅 싸잡아서 『잘못 했습니다』라고 사죄할 일이 아니다.” <자민당 본부에서의 강연>

▶ 1995.12.18. 오자와 이치로 (小澤一郎) 신진당 간사장

“중국과 한국은 `반일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증오를 잊지 못하게 하고서는 우호가 있을 수 없다.’ <일본평론가협회에서의 강연>

▶ 1996.1.4. 에토 다카미 (江藤隆美) 총무청장관

“(한일합방) 왜 반성해야 하느냐, 일본은 것처럼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다.”
<미야자키현 현청에서 기자단과 간담 하는 자리>

▶ 1996. 이케다 유키히고 (池田行彦) 외무장관

“한국 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주권에 대한 침해다.”



〈이케다 유키히고〉

해설 우리 정부는 즉각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엄연히 한국 고유의 땅’ 이라고 대응했다. 시민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망언에 대한 규탄이 잇따랐다.

▶ 1996.5.30. 이타가키 다다시 (板垣正) 자민당 참의원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 다루고 있을 뿐 역사의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중군위안부가 일본 교과서에 게재된 점과 관련>

▶ 1996.6. 와타누키 다미스케 (綿貫民輔) 자민당 간사장

“실제로 중군간호부는 있었으나 중군위안부는 없었다.”
<사가시에서 열린 자민당 총선 후보자들의 예비 궤기 대회>

▶ 1996.6.6. 이타가키 다다시(板垣正) 자민당 참의원

“돈을 받지 않았느냐 위안부는 공창제도, 국가의 강제연행사실 없음”
<전 일본군 위안부 김상희(73세)와 면담한 자리>

▶ 1996.6.29. 오쿠노 세이스케 (奥野誠亮) 전 법무상

“당시는 공창 제도가 있었고, 상행위로 이뤄졌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사회에서>

▶ 1996.7.1. 오쿠노 세이스케 (奥野誠亮) 전 법무상

“미군의 점령정책 때문에 일본의 행위가 침략, 잔학 행위로 세뇌 돼 왔다.”

▶ 1996.7.18 이타카키 다다시(板垣正) 자민당 참의원

“군대위안부, 강제연행만 한 것 아님. 남경사건 희생자 20만명, 근거없음”

▶ 1996.8.8.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夫) 총리

“한반도 유사시 민단과 조총련 간에 게릴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한국과 북한이 하나가 되고 미군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 1996.8. 가메이 시즈카 (龜井靜香) 자민당 홍보본부장

“일 침략과 일 원폭투하는 무관하다.”

해설 같은 달 30일 자민당은 『독도, 조어도, 북방 4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선거공약으로 공식 결정.

▶ 1996.9.20. 사쿠라우치 요시오 (櫻内義雄) 자민련 중의원 의장

“군대위안부 강제모집, 도와야만 했던 전쟁의 배경 위에서 생각해야 한다.”



<와타누키 다미스케>

▶ 1996.9.23 와타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 건설성 장관

“중군간호부는 있었으나 군대위안부는 없었음.”

▶ 1996. 노나카 마사지 사이타마현 상이군인회 회장

“중군위안부는 매춘녀였다.” <월례운영협의회 석상에서>



<야마자키 다쿠>

▶ 1996.10.6.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자민당 총선 공약에 독도와 디아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

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정당”, “이를 항의할 경우 내정 간섭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다”

▶ 1996. 베스트셀러 『대장성 극비정보』中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다. 독일·영국·프랑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케시마 문제를 두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해군이 어떻게 저땅다고 얘기했다는데 바보 아닌가.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한 척만 가면 아 마 한국해군 7,8함은 전멸이다. 이진 과장이 아니다. 7,8함은 바다에서 몽땅 사라지게 된다”

해설 1996년초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 일본 정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 선포와 '독도는 일본땅' 주장이 교차하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 ▶ 1996. 일본 자민당 외교 조사회
“다케시마는 틀림없는 일본 영토”, “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때 다케시마가 한국 수역에 포함돼서는 안된다”
- ▶ 1996.2. 일본 연립 여당
“독도가 지난 1905년 일본 영토로 등록돼 시마네(島根)현이 관할토록 결정했는데도 한국측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인정했다. 한국측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적극 대처하라”
- ▶ 1996.9.27.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 참의원 간사장
“독도와 조어도는 일본 땅이다.”
- ▶ 1996.10.22. 하시모토 히로시(橋本恕) 외무성 대변인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며 이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 ▶ 1996.11. 가토료쥬(加藤良三) 외무성 아시아 국장
“한국은 독도 부두공사 중단하라.”

▶ 1997.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静六) 관방장관

“구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 당시에는 공창제도등 사회배경을 가르치지 않고 군대위안 부 문제만 가르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당시에는 엄연히 공창제도가 존재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례기자회견이 끝난 뒤>

▶ 1997.2.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신진당 의원

“일제가 한국을 식민 지배할 당시 좋은 일도 했다. 또 당시 공창이 존재했 으며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없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중의원 예산위 질의에서>



<가지야마 세이로쿠>

▶ 1997.2. 나카오 에이이치(中尾榮一) 건설상

“공창제도로 일반 여성들이 덕을 본 면도 있다.”

▶ 1997.2.6.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문부과학상

“종군위안부, 일본군에 봉사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모집 역할도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했다.”

▶ 1997.7.12.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신진당 의원

“150년에 걸친 영국의 지배가 홍콩의 번영을 낳았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너무 짧았다. 일본은 자본주의의 전제가 되는 토지소유권을 확립하여 한국 근대화의 기초를 닦았다.”

▶ 1998.8.1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림 수산상

“강제연행이 분명치 않으므로 교과서에 실는 것은 부당.”



▶ 1998.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 만화가

“위안부의 강제연행 따윈 없었다. 다들 위안부가 되려고 했다.” <‘대만론’이라는 만화>

▶ 1999.6.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전 건설상

“지금처럼 한국과 중국이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등에 간섭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10년, 2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따른 항의가 있자.>

2000년대

▶ 2000.4.9.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

“3국인(재일 한국인대만인)과 외국인의 흉악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지진 등이 발생하면 소요사건이 예상되며 그럴 경우 자위대에 치안출동을 요청하겠다.”

육상자위대 창설기념식에서. 이시하라는 자위대의 치안출동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불법입국 외국인 등을 3국인으로 지칭,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3국인’은 과거 한때 재일동포 등을 멸시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었다.



〈모리 요시로〉

▶ 2000.5. 모리 요시로(森喜郎) 총리

“일본 국가는 당연히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의 나라임을 국민에게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활동해 온지 30년이 지났다.” 한 달

넘게 동일한 '신국(神國)말인' 을 계속하여 물의를 빚음.

▶ 2000.5. 모리 요시로 (森喜郎) 총리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하루 앞둔 당시 KBS와의 인터뷰>



<스미다 노부요시>

▶ 2001.2.27. 스미다 노부요시 (澄田信義) 시마네현 지사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해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는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자 시마네현 5개 촌에 속해 있다” <시마네현 의회>

▶ 2001.2. 노로타 호세이 (野呂田芳成) 자민당 의원

“우리가 2차 대전에 참전해 서구의 식민주의 정책을 아시아에 몰아냈다. 동남아시아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일본 덕분에 독립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북부 아키타(秋田)현(縣)을 방문>

<2001.4.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



▲ 일 '새역사 모임' 한중비하 발언 6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니시오 간지, 니시베 스스무, 다쿠보 다다에, 고바야시 요시노리, 고분유, 니시오카 자카라.

▶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역사교과서 집필자,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명예회장

“우리의 목적은 교과서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다. 군 위안부는 그래서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사라져도 교과서만 개선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 니시베 스스무 (西部邁, 슈메이대학 학장, 전 새역모이사) 공민교과서 집필자

“아사히 신문과 중국, 한국 중상비방을 한 덕분에 합격했다. 이것을 내정간섭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린애 같은 대응이다. 우리도 중국과 한국에 대해 당당하게 간섭을 하면 된다.”

▶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 교린(杏林)대 교수

“자위대를 군대로 정상화하자고 하면 미국, 한국 등이 안 된다고 합창을 하는데 용서 못한다. 이번에 우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은 큰 돌파구를 연 것이다.”

▶ 고분유(黃文雄) 대만출신 평론가

“중국, 한국, 대만 학자들은 일본의 교과서를 검증할 만한 힘이 없다. 역사에 대한

학력(실력)이 매우 낮다.”

▶ 니시오카 지카라(西岡力) 도쿄기독교대학 교수

“한일합방은 합법적이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1965년 한일 협정 때 배상금이 아니라 과거청산 및 경제 협력금을 준 것이다.”

▶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일본 히로시마대학 교수

“중국이나 한국에는 언론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고 감정뿐이다. 그래서 논의가 안 된다.”

▷ 『새로운 역사 교과서』(후소샤 교과서) 본문 내용 中



▲ 후소샤 교과서

‘이것(일본군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수백년에 걸쳐 백인의 식민지 지배에 시달리던 현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 일본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여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독립이라는 꿈과 용기를 주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이름 붙였다. 일본의 전쟁 목적은 자존자위와 아이아를 서양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는 것에 있다고 선언했다.’

▶ 2003.6.2. 아소 다로(麻生太郎) 정조 회장

“조선인들이 성씨를 달라고 한 것이 원래 (창씨개명의) 시발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 2003.7.13.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일본 전 장관

발언 1 : “양국이 조인해 국제연맹이 무조건 승인했는데 (그것이) 90년이 지나 왜 식민지 지배가 되느냐”

발언 2 :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초(歌舞伎町)는 제3국인이 지배하는 무법지대” “최근에는 중국, 한국 등의 불법 체류자가 무리를 지어강도짓을 하고 있다” “도둑질이나 살인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100만명 있다”

해설 한 달 넘게 동일한 ‘신국(神國)발언’ 을 계속하여 물의를 빚음.

에토 다카미는 총무청 장관 때인 지난 95년 10월 일본은 한반도 식민지 통치 기간에 “좋은 일도 했다”고 망언했다가 한국 여론 등의 거센 비난과 반발로 장관직을 사퇴했던 인물이다.

▶ 2003.10.28.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총의로 선택한 것”, “조선인 선조들의 책임” <북한 납치 피해자를 위한 한 집회>

▶ 2003.11.1.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도 지사

“조선인이) 청과 러시아, 일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 지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차선택으로 일본을 선택했으며 이는 역사에 기록돼 있다”

“조선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토론하고 표결을 거치지 않았느냐” “당시 국제기구 가운데 그 어디서도 일본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

<기자회견>



<이시하라 신타로>

▶ 2004.1.9.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 계획에 대해>



<한국의 독도 우표>

▶ 2004.11.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중군위안부 강제연행 같은 표현 줄어 정말 잘됐다”

<오이타(大分)현 벳푸(別府)시에서 열린 타운 미팅에서>



<나카야마 나리아키>

▶ 2005.1.29.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일본 역사교과서 가운데는) 자학적인 교과서가 잔뜩 있다”

<미야기현 미야코노조시에서 열린 자신의 장관 취임 축하모임에서 인사말>

▶ 2005.3.29.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해야 한다”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 2005.3.31.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성 정무관

“위안부 교과서 포함 부적절하다”

해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성 정무관이 31일 위안부 문제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웃국가들의 역사관을 존중하는 ‘근린제국 조항’이 생기는 바람에 자학사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망언을 했던 장본인이다.



<고이즈미 총리와 ‘차기 총리후보 0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아베신조 관방장관>

▶ 2005.3.27. 아베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대리

“중군위안부는 요시다 세이지(한반도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여했던 일본인)가 지어낸 이야기다. 아사히

신문이 먼저 이를 보도해 독주했다. 일본 언론이 만들어 낸 이야기가 밖으로 나간 것이다”
<2005. 도쿄의 메이지진구 회관에서 열린 지방의원 심포지엄>

▶ 2005.4.10.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부회장

“지금 한국에서는 중군위안부들이 정기적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위안부가 아니라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

<새역모 왜곡 교과서 문부과학성 검정 통과를 자축하는 도쿄 강연회에서.>



<후지오카 노부카쓰>

해설 정대협(정신대대책협의회)은 이에 대해 12일 성명서를 내어 “후지오카 노부카쓰는 터무니없는 망언으로 올바른 역사청산과 정의·평화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지오카가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05.4.28.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 대리

“나는 지금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가 나라를 위해 순직한 분들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TV에 출연>

▶ 2005.5.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무성 장관

“운 좋게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일본경제 재건을 급속도로 진전시켰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강연>

▶ 2005.6.11.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중군위안부라는 말은 원래 없던 것”

해설 시즈오카에서 열린 교육개혁 시민모임에서 한 말이다. 이에 대해, 호소다 장관은 “중군위안부의 존재가 있었던 이상,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호소다 장관은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이다”라며 이렇게 말한 뒤, “중군위안부 문제가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해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 2006.1.31.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무장관

“(야스쿠니신사의) 영령은 ‘천황 폐하 만세’ 라고 했지 ‘총리 만세’ 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황이 참배하는 것이 최고다”

해설 아소 외상은 28일 나고야(名古屋) 시에서 열린 공명당 의원모임에 참석해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일왕이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중국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증단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총리가 자기 나라에서 ‘여기는 가선 안 된다’고 외국으로부터 지적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말하면 말할수록 가지 않을 수 없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더 피우고 싶어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왕은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정치 문제로 부각된 1975년 이후 그곳을 찾지 않고 있다.

▶ 2006.2.9.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曾根康弘) 전 총리

“(전쟁에) 징집됐던 사람들은 천황의 참배를 기다리고 있다. 총리의 참배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천황이 참배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을 만드는게 총리의 업무”

<간사이(關西) 재계세미나>

<참고자료>

다카사키 소오지 지음, 최혜주 옮김, 『일본망언의 계보』, 한울, 1996
 조정남, 『일본 보수주의 연구』, 교양사회, 2004
 한중일3국동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 신문사, 2005

[참고 사이트]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관련 자료 전시관: www.nanet.go.kr
 한국방송공사 '명성황후' event_우리역사 바로보기:
<http://www.kbs.co.kr/event/myungsung/main-history2.htm>
 한일문제연구원: <http://1945815.co.kr/index.php>
 구글: www.google.com
 야후 제팬: www.yahoo.co.jp
 네이버 뉴스: <http://www.naver.com> (2000-2006.2.5)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2003-2006.2.5)
 동아일보 인물 검색: <http://www.donga.com>

논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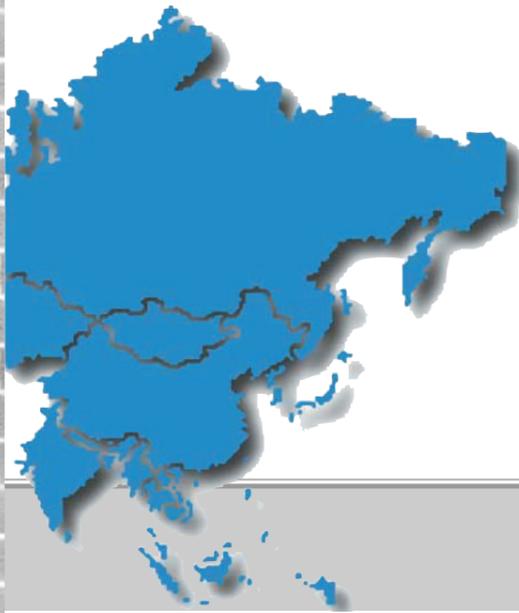
중앙아시아의 민주화노선을 재고하라 - 그레고리 고스

포커스

중앙아시아의 중국이민 - 예동근 역

기획연재

'님'의 재발견과 민족의 구체화 - 여태천





중앙아시아 민주화노선을 재고하라

그레고리 고스
(F. Gregory Gause III, 바몬트대학교)

중동에서 선거를 실시하면

미국은 아랍의 민주주의를 서서히 정착 시키려 노력하면서, 부시대통령은 이것을 '세대적인 과제'로 부르고 있다. 부시정권과 아랍 민주화 정책의 지지파는 민주화의 시도로 미국적가치가 아랍세계에 침투할 뿐 아니라, 미국의 안전보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랍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반미테러를 만들어 내는 사회 환경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보장 목적에도 합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민주화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문은 남는다. "아랍세계가 보다 민주적인 지역이 되면 정말 테러리스트나 테러집단이 탄생하기 어렵게 될 것인가." 아랍에서 민주주의 촉진책의 근거를 지탱하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단은 정직한 전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테러리즘이 왜 일어난 것인가의 전모는 해명되지 않고 있으나, 입수가능 한 자료로 판단하는 한, '민주주의와 테러의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 중동지역에서

의 민주화의 진전에 의해, 대미테러공세가 없어진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알 카이다를 비롯해 알 카이다와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은 이슬람국가에 관한 자기들의 비전을 중동에서 실현하려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중동에 정착하면, '沼에서 물을 빼는' 것이 돼, 아랍사회에서의 테러조직에의 지원도 단절되고 테러리스트의 신규 충원도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희박하다. 중동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경우 어떤 정부가 탄생할 것인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테러정책을 취하는 이외에도, 아랍-이스라엘 평화, 페르시아 만의 안정유지, 석유의 안정적 공급 등, 중요한 미국의 정책목표를 둘러싸고 워싱턴과 협조할 것인가. 최근의 아랍세계에서 여론조사나 선거결과를 보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면, 현재의 권위주의 정권보다도 미국과의 협조에 난색을 표하는, 이슬람주의정권이 새롭게 탄생할 가능성 쪽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워싱턴은 아랍의 민주화노선을 지금 다시한번 재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확실히 부시정권의 아랍민주화구상은 미국의 민주적 가치를 세계에 넓혀가는 시도로

옹호될지 모른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 이스라엘주의자가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실제로 통치할 단계가 되면 종교색은 약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언젠가는 민중들도 이슬람주의정권에 환멸을 느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실시를 중시한 민주화정책을 취하더라도, 대 테러전쟁, 그 밖의 중동에서의 미국의 절실한 정책이익이 촉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랍세계의 민주화를 중시할 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졸속하게 선거실시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주의집단, 내셔널리스트집단, 리버럴한 정치집단의 육성을 촉진하는 노선으로 전환, 이들 집단이 이슬람주의정당과 대등하게 정치의 틀 속에서 경쟁해 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선거가 실시돼, 그 결과

부는, 압정, 절망, 과격주의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독재자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책임 있는 반정부세력이 탄생하지 않고, 오히려 반정부파는 지하에 숨어, 과격화되고 있다. 한편 독재자는 스스로의 사회적, 경제적 실정에 대중이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나 민족을 비판, 폭력으로 연결되는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 독재자와 증오와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들은 방치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상황과 마주치는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한 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결합과 테러리즘을 연관시켜 파악하는 것은 부시정권 만이 아니다. 2004년 대통령선거에서, 존 케리상원의원(민주당, 메사츄세츠주 선출)도, 대 테러전쟁의 일



테러리즘이 왜 일어난 것인가의 전모는 해명되지 않고 있으나, 입수 가능한 자료로 판단하는 한, '민주주의와 테러의 감소' 사이에 인관 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이해와 정합성이 높은 노선을 취하는 정권을 틀림없이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선으로서의 전환이 불가결하다.

잘못된 전제

부시대통령은 2005년3월의 연설에서, 아랍세계에서의 민주화 촉진책이 왜 미국의 이익에 있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명쾌한 코멘트를 한 바있다.

확대중동지역에서 과격주의와 테러의 대두를 촉진하려는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평화를 유지해 가기 위한 우리들의 전략이다. 확대중동지역의 일

환으로 중동에서의 대대적인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정권의 고관으로 중동정책에 뛰어든 마틴 인디크도 클린턴 대통령이 아랍 이스라엘 평화에 정력적으로 뛰어든면서도, 한편으로 중동의 민주화를 중시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 워싱턴은 중동의 정치개혁에 눈을 돌리도록 촉진했다.

최근 인디크가 클린턴정권의 국무성, 정책입안부장이었던 모돈 할페링도 한 저작에서, 알 카이다의 루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에서의 빈곤과 교육의 결합에 있다고 판단, '빈곤이나 교육 문제는 이러한 제국의 권위주의적 체질 결과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뿐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사회에 확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이, 뉴욕 타임즈의 컬럼리스트, 토마스 푸리드만이다.

권위주의 체제가 테러를 조장 하는가

이렇듯 민주주의의 결함과 테러리즘의 상관성은 지금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테러와 민주주의의 인과관계를 테마로 하는 학문적 연구는 거의 없다. 테러리스트와 테러집단에 관한 케이스 스타디나 서베이는 많이 있으나, “민주주의 확대에 의해 테러리즘이 감소하는가.”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문제의 일단은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질에 있다. 유럽의 미디어는 국내 테러보다도, 국경을 초월한 국제테러를 보다 상세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테러에 관한 통계는 어디서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취급하는 항목은 있으나, 누가 실행했는가, 실행 범이 비민주적인 나라의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항목은 없다.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밖에 없는 이상, 학문적 연구에서 도출되는 것은 잠정적인 결론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의 대부분은 부시 정권의 정책 불력을 지탱하는 ‘테러와 권위주의체제의 인과관계’에는 부정적이다. 1980년대의 테러연구로서 빈번하게 인용되는 윌리엄 뉴반크와 네나드 웨인바그라는 두 사람의 정치학자에 의한 연구는 테러의 대부분이 민주국가에서 일어났고, 그 실행법도 희생자도 민주국가의 시민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75년부터 97년까지의 테러분석을 한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쿠원 리는 민주적인 정치참가가 진전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테러가

일어날 빈도가 적으나, 리버랄한 민주적 제도가 행정부에 과하는 제약이 테러를 유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였다. 로버트 페이프는 최근의 저작 <자폭테러의 전략 블록>에서, 자폭테러의 실행법의 대부분이 민주주의국가를 공격대상으로 하나, 폭파테러를 행하는 테러집단의 동기는, 군사적 점령에의 반발과 민족자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발표하는 테러보고의 숫자를 봐도, 테러와 권위주의정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국무성의 ‘글로벌 테러 패턴’이라는 타이틀의 연차보고에 의하면, 00년부터 03년 사이, 프리덤하우스가 ‘자유’라고 분류한 나라에서 269건의 테러가 일어났고, ‘부분적으로 자유’라고 분류된 나라에서 119건의 테러가, ‘자유가 없다’고 분류된 나라에서 138건의 테러가 일어났다. (이들 숫자에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이스라엘 공격이나, 타국에서 계획된 9.11과 같은 테러는 포함되지 않고, 이들을 추가하면 민주국가에서 테러의 건수는 보다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테러리스트가 탄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보다 훨씬 높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이들 숫자는 특정국가에서의 테러의 발생과, 그 나라 시민이 향유하는 자유의 수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어쨌든 민주국가에서는 그 밖의 다른 정체의 국가보다도, 테러가 일어나기 어렵지는 않는 것이다.

물론 테러대상국이 무작위로 결정되는 않는다. 미국정부의 공적 데이터에 의하면, 테러의 대부분은 소수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03년에 ‘자유가 없다’고 분류되는 나라에서 일어난 테러의 대부분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이라는 두 개의 나라에 집중되고

있다. 민주화에 의해, 이들 국가에서 테러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화프로세스가 테러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자유'스러운 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75%가 인도에서 발생한다. 물론 파키스탄 내의 이슬람과격파에 의한 인도 영 카슈미르에서의 테러가 이 숫자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테러 실행법의 모두가 외국인이지도 않다.

실제로 카슈미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인도 국내에서 불만을 누적시킨 세력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테러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는 강력하고 약동적인 민주국가임에 불구하고, 인디라 간디와 그의 자식인 라지브 간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수상이 암살당한 나라다. 민주주의로 테러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인도에서의 테러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국가인 인도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권위주의국가인 중국의 경우를 비교하면, 민주주의 테러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00-03년의 국무성의 테러보고를 보면, 인도에서 203건의 테러가 일어난 반면, 중국에서는 한번도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다. 76-04년의 테러분석을 한 연구를 보더라도, 인도에서 400건의 테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중국에서의 테러건수는 겨우 18건에 불과하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일어난 테러의 1/10밖에 보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도와 비교하여 테러건수는 확실히 적다. 부시정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권위주의정권과 테러건수에 인과관계가 강하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중국과 인도에서의 테러건수는 역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70년대와 80년대의 유럽을 중심으로 수 많은 테러집단이 민주국가에서 출현했음도, 정부통치 스타일과 테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아일랜드나 영국의 아일랜드공화국 잠정과, 일본의 연합적군, 서독의 독일 적국 등이다. 스페인이 민주국가로 변모했음에도, 바스크조국과 자유에 의한 테러는 없어지지 않았다.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한 터키도 70년대 말까지, 정치적 폭력에 시달렸다. 이스라엘에서는 강력하고 훌륭한 민주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나 그래도, 테러리스트가 생겨나고, 라빈 전 수상은 이스라엘인에 암살당하기도 했다. 05년 7월에 일어난 런던 테러의 실행범의 적어도 3명도 민주적인 영국에서 태어나, 자란 인물이었다. 민주화 도상에 있는 이라크에서는 거의 매일 테러가 일어나는 통탄할만한 상황이다. 더욱 오크라 호마 시티 연방빌딩 폭파 테러는 미국의 민주주의마저도 국내의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을 저지할 할 수 없었음을 시사 하는 아픈 기억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주주의 혹은 그 밖의 정체와 테러와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통계상의 데이터는 존재치 않는다. 포스트 9.11종교과격파를 분석, 높은 평가를 얻은 <신의 이름에 의한 테러>의 저자인 쥘리아 스타인은 "이슬람과격주의와 싸우는데, 반드시 민주주의가 최선책은 아니다"고 지적, 그 이유로, "그것이 어떤 나라든, 민주화예의 이행 프로세스 속에 있는 나라는 테러가 대단히 일어나기 쉽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는 나라의 정체와는 관계없는 곳으로부터 생겨나고 있다. 아랍세계가 보다 민주적이 되면, 탄생하는 테러리스트의 수도 적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을 근거가 없다.

알 카이다와 민주주의

그렇다고 한다면, 대 테러전쟁의 일환으로 민주주의의 촉진을 주장하는 논리는 이론상으로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게 된다. 민주체제가 뿌리내리면 테러도 적어진다고 하는 주장의 정제는 “개방적인 정치제도 아래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여론의 장에서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스트 동조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에 호소할 필요도 없어진다” 였다. “선거에서 한번 패해도, 언젠가는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민주적인 방법 이외의 수단에

괜찮다는 상식에서 벗어난 열의를 가진 테러집단이 자기목적에 사회에 인식시키고 실현시키리라는 과격한 생각을 가슴에 품은채,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 참가한다고 하자, 이때 그들이 생각한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테러리스트, 그리고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은 민주주의를 공격하게 된다. 이라크에서는 05년1월의 선거가 성공하여 민주적인 프로세스가 기능하는 것이 실증되었으나, 이라크인 혹은 외국인의 테러리스트가 새로운 정치질서에 공격을 그만두는 일은 없는 것 아닌가. 테러집단은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소규모 비밀주의의 집단이다. 민주적 원칙에 의해 조직



알 카이다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신용하지 않은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서일 뿐 아니라, 자유스러운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호소하는 일은 없다. 민주주의의 물을 지키면, 과격주의에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으며 아랍민중도, 분노를 미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국정부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집단이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는 아젠다를 내거는 것은 먼저 있을 수 없다. 또한 테러집단이 리버럴한 민주주의 내의 다수결주의와 소수파의 권리보장의 기본원칙을 거절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테러 세력이 스스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민주적인 정치구조 속에서 자기들의 목적보다도 민주적 원칙을 중시할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과연 있을 것인가.

무방비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되지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강력한 지도자아래 결집한 테러집단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포 속에 빠트리는 행동도 불사하는 강한 결의를 가진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선거에서 지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집단이 그때까지의 노선에 대한 생각을 변경시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이슬람 제국이 민주국가가 돼서도, 대 테러전쟁에서의 미국의 주요한 적인 알 카이다가 폐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사마 빈 라덴의 민주주의에의 입장은 명쾌하다. 그는 이 제도를 싫어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정치모델은 이슬람교의 교주로서의 카리프에 의한 통치에 지나지 않으며, 빈 라덴은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달리반에 의한 통치를 근대에서는 칼리프 통치에 보다 가까운

형태로 보고 있다.

빈 라덴은 03년10월에 발족한 '이라크 인에의 메시지' 속에서, 아랍세계 속에서 '배교자의 정부, 혹은 유대 기독교 십자군이라는 침략자에 대해, 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대체해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빈 라덴은 민주주의를 '상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수법'이라고 말하고, '부지한 사람들의 신조'라고 못 박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빈 라덴의 동맹자인 잘 카이브는 05년1월의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속에 순종해야 할 의원(정치가)은 인간이며, 신은 아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다신교이며, 잘못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의 신앙, 일신교라고 하는 가르침과 모순되며, 약하고 무지한 인간을, 신의 가장 신성한 임무인 통치와 입법을 둘러싸고 신의 파트너로 삼기 때문이다."

알 카이다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신용하지 않은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서일 뿐 아니라, 자유스러운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랍제국이 민주화하면, 테러리스트들이 노선을 변경시킨다."고 생각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아랍제국의 정부가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과의 평화에 합의, 워싱턴에 있어 받아드려질 수 있는 절도 있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테러리스트는 점점 과격화 해져 갈 것이 틀림없다.

알 카이다는 민주주의만 아니라, 중동에서의 미국의 아젠다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이 바라는 것과 같이, 민주화한 중동제국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커다란 역할을 받아들이어서, 미국의 목적의 실현에 협력한

다면, 아랍세계에서의 반미주의가 없어지며, 알 카이다에의 지지도 활동자금에의 지원도 충원도 소실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이브한 생각이리라.

선거는 이슬람주의를 대두 시킨다

그것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랍세계의 정부가, 현재의 권위주의정권과 같은 대미협조노선을 취하는 것도 거의 있을 수 없다. 다분히 아랍제국의 여론조사를 보는 한, 아랍민중들은 강하게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되면, 아랍세계에서 투표율은 미국에서의 선거 투표율을 확실히 상회할 것이다. 그러나 아랍의 민중들 대부분은 미국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연히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보다 민중의 의견을 존중할 정권이 아랍세계에 탄생하면, 필연적으로 신정부는 반미노선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중동에서의 민주화는 단기적으로는 중동에서의 미국의 기지사용, 아랍·이스라엘 평화, 대테러 전쟁을 포함한 미국의 중요한 정책목표를 둘러싸고, 대미협조노선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슬람정권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역사는 아랍세계에서 법에 따른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면 최대의 우위를 손에 넣는 것은 이슬람주의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최근 아랍세계에서 행해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이슬람주의 정당은 주요한 야당세력으로 약진했다. 모로코에서는 02년의 제1차 선거에서 이슬람주의정당인 신정의발전당이 325석 가운데 42석을 획득했다. 동년, 바레인의 의회선거에서도 40의석 가운데 19-21석을 이슬람계 후보자가 차지하고 있다. 03년 예멘에서의 의회선거에서도, 이슬람주의자와 부족이 연합한 예멘개혁당이 301석 가운데

46석을 차지, 지금은 주요한 야당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년의 쿠웨이트의회선거에서도 이슬람주의자가 50의석 중 17의석을 차지, 유력한 이데올로기연합을 형성했다. 05년에 들어서도, 이슬람주의세력의 신장은 쇠퇴하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방평의회 선거에서, 이슬람계 후보는 리야드에서 7의석 중 6석을 차지, 젓다와 메카에서도 압승했다. 이라크의 의회선거에서도 아리 시스타니가 승인한 시아파연합이 275석 중 145석을 차지, 아라비 수상이나 당시 야울 대통령이 이끄는 보다 세속적인 정치세력은 45석 밖에 얻지 못했다.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주의자가 자유스러운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04년에 조구비 인터내셔널과 메릴랜드대학이 행한 공동조사에 의하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방의 조사대상의 거의 반수가 “이슬람교의 종교지도자는 보다 정치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아랍사회가 민주적이 되면 될수록, 이슬람주의자가 권력을 탈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한 이슬람주의자가 민주주의의 룰을 받아들여 정치적 폭력을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중동에서의 미국의 외교목표를 받아들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비 이슬람주의 세력을 지원하라

부시정권에 의한 아랍민주화의 시도는 중동을 온상으로 하는 대미테러대책으로서 그 정도 성과를 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권위주의 정권에 비해, 대 테러전쟁을 포함한 많은 미국의 아젠다에 협력적이지 않은 세력을 권력포스트에 안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유감스러운 일이나, 현

재 워싱턴에는 미국에 협력하는 편에서 아랍제국의 권위주의정권과 협력해 가는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

워싱턴이 아랍세계의 민주화의 추진에 고집한다고 해도, 이들 지역에서의 과거의 선거결과로부터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모로코와 같이 비 이슬람계 정당이 확실한 정치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슬람세력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힘을 가지는 것이 어렵다. 같은 일은, 세속주의를 내거는 군부, 이미 정치기반을 확립하고 있는 세속정당과의 대립을 거쳐, 이슬람주의정당이 온건화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또 유권자의 입장이 다양한 레바논에서도, 히스포라등 그 밖의 이슬람과격파는 선거에서 커다란 지지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 이슬람계 정당이 억압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같은 나라가 민주화하면, 이슬람주의 정당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알제리아, 이집트, 예멘에서의 지배적 정당이 이슬람주의정당을 타격한다하더라도, 그것으로 안도해서는 안 된다. 지배정당이 정부나 치안부대에 의한 보호를 얻지 못하면, 민주제에의 이행기에 있는 선거에서 승리를 획득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의 아랍제국의 정권에 대해서 리버럴 세력, 세속주의세력, 좌파, 내셔널리스트와 그 밖의 비 이슬람계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인정하도록 노력해, 이들 세력이 땅에 발자취를 남겨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환경의 출현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은 미국의 외교목표나 미국의 정치적 가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정치집단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법은 아

랍 현정권이 리버럴 한 정치세력의 활동을 억압하려 할 때, 그러한 태도에 반대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일이다.

이미 부시정권은 카이로가 이집트의 리버럴 한 개혁주의자인 사드 이딘 이부라힘과 아이만 노웰을 투옥시킨 후, 이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05년5월에 비폭력적인 정치 활동가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긴 형기를 과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워싱턴은 그것이 아랍의 리버럴 세력을 실망시킨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노선을 당장 포기해야 할 것이다. 부시대통령, 그리고 부시정권의 고위관리들은 아랍세계의 민주주의에의 이행은 간단치 않고,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오면서도, 아랍민주화노선을 옹호하려고,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티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선거를 이슬람세계에서의 선거의 성공예로서 들고 있다. 그러나 비 이슬람계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이슬람세력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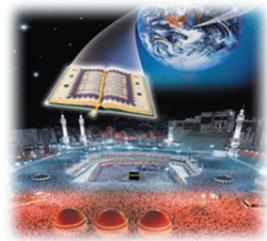
아랍세계의 민주화구상을 둘러싼 워싱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노선만이 아니다. 동일하게 문제인 것은 “워싱턴은 다른 제국에서의 정치적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혹은 좌우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 믿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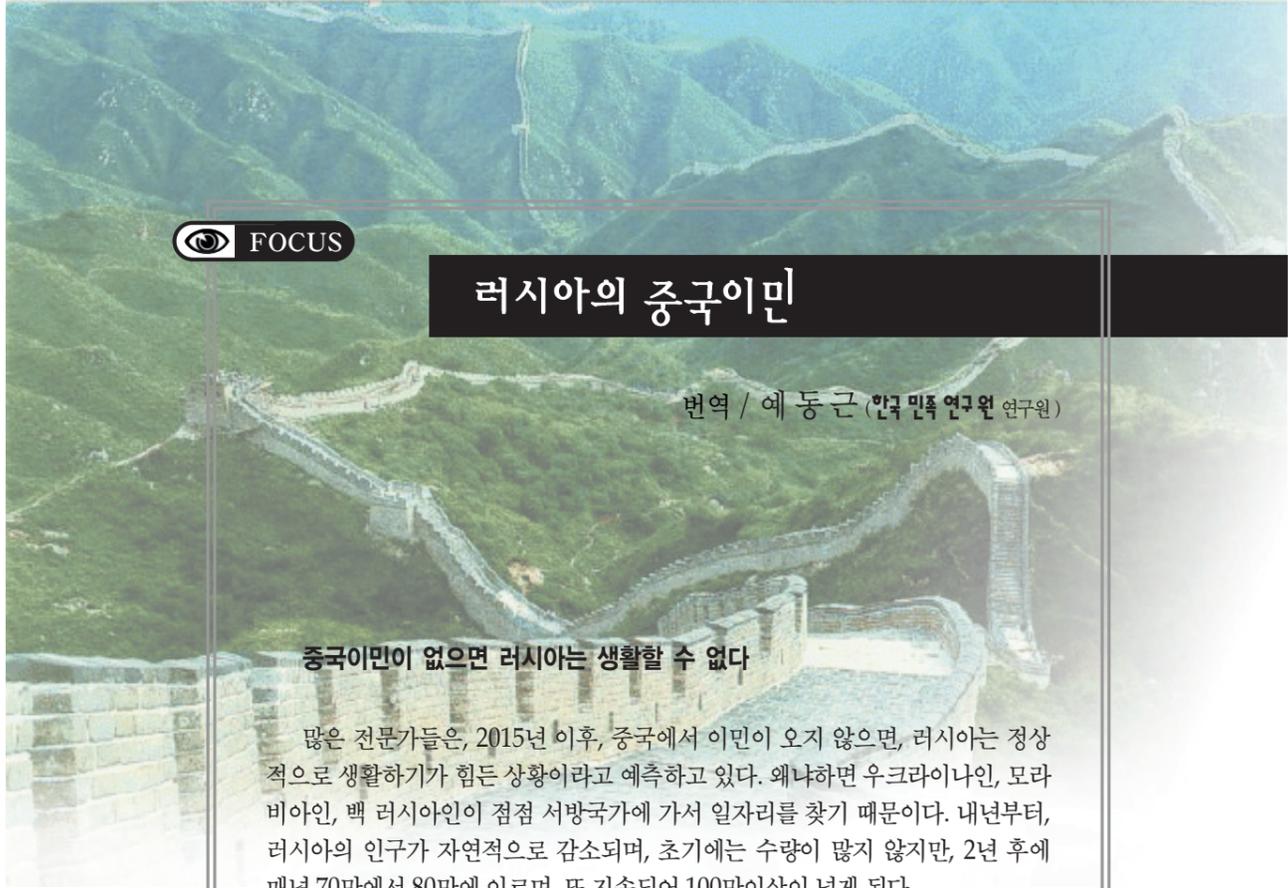
확실히, 아랍에 민주주의 정착하면 미국과 잘 협조하는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보는 나이브한 생각을 공연하게 표명하는 부시정권의 고관은 누구도 없다. 그러나 아랍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워싱턴의 고관들이, 민주체제로 이행하면, 동구,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에서의 민주화에의 제도이행과 같이, 미국의 정책목적의 실현을 지지할 것인가, 적어도 방해되지 않는 정권을 아랍세계에서 언젠가는 탄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동구,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에서 리버럴리즘이 커다란 조류를 형성한 것은, 이데올로기상의 커다란 라이벌이었던 공산주의가 완전히 붕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아랍세계에는 리버럴한 민주주의의 대체책으로서 ‘이슬람적 해결’을 부르짖는 이슬람주의운동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6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서도, 미국의 계획대로 현지의 정치가 전개되지 않은 이라크의 케이스 앞에, 워싱턴의 그러한 자만이 분쇄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아랍세계의 민주화라는 아득한 과제를 앞에 두고서도, 겸허함도 인내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아랍에서의 민주화구상을 ‘세대적인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면, 모든 미국인이 아랍지역의 민주화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특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FOCUS

러시아의 중국이민

번역 / 예 동근 (한국 민족 연구원 연구원)

중국이민이 없으면 러시아는 생활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2015년 이후, 중국에서 이민이 오지 않으면, 러시아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인, 모라비아인, 백 러시아인이 점점 서방국가에 가서 일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러시아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되며, 초기에는 수량이 많지 않지만, 2년 후에 매년 70만에서 80만에 이르며, 또 지속되어 100만이상이 넘게 된다.

러시아과학원의 인구사회경제문제전문가 안나 자이워치크스키카나는 이렇게 경고하였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치이다.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러시아인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러시아인은 우선 이민수입이 요청 된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이민접수를 거부하면, 현재 40세인 러시아인들은 전혀 퇴직금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에서 조직하는 여행단체와 재래식 상거래를 하는 상인단체들에게 무비자대우를 주는 것이 제일 우호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인구로 친구를 사귀자”는 계획이 있다. 우리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은 노동력이 넘쳐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2년 후 중국에서 세계무역조직의 규정에 따라 농산품시장을 개방하면, 이 문제는 더욱 첨예화된다.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4.9억의 노동력인구에서 1.7억의 농촌노동력만 남기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중국은 현재 급히 2.5억 내지 3억의 인구를 처리해야 하는데, 중국 안에서는 이를 감당할 일거리가 없다. 현재 단시일 내에 이 많은 인구가 세계각지로 수출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러시아로 인구가동의 출구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2/3의 러시아인들이 중국이민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이민에 대해 노동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이민을 시도한다

유리아 거얼푸라스는 유럽인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그들은 우선 노동의 종류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은 세련된 목공과 제강 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들에 대해 전적으로 개방하였다.” 만약 우리가 이민이 저렴한 노동력을 수요로 하는 경제영역에만 유입되게 한다면, 중국인구의 이동은 러시아의 재난으로 변할 것이다.

러시아 전국여론조사의 수치를 보면, 원동지구의 81%인(전체 러시아인 인구의 66%를 차지)사람들이, 중국인이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러시아의 재산축적에 대한 ‘위험한 존재’로 인식한다.

현재 상호불신임의 상황에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연구에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래도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두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양국의 같은 수의 사람들이 모두 마약이 범람하고, 국제 테러와 빈곤의 문제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에 대한 만족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54%의 러시아인과 49%의 중국인들은 가정의 기본수요에 만족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33%의 러시아인과 34%의 중국인들은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고, 양국의 8%의 사람들이 밥벌이 정도의 돈만 벌수 있는 정도면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2%의 러시아인과 4%의 중국인은 자신들의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양국의 국민들은 ‘주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판단이 일치하였다. 실업, 마약, 범죄율 상승에 대해 많은 일치점이 있는데,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사람들은 관원들의 부패와 뇌물 횡령에 대한 사회적 환경오염에 대하여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러시아인들은 이런 불행에 이미 습관화 된 것 같다. 우리와 중국인들이 공동적으로 의식한 점은 연합하여 어떤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34%의 러시아인과 54%의 중국인들은 모두 미국을 ‘비우호적인 국가’로 말하고 있다.

러시아 주간지<불꽃>2005년9월5일에 게재된 글 “러시아 상인들이 본 중국동료”라는 글에서는 중국인들은 총명하며, 일도 잘한다. 그러나 혼자하기 좋아하고, 집단정신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연한 갈색 파마를 한 러시아인 니지타와 흑색 생머리 중국인 張은 러-중합자회사의 두 지배인이다. 이 회사의 업무는 중국에서 음식업에 필요한 특수재료와 조미료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러시아가 최초로 중국과 합작한 러-중 합자기업이다. 니지타와 장은 1986년에 알았으며, 1989년에 같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금방 개혁이 시작되어, 장은 150명의 중국인과 함께 모스크바로 가서 학습하게 되었다. 니지카는 중국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중국인과 러시아인이 합작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합작을 하는 선례를 보였다. 이것은 모스크바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Q : 왜요?

A : (니지카) : 러시아인과 중국인의 차이가 너무 크다. 모두 상대방을 깔보고 있다. 우리 러시아인들은 모든 민족과 화해 할 수 있지만, 중국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옛 부터 믿지 않는다.

Q : 그럼, 중국친구와는 어떻게 같이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A : 저와 장의 합작은 특수한 사례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장사하기 전에 이미 아는 사이였고, 서로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우정이 이미 하나의 자본으로 변한 것이다. 내가 장의 자식한테 유아차를 사줄 때, 중국에는 그런 유아차가 없을 때였다. 우리들은 교분이 있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이미 좋은 친구가 되었다. 중국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기는 힘들지만,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와 장이 같이 손해를 보면, 단합하여 돈을 다시 벌었다. 중국친구와 제일 힘든 것은 상호신임을 취득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인과 우리사이

의 생각은 종래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Q : 무슨 방법이 있어요?

A : 그들은 더욱 신중하고, 더욱 인내성 있고, 더욱 영민하다. 문제에 부딪치면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해? 이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등등 형식이지만, 중국인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면서 더욱 많은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일을 할 때 매우 논리가 있고, 착실하게 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급한 일에 부딪치면, 매우 힘들어 지는 것이다. 중국인은 기억력이 매우 좋은 것이다. 장사를 할 때 더욱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토론할 문제들을 매우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다. 그들은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일에 대하여 매우 잘 하는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단시기로 단합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담판도 좋고, 일상생활도 좋고, 중국인들의 침착함과 자신감은 매우 중요하다.

Q :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이 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사람들은 러시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 : 게으르고, 책임지지 않으며, 경솔하다.

Q : 중국인들을 인솔하기 힘든가요?

A : 회사에서 제일 머리 아픈 일이 간부문제다. 우리에게만 족을 주는 중국인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양호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여기에 온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원동지역에서 모든 방법을 써서 오려는 중국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일부의 모험가들이 포함되며, 러시아에 와서 운수

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들은 중국 사람들이 매우 부지런하고 지휘에 복종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도박과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Q : 중국 직원이 일을 잘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요? 욕하나요? 아니면 벌금을 내는가요?

A :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러시아에서는 광고로 고용자를 모집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매 사람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를 한다.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왔는가? 어떤 지방에서 공부하였는가? 등등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여기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은 모두 러시아 이름을 갖고 있다. 매일 출근하면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장의 부인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였다. “니지타, 여기 봐봐, 와샤는 매달마다 5분전에 회사에 도착하고, 미씨는 10분 전에 도착한다. 그러나 뽀리야는 몇 번이나 2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다. 3,4번은 겨우 1분을 앞두고 도착하는 것이다. 어느 날 난 그가 지하철에서 뛰는 것을 보았다.” “그가 지각하였는가?” 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 오는 것은 그가 이 일에 대해 아까지 않는 것을 설명한다.”

그 때 내가 생각한 것은 러시아인들은 이렇게 가혹한 분위기에서 일하기 힘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요구는 모두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영원히 그렇게 많은 러-중합자기업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Q : 중국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A : 조선인과 일본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일하기 좋아한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혼자 하기 좋아한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중 하나면 물을 길어서 마시고, 둘이면 같이 매고 와서 마시고, 셋이면 마실 물이 없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한 사람이면 약하지만 두 사람이면 강하고, 세 사람이면 무적이라고 한다.

Q : 중국 사람들이 뽀뚜러드보와 모스크바에 주택단지 건설을 하는 전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두 개의 예를 들어 보자. 모스크바의 신촌 지하철 옆에 건설한 “友誼” 무역 성을 보자. 원래 중국친구들이 여기서 중국 상품을 파는 가 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중국 사람들은 백화점을 전부 임대하였다. 지금은 거기에 모두 유럽 상품이다. 중국 사람들은 전혀 단합되어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점포를 임대하면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모스크바에 天客隆이란 슈퍼가 있는데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개업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파산되었다. 이제 알았지요. 중국 사람들은 집단주의 정신이 없는 것이다. 사람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 그를 돕거나 건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www.people.com.cn〉 2005年09月27日10:55



'님'의 재발견과 민족의 구체화

여 태 천

시인, 고려대학교 국문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고려대 강사.
계간 '서정시학' 편집위원.



'님'의 재발견

우리 문학에서 '님'은 매우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고대가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에서의 '님', 조선시대 황진이 시조의 한결같이 등장하는 '님', 그리고 고려가요 「가시리」에서의 '님'은 모두가 애인이거나 연인이다. 이에 반하여 고려말의 충신인 정몽주와 조선의 충절 정철의 작품에 등장하는 '님'은 당연히 임금이다. 또한 고려가요 「사모곡」에서 노래하는 '님'은 부모다. 빼어난 우리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이러한 '님'은 대부분 주체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들이다. 그러므로 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식민지적 근대라는 상황에 직면한 1910년대의 주체는 자아를 실현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님'은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정서의 구조'의 역할을 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님'은 이제 하나의 비유를 넘어 시적 상징의 고도(高度)를 점하게 된다. 예컨대, '님'과의 이별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 '님'의 부재에 대한 그리움은 식민지라는 사회·역사적 상황과는 별도로 우리 시문학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1920년대에 '님'이 어떻게 재발견되고, 새롭게 그 의미를 만들어갔는지를 살펴보자.

낭만화된 '님'

1910년대 말 동인지 문인들에게 분열적이며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던 '님'의 특성은 1920년대 시에서도 두루 발견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 '님'이 매우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애인' '그대' '당신' 등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 불려졌지만, 사실 그 대상은 하나였다.

애인
아리따운!
애인의 목소래
들리도다
산을 넘고 물도 건너
아아! 애인의 고운 소래,
들어라! 저기 저 소래를,
아리따운!
애인이 오도다
— 동원, 「애인」(『창조』 8호, 1921. 1. 27) 부분

동원(東園) 이일의 시 「애인」은 그 제목부터 매우 낭만적이다. '애인'이라는 단어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축소된 기의를 내포한다. 시인이 부르는 '애인'은 보편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이고 내밀한 대상으로서의 연인이다. "아리따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애인'은 감각적이기까지 하다. "산을 넘고 물도 건너" 들려오는 '애인'의 목소리가 주는 애뜻함은 분명 새로운 것이다. 1920년대의 '애인'이 낭만화된 '님'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그들의 시가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극적으로 표출한 「불노리」(『창조』 1호)에서 주요한(1900. 10. 14~1979. 11. 17)이 부르는 '님'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민족적 색채를 강하게 풍긴다.

봄이 옵니다 님이여
따뜻하게 풀린 땅에 폭 안기고 싶은 —
묵은 발에 까마귀떼
그 울음 소리까지 곱게 들리는 —
봄이 옵니다.

저기 햇숨같은 구름떼
푸른 하늘 햇빛 — 오오 님이어
고향생각 몹시 나는
봄이 아납니까.

— 주요한, 「흰구름」(『폐허이후』, 1924. 2) 전문

시인은 봄이 온다고 ‘님’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님’과 봄을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봄의 “햇숨같은 구름떼”와 “푸른 하늘 햇빛”은 봄과 ‘님’이 동시에 지니는 특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다. 시인은 봄이 되어 “따뜻하게 풀린 땅에 푹” 안기고 싶다고 고백한다. 시인의 이 고백은 “묵은 밭에 까마귀떼”의 울음소리까지 곱게 들릴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고향”이다. “고향”이란 ‘님’의 비유인 민족이자 조국이다. 매우 개인적인 느낌을 술회하고 있는 시이지만, 이 시에서 우리는 낭만화된 ‘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시의 일반적인 흐름은 절망과 퇴폐의 분위기였다. 대체로 그것들은 순결한 개인과 타락한 사회라는 양분론에 의지하여 우울하고 도피적인 경향을 보인다. 우리 문학의 초창기를 절망과 퇴폐의 언어로 장식했던 황석우, 오상순, 박종화, 박영희 등의 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현실세계에 대한 환멸(「말세의 회탄」, 『백조』 창간호, 1922. 12)을 노래했던 이상화(1901. 4. 5~1943. 4. 25)는 절망과 체념을 딛고 꿈의 세계에 대한 낭만적인 동경을 보여주었다. 그가 “침실”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마돈나”는 바로 낭만화된 ‘님’ 그 자체다.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疲倦하여 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
느라.

『마돈나』 오렴으나, 네 집에서 눈으로 遺傳하든 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느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덴지 모르게 숨는 두별이여라.

[……]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렴으나, 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이 내목을 안어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나라로 가고말자.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寢室 열어도 업느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렴으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마돈나』 가엽서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업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파란피 — 가슴의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도다.

『마돈나』 언젠들 안갈 수 있으랴, 갈테면, 우리가 가자, 끄올려 가지말고!
너는 내말을 믿는 『마리아』! 내 寢室이 復活의 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궁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歲月 모르는 나의 寢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 이상화, 「나의 寢室로」(『백조』 3호, 1923. 9) 부분



〈이상화〉

이 시에서 “마돈나”는 화자의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분리된 상태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을 해소시켜 주는 존재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성모마리아에서 차용된 것이다. 시적 화자는 聖과 性의 복합적 요소가 상호 침투된 “마돈나”를 통해 유교적 세계관으로 나타낼 수 없는 욕망을 서구적, 근대적 세계관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한다. “마돈나”는 화자에 의해 종교적 차원에서 개인적 욕구를 실현해 주는 존재로, 더 나아가 사회적 대상으로 변모된다. 훼손된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구의 대상으로서의 “마돈나”가 조국을 의미할 때, 그를 애타게 부르는 행위는 조국 상실의 아픔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 시에서 “침실”은 “疲困하여 돌아가려는” 곳이며,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곳이며, 동시에 “復活의 洞窟”이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묘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침실”이라는 공간은 화자에게 있어서 휴식의 공간이자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두 사람의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부활의 공간이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 민족이 식민치하의 죽음의 시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부활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그곳은 시련을 겪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화자가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과 시의 서두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직 꿈속에서만 있어라" 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분명 그곳은 화자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비현실적 공간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이 화자가 애타게 부르는 "마돈나"를 낭만화한다.

『나의 침실로』에서 "나의 침실"의 의미는 관능적 쾌락과 도취의 장소인 동시에 죽음의 장소다. "수밀도의 네 가슴" "이슬" "몸" "침실" 등의 이미지와 "마돈나"를 부르는 간절한 호흡이 만드는 전반부의 관능적 쾌락이 후반부로 오면서 죽음의 의미와 함께 "부활의 동굴"로 전이된다. "부활의 동굴"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하고, 참다운 가치가 실현된다. 이러한 절망이 다른 낭만주의적 도피주의의 시와 다른 이유는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이상화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님’의 상실과 부재

김소월(1902. 8. 6~1934. 12. 24)은 7·5조의 율격을 독자적으로 심화하여 당대 민족의 좌절과 비애감을 아름다운 모국어로 형상화했다. 그는 『창조』 2호에 「낭인의 봄」 등 5편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이름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한번도 중심에 서본 적이 없었으며, 그의 삶은 언제나 변방에 있었다. 시집 『진달래꽃』(1925)은 나날의 삶이 주는 기쁨과 슬픔뿐만 아니라 인간과 우주와의 친화를 폭넓게 다루어 우리 민족의 근원적 서정에 접하는 기적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김소월〉

소월은 오산학교 시절 이승훈 교장과 교사로 있던 조만식을 통해 민족의식을 키웠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였고, 화재로 인해 오산학교를 다니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귀향하였다가 1920년에는 일제에 의해 남산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일본에 유학하던 중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사건으로 약소민족의 설움을 확인하였고, 돌아와 고향에 머물 때에도 감시의 대상으로 종종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하였다. 처가가 있던 평북 구성에서 생활할 때에도 일인의 감시를 받았으며 심지어 작품을 압수당하였고, 자신의 작품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약소민족의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그는 우리말에 대한 애착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소월의 시에는 국토의 상실과 민족의 부재에 의한 한탄과 비애가 숨어있다. 그 단서를 「진달래꽃」에서 찾을 수 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개벽』, 1922. 6) 전문

이 시에는 떠나버린 '님' 에 대한 미련과 '님' 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맹목적인 복종심과 순종의 미덕보다는 미련과 원망, 혹은 자책과 갈등의 감정이 길항한다. '님' 은 떠나지만 그를 끝내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미련은 '님' 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성적 자각에 의해 두려움을 전환된다. 그러므로 짓밟히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먼저, 진달래꽃을 뿌리는 것이다. 이 시에서 '님' 은 영원히 부재한다. 그 '님' 은 먼 훗날 다시 돌아올 '님' 이 아니다. 지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은 '님' 이다. 김소월의 시에서 애타게 그리워하는 사람은 현전하지 않는 부재의 '님' 이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가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진달래꽃』, 1925. 12) 전문



〈1925년 초판 『진달래꽃』〉

이 시에는 좌절과 미련이 서로 상충되는 데서 오는 처절한 슬픔의 극단적인 토로가 구체화되어 있다. “이름” “사랑하던 그 사람”이 ‘님’을 대신한다. ‘님’의 죽음에서 연유된 좌절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강한 미련의 감정과 자신을 홀로 두고 떠난 ‘님’에 대한 원망이 교차한다. 미련과 원망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심한 자책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시 「진달래꽃」에서 ‘님’은 이제 막 떠나려는 순간이지만, 「초혼」에서의 ‘님’은 떠나고 없는 ‘님’이다. 이처럼 김소월은 ‘님’의 상황에 따른 감정의 국면을 탁월하게 형상화하였다.

「초혼」의 경우는 식민지 현실로 인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던 냇이 나간 상태의 민족 구성원들을 격렬한 감정의 언어로 위로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에서 그 대상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김소월은 부재하는 ‘님’을 통해 동시대의 정서적 공감대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잃은 상실감을 기축으로 한 시대적 정서에 가장 극적으로 상응하는 시를 창작하여 민족이라는 ‘님’의 소중함을 역설했다.

‘님’의 침묵과 영원성



〈한용운〉

소월이 ‘님’의 상실과 부재를 정서의 언어로 위무했다면, 한용운(1879. 8. 29~1944. 6. 29)은 ‘님’의 상실과 부재를 침묵으로 이해하고 ‘님’의 영원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용운은 퇴폐적인 서정성을 배격하고 불교적인 ‘님’을 자연으로 형상화했으며, 고도의 은유법을 구사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옹혼한 민족의 정신을 노래했다.

한용운은 1916년 서울 계동에서 월간지 『唯心』을 발간하였으며,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여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시집 『님의 침묵』(1926)을 1년 만에 탈고,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서기도 했다. 1920년대 한용운은 나라 잃은 시대에 있어야 할 것의 결여를 ‘님’의 침묵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시 전체는 부재하는 ‘님’에 대한 헌사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가 시에서 말하는 ‘님’은 조국, 민족, 중생, 불타, 애인, 친구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실은 시집의 머리말로 엮어둔 「군말」에 잘 나타나 있다.

‘님’ 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衆生이 釋迦의 님
이라면, 哲學은 칸트의 님이다. 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
의 님은 伊太利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戀愛가 自由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
은 自由에 알뜰한 拘束을 받지 않더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
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별관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詩를 쓴다.

— 한용운, 「군말」(『님의 침묵』, 1926) 전문

한용운에게 ‘님’은 존재의 이유와 같다. 그의 말대로 “‘님’ 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그가 그리워하는 모든 대상으로서의 ‘님’은 “중생” “철학” “장미화” “마시니” 등에서처럼 다양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는 불교적 ‘님’을 가장 중시했다. 무엇보다 조국과 민족, 애인과 친구는 불타와 중생 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용운의 ‘님’은 불교의 진리를 초월적인 방향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잘 나타난다. 조선의 민중들이 갈 길을 잃고 어린 양처럼 헤맬 때, 그는 나의 ‘님’은 바로 그들이



<1926년 초판 『님의 침묵』(오른쪽)과 재판본(1934)>

라고 말했다. “해 저문 별관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그리워 그가 시를 썼다는 말이 이를 입증한다. 시집의 표제작이기도 한 시 「님의 침묵」은 ‘님’의 침묵과 ‘님’과의 이별이 지나는 진정한 의미를 탁월하게 형상화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뽕씨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追憶은 나의 運命의 指針을 돌려놓고 뒷
걸음질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님의 침묵』) 전문

이 시는 관능적 호소력과 초월적 의미와 형이상학적 사유가 중첩되어 있다. 이 시 전체를 휩싸고 있는 고고한 절조와 강개는 '님' 이 침묵하는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자 '님' 의 침묵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보여준다. "희망의 정수박이"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모태와 같다. 한용운은 부재하는 '님' 을 사랑의 힘으로 다시 살게 했다. '님' 의 부재에 의해 사랑이 실재한다는 것이 이 시가 설정하고 있는 침묵의 공간이다. 한용운의 '님' 이 가지는 특징이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에서 '이별' 은 깨달은 자의 시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구도하는 자의 시임을 보여준다. 한용운은 불타와 중생을 위한 길이 곧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시에서 발견하는 부재하는 '님' 의 재탄생은 우리 민족의 회복이 아닐 수 없다.

만해와 소월의 '님' 은 여러 측면에서 상사의 관계에 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일 수 없다. 둘은 서로 서로의 원형과도 같다. 그러나 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우리 문학의 깊이와 높이가 마련된다. 소월의 시에서 '님' 은 떠나갔기 때문에 '님' 과의 단절이 강조된다. 반면, 만해의 '님' 은 갔으므로 다시 올 수 있고, 헤어졌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소월의 '님' 을 과거의 '님' 으로, 개인적인 '님' 으로, 미학적 '님' 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의 문학적 가치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만해의 '님' 은 현실을 넘어선 초시간적 '님' 이다. 역시 만해 시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소월이 '님' 의 죽음을 미학적 개념으로 형상화했다면, 만해는 '님' 의 죽음을 열반과 영원의 길잡이로 노래하였다. 우리가 소월의 시를 읽을 때 발견하는 운동과 정지, 방황과 정착 사이에서 머뭇거림은 '님' 의 상실과 부재 탓이다. 이에 비해 만해의 시에서 생성과 단절, 그리고 재생의 원환을 발견하고 무한대로 전진하는 힘을 느끼는 까닭

은 '님'의 침묵이 영원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현대시와 '님'

1920년대 우리시가 보여준 민족의 문제를 '님'을 통해 살펴보았다. '님'이라는 낱말은 1920년대의 시인들이 애용하던 관용어의 하나였다. 일상어에서 '님'은 존칭할 명사 밑에 붙이는 접미사로서 독립된 단어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낭만적 대상으로서의 '님' 뿐만 아니라 소월과 만해의 '님' 역시 관습적으로 사용되기는 마찬가지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인들은 일상어의 가치를 깨닫고 그들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심화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감상적이며 관념적인 '님'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현대시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1920년대 여러 시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님'이 환기하는 의미가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신하였다는 점이다. 식민지적 근대라는 상황 속에서 '님'은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였다. 우리 시문학에서 민족적 정서라는 특별한 위치를 고안해낸 '님'을 단순한 비유나 상징으로 제한해서 해석하기보다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기구독 안내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시메이츠 민족연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메이츠 민족연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절차

1. 아래 <정기구독 신청서>에서 정기구독 희망 잡지를 <구독기간>란에 구독기간을 표시.
2. 해당하는 구독료를 <우체국 012187-01-002824> (예금주 : 교양사회)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연 락 처

<저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우편번호:142-881)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교양사회

----- <절취선> -----

정기구독 신청서

교양사회

저널명	간별	구독 권수	금 액	구독희망	기타
시메이츠 민족연구	계간	4권(1년분)	₩ 60,000	~	
		8권(2년분)	₩ 100,000	~	
구독자	구독자명(기관)				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